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5. 03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5년 03월
서울연구원 원장 김 수 현

참 여 연 구 진

서울연구원

연구책임 이창우 (선임연구위원)

 이지연 (연구원)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원순(서울시장), 조명래(단국대학교)

경제분과위원

김종욱(서울시의회), 신창호(서울연구원), 박용신(환경정의), 이명주(제드엠제이),
최금주((주)화이버텍), 윤형근(한살림), 이은애(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송상석(녹색교통운동), 허철((주)프론티어)

사회문화분과위원

김생환(서울시의회), 이상목(서울대학교), 이원재(문화연대), 권기태(희망제작소)
임성규(서울시 복지재단),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김익환(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정선순(녹색환경운동), 조금득(토닥토닥협동조합), 장국환(공연기획 워터게이트미디어)

환경분과위원

김동승(서울시의회), 설동근(법무법인 광장), 박창근(관동대학교), 문태훈(중앙대학교)
김은경(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남미정(에너지시민연대),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전의찬(세종대학교), 윤순진(서울대학교), 이강오(그린트러스트)

자문위원

조명래(단국대학교), 김은경(지속가능성센터 지우), 고재경(경기개발연구원)
문태훈(중앙대학교), 정희성(환경과 문명),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01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과 목적	3
1.1 계획의 배경	3
1.2 계획의 목적	3
2. 계획의 범위와 내용	4
2.1 계획의 범위	4
2.2 계획의 내용	5
3. 연구방법과 추진일정	6
3.1 연구방법	6
3.2 추진일정	6

02 지속가능발전의 의의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11
1.1 지속가능발전의 논의과정	11
1.2 Post-2015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3
1.3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16
1.4 지속가능발전 개념 모델	17
2. 지속가능발전 현황	20
2.1 해외 현황	20
2.2 국내 현황	23

03 국내외 사례 검토

1. 지속가능발전 해외 사례	27
1.1 환경성과지수(EPI)	27
1.2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35
1.3 OECD의 환경지표	37
1.4 호주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38
1.5 오스트리아 지속가능성 지표	40
1.6 미국 워싱턴 D.C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41
1.7 미국 뉴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42
1.8 미국 산타모니카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44
1.9 캐나다 킹스턴 지속가능발전 계획	46

2. 지속가능발전 국내 사례	48
2.1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48
2.2 인천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전략	51
2.3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53
2.4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55
3. 시사점과 서울시 적용방안	56
3.1 시사점	56
3.2 서울시 적용방안	58

04 서울특별시 현황 및 정책환경 분석

1. 서울시 일반현황	63
1.1 위치와 지형 특성	63
1.2 토지이용과 공간구조 변화	63
1.3 인구변화	64
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현황	66
2.1 환경 분야	66
2.2 사회문화 분야	76
2.3 경제 분야	94
3. 정책적 시사점	106
3.1 환경 분야	106
3.2 사회문화 분야	106
3.3 경제 분야	107
3.4 종합의견	107

05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111
1.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111
1.2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필요성	112
2.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원칙	113
3.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정	114
3.1 서울시 지속가능성 요인 설문조사	116
3.2 서울시 관련계획 검토	128
3.3 서울시 정책박람회	129
3.4 서울시 관련부서 의견 수렴	131
4.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132
4.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132
4.2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전략과 과제	132
4.3 분야별 과제 추진계획	135

06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1.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의의와 필요성	209
1.1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의의	209
1.2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과정	209
1.3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필요성	209
2.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원칙과 기본방향	210
2.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원칙	210
2.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기본방향	212
2.3 지표의 목적과 기능	213
3. 지속가능발전 지표 수립과정	214
3.1 지속가능발전 지표 풀(Pool) 구축	215
3.2 서울시 지속가능성 요인 설문조사	216
3.3 지표은행 구축	216
3.4 서울시 정책박람회	221
3.5 서울시 관련부서 의견 수렴	222
3.6 핵심지표 선정	222
4.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223
4.1 환경 분야 지표	223
4.2 사회문화 분야 지표	234
4.3 경제 분야 지표	245
5.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방안	256
5.1 평가모델	256
5.2 평가절차	258
5.3 평가결과	259

07 실행력 확보방안

1.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273
2. 지속가능발전 의제 발굴	275
3. 사회적 인식기반 확대	276
4. 지속가능발전 교육 추진	278
5. 법규와 제도 개선	280
6. 지속가능발전 조직 체계 개편	281
7.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283
8. 총괄과 재정계획	286

참고문헌

참고문헌	293
------	-----

부록

부록	299
----	-----

【표 목 차】

〈표 1-1〉 연구의 체계	5
〈표 1-2〉 연구 추진일정	6
〈표 2-1〉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 전개과정	12
〈표 2-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	15
〈표 2-3〉 지속가능발전의 다양한 개념	16
〈표 2-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 기둥의 상호연계성	17
〈표 2-5〉 해외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현황	21
〈표 2-6〉 해외 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현황	22
〈표 2-7〉 국내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현황	24
〈표 3-1〉 2014년 EPI 평가 상위 10개 국가	29
〈표 3-2〉 우리나라 EPI 종합순위 변화	29
〈표 3-3〉 EPI 지수 및 지표별 순위 변화	31
〈표 3-4〉 2014년 EPI 지표별 가중치	33
〈표 3-5〉 UNCSO의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 (2001)	35
〈표 3-6〉 OECD 환경지표	37
〈표 3-7〉 호주 국가 지속가능성 지표	39
〈표 3-8〉 오스트리아 지속가능성 지표	40
〈표 3-9〉 미국 워싱턴 D.C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분야별 목표	41
〈표 3-10〉 미국 뉴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분야별 목표	42
〈표 3-11〉 미국 뉴욕시 지속가능성 지표	43
〈표 3-12〉 캐나다 킹스턴 지속가능발전 지표	47
〈표 3-13〉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49
〈표 3-14〉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지표	51
〈표 3-15〉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53
〈표 3-16〉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대표지표 선정(안)	55
〈표 3-17〉 키워드 접근방법 개요	58
〈표 4-1〉 서울시 인구구성 변화 추이	64
〈표 4-2〉 서울시 외국인 인구 변화 추이	65
〈표 4-3〉 서울시 대기오염도 현황	66
〈표 4-4〉 한강수계 수질오염도 현황	68
〈표 4-5〉 서울시 녹지율 현황	69
〈표 4-6〉 서울시 1인당 공원면적 현황	70
〈표 4-7〉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황	71
〈표 4-8〉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72
〈표 4-9〉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비전체계도	73
〈표 4-10〉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	74
〈표 4-11〉 서울시 2011년 지역별 소음도	75
〈표 4-12〉 2013년 기준 자치구 별 기초생활보급자수	77

〈표 4-13〉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78
〈표 4-14〉 성별 독거노인 비율	79
〈표 4-15〉 서울시 주택보급률 추이	80
〈표 5-16〉 서울시 주택현황	80
〈표 4-17〉 서울시 임대주택 건설 현황	81
〈표 4-18〉 교원 1인당 학생 수	82
〈표 4-19〉 교육환경 만족도 현황	82
〈표 4-20〉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현황	82
〈표 4-21〉 서울시 평생학습 기관 현황	83
〈표 4-22〉 서울시 공연건수 및 전시횟수 현황	84
〈표 4-23〉 서울시민 문화환경 만족도	84
〈표 4-24〉 서울시 자살률 현황	85
〈표 4-25〉 서울시민복지기준 5개 분야 복지기준	88
〈표 4-26〉 서울시 5대 범죄 발생 현황	93
〈표 4-27〉 서울의 GRDP 추이(2010년 기준가격)	95
〈표 4-28〉 주요 광역시별 창조계층 인력 수 산출 결과(2012)	96
〈표 4-29〉 주요 광역시별 창조계층 인력 분포(2008~2012)	96
〈표 4-30〉 서울시 고용 및 실업률 현황	97
〈표 4-31〉 서울시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현황	97
〈표 4-32〉 서울시민의 가구부채 현황	98
〈표 4-33〉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현황	100
〈표 4-34〉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2013년)	101
〈표 4-35〉 사회서비스 분야별 사업체수와 매출액	101
〈표 4-36〉 서울시 도시농업 면적 현황	103
〈표 4-37〉 서울시 사업체 현황	104
〈표 4-38〉 산업세분류별 사업체수·매출액 상위 업종	105
〈표 4-39〉 1~4명 개인사업체 현황	105
〈표 4-40〉 서울시 서비스업 부문별 매출액 현황	105
〈표 5-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정	114
〈표 5-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회의 결과	115
〈표 5-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상 설문조사 결과	117
〈표 5-4〉 서울연구원 박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118
〈표 5-5〉 서울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19
〈표 5-6〉 지속가능성 요인 설문조사 종합결과 (분야별 Top 10)	120
〈표 5-7〉 서울의 지속가능발전 키워드	127
〈표 5-8〉 서울시 주요 계획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내용	128
〈표 5-9〉 서울시 정책박람회 운영 개요	129
〈표 5-10〉 서울시 정책박람회 부스 운영 현황	129
〈표 5-11〉 지속가능발전 도시 ‘서울’ 관련 시민 정책제언	130
〈표 5-1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체계	133
〈표 5-13〉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전략과 과제	134

〈표 5-14〉 환경 분야 과제 추진계획	135
〈표 5-15〉 원전하나 줄이기 달성 성과	137
〈표 5-16〉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성과	138
〈표 5-17〉 산사태 방지시설 확충 추진계획	139
〈표 5-18〉 분산형 전원 보급 추진계획	141
〈표 5-19〉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 추진계획	142
〈표 5-20〉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대상	144
〈표 5-21〉 물재이용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144
〈표 5-22〉 공간계획 규모에 따른 분산식 빗물관리	145
〈표 5-23〉 친환경자동차 보급 추진계획	146
〈표 5-24〉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단계별 추진계획	146
〈표 5-25〉 경유차 제작기준 및 운행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추진계획	147
〈표 5-26〉 한강 숲 조성 계획	148
〈표 5-27〉 한강 생태거점 조성 계획	149
〈표 5-28〉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원 조성 계획	150
〈표 5-29〉 녹색문화 확산 사업 추진계획	151
〈표 5-30〉 도시문화공원 조성 추진방향	151
〈표 5-31〉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계획	152
〈표 5-32〉 자전거 관련 사업 추진계획	153
〈표 5-33〉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 추진계획	153
〈표 5-34〉 사회문화 분야 과제 추진 계획	154
〈표 5-35〉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156
〈표 5-36〉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안	156
〈표 5-37〉 젠더옴부즈만 운영 추진계획	157
〈표 5-38〉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사업 추진계획	158
〈표 5-39〉 생활임금 결정구조	159
〈표 5-40〉 생활임금 조정률 결정모델(안)	159
〈표 5-41〉 서울형 기초보장·긴급복지 2.0 사업 추진계획	159
〈표 5-42〉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계획	160
〈표 5-43〉 교육우선지구 사업 추진계획	160
〈표 5-44〉 평생학습체계 구축 사업 추진계획	161
〈표 5-45〉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계획	162
〈표 5-46〉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대상 확대 계획	162
〈표 5-47〉 서울형 전월세제도 기반 마련 추진계획	163
〈표 5-48〉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 강화 추진계획	164
〈표 5-49〉 가족문화 확산 및 가족유형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계획	164
〈표 5-50〉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 사업 추진계획	165
〈표 5-51〉 어르신 건강·요양시설 확충 및 개선 계획	165
〈표 5-52〉 마을공동체 지원 추진계획(안)	166
〈표 5-53〉 시민제안 활성화 추진계획(안)	166
〈표 5-54〉 행정정보 공개 성과 및 추진계획(안)	167

〈표 5-55〉 시민참여 감사 확대 추진계획(안)	167
〈표 5-56〉 참여예산위원회 구성현황	168
〈표 5-57〉 유형별 황금시간 목표 정립	169
〈표 5-58〉 재난 초기 시민 대응역량 강화 추진계획	170
〈표 5-59〉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추진계획	171
〈표 5-60〉 연도별 노후전동차 교체계획	171
〈표 5-61〉 301네트워크(보건·의료·복지 연계) 확대 체계	173
〈표 5-62〉 어린이 대상 환경호르몬 관련 정책 추진계획	174
〈표 5-63〉 소생활권 건강협의회 구축 추진계획	174
〈표 5-64〉 문화시설 기반 확충 추진계획	175
〈표 5-65〉 공공·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확대 추진계획	175
〈표 5-66〉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센터 확충 추진계획	176
〈표 5-67〉 유산가치 공유 및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	176
〈표 5-68〉 마을예술창작소 내실화 추진계획	177
〈표 5-69〉 마을미디어 교육 및 활동지원 추진계획	177
〈표 5-70〉 시민 생활문화제작 프로그램 사업 추진계획	178
〈표 5-71〉 경제 분야 과제 추진 계획	179
〈표 5-72〉 홍릉일대 현황	181
〈표 5-73〉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핵심거점 기능	181
〈표 5-74〉 동대문 창조경제클러스터 육성 추진계획	182
〈표 5-75〉 홍합밸리 현황	183
〈표 5-76〉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추진계획	183
〈표 5-77〉 DMC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 생태계 구현 추진계획	185
〈표 5-78〉 창조인재 양성 세부 추진사업 현황	186
〈표 5-79〉 신규 인재양성 사업 추진계획	186
〈표 5-80〉 2014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업	187
〈표 5-81〉 서울시 기술교육원 현황	187
〈표 5-82〉 취약계층 종사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보호사업 추진계획	189
〈표 5-83〉 청년창업기반 조성 추진계획	190
〈표 5-84〉 공공부문 청년의무고용제 추진계획	191
〈표 5-85〉 청년층 노동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추진계획	191
〈표 5-86〉 글로벌 환경 구축 추진계획	192
〈표 5-87〉 다문화사회 조성 사업 추진계획(안)	193
〈표 5-88〉 관광콘텐츠 개발 추진계획	194
〈표 5-89〉 MICE 중심도시 기반조성 추진계획	195
〈표 5-90〉 한류관광 활성화 추진계획	196
〈표 5-91〉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추진계획	197
〈표 5-92〉 혁신형 생활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추진계획	198
〈표 5-93〉 생활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계획	198
〈표 5-94〉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추진계획	199
〈표 5-95〉 공유문화 확산 추진계획	200

〈표 5-96〉 공유단체·기업 지원 현황	201
〈표 5-97〉 공유기업 및 자치구 공유사업 지원 추진계획	201
〈표 5-98〉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202
〈표 5-99〉 특화상권 활성화 선정 지원 추진계획	203
〈표 5-100〉 중소기업 육성 지원 추진계획(안)	204
〈표 5-101〉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추진계획	205
〈표 5-102〉 도시농업 공간 확대 추진계획(안)	206
〈표 6-1〉 지속가능발전 지표 수립과정	214
〈표 6-2〉 지속가능발전 지표 풀 구축 참고 자료	215
〈표 6-3〉 서울의 지속가능발전 키워드	216
〈표 6-4〉 환경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은행	217
〈표 6-5〉 사회문화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은행	218
〈표 6-6〉 경제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은행	220
〈표 6-7〉 지속가능발전 핵심지표 선정결과(상위 10개)	221
〈표 6-8〉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핵심지표	222
〈표 6-9〉 환경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223
〈표 6-10〉 사회문화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234
〈표 6-11〉 경제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245
〈표 6-12〉 지속가능성 평가와 지속가능발전 평가의 차이점	256
〈표 6-13〉 환경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259
〈표 6-14〉 사회문화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262
〈표 6-15〉 경제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265
〈표 6-16〉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지수 산출 체계(안)	270
〈표 7-1〉 서울시정 4개년 계획 25개 핵심과제	274
〈표 7-2〉 지속가능발전 의제 발굴 및 채택 과정	275
〈표 7-3〉 라운드테이블 참여대상	276
〈표 7-4〉 대상별 교육내용	279
〈표 7-5〉 지속가능발전 교육내용	279
〈표 7-6〉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추진계획	280
〈표 7-7〉 지속가능발전위원회 T/F 구성(안)	281
〈표 7-8〉 지속가능발전 전담 조직 체계 및 주요 업무	282
〈표 7-9〉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내용	284
〈표 7-10〉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실행력 확보 추진계획	286
〈표 7-1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재정운영계획(총괄)	287
〈표 7-12〉 환경 분야 사업별 재정운영계획	288
〈표 7-13〉 사회문화 분야 사업별 재정운영계획	289
〈표 7-14〉 경제 분야 사업별 재정운영계획	290

【그림 목 차】

〈그림 2-1〉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8개 의제 개발 목표	13
〈그림 2-2〉 지속가능성의 세 기둥	17
〈그림 2-3〉 지속가능발전 3개의 원 벤다이어그램	18
〈그림 2-4〉 동심원 모델	18
〈그림 2-5〉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개념 모델(동심원 모델)	19
〈그림 3-1〉 2000~2013년 EPI 지표 성과 변화 추세	28
〈그림 3-2〉 2014년 EPI의 구성체계	32
〈그림 3-3〉 목표근접치 계산 개념도	33
〈그림 3-4〉 미국 뉴욕시 지속가능성 지표 매트릭스	43
〈그림 3-5〉 미국 산타모니카 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의 10가지 원칙	44
〈그림 3-6〉 미국 산타모니카시 지속가능성 지표 매트릭스	45
〈그림 3-7〉 지속가능한 킹스턴 체계	46
〈그림 3-8〉 미국 산타모니카 지속가능발전 평가 모델	57
〈그림 4-1〉 3차원 지형도	63
〈그림 4-2〉 서울시 지형도	63
〈그림 4-3〉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분포도	65
〈그림 4-4〉 서울시 외국인 인구 분포도	65
〈그림 4-5〉 초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66
〈그림 4-6〉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67
〈그림 4-7〉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67
〈그림 4-8〉 에너지 소비부문 중 온실가스 배출량	67
〈그림 4-9〉 한강대교 지점 수질오염도(BOD) 목표치	68
〈그림 4-10〉 녹지율 등급 및 등급에 따른 심볼	69
〈그림 4-11〉 구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70
〈그림 4-12〉 구별 1인당 도시생활권공원 면적	70
〈그림 4-13〉 서울시 연도별 전력 사용현황	72
〈그림 4-14〉 소음민원 변화추이	75
〈그림 4-15〉 서울시 소음원별 소음민원 비율	75
〈그림 4-16〉 가구별 1인 가구 소득분포	76
〈그림 4-17〉 소득 하위 20% 평균소득 대비 상위 20% 평균소득 배율	76
〈그림 4-18〉 청년여성의 연령별 실업률	78
〈그림 4-19〉 문화환경 만족도 현황	84
〈그림 4-20〉 분야별 문화시설 현황	84
〈그림 4-21〉 비만을 분포도	86
〈그림 4-22〉 연령별 건강행태	87
〈그림 4-23〉 서울시 구별 장애인 현황	89
〈그림 4-24〉 연도별 상담시설 이용 청소년 수	90
〈그림 4-25〉 학업중단 학생이 필요로 하는 도움	90

〈그림 4-26〉 서울시 대안교육 지원 인원수	90
〈그림 4-27〉 서울시 보육시설 유형별 현황	91
〈그림 4-28〉 서울시 행정동별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91
〈그림 4-29〉 ‘마을공동체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92
〈그림 4-30〉 서울시 재정규모	94
〈그림 4-31〉 2014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94
〈그림 4-32〉 서울시 지역내 총생산 추이	95
〈그림 4-33〉 2014년 기준 서울시 가구당 평균 소득과 자산	98
〈그림 4-34〉 서울시 도시브랜드 지수 변화	99
〈그림 4-35〉 서울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순위변화	99
〈그림 5-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필요성	112
〈그림 5-2〉 서울의 지속가능성 요인 설문조사 결과(통합)	121
〈그림 5-3〉 서울의 지속불가능성 요인 설문조사 결과(통합)	121
〈그림 5-4〉 환경 분야 대표 키워드 선정	123
〈그림 5-5〉 사회문화 분야 대표 키워드 선정	125
〈그림 5-6〉 경제 분야 대표 키워드 선정	126
〈그림 5-7〉 권역별 공동이용 현황	142
〈그림 5-8〉 재활용 장터 운영 현황	143
〈그림 5-9〉 한강 생태거점 조성 대상지 위치도	149
〈그림 5-10〉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추진방향	163
〈그림 5-11〉 골든타임 정립 거버넌스 구축	169
〈그림 5-12〉 301네트워크(보건·의료·복지 연계) 확대 체계도	173
〈그림 5-13〉 DMC(디지털미디어시티) 전경	185
〈그림 5-14〉 굿 뉴딜일자리 추진계획	188
〈그림 5-15〉 금천구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잇슈’	200
〈그림 5-16〉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추진전략	205
〈그림 6-1〉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원칙	210
〈그림 6-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모델(수레바퀴 모델)	257
〈그림 6-3〉 지속가능발전 평가절차	258
〈그림 6-4〉 환경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결과	259
〈그림 6-5〉 사회문화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결과	262
〈그림 6-6〉 경제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결과	265
〈그림 6-7〉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 결과	268
〈그림 7-1〉 분야별 재정운영계획	287
〈그림 7-2〉 연도별 재정운영계획	287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요약

1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과 목적

- 2012년 리우+20 이후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새천년발전목표(MDGs)을 이어받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내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가고 있음.
- 2013년 5월 16일 서울시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고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며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서울시정의 핵심원칙으로 설정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발전 추진 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며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또한 시정의 주요 정책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서울시정의 핵심원칙으로 설정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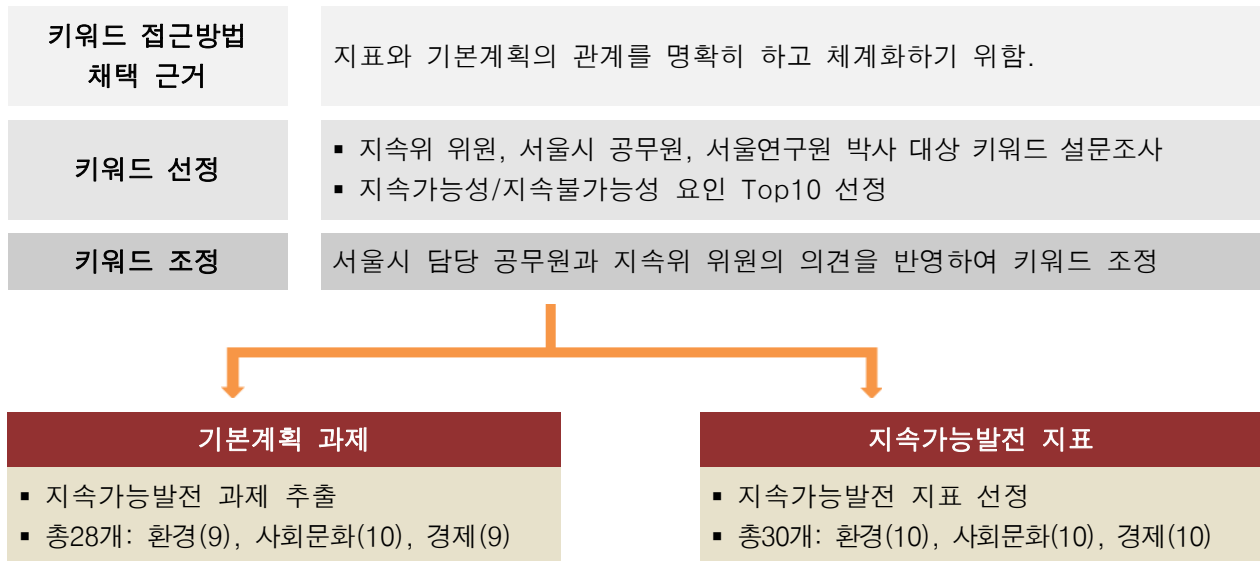
2.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는 2015년~2019년(5년간)으로서 시정운영에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함. 하지만 서울시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을 위하여 내용상으로는 중기목표연도 2020년, 장기목표연도 2030년을 시간적 범위에 포함시켰음.
-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전체로 설정하였으며, 경기도, 인천시 등 타 지자체와의 연계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이를 포함하여 검토함.
- 내용적 범위는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실태 파악,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지표의 수립, 실행력 확보방안의 제시를 포함함.

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기본계획과 지표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표의 수립 목적 및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며,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확보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기본계획과 지표의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실행력을 확보하였음.



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키워드

-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고 해결하여야 할 이슈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 요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키워드를 선정하였음.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속가능발전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키워드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폐기물, 수자원, 대기질, 쾌적한 도시환경, 녹색교통
사회문화	양성평등, 사회적 양극화, 교육, 주택, 고령화, 시민의식, 안전, 건강, 문화생활
경제	우수·숙련 인력, 질높은 일자리 창출, 글로벌 도시, 사회적경제, 산업의 다양성

2.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전체계

비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목표	환경	사회문화	경제
	회복력 증대와 쾌적한 환경 조성	사회적 형평성 및 문화적 활력 제고	창조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전략	01. 세계적인 기후보호 선도도시로 도약	01. 양극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01. 창조경제 중심도시 조성
	0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조성	02.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	0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03.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푸른도시 조성	03.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03. 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
	04.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04.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	04. 사회적 경제 확대와 산업 다양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 사회를 만든다.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한다. 양질의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조산업을 육성한다. 창조전문인력을 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소비·생산의 효율을 높인다.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한다. 물순환을 개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든다. 주민참여를 활성화로 생활거버넌스를 구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청년일job을 활성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질을 개선한다.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이 우선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이 살기좋은 서울을 만든다. 서울형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밀착형 보행 및 자전거를 활성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생활주변의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확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를 확대한다.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 다양한 산업기반을 강화한다.



3.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전략과 과제

목표	12개 전략 28개 과제
 <p>회복력 증대와 쾌적한 환경 조성</p>	<p>전략 01 세계적인 기후보호 선도도시로 도약 과제 1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과제 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p> <p>전략 0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조성 과제 3 에너지 소비·생산의 효율을 높인다. 과제 4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한다. 과제 5 물순환을 개선한다.</p> <p>전략 03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푸른 도시 조성 과제 6 대기질을 개선한다. 과제 7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과제 8 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한다.</p> <p>전략 04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과제 9 생활밀착형 보행 및 자전거를 활성화한다.</p>
 <p>사회적 형평성 및 문화적 활력 제고</p>	<p>전략 01 양극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과제 1 양성평등 사회를 만든다. 과제 2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한다. 과제 3 양질의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과제 4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p> <p>전략 02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 과제 5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든다. 과제 6 주민참여 활성화로 생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p> <p>전략 03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과제 7 시민이 우선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과제 8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p> <p>전략 04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 과제 9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과제 10 생활 주변의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확대한다.</p>
 <p>창조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p>	<p>전략 01 창조경제 중심도시 조성 과제 1 창조산업을 육성한다. 과제 2 창조전문인력을 양성한다.</p> <p>전략 0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과제 3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과제 4 청년 일자리를 활성화한다.</p> <p>전략 03 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 과제 5 외국인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든다. 과제 6 서울형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한다.</p> <p>전략 04 사회적경제 확대와 산업 다양화 과제 7 사회적경제를 확대한다. 과제 8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 과제 9 다양한 산업기반을 강화한다.</p>

4.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분야별 사업

- 지속가능성을 시정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속가능성 요인을 더욱 더 증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비전은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로 설정함.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환경, 사회문화, 경제의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로 전략과 과제를 수립하였음. “회복력 증대와 쾌적한 환경 조성(환경 분야)”, “사회적 형평성 및 문화적 활력 제고(사회문화 분야)”, “창조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경제 분야)”를 목표로 하여 12개 전략과 28개 과제를 설정함.
- 28개 과제의 하위 체계에는 과제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이 설정되어 있음. 분야별 사업은 아래의 내용과 같음.

1) 환경 분야

전략 01		세계적인 기후보호 선도도시로 도약
과 제 1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건물·수송 등 주요 배출원별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정책을 통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	<p>원전하나줄이기 2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을 적극 추진하며 그 성과를 공개한다.</p> <p>공공부문 및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p> <p>온실가스 감축사업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p>	
과 제 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자연재해 취약지역의 방재성능 강화 및 지역맞춤형 대책을 시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사업	<p>침수취약지역을 해소한다.</p> <p>산사태 방지사설을 확충한다.</p>	

전략 0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 도시 조성

과 제 3

에너지 소비·생산의 효율을 높인다.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건물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사업

에너지 복지·지역 공동체를 확대한다.

건축물 신축, 리모델링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효율 고려를 의무화한다.

서울형 건물 미니발전소 등 분산형 전원을 보급한다.

시민이 건설하는 건물 태양광발전소를 확대한다.

과 제 4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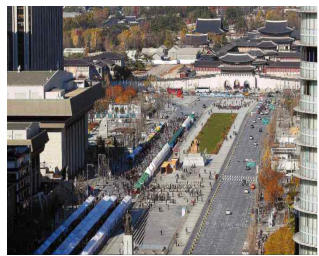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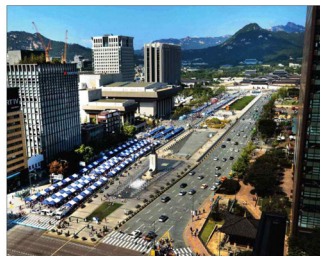
생활폐기물을 획기적으로 감량하고 다양한 재활용 강화수단을 마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달성한다.

사업

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를 도입한다.

생활폐기물의 자체처리기반을 구축한다.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주도형 나눔장터를 확대 운영한다.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확대 구축한다.

과 제 5

물순환을 개선한다.







체계적인 물순환시스템 도입으로 물 재이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환경을 조성한다.

사업

물사용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재이용 교육 및 홍보를 한다.

중수도 시설 설치 시 다양한 지원을 한다.

소규모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전략 03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푸른 도시 조성	
과 제 6	대기질을 개선한다.
	초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 시민이 건강하게 숨쉬는 서울을 구현한다.
사업	전기승용차, CNG하이브리드 버스 등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한다. 초미세먼지 노출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 배출량 감축과 생활주변 대기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동북아, 수도권 등과 대기환경협업체를 구성하고 대기개선 노하우를 공유한다.
과 제 7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한강 생태계 복원 및 생태적 기능 회복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사업	한강의 수변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경관의 한강 숲을 조성한다. 시민이 한강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자연형 호안을 조성한다. 생태거점을 조성한다.
	
과 제 8	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한다.
	생활권 공원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생태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한다.
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원을 조성한다.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등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한다. 공원녹지를 시민이 돌보고 가꾸고 즐기는 녹색문화를 확산한다. 도시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도시문화공원을 조성한다.

전략 04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과 제 9

생활밀착형 보행 및 자전거를 활성화한다.



도심 차도를 줄이고 자동차보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우선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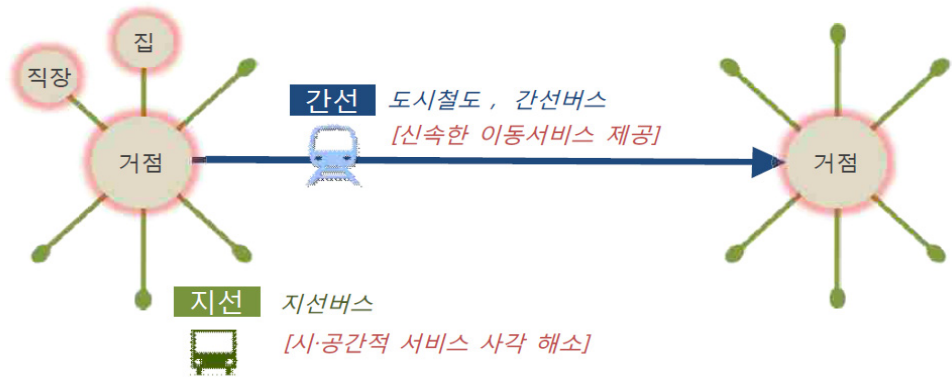
도심 차도를 축소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도시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공원화한다.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한다.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



2) 사회문화 분야

전략 01 양극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과 제 1	양성평등 사회를 만든다.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하고 보편적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사업	<p>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역연계형 일자리 등 여성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p> <p>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p> <p>여성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하여 서울형 성평등 선도모형을 제시한다.</p>
과 제 2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한다.
	계층간, 지역간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
사업	<p>찾아가는 복지플래너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균형적으로 실현한다.</p> <p>동 주민센터를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주민 주도의 복지생태계를 활성화한다.</p> <p>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소득불평등을 줄인다.</p> <p>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시민들의 긴급한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p>
과 제 3	양질의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학습하는 평생교육체계를 도입한다.
사업	<p>서울시민대학을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으로 확대 개편 운영한다.</p> <p>지역여건·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지원확대를 통해 지역간 균형을 도모한다.</p> <p>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한다.</p>
과 제 4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주택의 공공성을 확대한다.
사업	<p>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p> <p>주거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p> <p>지역사회 주거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거복지를 향상시킨다.</p> <p>서울형 전월세제도 기반을 마련한다.</p>

전략 02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
과 제 5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든다.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종합적인 고령화 대책을 수립한다.
사업		<p>다양한 가족유형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p> <p>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한다.</p> <p>노후설계 및 여가·건강 프로그램 활성화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한다.</p> <p>공공 노인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한다.</p>
과 제 6		주민참여 활성화로 생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민 주인 관점의 시정패러다임을 정착시킨다.
사업		<p>마을공동체의 자생적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한다.</p> <p>정책참여를 위한 시민제안을 활성화한다.</p> <p>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해나간다.</p> <p>시민참여 감사를 확대한다.</p> <p>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p>
전략 03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과 제 7		시민이 우선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시민 중심의 안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안전시스템을 개선한다.
사업		<p>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를 실행한다.</p> <p>재난 초기 시민 대응역량을 강화한다.</p> <p>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p> <p>노후전동차 교체 및 SMART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지하철 안전 운영을 강화한다.</p>
과 제 8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해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구현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p>시민이 참여하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p> <p>의료 취약계층에 의료, 보건,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p> <p>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예방 우선 정책을 추진한다.</p> <p>민간중심의 소생활권 건강생태계를 조성한다.</p>

전략 04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

과 제 9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수요에 대응하고 계층별 특색 있는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한다.

사업

클래식, 국악, 영화,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공공·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책 읽는 서울을 구현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센터를 확충한다.

서울의 역사문화 가치를 공유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한다.



과 제 10

생활주변의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확대한다.



지역과 마을단위로 자생적 문화활동을 하는 생활권내 시민 문화예술 활동을 강화한다.

사업

마을예술창작소를 내실화한다.

마을미디어 교육 및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시민들의 생활문화제작 프로그램 지원 및 기반을 조성한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를 만든다.

3) 경제 분야

전략 01	창조경제 중심도시 조성
과 제 1	창조산업을 육성한다.
	IT·융복합 기반 위에서 콘텐츠, 앱, 패션, 디자인 산업 등 창조산업을 육성한다.
사업	홍릉을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핵심거점으로 조성한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를 디자인, 창조산업의 발신지로 육성한다.
	  
	신촌, 홍대, 합정을 창조밸리 창업생태계로 구축한다.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를 조성한다.
	  
	상암 DMC·수색 서북권을 창조경제거점으로 육성한다.
과 제 2	창조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창조적 인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구조를 고도화한다.
사업	신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소셜 이노베이터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산업 필수인력 양성소와 기술교육원을 운영한다.

전략 0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과 제 3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사업		<p>세대별 적합업종, 민간진입이 용이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p> <p>서울시 취약계층 종사자의 보편적 노동권익 향상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p>
과 제 4		청년 일자리를 활성화한다.
		<p>청년의 일과 삶의 자립을 위한 청년일자리를 활성화하며</p> <p>청년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한다.</p>
사업		<p>청년의 자기실현을 위한 창업기반을 조성한다.</p> <p>청년의무고용제를 확대 시행하고 구인, 구직 매칭을 강화한다.</p> <p>청년층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한다.</p>

전략 03		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
과 제 5		외국인이 살기좋은 서울을 만든다.
		글로벌 인프라 구축 및 생활환경 조성으로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사업		<p>교육, 주거, 의료, 투자 등 외국인이 살기 편한 글로벌 생활환경을 구축한다.</p> <p>내.외국인간 상호 다양성을 인정하며 세계인과 함께 어울리는 다문화사회를 조성한다.</p>
과 제 6		서울형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한류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
사업		<p>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명소화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p> <p>MICE 중심도시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한다.</p> <p>K-pop, K-drama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여 한류관광을 활성화한다.</p>

전략 04

사회적경제 확대와 산업 다양화

과 제 7

사회적경제를 확대한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협동조합을 지원한다.

사업

자치구별로 사회적경제 특구를 육성한다.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

지역단위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과 제 8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



시민의 삶 속에 공유를 정착시키고 공유기업을 육성 지원한다.

사업

마을 공동체와 연계한 일상생활 속 공유문화를 확산한다.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성장가능성 있는 공유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과 제 9

다양한 산업기반을 강화한다.



제조업 기반 강화 등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하며,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시농업을 육성한다.

사업

도심형 제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지역별 특화상권에 대한 특구 지정으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중소기업의 체계적, 전략적 육성지원을 확대한다.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

도시농업 공간을 확대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3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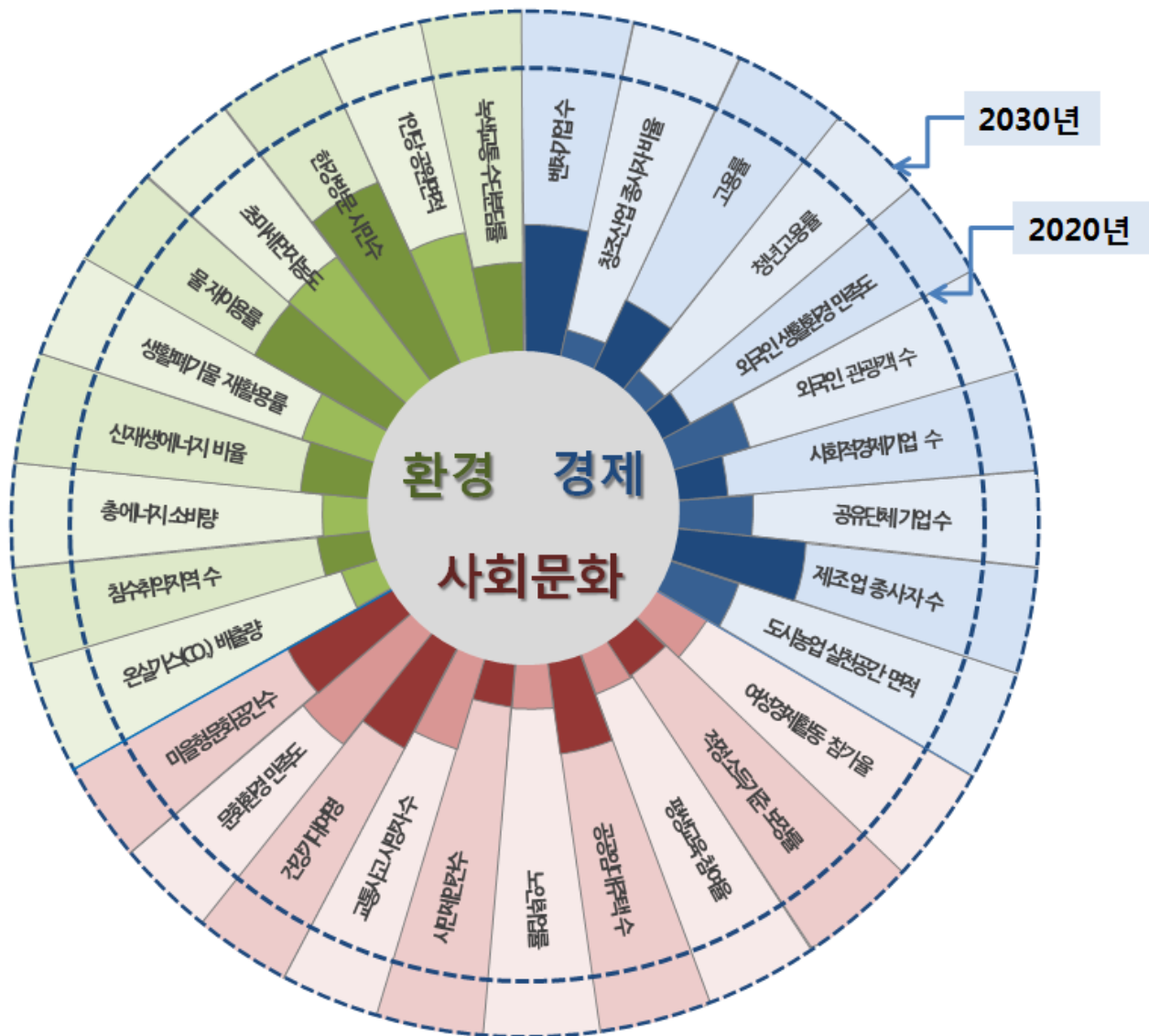
1. 지속가능발전 지표

- 지속가능성 키워드 조사, 정책박람회, 부서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구축된 총87개의 지표은행 중에서 핵심지표 30개를 선정함.
- 핵심지표는 환경 10개, 사회문화 10개, 경제 10개 등 총 30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의 여건 및 정책 방향의 변화에 따라 향후 유연하게 수정될 수 있음.

분야	키워드	지표
 환경	기후변화	온실가스(CO ₂)배출량
		침수취약지역 수
	에너지	총 에너지 소비량
		신재생에너지 비율
	폐기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수자원	물 재이용률
	대기질	초미세먼지 농도
	쾌적한 도시환경	한강방문 시민 수
		1인당 공원면적
 사회문화	녹색교통	녹색교통 수단분담률
	양성평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사회적 양극화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교육	평생교육 참여율
	주택	공공임대주택 수(누계)
	고령화	노인취업률
	시민의식	시민제안 건수
	안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
	건강	건강기대여명
	문화생활	문화환경 만족도
		마을형 문화공간 수
 경제	우수·숙련 인력	벤처기업 수
		창조산업 종사자 비율
	질높은 일자리 창출	고용률
		청년고용률
	글로벌 도시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외국인 관광객 수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업 수
		공유단체·기업 수
	산업의 다양성	제조업 종사자 수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

2.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 서울시는 지표의 현황과 목표치까지의 도달 정도를 수레바퀴 모델로 제시하여 목표 달성도를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지표의 정보전달력을 높이하고자 함.
- 원둘레의 점선부분은 각 지표의 2020년, 2030년 목표치를 나타내며, 바퀴살의 끝부분은 각 지표의 목표치(2020년)에 대한 현재의 달성도(2013년 현황)를 나타냄.¹⁾
- 30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각각의 목표치를 달성하여 원 모양에 근접할수록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함.



1) 달성도 = [(현황-기준연도)/(목표연도-기준연도)]*100

4 실행력 확보방안

1.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평가 및 자문을 수행하며,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기반으로 서울시정 전반 및 민선6기 핵심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함.
- 평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 시정평가 T/F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자 함. 또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핵심지표 30개(환경 10개, 사회문화 10개, 경제10개)를 수레바퀴 평가모델에 적용하고 2020년 목표치 대비 현 시점의 지속가능발전 달성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핵심지표 이외에도 지표은행(87개 지표)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각 실·국·본부 및 자치구 등과 공유할 계획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따른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기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절성 검토 및 이에 대한 보완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됨.

2. 지속가능발전 의제 발굴

- 의제 발굴대상은 크게 신규의제, 지표개선, 복합의제로 구분할 수 있음. 지속위 위원, 시민, 공무원이 제안한 의제는 의제발굴 T/F에 회부되어 타당성 및 적용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기획조정회의에서 검토된 의제를 채택함. 채택된 의제는 의제발굴 T/F에서 연구조사를 시행하게 됨. 연구된 의제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최종 채택되며, 각 부서에 연구결과를 송부하여 정책 수립 및 집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함.

3. 사회적 인식기반 확대

1) 라운드 테이블 개최

- 다양한 주체들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시 위원회, 공무원, 시민으로 구성된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고자 함. 운영 내용은 참여대상별로 세분화하여 진행될 것임.

2) 시민 지속가능참여단 운영

- 대학생, 회사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여러 분야에 속해 있는 20~30대 청년층 약 4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인식확산 T/F가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시민 참여단의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이해도 향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평가의견 제시, 시민참여 활성화,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제언 등을 시행하고자 함.

4. 지속가능발전 교육 추진

1) 공무원 직급별 교육 실시

-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향상 및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교육은 함께서울 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임. 또한 직급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며, 교육의 주체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에 인식확산 T/F를 중심으로 함.

2) 인재개발원 내 지속가능발전 이해향상 과목 편성

- 신입리더, 5급 승진리더, 6급 실무전문가 양성 등을 대상과정으로 하며, 교육의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이해도 향상을 중심으로 편성됨.

5. 법규와 제도 개선

- 「지속가능발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정계획이 되므로 이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는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시행하고자 함. 또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임.

6. 지속가능발전 조직 체계 개편

1)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T/F 구성·운영

- 위원회 내의 분과위원회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하되,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등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경우 활동별 T/F를 구성하여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함. T/F는 시정 평가, 정책평가, 의제발굴, 인식확산 분야로 나누어 운영될 예정이며 각 분과위원이

T/F에 참여하기로 함. 또한 기존의 기획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분과위원장, 분과간사로 구성되어 왔으나 이를 확대하여 T/F 위원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함.

2) 지속가능발전 전담조직 설치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더욱 체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2015년부터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내 지속가능발전 전담팀을 신설하여 업무의 실행력을 담보하게 되었음. 지속가능발전전담팀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지표의 관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및 정책의제 발굴,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계획임.

7.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사례의 자치구 확산

-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모델의 공유 및 확대를 위하여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와 연계하여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배포하고 공유하고자 함. 또한 자치구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하고자 함.
- 市는 자치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함.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현황 및 역량 수준을 진단함으로써 기본계획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지표 설정 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2) 국제사회에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모델 제시

- 2015년 이클레이 세계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총회를 통해 세계 도시들과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영문자료집을 제공하여 국제사회에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홍보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지속가능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3)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정합성 고려

- 현재 UN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마련하고 있어 서울시가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적 동향 또한 고려하여야 함.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목표 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기본계획 수

립 시 개념적 모델로서 동심원 모델을 사용하고 수레바퀴 모델을 통한 지표의 평가과정에서도 각 지표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였음. 또한 정책박람회, 지속가능성 요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참여성을 확보하는 한편, 평가에 통합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 T/F 운영을 제안함.

-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중점 분야인 글로벌 시민교육, 포용성장, 기후변화, 성평등을 기본계획에 평생교육, 노인·청년일자리, 창조경제 등으로 반영하고 기후변화 분야의 전략·목표·과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정합성을 고려하고자 하였음.

8. 총괄과 재정계획

1) 실행력 확보 추진계획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2015년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회의 T/F회의는 각 일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요 과업	T/F 구성	주요정책 평가					보고서 작성					
		의제 발굴					의제 발굴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					
				ICLEI 총회	교육			라운드 테이블				

2) 재정운영계획

- 본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 아래 분야별 전략 및 목표를 설정하고 시정사업 중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재배치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따라서 본 기본계획의 재정운영계획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함.

(단위: 백만원)

분야	투자계획				
	계	2015	2016	2017	2018
계	14,570,854 (5,432,298)	2,122,983 (558,443)	3,918,429 (772,726)	4,041,395 (1,112,126)	4,488,047 (2,773,403)
환경	8,568,057 (3,494,946)	1,190,913 (514,515)	2,287,921 (707,204)	2,471,429 (895,424)	2,617,794 (1,162,203)
사회문화	5,354,748 (437,352)	776,834 (43,928)	1,454,469 (50,522)	1,413,391 (156,702)	1,710,054 (186,200)
경제	648,049 (1,500,000)	155,236 (-)	176,039 (15,000)	156,575 (60,000)	160,199 (1,425,000)

01 계획의 개요

- 1 계획의 배경과 목적
- 2 계획의 범위와 내용
- 3 연구방법과 추진일정

1. 계획의 배경과 목적

1.1 계획의 배경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 증대

- 2012년 리우+20 이후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새천년발전목표(MDGs)를 이어받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내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가고 있음.
- 리우+20 회의에서 개발, 발전은 곧 지속가능한 개발, 발전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Post-2015 개발의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

- 2013년 5월 16일 서울시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음. 이에 따라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음.

1.2 계획의 목적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의 현황분석과 진단

-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적용됨에 따라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진단하여 국제사회 동향에 발맞추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며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제고

- 최근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여러 분야가 연관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로서 시정의 주요 정책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서울시정의 핵심원칙으로 설정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고자 함.

2. 계획의 범위와 내용

2.1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2015~2019(5년간)

- 과업내용서에 따른 과업의 시간적 범위는 2015년에서 2019년까지 5년간임.¹⁾ 하지만 서울시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을 위하여 내용상으로는 중기목표연도 2020년, 장기목표연도 2030년을 시간적 범위에 포함시켰음.
- 시간적 범위를 5년으로 설정하여 시정운영에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도입함.

2) 공간적 범위: 서울특별시 전체

-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전체인 605.96km²로 설정하며, 경기도, 인천시 등 타 지자체와의 연계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이를 포함하여 검토함.

3) 내용적 범위

- 문헌연구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 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함.
- 설문조사 실시 및 정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집단지성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기본계획은 환경, 사회문화, 경제의 각 분야별 목표, 전략, 과제, 세부사업의 체계로 구성함.
- 서울시의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평가방안을 수립함.
-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인식 확대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방안을 제시함.

1)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제5조(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2 계획의 내용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체계는 다음과 같음.

〈표 1-1〉 연구의 체계

	연구내용	연구방법
01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목적과 연구방향 설정	
02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현황과 실태분석	1 해외도시, 중앙정부, 타 지자체 현황과 실태분석 2 서울시 실태와 정책환경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03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전체계 수립 2 분야별 목표, 전략과 이행과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조사 집단지성 접근방법 (정책박람회)
04 지속가능발 전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방안 수립	1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평가지표 개발 2 지속가능발 전 지 표 평 가방안과 활용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조사 집단지성 접근방법 (정책박람회)
05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방안 제시	1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2 지속가능발전 의제 발굴 3 사회적 인식기반 확대 4 지속가능발전 교육 추진 5 법규와 제도 개선 6 지속가능발전 조직 체계 개편 7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8 총괄과 재정계획	

3. 연구방법과 추진일정

3.1 연구방법

1) 문헌연구와 자료분석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모델 검토
- 국내 지속가능발전 현황분석, 주요 외국도시의 정책사례 조사
- 서울시 현황과 정책환경 분석

2) 집단지성 접근방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집단지성 활용
- 희망서울 정책박람회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 서울시 관련 부서 공무원의 의견 제시 및 수렴

3) 전문가 설문조사

- 키워드 접근방법을 기반으로 한 서울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평가 지표 개발

3.2 추진일정

〈표 1-2〉 연구 추진일정

일시	논의내용
2014.04.11 착수보고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 및 향후 연구방향 논의
2014.04.23 제1차 사회문화 분과위원회	사회문화 분야의 연구방향에 대한 지속위 의견 수렴
2014.04.28 환경 분과위원회	환경 분야 연구방향에 대한 지속위 의견 수렴
2014.05.09 제1차 실무회의	비전체계 및 실행력 확보방안 논의
2014.06.02 제1차 기획조정회의	지속가능발전 모델 및 비전체계 논의
2014.06.12 제1차 실무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 모델 논의

2014.06.25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	지속가능발전 비전체계 및 키워드 접근방법 논의
2014.06.26	제2차 실무협의회	지속가능발전 모델 및 지표 간 연계성 논의
2014.07.03	제3차 실무협의회	지속가능발전 개념모델(동심원 모델) 및 평가모델(수레바퀴 모델) 논의
2014.07.07	제1차 중간보고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 및 모델과 지속가능발전 지표 논의
2014.07.15	제2차 사회문화 분과위원회	키워드 수정·보완 및 키워드 지표 논의
2014.07.25	제2차 기획조정회의	지속가능발전 모델 및 지표 간 연계성 논의
2014.08.26	제2차 실무회의	지속가능발전 비전체계의 전략, 과제와 실행력 확보방안 논의
2014.08.28	제3차 기획조정회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전체계와 지표 논의
2014.09.11	제4차 실무협의회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실행력 확보방안과 지속위 역할 논의
2014.09.15	제2차 중간보고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 및 비전 체계와 실행력 확보방안 논의
2014.10.15	제5차 실무협의회	지속가능발전 지표 풀(pool) 구성 및 대표지표 선정 방안 논의
2014.11.03	경제 분과위원회	경제 분야 기본계획 비전체계와 지표 논의
2014.11.10	제3차 사회문화 분과위원회	사회문화 분야 기본계획 비전체계와 지표 논의
2014.11.12	제3차 실무회의	각 분야별 전략 및 목표와 서울시 주요 계획과의 정합성 논의 및 지표의 타당성 검토
2014.11.14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대표성과 타당성 검토
2014.11.19	최종보고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연구 최종보고

02 지속가능발전의 의의

-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 2 지속가능발전 현황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1.1 지속가능발전의 논의과정

-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¹⁾,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²⁾등을 통해 과학 기술의 발전과 환경, 사회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기 시작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
- 1972년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오직 하나뿐인 지구’³⁾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체 구성을 위한 합의가 진행되면서 경제·사회·환경을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등장하게 됨.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는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⁴⁾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됨.
- 1992년 리우회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환경과 개발에 관한 27개 원칙으로 구성된 리우선언과 의제21(Agenda 21)⁵⁾,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채택하였음. 또한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논의되어야 하고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리우회의 이후 지속가능발전은 새로운 발전 모델로 주목받게 되었음.
- 리우회의 이후 1993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립하여 의제 21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합의하였음.

1) 「침묵의 봄」은 1962년 레이첼 카슨이 저술한 저서로서, 여기에서 ‘침묵의 봄’이란 환경오염으로 새들이 죽어버린 암울한 세계를 뜻함. 저자는 유독성 농약에 의한 생태계 파괴의 위협을 경고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였으며, 당시 사회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의제를 앞장서서 제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2) MIT 공과대학의 메도우즈(Dennis L. Meadows)가 이끄는 연구팀은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현재와 같은 추세로 산업화, 오염, 식량 생산, 자원 약탈이 계속된다면 지구는 앞으로 백 년 안에 성장의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이는 무한한 성장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던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

3) 1972년 6월 5일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오직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슬로건 아래 유엔 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개최되었음. 이 회의에서는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해 발생된 공해, 오염 등의 문제를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 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유엔 내에 환경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할 것을 제창하였음.

4)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는 WCED(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브룬트란트(Brundtland)의 이름을 따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도 불리며,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음.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이란 자원의 이용, 투자 방향, 기술의 발전, 제도의 변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증진하는 변화의 과정을 의미하기도 함.

5) 의제21(Agenda 21)은 지구적 수준에서 뿐 아니라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전문과 3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00개의 권고내용으로 이루어짐. 우리나라도 1996년 UNCED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발표하여 UN에 제출하였음.

- 2000년 UN에서 새천년발전목표(MDGs)⁶⁾ 8가지를 채택하여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함.
- 2012년 Rio+20 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전에 논의되었던 주요 지속가능발전 합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개최되었음. 리우+20에서 UNCSD는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의제로 채택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⁷⁾를 설정하는 것에 합의하고, 추후 유엔 총회를 통해 구체적 분야 및 목표 설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음.

〈표 2-1〉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 전개과정

회의	내용
스톡홀름 인간환경 회의 (1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논의 시작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7개 행동원칙 수립 ▪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⁸⁾ 설립 결정 ▪ 유엔인간환경선언 선포
세계환경개발위원회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제시 ▪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
리우 환경개발회의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환경보전행동계획으로 의제21 채택 ▪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설립 ▪ 3대 환경협약(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채택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가가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을 2005년까지 수립·실행해야 한다는 JPOI(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채택 ▪ 의제21 이행성과 평가 및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계획 제시
리우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천년개발목표(MDG)를 대체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설정 합의 ▪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퇴치 달성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녹색경제의 필요성을 인정 ▪ UNEP 강화

6)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각국 정부가 2015년까지 빈곤퇴치를 위해 달성하기로 한 8가지 목표로 ①절대빈곤과 기아퇴치, ②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③남녀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④아동사망률 감소, ⑤모자보건 향상, ⑥각종 질병퇴치, ⑦지속가능한 환경보전, ⑧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7)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목표시한인 2015년이 도래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수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Post-2015 개발의제’에서 17개 개발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음. 유엔이 제시한 post-2015 개발의제는 2015년 7월까지 정부간 협상을 거쳐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임.

8) 1972년 6월 스톡홀름 인간환경 회의에서 인간환경을 위한 선언·행동계획 채택 및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국제기구 설립이 건의되었고, 1972년 12월 제27차 UN총회의 결의로 설립되었음. 환경문제 조정기능 및 촉매기능 유지, 환경상태 평가 및 환경관리, 환경보호를 위한 지원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함.

1.2 Post-2015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 새천년개발목표(MDGs)

- 2000년 UN 총회에서 189개국 정부 대표들은 빈곤, 질병, 환경파괴 등과 같이 개발을 저해하는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기간 및 이행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형성하고 8개 의제 개발 목표 MDGs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되었으며,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수립한 유엔체제 하의 최초의 개발목표임.
- 8개 의제 분야 목표는 ①절대빈곤과 기아퇴치, ②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③남녀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④아동사망률 감소, ⑤모자보건 향상, ⑥각종 질병퇴치, ⑦지속가능한 환경보전, ⑧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1〉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8개 의제 개발 목표

- MDGs는 빈곤 문제의 극복 등 개도국 중심으로 설정되었으나 각 목표의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며, 빈곤의 다양한 양상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유엔은 2012년 Rio+20 회의에서 MDGs의 목표완료 시한(2015년)이 도래함에 따라 2016~2030년을 시간적 범위로 하는 Post 2015 개발의제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음.
- 유엔총회는 결정문을 통해 SDGs를 Post-2015 개발 의제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 2013년 5월 발표된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유엔고위급패널(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HLP⁹⁾) 보고서에서 제시된 Post-2015 개발의제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Post-2015 개발 의제의 5대 우선 추진방향

1. 모든 사람을 고려할 것(Leave No one Behind)
2. 지속가능한 개발을 중심에 둘 것(Put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Core)
3. 일자리 창출 및 포괄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의 변화(Transform Economics for Jobs and Inclusive Growth)
4. 평화롭고 효과적이며 개방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공제도 구축(Build Peace and Effective, open and Accountable Public Institutions for All)
5.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Forge a New Global Partnership)

- MDGs가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목표를 설정했다면, SDGs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유연한 접근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상향식 접근방법을 채택하였음.
- 그 예로, HLP 보고서의 경우 고위급 패널들이 5,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와 250여개 기업의 CEO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음.
- 또한 MDGs의 목표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설정되었으나, SDGs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시민, 기업 등 다양한 개발주체를 적용대상으로 고려하였음.
- 목표의 범위 또한 확장되어 빈곤 퇴치 등 경제중심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환경적 지속성 모두를 아우르는 개발목표를 제시함.
- 2014년 9월 유엔총회에서 공개작업반(OWG: 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¹⁰⁾이 제안한 17개 목표는 다음과 같음.

9) UN HLP(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는 UN 사무총장의 지시로 Post-2015 빈곤 감소 개발 의제 발굴을 위해 2012년 7월 결성되었음.

10) OWG(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2년 6월 Rio+20회의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수립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SDGs를 위해 출범하였으며, 30개 UN회원국이 참여하였음.

〈표 2-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
경제	기아 근절과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및 산업화 구축, 혁신 장려
	지속가능한 소비·생산패턴의 보장
사회	빈곤 근절
	건강한 삶 보장
	포용적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보장
	성평등 달성 및 여성 역량 강화
	국가내 · 국가간 불평등 완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접근가능한 사법제도 포용적 제도 구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환경	지속가능한 사용량의 식수와 위생 보장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긴급조치 시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자원 보존과 사용
	지상자원 보호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자료: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focussdgs.html>, 한겨레(2015. 1. 6) 참조

- 유엔이 제시한 ‘Post-2015 개발의제’는 2015년 7월까지 정부간 협상을 거쳐 9월 유엔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2016년부터 적용될 것임.
-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시민교육, 포용성장, 기후변화, 성평등을 중점 분야로 보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였음¹¹⁾.

11) 한겨레, 2015. 1. 6, “유엔이 제시한 ‘향후 15년 화두’는 지속가능발전”

1.3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오랜 시간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대한 합치된 의견을 구하기 어려움.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많은 정의가 존재하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내린 정의임.
-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이란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을 포함하는데 첫 번째는 욕구(needs)의 개념이며, 두 번째는 한계(limitations)의 개념임.¹²⁾
-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이 이루고자 하는 두 가지 목표는 발전(development)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임.¹³⁾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환경정책과 발전전략을 통합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환경과 발전문제의 책임이 부문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줌(WCED, 1987).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이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효율성, 형평성이 결합된 복잡하고 다중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함.
- 지속가능발전 개념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는 것은 지속가능발전 그 자체를 목표로 보기보다는 창조적인 사고와 실천의 촉매로 바라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존재함(부평구, 2011).

〈표 2-3〉 지속가능발전의 다양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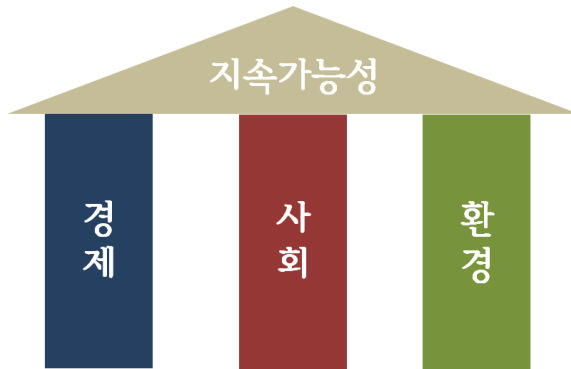
출처	의의
브룬트란트 보고서(1987)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The world Conversation Union(1991)	현 자원시스템의 용량을 해치지 않으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Meadows & Randers(1992)	지속가능한 사회란 세대를 넘어서 오래 유지되고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하며,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자원기반을 해치지 않는 것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2조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것
이창우(2012)	지속가능한 발전은 시간적으로 장기와 단기의 통합, 공간적으로 지구와 지방의 통합, 내용적으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관련 부문의 통합을 추구하는 통합 패러다임의 다른 표현

12) 브룬트란트 보고서(1987)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은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을 포함한다. 첫 번째는 욕구(needs)의 개념이며 특히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의 필수적인 욕구를 의미하고 여기에 일차적인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한계(limitation)의 개념으로 기술과 사회조직의 상태가 현재와 미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의 능력에 미치는 한계를 의미한다.

13) 발전(development)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며,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환경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을 의미한다.

1.4 지속가능발전 개념 모델

1) 세 기둥 모델(Three Pillars Model)



〈그림 2-2〉 지속가능성의 세 기둥

- ‘지속가능성’ 개념이 수립된 초기에는 경제·사회·환경 세 분야가 함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고 있다는 세 기둥 개념으로 지속가능성을 설명함.
- 하나의 기둥이 약하다면 다른 기둥이 아무리 튼튼해도 붕괴되므로 각 분야의 중요성은 동일시됨.
- 세 기둥 각각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집합적으로 중요함.

- 2005년 UN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에서는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기둥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요소인 경제개발, 사회발전, 환경보호의 통합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음.

〈표 2-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 기둥의 상호연계성

	경제	사회	환경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통합적 성장	지속가능한 생산
	고용	안정적이고 생산적이며 질 높은 일자리	식량, 에너지와 물
	총수요	사회 및 농촌지역의 기반시설을 위한 국가 재정	산업의 더 작은 생태발자국
사회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사회적 보호	지속가능한 소비
		모든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기본 서비스로의 접근	변화된 태도
		더 나은 조직의 기능과 책임	더 나은 환경적 책임감
환경	성장의 한계의 확장	사회-생태 시스템의 균형	자연자원 및 생태계의 책임감있는 관리
		더 나은 식량, 물, 대기질	생물다양성
		빈곤층의 더 나은 소비	생물서식지 개선

출처: UN ESCAP¹⁴⁾(2013), Asia-Pacific Aspirations: Perspectives for a Post-2015 Development Agenda, Asia-Pacific Regional MDGs Report 2012/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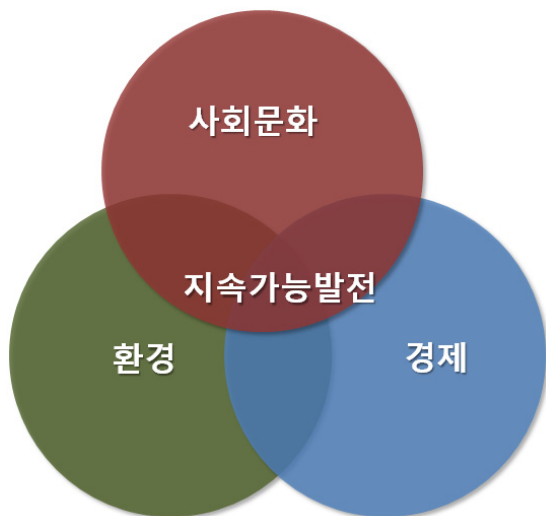
14) United Nations East and North-East Asia Office

2) 3개의 원 모델(Three Circles Model)

-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경제, 환경, 사회 각 분야가 상호작용하는 3개의 원으로 나타낸 다이어그램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3개의 원 모델에서 지속가능발전이란 환경, 사회문화, 경제가 모두 중첩되는 곳을 의미함.
- 이러한 3개 원 체계의 이론적 함의는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 사회, 환경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성이 충족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세 가지 영역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임.
- 경제, 사회, 환경 세 가지 영역의 균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 모델을 비판하는 견해도 존재함. 이들은 경제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도 환경의 토대 위에서 존재할 수 있지만 환경은 경제와 사회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와 사회보다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Bazan and Slawewski, 2002).

3) 동심원 모델(Concentric Circles Model)

- 동심원 모델에 따르면 경제는 가장 안쪽 원에 위치하는데, 이는 경제의 모든 부분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사회)을 필요로 하며, 경제발전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임.
- 사회는 경제와 환경의 중간에 위치하는데, 인간의 기본적 욕구(공기, 식량, 물 등)는 자연을 통해 충족될 수 있으며, 또한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임.
- 동심원 모델은 경제, 사회, 환경의 상호의존성을 적절하게 나타내는 모델이며, 생태학적 평가 모델로서 가치를 지님(Bazan and Slawewski, 2002).



〈그림 2-3〉 지속가능발전 3개의 원 벤다이어그램



〈그림 2-4〉 동심원 모델

4) 지속가능발전 개념 모델 검토 결과

-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사회·환경 세 영역이 모두 충족되는 범위를 의미한다는 것에 대부분이 동의함에 따라 개념 모델 또한 변화하여 왔음.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바라보는 관점과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모델은 다양해질 수 있음.
- 개념 모델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동심원 모델을 채택함. 서울의 경제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며,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사회문화적 기반이 약화되어 왔음. 최근 국제사회는 환경의 수용능력 및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동심원 모델이 서울시에 가장 적합한 개념 모델이라고 판단됨.
- 서울시의 동심원 모델에서 환경은 삶의 터전과 수용능력의 한계를 나타내며, 사회문화는 경제와 환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함.
- 경제는 동심원 모델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며, 건강한 경제는 건강한 사회를 필요로 하고 이는 건강한 환경에 달려 있음.



〈그림 2-5〉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개념 모델(동심원 모델)

2. 지속가능발전 현황

2.1 해외 현황

- 1988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for Environmental Development)의 브룬트란트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가 발간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하였음.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유럽에서 먼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EU는 UNCSD(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1996년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적용시키기 위해 DSR구조¹⁵⁾를 적용한 EU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이듬해 발표하였음.
- 1999년 영국의 블레어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4가지 목표(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적진, 환경의 효율적인 보호, 자연자원의 적절한 이용, 높고 안정된 수준의 경제적 성장과 고용의 유지)를 수립하였음.
- 2000년 영국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SDC: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가 만들어지면서 영국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
- 영국 이외에도 포르투갈,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 헝가리 등에도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지속가능발전 정책자문과 연구를 수행하였음.
- 미국은 여러 주(州)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지표를 수립하여 주(州)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있음.
- 아시아에서도 한국, 홍콩, 대만, 호주 등의 국가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는 추세임.

15) DSR구조란 'Driving force - State - Response'를 의미한다. Driving force(추진력)는 인간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며, State(상태)는 환경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로 환경의 상태, Response(대응)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의미함. OECD의 환경 지표는 이와 유사한 PSR(Pressure - state - Response)모형을 적용하였는데, Pressure(압력)는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압력, State(상태)는 자연자원의 양과 질에 대한 영향, Response(대응)는 환경적·일반경제적·분야별 정책에서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의미함.

〈표 2-5〉 해외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현황

구분		위원회	비고
유럽	영국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지속가능발전 지표 수립
	포르투갈	National Council on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자문 및 수립
	벨기에	Belgian Feder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elgium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자문
	독일	German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자문
	헝가리	Hungarian National Council for SD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북미	캐나다	Sustainable Development Advisory Council (SDAC)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지속가능발전 지표 수립
남미	칠레	Council of Ministers for Sustainability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자문
	콜롬비아	National Council for Economic and Social Policy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자문
아시아	베트남	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지속가능발전 지표 수립
	인도	India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The Energy and Resources Institute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자문
	대만	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지속가능발전 지표 수립
	태국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NESDB)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방글라데시	Sustainable Development Monitoring Council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아르메니아	Republic of Armenia National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자문
오세아니아	호주	National Sustainability Council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지속가능발전 지표 수립
아프리카	모리셔스	Maurice Ile Durable (MID) Commission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자문

〈표 2-6〉 해외 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현황

도시		위원회	비고
영국	런던	London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삶의 질 지표 보고서 발간
캐나다	벌링턴	Burlington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지속가능발전 정책 자문
미국	그린즈버러 (노스캐롤라이나주)	Community Sustainability Council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과 지속가능발전 지표 수립
	쿡 카운티 (일리노이주)	Cook County Sustainability Advisory Council	지속가능발전 정책 자문
	시애틀	Planning, Land Use and Sustainability Committee	지속가능발전 정책 자문
	루이스빌 (켄터키주)	Committee on Sustainability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던우디 (조지아주)	Sustainability Committee	지속가능발전 정책 자문
	그레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Natural Resources and Sustainability Committee (NRSC)	지속가능발전 정책 자문
호주	브리즈번	Environment, Parks and Sustainability Committee	지속가능발전 정책 자문과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 수립
중국	홍콩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 정책 자문

자료 : <http://www.ncsds.org/index.php/sustainable-development-councils>

2.1 국내 현황

- 우리나라는 1995년 부산을 시작으로 2002년 전국 지자체의 90%가 ‘지방의제21’을 작성하여 유엔정상회의에 모범사례로 소개된 바 있음.¹⁶⁾
-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은 2000년 9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참여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2005),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2006),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2007)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이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2008년 2월 4일 우리나라에서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시행하였음.
- 이명박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음.¹⁷⁾
-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2009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음.¹⁸⁾
-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2011년 12월 「인천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2011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이후 환경부 소속으로 출범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음.
- 충청남도는 2012년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로 개정하였음.
- 2013년 서울시에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음.
- 2013년 경기도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작성하였음.
-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소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였음.

16) 지방의제21은 총체적으로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지역 수준에서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각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을 지역 주민과 합의하여 1996년까지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음. 우리나라는 1995년 처음으로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음(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

1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준용한 조문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4조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제5조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제6조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등 총 22개 조문 중에서 핵심조항 6개가 삭제되었으며, 기타 조문도 수정되었음(희망제작소, 2013).

18)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서울시는 2010년 11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하여 2011년에 동 조례를 폐지하였음(희망제작소, 2013).

- 2014년 2월 국회에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복원하려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

〈표 2-7〉 국내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현황

지자체	조례명	내용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2013)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이 서울시 시정 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 주요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등을 수행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12)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며 정책제안,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경기도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2013)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과 매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심의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수행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12)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위원회는 평가지표 개발,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 시장 자문 사항, 지속가능발전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2)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과 평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

03 국내외 사례 검토

- 1 지속가능발전 해외 사례
- 2 지속가능발전 국내 사례
- 3 시사점과 서울시 적용방안

1. 지속가능발전 해외 사례

1.1 환경성과지수(EPI)

1) 수립 배경

- 지속가능발전 평가 체계의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지표(SDI: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 환경지속성지수(ES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¹⁾, 환경성과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가 있음,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의 제40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1996년 UNCSD(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 시안을 발표하였음, 또한 2001년부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²⁾)에서는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를, 2002년부터는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를 발표하 바 있음.
- 환경성과지수는 기존 환경관련 지수들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평가결과를 정책지침에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책수립과 집행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립되었음(김유나·문태훈, 2008).

2) 개념과 현황

(1) 개념

- 환경성과지수(EPI)는 환경개선정도를 계량화한 지수로서 국가별 환경개선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음. 미국 예일대 환경법·정책센터 및 컬럼비아대 국제지구과학 정보센터가 공동으로 환경, 기후변화, 보건, 농업, 어업, 해양 분야의 20여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국가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2년마다 세계경제포럼(WEF)를 통하여 발표하고 있음.
- EPI 지표 구성은 평가할 때마다 변화되어 왔음. 2002년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에는 대기질, 수질, 기후변화, 국토보전의 4개 정책지표와 13개의 측정변수로 구성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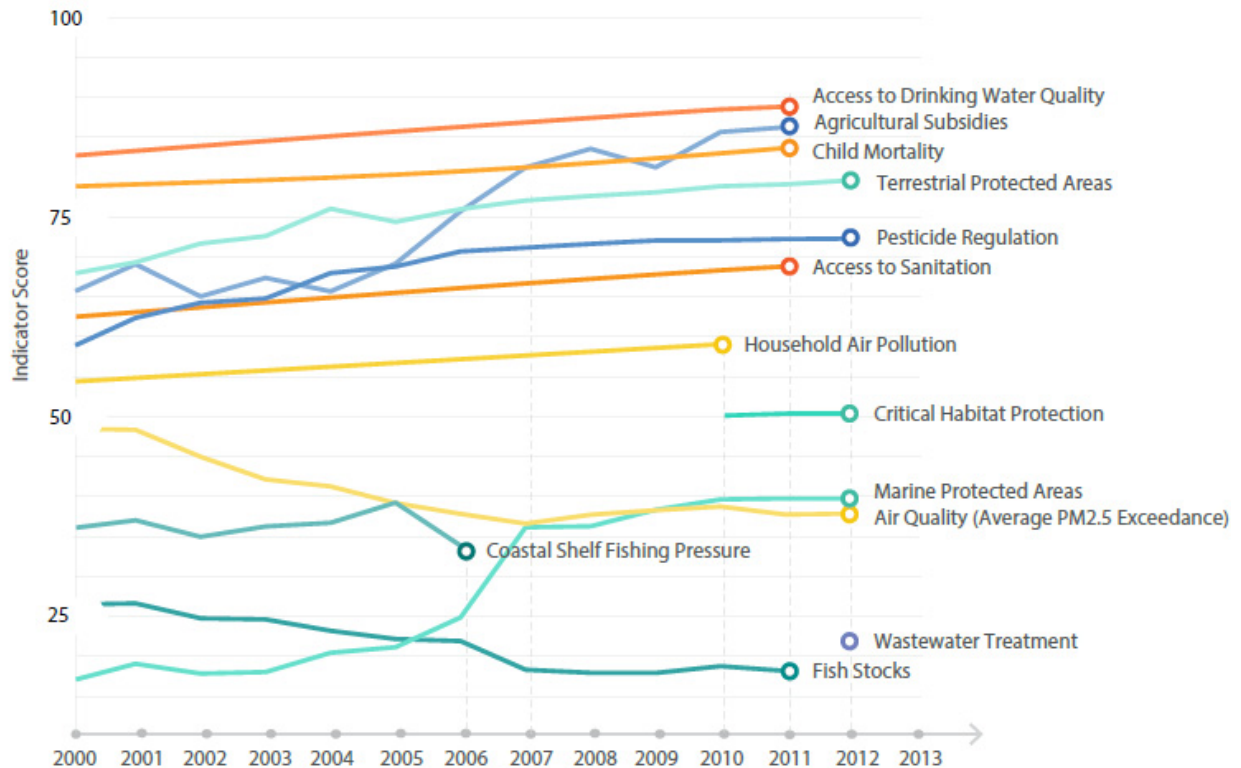
1) 환경지속성지수(ESI)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후원으로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연구하여 발표한 지수로서 환경, 사회, 경제 조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계량화한 지수를 의미함. 지수는 환경의 질, 환경오염부하량, 환경위해취약성, 사회·제도적 대응능력, 국제적 책임공유의 5개 분야와 7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은 2002년 142개국 중 136위, 2005년 146개국 중 122위를 차지하였음.

2) 세계경제포럼은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들이 모여 세계 경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연구하는 비영리재단의 성격을 띤 단체로서 1971년 유럽경영자 포럼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점차 확대되어 1987년 세계경제포럼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매년 1월 하순 스위스 알프스에 위치한 다보스에서 개최되어 다보스포럼이라고도 불림.

었으며 23개국을 대상으로 환경성과를 제시하였음. 이후 예일대학교 환경법 및 정책 연구센터(YCELP: The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 Policy)와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지구과학정보네트워크센터(CIESIN: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Earth Science Information Network)의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발표한 2006년 EPI는 환경보건, 대기질, 수자원, 생물다양성, 자연자원, 지속가능에너지 등 6개의 정책지표와 16개의 측정변수로 구성되어 133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음(차용진, 2012).

(2) 전 세계적 추세 변화

- 2000~2013년 기간 동안의 전 세계적 추세를 살펴보면 농업보조금의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며, 해양보호 또한 아직 낮은 점수대에 머물고 있지만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식수접근성 및 영유아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와 어업강도, 초과어획량 지표 등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3-1〉 2000~2013년 EPI 지표 성과 변화 추세(YCELP, 2014))

- 2014년 EPI에서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EPI 변화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Back-casted 점수를 사용하였음. Back-casted 점수란 2014년 EPI의 체계, 지표, 지수화 방식을 2002년부터 누적된 각 연도별 자료값에 반영하여 점수와 순위를 재산정한 것을 의미함(환경부, 2014).
- Back-casted 방식으로 지난 10년간 환경성과의 변화를 검토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변화율은 약 +7.37%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성과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남미국가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의 환경성과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임.

(3) 우리나라의 추세 변화

- 최근 EPI지수의 구성 및 우리나라의 지표별 순위의 변화는 <표 3-1>과 같으며, 싱가포르(4위)를 제외하면 상위 10개 국가는 모두 유럽 국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 2014년 EPI 평가 상위 10개 국가

순위	국가	점수
1	스위스	87.67
2	룩셈부르크	83.29
3	오스트레일리아	82.40
4	싱가포르	81.78
5	체코	81.47
6	독일	80.47
7	스페인	79.79
8	오스트리아	78.32
9	스웨덴	78.09
10	노르웨이	78.04

- 2014년 EPI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178개국 중 43위로 평가되었음. 2010년 이후 백분율 종합순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2010년 상위 57.7%, 2012년 상위 32.6%, 2014년 24.2%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표 3-2> 우리나라 EPI 종합순위 변화

연도	2002	2006	2008	2010	2012	2014
순위	15위/23개국 (65.2%)	42위/133개국 (31.6%)	51위/149개국 (34.2%)	94위/163개국 (57.7%)	43위/132개국 (32.6%)	43위/178개국 (24.2%)

자료: 환경부 EPI 관련 보도자료

- 특히 실내공기오염, 물 위생의 지표는 1위를 차지하여 매우 우수하게 평가되었음. 실내공기오염 지표는 조리용 1차 연료로 고체연료(나무, 석탄, 곡물, 농업, 폐기물, 축분 등)를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100점을 받아 10년 넘게 1위를 차지하였음. 물 위생 지표 또한 2002~2014년 기간 동안 100점을 유지하고 있음.
- 하수처리 과정을 거치는 물의 비율을 의미하는 하수처리 지표는 2014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18위로 좋은 성과를 기록하였음. 특히 상위 20개 국가 중 호주, 싱가포르, 우리나라만이 아시아 국가라는 점이 주목할 만함.
- 그러나 2012년에도 하위권이었던 농업보조금, 미세먼지는 여전히 낮은 순위를 나타냈으며, 기후변화 분야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순위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미세먼지 지표는 PM2.5의 초미세먼지를 인구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며, 우리나라는 178개 평가대상국 중 171위로 평가되었음. 2007년 최하점인 46.91점을 기록한 이후 점차 회복하고는 있으나 절대적인 수준은 아직 낮은 실정임. 특히 중국은 178위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과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음.
- 농업보조금이 환경에 가하는 압력을 보조금의 규모로 평가하는 농업보조금 지표는 평가가 시작된 2002년부터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 지표는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의 특징 및 유통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단기기간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환경부, 2014).

3) 2014년 EPI 평가

(1) 구성체계

- 환경성과지수(EPI)는 국가별 환경 데이터를 반영한 총 2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표들은 환경보건, 생태계 건전성이라는 2가지의 주요 목표와 그 하위체계인 9개의 범주에 따라 구분되어 있음.
- EPI의 주요 목표인 환경보건은 환경적 위협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며, 생태계 건전성이란 생태계 보호 및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 환경보건과 생태계 건전성의 2가지 주요 목표는 다시 9개의 범주로 구분되며, 환경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갖는 환경성 질병 부담, 대기보건, 물보건, 수자원, 생물다양성, 삼림, 해양/어업, 농업, 기후변화로 이루어져 있음.
- 2014년 EPI의 지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되었음. 예를 들어 SDGs에서 논의되고 있는 물 분야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하수처리’의 지표를 신규로 도입하였음. 더불어 기후변화 분야에 새로운 지표들을 도입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자 하였음.

〈표 3-3〉 EPI 지수 및 지표별 순위 변화

	범주	2008		2010		2012		2014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환경보건	환경성 질병부담	환경성질병부담	107	환경성질병부담	37	영유아사망률	23	영유아사망률	29
	대기보건	실내공기오염	2	실내공기오염	1	실내공기오염	1	실내공기오염	1
		도시분진	68	실외공기오염	76	미세먼지(PM2.5)	95	미세먼지(PM2.5) 평균노출인구	171
						—		미세먼지(PM2.5) 기준초과노출인구	171
		지역오존	116			—			
	물보건	식수공급	65	식수 접근성	77	식수 접근성	50	식수 접근성	63
		물위생	1	물위생	68	물위생	1	물위생	1
생태계 건전성	대기 오염	So2	148	So2	145	일인당 So2	58		
				Nox	158	GDP당 So2	17		
				NMVOc	156				
		지역오존	118	오존	132				
	수자원	수질	21	수질지수	30	수량변화	84	하수처리	18
		물부족	68	수자원압력지수	87	—			
				수자원회소성지수	1				
	생물 다양성	보전유효성	111	생물군보호	119	생물군보호	96	보호지역/국토면적	124
								보호지역/세계보호구역 면적	121
		해양보호지역	79	해양보호	53	해양보호	42	해양보호	45
		주요서식처보호	—	주요서식처보호	NA*	주요서식처보호	NA*	주요서식처보호	NA*
		생태계 위험지수	127						
	삼림	입목축적변화	1	입목축적변화	1	입목축적변화	1		
				삼림지역	85	삼림지역	79		
						산림손실	53	산림손실	62
	해양/ 어업	해양보호지역	78	해양생태계	1				
		어업강도	91	어업강도	104	어업강도	95	어업강도	83
						초과어획량	71	초과어획량	12
	농업	농업용수부족	1	농업용수집약도	108				
		농업보조금	145	농업보조금	153	농업보조금	120	농업보조금	152
		농약규제	84	농약규제	1	농약규제	1	농약규제	18
		집약적 경작	65						
		화전농업	115						
	기후 변화	일인당온실 가스배출량	103	일인당온실가스 배출량	118	일인당 CO ₂ 배출량	116		—
		발전부문온실가스 집약도	68	발전부문온실 가스집약도	78	KWH당 CO ₂ 배출량	77	KWH당 CO ₂ 배출량 추세	91
		산업부문온실가스 집약도	98	산업부문온실 가스집약도	146	GDP당 CO ₂ 배출량	91		—
						재생에너지	110		—
						—		탄소집약도 추세	90
						—		탄소집약도 추세변화	112
						—		전력 접근성	91

자료: 환경부 EPI 관련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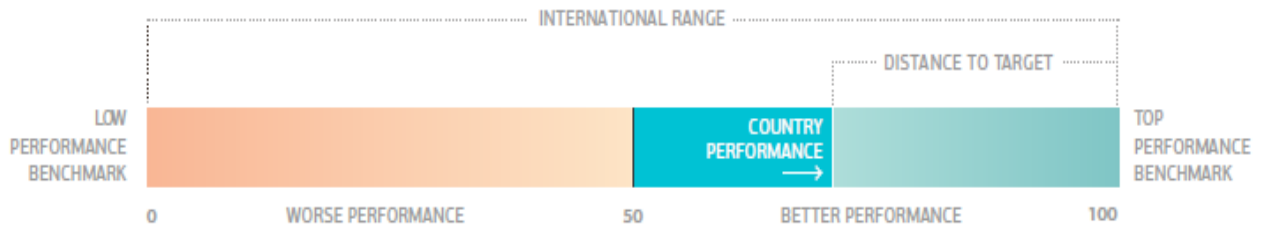


출처: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 Policy(2014)

〈그림 3-2〉 2014년 EPI의 구성체계

(2) 평가체계

- 2014년 EPI는 종전에 비해 평가 대상 국가를 178개국으로 크게 확대하였으며, 군소도서 개발국(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거 포함되었음.
- EPI 지수의 계산은 원데이터를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것부터 시작됨. 이를 위해 각각 다른 개별 국가의 인구, 면적, 경제규모 등을 표준화해야 하며 정규분포에서 지나치게 벗어나 있는 국가가 있는 경우 로그변환 기법을 적용하였음.
- 비교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변환한 후 목표근접치에 의한 표준화 값을 이용하여 점수를 계산함. 목표근접치의 값은 0부터 100까지의 값을 갖는데, 해당 국가의 자료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함. 어느 국가의 자료 값이 100보다 높을 경우에는 모두 100점으로 처리함. 목표근접치의 계산은 $\{(\text{국제적 범위}) - (\text{목표와의 차이}) / \text{국제적 범위}\} \times 100$ 으로 계산됨.



출처: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 Policy(2014)

〈그림 3-3〉 목표근접치 계산 개념도

- 이후 각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침. 가중치는 일반적으로 자료의 질, 정책적합성에 의해 부여됨. 만약 특정 지표의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중치는 낮아지게 됨. 마지막으로 환경보건과 생태계 건전성에 각각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이를 합계하여 지수를 산출하였음.
- 2012년 EPI에서 환경보건 분야와 생태계 건전성 분야의 가중치는 30:70이었으나, 2014년 EPI는 40:60으로 조정되었음. 이는 각 분야에 해당하는 지표의 내용과 개수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음. 특히 환경보건 분야의 대기 보건, 물 보건 부문은 2012년에 비해 약 1.8배 가중치가 증가하였고, 생태계 건전성 분야의 수자원 부문 지표는 세부 지표 내용이 전문 교체되었을 뿐 아니라 가중치 역시 약 1.75배 증가하였음. 반면, 농업과 기후변화·에너지 부문의 경우 가중치가 각각 5.83%와 17.5%에서 3%와 15%로 감소하였음(환경부, 2014).

〈표 3-4〉 2014년 EPI 지표별 가중치

목표	범주	지표
환경보건 (40%)	환경성 질병부담 (13.33%)	영유아사망률 (13.33%)
	대기보건 (13.33%)	실내공기오염 (4.44%)
		미세먼지 평균노출인구 (4.44%)
		미세먼지(PM2.5) 기준초과노출인구 (4.44%)
	물보건 (13.33%)	식수 접근성 (6.67%)
		물위생 (6.67%)
생태계 건전성 (60%)	수자원 (15%)	하수처리 (15%)
	생물다양성 (15%)	보호지역/국토면적 (3.75%)
		보호지역/세계보호구역면적 (3.75%)
		해양보호 (3.75%)
		주요서식처보호 (3.75%)
	삼림 (6%)	산림손실 (6%)
	해양/어업 (6%)	어업강도 (3%)
		초과어획량 (3%)
	농업 (3%)	농업보조금 (1.5%)
		농약규제 (1.5%)
	기후변화 (15%)	KWH당 CO ₂ 배출량 추세 (국가별 GDP와 연계)
		탄소집약도 추세 (국가별 GDP와 연계)
		탄소집약도 추세변화 (5%)
		전력 접근성 (점수산정 불포함)

4) EPI 검토 결과와 시사점

- 환경성과지수(EPI)는 단순하고 명확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여 환경에 대한 각국의 노력을 독려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다보스포럼(WEF)에서 발표함으로써 인지도가 높아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환경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반영하고 있음.
- 그러나 평가 체계와 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가장 대표적으로 평가 지표, 지표별 가중치, 평가 대상 국가가 자주 변경되어 일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많은 국가를 평가하기 때문에 자료의 가용성 등으로 인해 지표별로 활용하는 통계의 기준연도가 통일되지 못하고, 주로 과거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환경성과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지표 평가 시 국가를 소득별로 그룹화하여 가중치를 주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최빈국, 개도국, 선진국 간의 형평성을 조율하고자 하였으나 선진국 중심의 지표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불평등과 같은 새로운 환경 위기 요소로 인한 개도국의 취약한 여건을 보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또한 존재함(환경부, 2014).
- 환경부(2014)에서는 향후 EPI의 개선방향을 지속가능성 개념의 구현 측면,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 측면, 정책적인 지침 활용성 측면에서 제시한 바 있음. 먼저 지속가능성 개념의 구현이란 기존 개발된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수와 EPI를 비교 검토하여 EPI의 본래 취지인 지속가능성의 측정을 되살리고 강조하자는 의미임. EPI의 한계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 문제에 대하여는 지표 각각을 재검토하여 지표별로 정책 범주와 그에 따른 환경목표, 환경성과를 반영하기에 적합한 요소인지를 판단하였음.
- 더불어 선진국 중심의 지표체계에서 새로운 지표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하는 한편, 개선된 EPI 체계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발맞추어 연계해 나가야 함을 시사하였음.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또한 앞서 살펴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EPI 변화의 추세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SDGs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체계 구성 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EPI는 지표 평가 결과 분석 시 향후 고려사항으로 도시 지속가능성 지수(Urban Sustainability Index)의 연구를 제안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제6장의 지표 평가결과와 제7장 실행력 확보방안 부분에 서술하였음.

1.2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 1996년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별 환경성과의 평가와 정부정책 결정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지표 기본체계를 발표하였음.
- 지표체계는 사회, 경제, 환경, 제도 등 4개 분야, 28개 영역, 132개 지표로 구성되었음.
- 수정보완을 통해 2001년 적용 가능한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 57개를 선정하였으며,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등 4개 분야, 15개 영역, 38개 항목, 5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표 3-5〉 UNCSD의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 (2001)

분야	영역	항목	지표
사회	1. 형평성	1-1 빈곤	1) 빈곤인구비율
			2)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3) 실업률
		1-2 남녀평등	4)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2. 건강	2-1 영양상태	5) 유소년 영양 상태
		2-2 사망률	6) 영아 사망률
		2-3 공중위생	7) 출생시 기대여명
			8) 하수처리 향유 인구
		2-4 식수	9) 안전한 식수 접근 인구
			10) 주요한 보건시설 접근 인구
			11)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12) 피임 보급률
	3. 교육	3-1 교육수준	13) 중등학교 순졸업률
		3-2 비문맹	14) 성인 비문맹률
	4. 주택	4-1 생활환경	15) 1인당 바닥 면적
	5. 안전	5-1 범죄	16) 1000인당 신고된 범죄 수
	6. 인구	6-1 인구변화	17) 인구 성장률
			18) 도시의 공식적/비공식적 거주인구
환경	1. 대기	1-1 기후변화	19) 온실가스 배출
		1-2 오존층	20) 오존파괴물질의 소비
		1-3 대기질	21) 도시내 오염물질의 대기농도
	2. 토지	2-1 농업	22) 경작에 적합하고 영구적인 경작지
			23) 비료 사용
			24) 농약 사용
		2-2 산림	25) 토지지역 중 산림지역 비율
			26) 목재 벌채 정도
		2-3 사막화	27) 사막화 영향을 받는 토지
		2-4 도시화	28) 도시의 공식적/비공식적 거주면적

	3. 해양/연안	3-1 연안지역	29) 연안 해조류 농도
			30) 해안지역 총 인구 비율
	4. 담수	3-2 어업	31) 주요 종의 연간 수확 사용 변화
		4-1 수량	32) 지하수 및 지표수의 연간 취수량
		4-2 수질	33) BOD
	5. 생물다양성		34) 담수 내 대장균 밀도
		5-1 생태계	35) 주요 보호 지역
			36) 전체 대비 보호구역 비율
		5-2 종	37) 주요 다양한 종
			38) 1인당 GDP
경제	1. 경제구조	1-1 경제이행	39) GDP의 투자분
		1-2 무역	40)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균형
		1-3 재정상태	41) 부채/GNP
	2. 소비/생산		42) GNP대비 총 ODA
		2-1 물질소비	43) 원료이용도
		2-2 에너지 사용	44)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
			45) 재생가능에너지자원 소비 비중
			46) 에너지 이용도
		2-3 폐기물 관리	47) 산업 및 도시 고형폐기물 발생량
			48) 유해폐기물 발생량
			49)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50)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제도	1. 제도형태	2-4 운송	51) 1인당 수송모드에 의한 승차거리
		1-1 지속가능성 실현	52)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2. 제도용량	1-2 국제협력	53) 인준된 국제적 합의 사항의 수행
		2-1 정보접근	54) 1000인당 인터넷 계정 및 라디오 수
		2-2 정보인프라	55) 1000인당 주전화선 수
		2-3 과학과 기술	56) GDP 대비 R&D에 대한 지출
		2-4 재해준비와 반응	57)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경제적 손실

자료: 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01),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 and Methodologies

1.3 OECD의 환경지표

- OECD는 1989년 대상국들의 화합과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여건을 마련하고 현행 정책 분석과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환경지표를 개발하였음.
- 개발목적은 크게 첫째, 국가별 환경적인 성장과 성취도 측정, 둘째, 정책통합 및 연계 등 모니터, 셋째, 효과적인 국제비교로 정의됨(국토교통부, 2013).
- 환경지표는 환경, 사회·경제지표 등 2개 분야, 15개 영역, 3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표 3-6〉 OECD 환경지표

분야	이슈	지표
환경	1. 기후변화	1) CO ₂ 배출 수준
		2) 온실가스 밀도
	2. 오존층 파괴	3) 오존층 파괴물질
		4) 성층권 오존
	3. 대기질	5) 대기배출물 수준
		6) 도시대기질
	4. 폐기물	7) 폐기물 발생
		8) 폐기물 재활용
	5. 수질	9) 강의 수질
		10) 폐수 처리
	6. 수자원	11) 수자원 이용수준
		12) 수도 공급 및 공급 가격
	7. 산림자원	13) 산림자원 이용수준
		14) 산림 및 임야지
	8. 수산자원	15) 수산 어획 및 소비: 국가
		16) 수산 어획 및 소비: 세계 및 지역
	9. 생물다양성	17) 멸종위기 종
		18) 보호 지역
사회 및 경제	10. GDP 및 인구	19) GDP
		20) 인구성장 및 인구밀도
	11. 소비	21) 개인 소비
		22) 정부 소비
	12. 에너지	23) 에너지 수준
		24) 에너지 공급 구조 및 변화
		25) 에너지 가격
	13. 교통	26) 도로 교통 및 자동차 보유 수준
		27) 도로 밀도
		28) 연료 가격 및 세금
	14. 농업	29) 질소 및 인 비료의 사용 수준
		30) 가축 밀도
		31) 농약 사용 수준
	15. 지출	32) 오염 저감 및 통제(PAC) 비용
		33) 공식적 개발 지원(ODA)

자료: OECD, 2001, OECD Environmental Indicator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1.4 호주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1)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le Australia Report)

- 호주 국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2012년 10월 지속가능성, 환경, 물, 인구, 지역사회와 관련된 관료들에게 지속가능성 안건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구하여 설치되었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2년마다 호주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임.
- 호주의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현재 상황이 갖는 함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으며,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임.
- 호주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지표체계를 먼저 설정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지표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요한 이슈와 도전과제들을 토론하였음.
-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지표와 데이터를 통해 호주의 지속가능성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우선과제는 무엇인지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음.
- 보고서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정부, 기업,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계획임.

2) 지속가능성 지표(Sustainability Indicator)

- 호주의 지속가능성 지표는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음.
- 지표체계는 크게 사회 및 인적자본, 자연 자본, 경제 자본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인구, 문화적 다양성, 지역간 이동, 토지 이용과 같은 상황지표도 수립하였음.
- 지속가능성 지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작성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안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변화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음.

〈표 3-7〉 호주 국가 지속가능성 지표

분야	항목	지표(굵은 글씨: 대표지표)
사회 및 인적 자본	기술 및 교육	교육 성취도 , 초등 교육, 조기 개발, 연구 및 개발
	건강	자신이 생각하는 육체적 건강 정도 , 기대수명, 정신적 건강, 흡연을, 비만도
	지역사회 참여	주요 기관에 대한 믿음의 정도 , 자원봉사, 문화활동 참여도, 스포츠 참여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도
	고용	비정규직 고용, 실업률 , 가사 노동, 고용률
	안전	안전감 , 개인적 범죄의 발생정도, 가정 범죄의 발생정도
자연 자본	기후 변화	온실가스 배출 , 관측된 기후변화, 에너지 원단위, 지역 내 저장된 탄소의 양
	대기	대기질
	토지, 생태계, 생물다양성	토종 식물의 범위, 지표 식물 , 생태계 보호(보호 지역)
	물	수질 , 물소비량, 물수요에 대한 이용률
	폐기물	쓰레기매립지에 버려진 폐기물의 양 , 재활용률
	자연 자원	수산자원량 , 산림자원, 광물연료와 화석연료 전환
경제 자본	부와 수입	가구순자산 , 소득양극화, 재정적 압박
	주택	주택보급률 , 주택구입능력
	교통 및 커뮤니케이션	자전거와 보행자가 이동하는 거리 ,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 직장까지 가는 교통수단, 광대역 인터넷 연결
	생산성과 혁신	생산성 , 사업 혁신
상황 지표	인구	인구 규모, 인구 밀도, 성별 및 연령
	문화적 다양성	영어구사능력, 원주민, 출생국가
	지역간 이동	국가 간 이동, 국내 이동
	토지 이용	토지이용 변화

자료 : National Sustainability Council, 2013, Sustainable Australia Report

1.5 오스트리아 지속가능성 지표

- 오스트리아 농림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농업 및 산림의 생산성 강화, 깨끗한 수질과 대기질, 자원의 보존, 농촌 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성 지표를 수립하였음.
-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목적으로 설정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설문조사를 통해 56개의 지표 중 26개의 대표지표를 선정하였음.

〈표 3-8〉 오스트리아 지속가능성 지표

분야	대표지표
세대내 및 세대간 정의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
국제적 정의	공적개발원조 (ODA)
자유	권위주의 지수 (Authoritarianism index)
평화와 안전	위험에 처한 빈곤층의 변화
거버넌스 및 참여	단체 내에서의 오스트리아인의 신뢰도
건강과 웰빙	건강수명
영양상태	체질량 지수(BMI)
복지	1인당 GDP
직업 교육의 수준	연령, 성별에 따른 실업률
여가생활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직장가 가정생활의 양립 가능성
생활 및 생활공간	사회적 및 기능적 혼합(mixing)
이동성	인구 이동에 대한 접근성
문화와 예술	문화 활동에 대한 공공지출
교육 및 연구	20-24세 청년의 교육 성취도
기후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	PM10 기준 초과정도
방사선	UV 방사선 강도
에너지 및 자원흐름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집약도, 신재생에너지, 자원투입량 (직접물질투입량, 국내물질소비량)
자연경관	경관 변화, 토지이용의 변화
생태계	생물종 서식지 지표로서의 조류 종 및 난과 식물
물	지표수질, 지하수질, 유수량
토양	토양 이용, 비이용토지의 비율
유독성 물질과 환경적으로 해로운 물질	화학적 지표, 특정 화학물질의 소비량
소음	소음 공해

자료 : Federal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Environment and Water Management, 2013, Sustainability barometer 2013.

1.6 미국 워싱턴 D.C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워싱턴 D.C는 시민의 형평성과 번영을 보장해주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계획 수립단계부터 수천 명의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음.
- 2011년 9월부터 계획팀은 4,700명 이상의 사람들과 180번 이상 대화를 나누었고 도시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1,300개 이상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출받음.
-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장은 9개 분야의 워킹 그룹을 만들었음(건축 환경, 기후, 에너지, 식량, 자연환경, 교통, 폐기물, 물, 녹색경제).
- 계획 수립과정에서 녹색리본위원회(Green Ribbon Committee)³⁾와 녹색캐비닛(Green Cabinet)⁴⁾ 등 두 개의 중요 자문 그룹이 기본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음.
- 각 분야마다 목표, 타겟, 이행계획(actions)이 수립되었으며, 이들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도 포함하고 있음.
- 계획 수립 후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각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확산시키는 한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시킴.

〈표 3-9〉 미국 워싱턴 D.C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분야별 목표

분야	목표
일자리(Jobs)	녹색 상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일자리 수를 5배 증가
건강(Health)	도시 비만을 50% 감소
건축환경(Built Environment)	250,000명의 신규 · 현재 거주자를 유입 · 유지
기후(Climate)	온실가스 배출 50% 감축
에너지(Energy)	도시 에너지 소비량 50%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50% 증가
식량(Food)	인구의 75%가 로컬푸드 섭취
자연환경(Nature)	지역의 40%에 캐노피(tree canopy) 조성: 모든 거주민들이 자연녹지에 도보로 10분 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기
교통(Transportation)	보행, 자전거, 환승 분담률 75% 달성
폐기물(Waste)	모든 분야의 재활용 및 저소비를 통한 폐기물 제로화 달성
물(Water)	도시 내의 모든 수로를 낚시가 가능하고 수영할 수 있도록 만들기; 도시 전역지역의 75%를 빗물 재활용을 위해 사용
녹색 경제(Green Economy)	지역기반 소규모사업 3배로 발전. 도시 실업률 50% 감소

자료 : District of Columbia, 2012, A Vision for a Sustainable DC.

3) Green Ribbon Committee: 공공, 민간, 비영리 부문에서의 지역사회 리더들로 구성되었으며 계획의 큰 그림(밀바탕)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함.

4) Green Cabinet: 시 공무원들로 구성되었으며 부서간 조정을 활성화하고 시정부가 각 부서별(그리고 부서별로 공유되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결정함.

1.7 미국 뉴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1) 기본계획

- 2007년 뉴욕시는 뉴욕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PlaNYC를 수립하였으며, 4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 수정된 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후 2014년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분야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된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에 더욱 중점을 두었음.
- 이전 보고서와 같이 10개 분야(주택 및 근린, 공원 및 공공 공간, 오염된 토지, 수로, 물공급, 교통, 에너지, 대기질, 고체 폐기물, 기후변화)의 목표 성취도를 모니터링하였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32개의 단기 세부목표를 정하였으며, 이러한 장기비전과 단기 세부계획의 결합은 지속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로 작용함.

〈표 3-10〉 미국 뉴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분야별 목표

분야	목표
주택 및 근린	적당한 가격과 지속가능한 주택 및 이웃을 만드는 동시에 100만 명 이상의 거주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
공원 및 공공 공간	모든 사람들이 공원에서 도보 10분내 거리에 거주
오염 토지	도시 내에 있는 모든 오염된 토지 정화
수로	해안생태계의 재건 및 회복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로 질의 개선
물 공급	고품질의 믿을 수 있는 물 공급 시스템 보장
교통	지속가능한 교통의 선택 및 신뢰성 있는 고품질 교통 네트워크 확대
에너지	에너지 소비 감소 및 에너지 체계의 청정성과 신뢰성 상승
대기질	미국 대도시 중에서 가장 깨끗한 대기질 확보
고체 폐기물	쓰레기 매립지의 75% 고체 폐기물 재활용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량 30% 이상 감축 지역사회, 생태계, 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회복력 상승

자료: The City of New York, 2014, PlaNYC Progress Report – A Greener, Greater New York / A Stronger, More Resilient YORK

2) 지속가능성 지표

- 뉴욕시는 도시 현황과 관련 장기 목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10개의 지속가능성 지표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고자 하였음.
- 지속가능성 지표는 PlaNYC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량화된 매트릭스를 제공함.

CATEGORY	METRIC	2030 TARGET	FIGURE FOR MOST RECENT YEAR	TREND SINCE BASE YEAR
HOUSING AND NEIGHBORHOODS	Create homes for almost a million more New Yorkers while making housing and neighborhoods more affordable and sustainable			
	Increase in new housing units since January, 2007	314,000	125,837 ₂	↗
	% of new units within a 1/2 mile of transit	> 70%	82.7% ₁	NEUTRAL
	Affordable housing units preserved or added (cumulative since 200)	165,000	156,351 ₂	↗
PARKS AND PUBLIC SPACE	Ensure all New Yorkers live within a 10-minute walk of a park			
	% of New Yorkers that live within a 1/4 mile of a park	85%	76.5% ₁	↗
	Cumulative number of trees planted through Million Trees initiative	1,000,000	834,015 ₁	↗
ENERGY	Reduce energy consumption and make our energy systems cleaner and more reliable			
	Greenhouse gas emissions per unit of electrical power (lbs CO ₂ e/MWh)	DECREASE	674.911 ₂	↗
AIR QUALITY	Achieve the cleanest air quality of any big U.S. city			
	City ranking in average PM _{2.5} (3 yr rolling avg) compared to other large U.S. cities	#1 (cleanest air)	#4 ₁	NEUTRAL
	Change in average PM _{2.5} (year-on-year % change in 3 yr rolling avg)	DECREASE	-0.5% ₁	↘
CLIMATE CHANGE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over 30%			
	Increase the resiliency of our communities, natural systems, and infrastructure to climate risks			
	Greenhouse gas emissions (MTCO ₂ e)	DECREASE 30% ₃	47,939,030 (19%) ₂	↘
SOLID WASTE	Achieve the cleanest air quality of any big U.S. city			
	Percentage of waste diverted from landfills (includes fill)	75%	52% ₁	↘

〈그림 3-4〉 미국 뉴욕시 지속가능성 지표 매트릭스

- 지표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설정되었으며, 기준연도에 비해 상황이 개선되었는지 혹은 악화되었는지의 여부를 화살표(↗, ↘)로 나타냄.

〈표 3-11〉 미국 뉴욕시 지속가능성 지표

분야	지표
주택 및 근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대비 신규 주택 증가량 ■ 1/2마일 이내에 교통수단이 있는 신규 주택의 비율 ■ 보존 혹은 추가된 적당한 가격의 주택 수(2000년부터 누적)
공원 및 공공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으로부터 1/4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 ■ 100만 그루 나무 계획에 따라 식재된 수목의 누적 수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소 당 온실가스 배출량(lbs CO₂e/MWh)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대도시 중 PM 2.5의 평균값 도시 순위(3년 평균) ■ PM 2.5 평균값의 변화(3년 평균)
기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량(MTCO₂e)
고체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매립지에서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비율(일반 부지 포함)

1.8 미국 산타모니카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1)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Sustainable City Plan)

- 미국 산타모니카시는 1994년부터 지속가능한 도시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음.
- 산타모니카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은 환경 전담위원회(Task Force)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환경 전담위원회는 전문가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지속가능한 도시 전담위원회(Sustainable City Task Force, SCTF)를 설치하였음.
- 시 공무원들은 지속가능성 자문팀(Sustainability Advisory Team, SAT)를 설치하고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업무를 조정하여 목표가 지속되고 활성화되도록 추진하였음.
- 지속가능한 도시 전담위원회(SCTF)와 지속가능성 자문팀(SAT)은 지속가능한 도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이행계획의 개발 및 조정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였음.
- 산타모니카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보고서를 두 가지 형태로 작성하였음. 「The Sustainable City Progress Report」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의 각 지표에 대한 자세한 분석 결과를 서술한 보고서이며, 「The Sustainable City Report Card」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되기 위한 목표 성취도를 나타내는 요약보고서로서 현재의 목표와 특정 지표 데이터에 기반한 등급(학점제)으로 표시됨.
-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은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음(City of Santa Monica, 2006).

1.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시정을 이끈다.
2. 자연환경의 보호, 보존, 복원을 시정의 최우선순위에 둔다.
3. 환경의 질, 경제적 건전성, 사회적 형평성은 상호 의존적이다.
4. 시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시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5. 공동체의식, 책임감, 참여, 교육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핵심요소이다.
6. 시는 광역, 국가, 지구와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한다.
7. 시는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하며 가장 비용효과적인 시책과 정책을 택해야 한다.
8. 시는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공조달 결정을 내려야 한다.
9. 이해관계자 참여는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10. 사전예방의 원칙이 정책결정자가 지속가능한 시정을 추진하는 데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그림 3-5〉 미국 산타모니카 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의 10가지 원칙

-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은 8개 분야의 목표(자원 보존, 환경 및 공중 보건, 교통, 경제 발전, 공공 공간 및 토지이용, 주택, 지역사회 교육 및 시민참여, 인간 존엄성)로 구성되었음.

2) 지속가능성 지표

- 2000년 지속가능성의 달성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더욱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지표를 수립하였음.
- 초기 지표는 자원 보존, 교통, 오염방지 및 공중 보건 보호,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의 4가지 분야를 바탕으로 수립되었음.
- 그동안의 이행 상황을 검토한 결과 지속가능한 도시 목표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2010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계획과 지표를 수립하였음.
- 8개 분야(자원 보존, 환경 및 공중 보건, 교통, 경제 발전, 공공 공간 및 토지이용, 주택, 지역사회 교육 및 시민참여, 인간 존엄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음. 지표는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시스템 단위의 지표(System level indicator)로서 각 개별 목표의 상태 등을 측정함. 프로그램 단위의 지표(Program level indicator)는 시(市)정부 혹은 기타 이해관계자에 의하여 실행된 구체적인 프로그램, 정책 혹은 이행계획의 성과 혹은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임.
- 산타모니카시는 상당수의 지표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하여 지표와 각 분야별 연계성을 나타내는 매트릭스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지표간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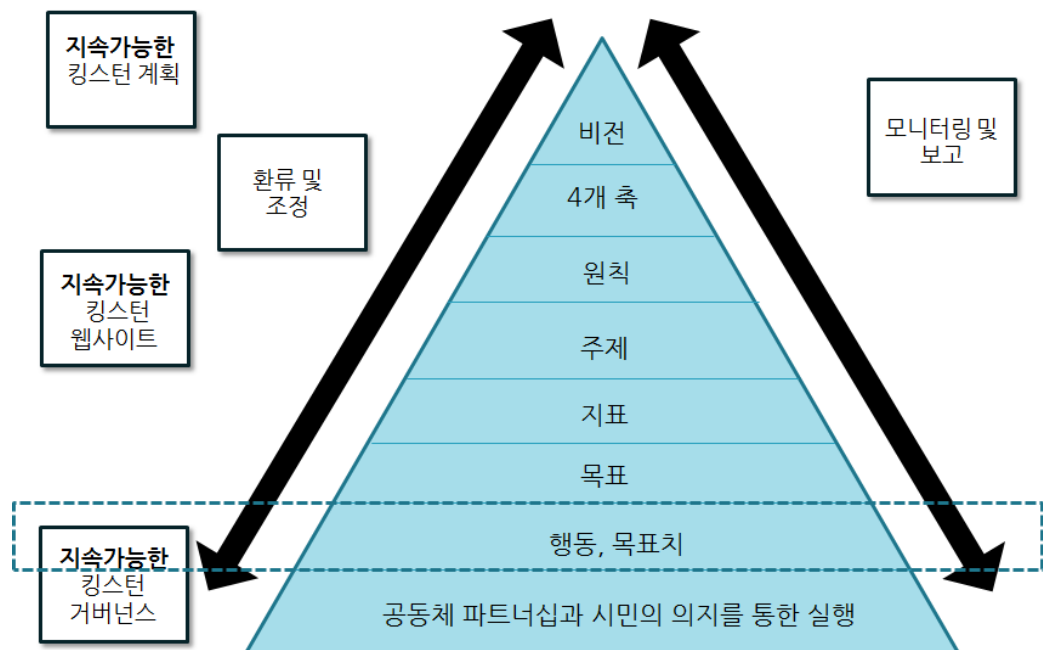
INDICATORS								
Resource Conservation Indicators	RC	EPH	T	ED	OSLU	H	CECP	HD
Solid waste generation	•			•				
Water use	•	•		•			•	
Energy use	•	•	•	•		•		
Renewable energy use	•	•		•			•	
Greenhouse gas emissions	•	•	•	•	•	•		
Ecological Footprint for Santa Monica	•	•	•	•	•	•		
Indicator of sustainable procurement	•	•		•	•			
"Green" construction	•	•	•			•		
Environmental and Public Health Indicators	RC	EPH	T	ED	OSLU	H	CECP	HD
Santa Monica Bay – beach closures		•			•		•	
Wastewater (sewage) generation	•	•		•				
Vehicle miles traveled	•	•	•	•	•	•		
Air quality	•	•	•	•				
Residential household hazardous waste		•						
City purchases of hazardous materials		•						
Toxic air contaminant releases		•						
Urban runoff reduction	•	•	•		•			
Fresh, local, organic produce		•	•	•				
Organic produce – Farmer's markets		•	•	•				
Restaurant produce purchases		•	•	•				
Food choices	•	•	•	•				

〈그림 3-6〉 미국 산타모니카시 지속가능성 지표 매트릭스

1.9 캐나다 킹스턴 지속가능발전 계획

1) 지속가능한 킹스턴 계획

- 캐나다 킹스턴의 지속가능한 킹스턴 계획(Sustainable Kingston Plan)은 장기 방향과 체계를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계획은 통합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계획(Integrated Community Sustainability Plan, ICSP)과 연계되어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였음.
- 계획 수립과정에서 인터뷰, 지속가능성 총회, 지역사회 토론회, 공공 자문,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기반을 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음.
- 지속가능한 킹스턴 계획은 지속가능한 킹스턴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며, 그 외에도 인터넷 웹사이트 개설,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음.
- 킹스턴의 지속가능성은 4가지 축(문화적 활력, 환경적 책임감, 건강한 경제, 사회적 형평성)으로 구성되어 타 도시보다 문화 분야를 강조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그림 3-7〉 지속가능한 킹스턴 체계

2) 지표

- 지속가능한 킹스턴 계획은 각 분야마다 현황분석, 목표,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지표는 각 분야와 연결되어 현재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각 분야에서의 양적인 성과를 제시함.
- 지표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 단체가 도시의 지속가능성 트렌드를 제시하여 참여성을 확보하고 지표의 타당성을 높임.
- 지표는 도시 내에서 영향을 미치고 통제할 수 있는가, 이용가능한 데이터인가,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비교가능한 지표인가, 현황·목표·이행계획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지표인가 등 여섯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되었음.

〈표 3-12〉 캐나다 킹스턴 지속가능발전 지표

구분	분야	지표
문화	예술·창의성·여가활동	예술·문화·여가활동·스포츠에 관련된 직업 종사자 수
	역사와 문화유산	시에 등록된 문화유산의 수
	활동적 시민의식	투표율
	다양성	인종적 배경에 따른 거주자 수
경제	경제발전	실업률, 고용 창출
	지역사회 경제발전	부문별 고용, 창업
	노동시장 발전	직업별 고용
	기반시설	기반시설 상태, 환승체계, 통근유형
	관광	연간 관광수입
	농업	농업용지의 보전, 농업 집약도
환경	에너지·대기·기후변화	에너지 이용, 온실가스 배출, 대기질 지수
	물	물 사용량, 해수질
	고체 폐기물	재활용비율, 폐기물량
	자연지역	수목 밀도, 녹지
	토지용 및 건축환경	혼합토지이용, 거주자 증가율, 거주자 밀도
사회	교육 및 배움	통합교육지수, 교육성취도, 고교졸업률
	건강	의료접근도, 비만율, 여가프로그램 시간
	식생활 및 건강	지역사회 내 정원, 건강한 음식에 대한 가구지출
	빈곤 및 무주택자	저소득가구, 주택구입능력
	편안함과 안전	도시범죄율

자료: City of Kingston, 2010, Sustainable Kingston—Designing Our Community Future...Together

2. 지속가능발전 국내 사례

2.1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1) 기본계획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이의 세부 실천방안으로서 의제21(Agenda 21)이 채택된 이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 2000년 9월에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음.
- 이어 2005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 국가)」을 선포하였음.
- 2006년 10월 국내 최초로 경제·사회·환경 분야 통합관리 전략과 실천계획인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을 확정하여 발표하게 됨.
- 2011년 8월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국토·환경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대폭 강화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
-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⁵⁾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산업경제, 사회·건강, 국토·환경 분야의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 84대 세부이행과제로 수립하였음.

2) 지표

- 2006년 10월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제2차 기본계획의 지표도 동일하게 설정되었음.
- 지표는 사회 분야(6개 영역, 12개 항목, 25개), 환경 분야(5개 영역, 11개 항목, 27개), 경제 분야(3개 영역, 11개 항목, 25개)의 총 7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상태를 점검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보완 근거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지표를 만들었음.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표 3-13〉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분야	영역	항목	지표
사회	형평성	1-1.빈곤	01)빈곤인구비율
			02)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03)실업률
		1-2.노동	04)근로시간
			05)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1-3.남녀평등	06)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07)여성경제활동 참가율
	2. 건강	2-1.영양상태	08)유소년 영양 상태
		2-2.사망률	09)영아 사망률
		2-3.수명	10)기대여명
		2-4.식수	11)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2-5.건강관리	12)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비율
			13)사회복지지출
			14)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3. 교육	3-1.교육수준	15)중등학교 순졸업률
			16)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17)공교육비 지출
	4. 주택	4-1.생활환경	18)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19)주택 수(인구 1천 명당)
			20)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5. 재해 · 안전	5-1.범죄 · 재해	21)범죄발생률
			22)자연재해 피해
	6. 인구	6-1.인구변화	23)인구 증가율
			24)인구 밀도
			25)고령인구비율
환경	대기	1-1. 기후변화	26)온실가스 배출량
			27)1인당 온실가스배출량
			28)GDP당 온실가스배출량
		1-2. 오존층	29)오존층파괴물질 소비량
		1-3. 대기질	30)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2. 토지	2-1. 농업	31)농지면적 비율
			32)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33)식량자급률
			34)화학비료 사용량
			35)농약 사용량
		2-2. 산림	36)국토면적 중 산림지역 비율
			37)1인당 도시공원 면적
			38)목재 벌채 정도

경제	3. 해양·연안	2-3. 도시화	39) 도시화율
			40) 수도권 인구 집중도
		3-1. 연안지역	41) 연안오염도
			42) 폐기물 해양 투기량
			43) 갯벌 면적 증감
		3-2. 어업	44) 수산자원량
			45) 어업양식량
	4. 담수	4-1. 수량	46) 취수율
			47) 1인당 1일 물소비량
		4-2. 수질	48) 4대강 수질오염도
			49) 하수도 보급율
	5. 생물다양성	5-1. 생태계	50) 자연보호지역비율
			51) 국가생물종 수
			52) 멸종위기종 수
경제	1. 경제구조	1-1. 경제이행	53) 국내총생산(GDP)
			54) 1인당 GDP
			55) 경제 성장률
			56) GDP 대비 순 투자율
			57) 소비자물가지수
		1-2. 무역	58) 무역수지
		1-3. 재정상태	59)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
			60) GDP대비대외채무비율
		1-4. 대외원조	61) GNI대비 공적대외원조(ODA) 비율
	2. 소비·생산	2-1. 물질소비	62) 자원생산성
		2-2. 에너지사용	63)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
			64) 총에너지 공급량
			65)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66) 에너지원단위
		2-3. 폐기물관리	67)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68) 지정폐기물 발생량
			69)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70)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2-4. 교통	71)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72) 자전거 도로 총 연장
			73) 자동차 사고건수
	3. 정보화 등	3-1. 정보접근	74)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75) PC보유 가구비율
		3-2. 정보인프라	76)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
		3-3. 과학기술	77) GDP 대비 R&D 지출 비율

2.2 인천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전략

1) 기본 전략

- 인천시 부평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지속가능한 부평’이라는 비전 아래 5개 전략, 17개 이행과제, 57개 단위과제를 수립하였음.
- 전략은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성, 세대간·세대내 형평성, 참여자치의 원칙 등에 따라 설정하였음.
- 단위과제는 세부사업과 성과지표라는 하위체계를 가지고 있음.

2) 지표

- 지표는 4개 분야, 20개 영역, 94개의 3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제분야(6개 영역, 18개 지표), 사회분야(4개 영역, 25개 지표), 환경분야(6개 영역, 23개 지표), 행정분야(3개 영역, 23개 지표) 및 배경지표(1개 영역, 5개 지표)로 이루어짐.
-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부평구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고유한 지표를 선정하였음.
- 기존 행정 업무를 기반으로 행정의 모든 부서가 이행계획서 작성에 동참하고 각 사업들의 성과지표와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설정하였다는 것이 특징임.

〈표 3-14〉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지표

분야	영역	지표
경제	경제여건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자원순환기반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교통	자전거도로 조성 실적, 자전거 교통수단 부담률 대중교통 부담률, 보행자를 위한 보도율, 도로율
	정보화	55세 이상 장노년층 무상정보교육 실시 비율
	산업	지역기업수(법인등록업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업체비율 사회적기업 지원 업체수, 가족친화기업인증 기업수 전통시장 이용객 수, 녹색기업인증비율
	에너지	1인당 에너지소비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에너지 절약사업 실적(에너지 절감)
사회	형평성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 비율,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 비율, 다문화 지원 가구 수

	건강 / 안전 / 재해	1,000인당 의사 수, 성인병 발생률, 초중고생 비만율 아동 아토피피부염 유병률,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건수 1,000인당 자동차 사고건수, 풍수해 피해, 10만 명당 자살률 1,000인당 범죄발생건수, 여성폭력범죄 상담건수
	교육 / 문화	초등학교학급당 학생 수, 평생학습참여율 인구 1인당 공공도서관 연간 대출권수, 지역문화 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비율
	보육 및 성인지	보육비용 지원 받는 아동비율,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비율 아이돌보미지원 아동비율, 성인지예산 도입률 성별영향평가 수행 정책비율, 공무원성인지교육이수자 비율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각 위원회의 여성 비율
환경	대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염도 오존(O ₃) 농도, 미세먼지 농도, 평균온도
	물	자연형 하천복원 비율, 하천오염도(BOD), 수서생물종 굴포천변 식생자연도, 1인당 1일 물소비량, 빗물 활용도
	녹지	법정자연환경보호지역 지정면적 비율, 도시생태면적비율 1인당 녹지면적, 1,000인당 도시공원 · 녹지 면적, 녹시율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기준치 초과 비율, 토양 오염 기준치 초과 비율
	폐기물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톤당 폐기물 처리비용,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소음	소음도
행정 및 제도	재정	1인당 예산지출 증감률, 재정자주도, 정책사업비 비율 자체사업비 비율, 행정운영경비 비율, 하드웨어(시설투자) 사업예산비율,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사업예산비율
	행정서비스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 공무원 청렴도 공무원 직무 만족도 조사, 주민자치센터이용자수, 홈페이지 방문자수, 정보공개비율, 홈페이지 게시판 주민의견 게시건수
	제도 및 거버넌스	거버넌스 관련 조례제정 여부, 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여부, 위원회개최건수, 주민참여 예산 참여자수 참여예산반영비율, 위원회주민참여율, 자원봉사활동참여율 예산대비 시민사회단체 지원 비율
배경 지표	인구	인구증감률, 고령인구비율, 노령화지수, 외국인수, 다문화 가구수

2.3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 충청남도의 상황을 진단하고, 개별 부서의 정책과 사업들이 도정 목표로 통합될 수 있도록 융복합 행정을 촉진하고자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였음.
- 적합성, 측정가능성, 측정비용, 적용가능성, 비교가능성의 5가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지표를 수립하였음.
-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분석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였음⁶⁾.
-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개별 부서의 성과지표가 아닌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됨.
-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충청남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부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됨.

〈표 3-15〉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분야	영역	지표
경제	경제여건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신규 창출 일자리 수, 비정규직 비율
	농업	농가부채,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량, 로컬푸드 매장 수 국내산 종자 수, 어종 종자 수, 농업생산량, 어업생산량 축산물이력제 등록수
	교통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보도율 대중교통 미공급 비율, 1,000인당 자동차 사고건수
	산업	중소 광업·제조업체 수, 사회적경제 업체 수 전통시장 이용객 수, 소득 역외 유출
	에너지	1인당 에너지소비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전력 자립도
사회	형평성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 비율, 지니계수, 빈곤 인구 비율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비율,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 비율,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작목반 가입률
	건강 / 안전 / 재해	1,000인당 의사 수, 성인병 발생률, 초중고생 비만을 어린이 아토피피부염 유병률, 영아사망률, 청소년인터넷 중독 상담건수, 풍수해 피해, 10만 명당 자살률, 1,000인당 범죄 발생건수, 여성폭력범죄 상담건수
	교육 / 문화	고등학교 졸업률, 평생학습 참여율, 1인당 공공도서관 연간 대출권수, 지역문화 보전 발굴 육성 수, 문화, 스포츠, 예술활동 관람률/참여율

6) 예를 들어 충청남도의 삼농정책을 반영하여 경제 영역에서는 농가부채,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량의 지표를 설정하였음. 또한 국내산 종자 수와 어종 종자 수를 지표에 포함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음.

	보육 및 성인지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비율, 아이돌보미지원 아동비율 성별영향평가 수행 정책비율
환경	대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오존(O ₃) 농도, 미세먼지 농도 평균온도
	물	1인당 1일 물소비량, 하수처리율, 하천오염도 (BOD) 2급수 이상 하천 비율, 빗물 활용량, 지하수오염 기준치 초과 비율
	생태 · 녹지	연안오염도, 갯벌면적 증감, 생태경관보전지역 비율 생물종 수, ha당 입목축적량
	토양오염	농약 사용량, 화학비료 사용량, 토양 오염 기준치 초과 비율
	폐기물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 영농폐기물 수거량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축산폐기물 발생량
	자원순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사업장지정폐기물 재활용률 녹색제품 이용률
	소음	소음도
행정 및 제도	재정	1인당 세출예산액, 재정력 지수,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정책사업비 비율, 자체사업비 비율, 채무 비율 정책사업 예산 대비 시설(하드웨어) 투자 예산 비율 정책사업 예산 대비 시설(소프트웨어) 투자 예산 비율
	행정서비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공무원 청렴도, 정보공개 비율
	제도 및 거버넌스	거버넌스 관련 조례제정 여부, 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여부, 위원회 참여 연인원, 주민참여예산 참여자수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건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성인지예산서 제출 건수,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예산대비 시민사회단체 지원비율 각 위원회의 여성 비율
배경 지표	인구	인구증감률, 경제활동인구수, 1인당 조세부담률, 고령인구비율 노령화지수, 외국인 주민수,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수

2.4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 경기도에서는 2011년부터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개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 이를 바탕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작성한 지속가능성 평가 초안(6개 목표, 17개 전략 과제, 64개 지표)에 대해 2012년 시범 평가를 실시하였음.
- 2013년 9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4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였음.
-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6대 목표와 17대 전략에 따른 61개 지표를 도출하였음.
- 또한 61개 지표 중 대표지표 25개를 선정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도민, 공무원의 인식 확산과 정책 홍보를 위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시·군의 공통지표를 선정하여 도와 시·군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연관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 특징임(고재경 외, 2014).

〈표 3-16〉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대표지표 선정(안)

전략	대표지표	보조지표
녹색생산과 소비	녹색소비	기업의 녹색경영, 산업구조고도화
지역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 친환경 농업, 사회적 경제	
건전한(good) 경제성장	고용안정 및 안전, 실업	경제성장과 소득, 중소기업 육성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취약계층	자연재해 피해, 물순환, 토지이용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효율성,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도, 탄소집약도
환경질 개선	대기질, 하천 및 호소 수질	연안환경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보호구역, 생물다양성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에너지, 폐기물	수자원, 생태발자국
저출산 고령화 대응	보육	출산률, 노인일자리, 노인복지
가족친화적이고 성평등한 사회	가족친화적 사회, 여성의 경제참여와 기회	여성의 대표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사회적 취약인구, 장애인 복지 및 일자리	
도시어메니티 증진	녹색교통, 공원·녹지, 주거생활만족도	
문화·여가 활동의 향유		문화생활, 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이용
안전하고 건강한 커뮤니티	자살율, 범죄율, 교통사고 발생률, 건강 관련 삶의 질, 의료서비스	
능력있는 시민과 시민참여	주민참여, 거버넌스, 자원봉사, 평생학습	
국제적 책임		ODA, 국제적 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 교육
미래세대 배려	청소년 복지, 아동복지, 교육의 질	

3. 시사점과 서울시 적용방안

3.1 시사점

1)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내용과 범위 다양

- 대부분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모델에 따라 경제, 사회, 환경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캐나다 킹스턴(Kingston)의 경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속가능성 축을 경제, 사회, 환경, 문화 4가지 축으로 구분하였음.
- 국가(도시)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검토한 결과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지표가 상당수 존재하였음.
- 경제 분야는 대표적으로 실업률, 교통, 1인당 GDP 지표 등이 공통적으로 사용됨.
- 사회 분야에서는 형평성, 교육, 비만율, 주택, 범죄율 등의 지표가 공통적으로 포함됨.
- 환경 분야의 지표는 국가와 도시마다 비슷한 양상을 보임. 대기질, 온실가스, 기후변화, 수질 등의 지표는 거의 모든 지표체계에 사용됨.
- 그러나 지역마다 지표의 분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주택 관련 지표가 사회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제 분야 지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에너지 또한 지역마다 경제 분야 또는 환경 분야로 다르게 분류하고 있음.
- 대부분이 국가(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선정하고 있으며,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는 지표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대한 정책을 강조하는 경우 문화 분야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문화적 다양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지속가능성 지표로 설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 지표 설정의 목적 다양

-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어느 방향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지표 설정의 목적이 다양하게 나타남.
- 기본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음.
- 지표 분석 결과를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도 존재함.

3) 지표 간 연계성 불명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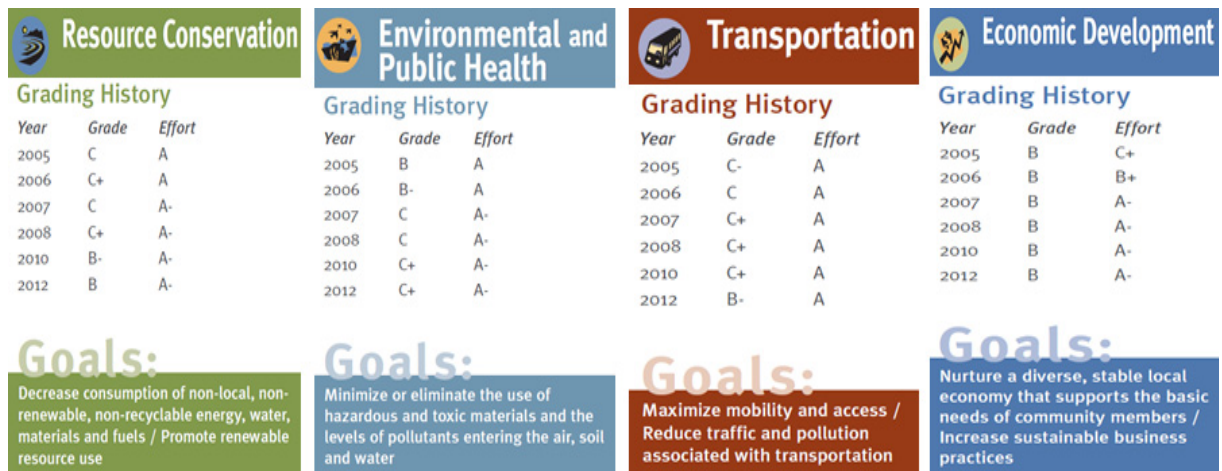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의미하므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에서도 각 분야의 지표 간 상호연계성이 중시됨.
- 예를 들어 경제 분야의 지표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됨에 따라 사회·환경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계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4) 지표와 기본계획의 관계 설정

- 많은 국가와 도시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가능발전 평가 지표를 설정함.
- 그러나 기본계획이 있더라도 지표를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있으며, 반대로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만 존재하고 기본계획이 없는 지역도 있음.
- 기본계획과 지표를 모두 수립할 시에는 지표와 기본계획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

5) 평가 방법의 다양성

-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평가 결과를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음.
- 미국 뉴욕시는 화살표 형태로 지속가능성 지표 측정 결과의 변화 추이를 나타냄.
- 미국 산타모니카는 객관적 측정 결과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정도도 학점제로 평가하였음.
- 미국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는 지표의 전년대비 변화를 ■(개선되었음), □(개선되지 않았음), - (변화가 없거나 기반 구축 중) 등의 도형으로 표시하였음.



〈그림 3-8〉 미국 산타모니카 지속가능발전 평가 모델

6) 국가지표와 도시지표의 차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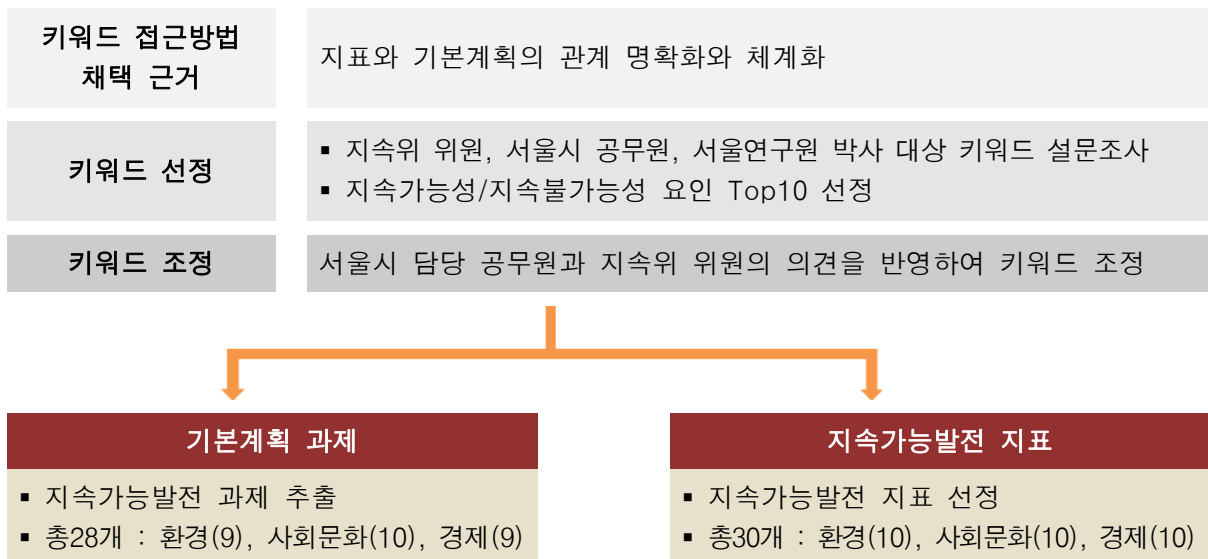
- 국가지표의 경우 평가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경제·사회·환경 세 가지 분야의 지표가 균형을 맞추고 있음.
- 반면에 도시지표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 분야의 지표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

3.2 서울시 적용방안

1) 기본계획과 지표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체계화하는 방안 모색

- 기본계획과 지표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음.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표의 수립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며,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확보함.
- 기본계획과 지표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과 지표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체계화하여야 함.
- 서울시는 키워드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기본계획과 지표의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실행력을 확보하였음.

〈표 3-17〉 키워드 접근방법 개요



2) 서울시정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 수립

-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개별 사업이나 계획의 성과지표가 아닌 포괄적·통합적으로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함을 목적으로 함.

3) 서울의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 많은 지역들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선정하는 한편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지속가능성 현안을 관리하기 위한 지표를 수립하기도 함.
-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서울시에서도 현황 파악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한 지표를 선정함.
- 그 외에도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지표 수립 시 반영함.

4) 독창적인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 개발

- 지표 수립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정보 전달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확산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평가 방법의 개발이 요구됨.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개념모델로서 동심원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평가모델로는 수레바퀴 모델을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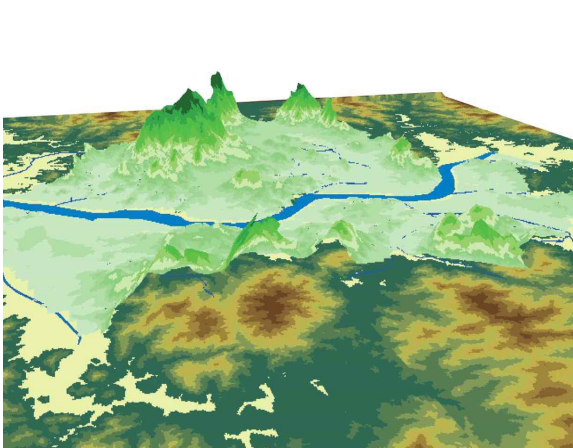
04 서울특별시 현황 및 정책환경 분석

- 1 서울시 일반현황
- 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현황
- 3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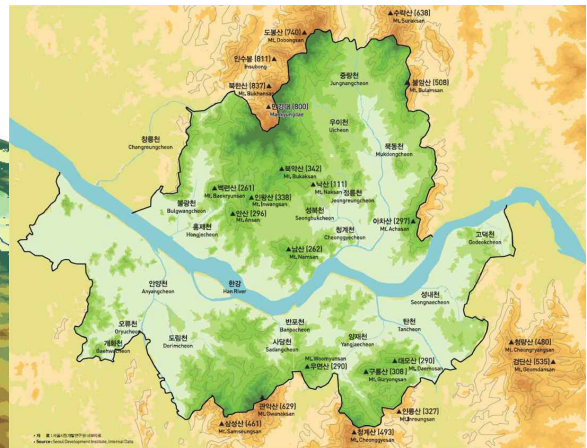
1. 서울시 일반현황

1.1 위치와 지형 특성¹⁾

- 서울은 면적 605.96km²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변은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여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음. 서울의 중앙에는 한강이 동서를 가르고 있고 권역별로 4대 지천이 한강으로 흐르고 있음.
- 행정구역은 25개구, 423개동이며, 인구 천만이 살고 있는 대도시임.



〈그림 4-1〉 3차원 지형도



〈그림 4-2〉 서울시 지형도

1.2 토지이용과 공간구조 변화

-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 산업화,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서울시 공간구조는 단핵도시구조에서 다핵공간구조로 변화하였음.
- 중심지의 수는 1966년 1도심 6부도심에서 2006년 1도심 5부도심 11지역 중심, 53개 지구 중심으로 변천하였음.
- 서울시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은 양호한 도시환경을 유지·관리하면서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공간구조란 서울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함.

1) 서울시 현황 및 정책환경 분석은 2030서울플랜, 서울시정 4개년 계획, 2014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등 서울시 관련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졌음.

1.3 인구변화

- 서울 인구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1년 65만 명에서 1992년 1,097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 안정적인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기준 서울의 인구는 약 1,038.8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의 인구밀도는 16,509명/km²으로 부산(4,456명/km²), 광주(3,029명/km²)와 큰 차이를 보여 인구 집중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의 인구구조는 생산가능 연령인구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비율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임. 구체적으로 0~14세 인구는 10년간(2003~2013년) 27.5%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79.6% 증가하였음.
- 서울 합계출산율은 1970년 3.05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1983년에는 1.81명으로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로 하락하여 저출산사회에 진입하였고, 1998년에는 합계출산율 1.26명으로 초저출산사회(합계출산율 1.3이하)에 진입하였음.
-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03년 6.3%에서 2005년 7.1%로 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3년 11.2%로 증가하였음.
-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4-1〉 서울시 인구구성 변화 추이

기간	서울인구	0~14세 인구	15~64세 인구	65세 이상 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2000	10,373,234	1,928,361	7,884,427	560,446	5.4
2001	10,331,244	1,884,339	7,857,731	589,174	5.7
2002	10,280,523	1,841,925	7,823,036	615,562	6.0
2003	10,276,968	1,797,245	7,829,968	649,755	6.3
2004	10,287,847	1,765,057	7,829,565	693,225	6.7
2005	10,297,004	1,715,719	7,845,383	735,902	7.1
2006	10,356,202	1,660,388	7,909,234	786,580	7.6
2007	10,421,782	1,608,217	7,961,330	852,235	8.2
2008	10,456,034	1,556,427	8,000,907	898,700	8.6
2009	10,464,051	1,500,794	8,020,311	942,946	9.0
2010	10,575,447	1,444,419	8,123,456	1,007,572	9.5
2011	10,528,774	1,393,303	8,086,046	1,049,425	10.0
2012	10,442,426	1,346,590	7,984,841	1,110,995	10.6
2013	10,388,055	1,302,288	7,918,590	1,167,177	11.2

출처: 서울통계

- 2013년 기준 서울에는 16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91일 이상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24만 4천명이 거주하고 있어 총 인구의 2.4%를 차지하며, 2003년 등록외국인 102천 명에 비해 2.4배 증가하였음.
- 등록외국인 중 영등포구에 2만 5,106명(14.4%)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어 구로구 2만 7,204명(11.1%), 금천구 1만 7,234명(7.1%), 관악구 1만 7,100명(7.0%) 순으로 많고, 외국인이 적은 지역은 도봉구 2,027명(0.8%), 강북구 3,214명(1.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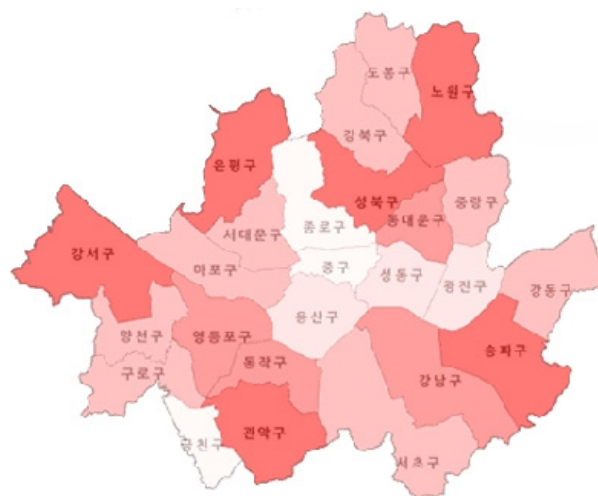
〈표 4-2〉 서울시 외국인 인구 변화 추이

기간	서울인구 (내국인+외국인)	등록외국인	서울인구 대비 구성비(%)
2000	10,373,234	61,920	0.6
2001	10,331,244	67,908	0.7
2002	10,280,523	73,228	0.7
2003	10,276,968	102,882	1.0
2004	10,287,847	114,685	1.1
2005	10,297,004	129,660	1.3
2006	10,356,202	175,036	1.7
2007	10,421,782	229,072	2.2
2008	10,456,034	255,207	2.4
2009	10,464,051	255,749	2.4
2010	10,575,447	262,902	2.5
2011	10,528,774	279,095	2.7
2012	10,442,426	247,108	2.4
2013	10,388,055	244,410	2.4

출처: 서울통계



〈그림 4-3〉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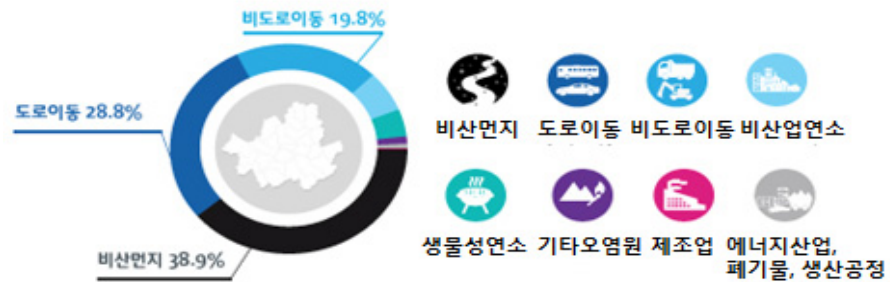
〈그림 4-4〉 서울시 외국인 인구 분포도

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현황

2.1 환경 분야

1) 미세먼지 오염도

- 서울시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미세먼지는 $45\mu\text{g}/\text{m}^3$, 초미세먼지는 $25\mu\text{g}/\text{m}^3$, 이산화질소는 0.033ppm
- 미세먼지의 배출원은 자동차 연소 35%, 난방·발전 27%, 건설기계 17% 순으로 나타남.
- 미세먼지는 감소추세이나 인체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서울의 연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총 2,732톤으로 배출원의 절반 이상은 비산먼지와 도로이동오염원이 차지하고 있음.



〈그림 4-5〉 초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관련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였음.
 - 경보 종류 : 주의보 예비단계($60\mu\text{g}/\text{m}^3$ 이상), 주의보($85\mu\text{g}/\text{m}^3$ 이상), 경보($120\mu\text{g}/\text{m}^3$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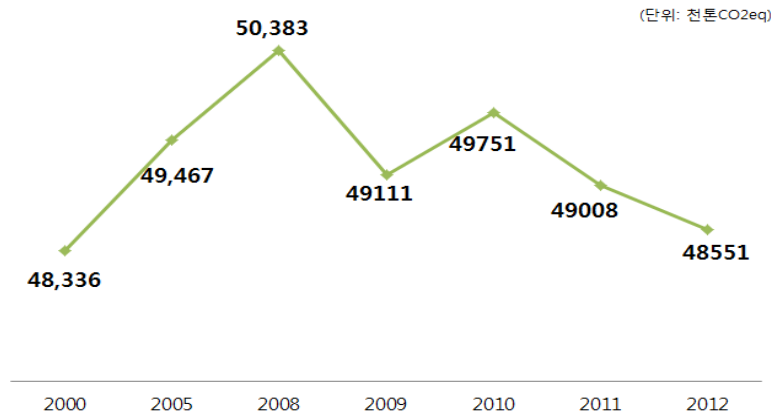
〈표 4-3〉 서울시 대기오염도 현황

연도	미세먼지 ($\mu\text{g}/\text{m}^3$)	초미세먼지 ($\mu\text{g}/\text{m}^3$)	이산화질소 (ppm)	아황산가스 (ppm)	일산화탄소 (ppm)	오존 (ppm)
2005	58	29	0.034	0.005	0.6	0.017
2006	60	30	0.036	0.005	0.6	0.018
2007	61	30	0.038	0.006	0.7	0.018
2008	55	26	0.038	0.006	0.6	0.019
2009	54	26	0.035	0.005	0.6	0.021
2010	49	25	0.034	0.005	0.5	0.019
2011	47	24	0.033	0.005	0.6	0.019
2012	41	23	0.030	0.005	0.5	0.021

출처: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2012, 서울 대기질 평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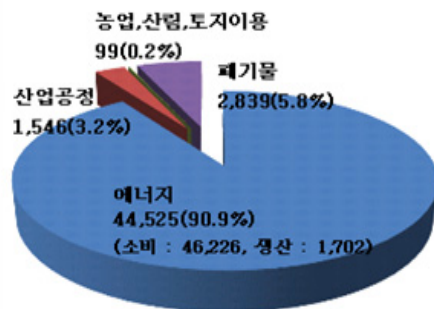
2) 온실가스 배출량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IMF 구제금융사태 당시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전체 배출량은 직접배출원과 간접배출원으로 구분하여 산정²⁾되며 직접배출량은 감소하는 한편 간접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9,751천 톤으로 1990년에 비해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부문별 배출량을 보면 에너지 사용이 92.4%로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건물이 71.2%, 수송이 22.2%를 차지하고 있음.
- 2007년 서울시는 「서울 친환경에너지 선언」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고, 2009년 「2030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으로 목표를 재설정하였음.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9,275천톤으로 2000년이 비해 29.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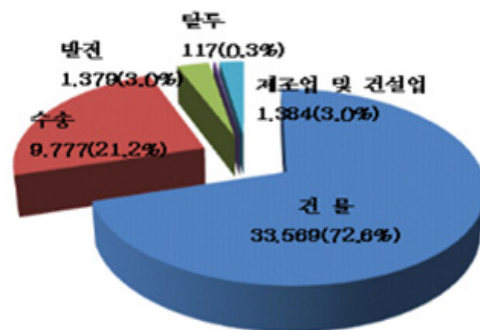
출처: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14,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

〈그림 4-6〉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그림 4-7〉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그림 4-8〉 에너지 소비부문 중 온실가스 배출량

2) 직접배출원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림·산림 및 기타 토지이용 부문으로 구성되며 간접배출원은 전력소비·열소비·폐기물 발생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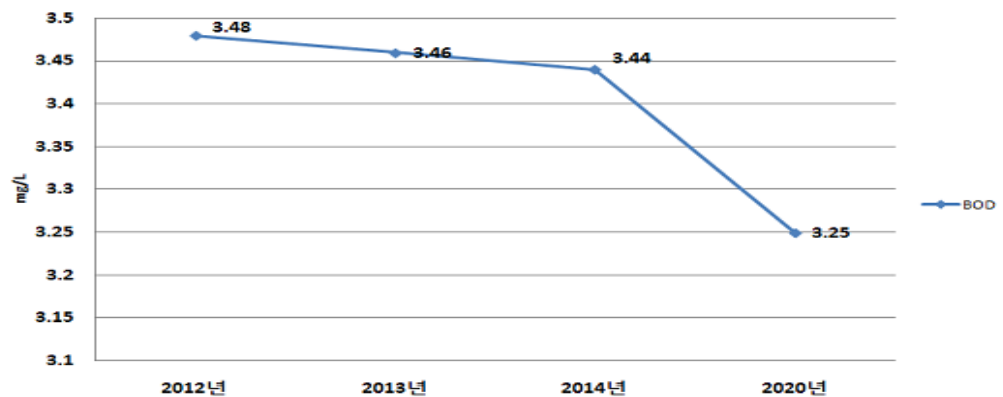
3) 한강의 수질오염도 (BOD)

- 한강본류 상류지역(팔당)의 BOD 오염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강본류 하류로 내려가면서 오염도가 높은 왕숙천, 탄천, 중랑천 등의 영향으로 상류에 비해 오염도는 증가하지만 연평균 수질은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임.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강대교 지점의 수질(BOD)은 3.5~4.3mg/L 수준이었으나, 2010년과 2011년은 각각 3.2mg/L와 2.8mg/L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질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강우량이 평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2012년도 지표 목표 설정 시 2010년, 2011년 측정결과 배제).
- 전반적으로 연평균 수질은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는 강우시 하천오염원(초기우수, CSOs)의 단계적 저감, 주요 간선·지선도로 하수도 준설 및 물청소(150km/년) 강화,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의 현대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사전예방적 대응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한강수계 수질오염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음.

〈표 4-4〉 한강수계 수질오염도 현황

연도	잠실(mg/L)	노량진(mg/L)	행주(mg/L)
2005	1.4	3.1	3.7
2006	1.9	4.0	4.7
2007	1.6	3.5	3.7
2008	1.9	4.3	4.8
2009	1.5	4.1	4.8
2010	1.5	3.2	4.0
2011	1.1	2.8	3.6
2012	1.2	2.6	4.1

출처: <http://water.nier.go.kr>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그림 4-9〉 한강대교 지점 수질오염도(BOD) 목표치





4) 가로경관 녹시율

- 살기 좋은 도시의 기준 가운데 중요한 지표 한 가지가 도심의 녹지비율 즉 가로변 녹시율임. 서울시의 가로경관 녹시율은 가로변 피녹지 조성, 가로수 메워심기, 벽면 녹화 사업과 같은 집중적인 개선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의 가로변 녹시율은 2006년 17.4%에서 2012년에는 2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2020년까지 평균 녹색비율 30.5%를 최종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 아직 녹시율이 생소하고 체감도와 인지도가 낮은 시민들에게 용어 개선 등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민홍보와 공유 차원에서 가로의 녹시율을 등급화하고 상징 심볼을 선정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개선하고 있음.
 - 녹시율 30%이상 측정 지역에는 ‘녹색비율 매우높아요!~’, 25%이상은 ‘녹색비율 높아요!~’ 20%이상은 ‘녹색비율 높아지고 있어요!~’, 20%이하 지역은 ‘녹색비율 좀 더 높여주세요!~’ 로 등급을 나눔.

〈표 4-5〉 서울시 녹시율 현황

연도	평균(%)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2009	19.3	21.4	23.3	21.6	11.0
2010	20.4	21.5	25.4	23.0	11.6
2011	20.4	20.9	25.0	24.0	11.7
2012	21.0	21.5	25.1	25.4	12.1

출처: 서울시, 2012, 서울서베이

녹시율	30% 이상	25%이상	20%이상	20%이하
안내문안	녹색비율 매우높아요!~	녹색비율 높아요!~	녹색비율 높아지고 있어요!~	녹색비율 좀더 높여주세요!~
심볼표시				
	(진녹색 앞)	(녹색 앞)	(연녹색 앞)	(회색 앞)

〈그림 4-10〉 녹시율 등급 및 등급에 따른 심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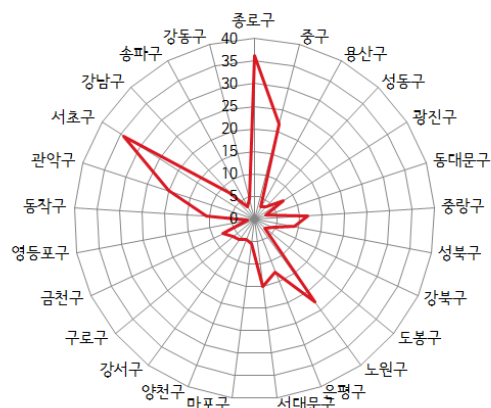
5) 1인당 공원면적

- 서울은 산이 많은데다가 꾸준한 공원녹지 확보정책으로 1인당 공원면적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음.
- 공원 유형별로는 도시자연공원이 66.56km²(39%)로 면적상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린공원이 44.06km², 자연공원(북한산)이 37.34km² 순으로 나타남.
-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의 구별 편차는 크게 나타났으며 종로구가 17.11m²으로 가장 넓고 마포구가 11.76m², 중구 10.18m² 순이며 금천구는 1.42m²로 가장 낮음.
- 공원의 70%가 도시외곽에 편중 분포되어 있으며 실질적 이용 면적은 부족한 실정임.
 - 북한산, 관악산 등을 제외한 도시 생활권 공원 5.03m², WHO 권장기준 9.0m²(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 [(도시자연공원×0.08)+근린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체육공원+문화공원+역사공원+수변공원+기타공원] ÷ 인구수)
-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걸어서 10분 거리(800m) 내 기준 면적 3m²의 서비스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40%에 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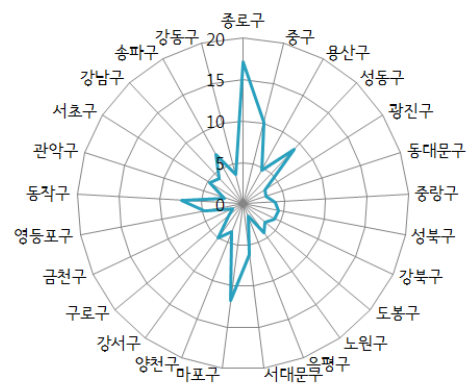
〈표 4-6〉 서울시 1인당 공원면적 현황

연도	1인당 공원면적(m ²)	1인당 도시공원면적(m ²)	1인당 생활권공원면적(m ²)
2005	15.95	10.55	5.19
2006	15.92	10.56	5.22
2007	15.93	10.60	5.29
2008	16.08	10.83	5.00
2009	16.16	10.00	4.86
2010	16.06	10.82	4.83
2011	16.15	10.90	4.86
2012	16.20	11.10	5.02

출처: 서울통계



〈그림 4-11〉 구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그림 4-12〉 구별 1인당 도시생활권공원 면적

6)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률

- 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의 생활폐기물을 합한 것을 말함. 서울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소득과 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선진도시들(1인당 1일 1.3~1.5kg)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런던(1.5kg), 뉴욕과 파리(1.4kg), 베를린(1.3kg)보다 생활폐기물을 적게 배출하고 있으며, 도쿄(1.0kg)와 비슷한 수준임.
- 서울시의 생활쓰레기는 강남, 노원, 마포, 양천 4개의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해서 소각처리하거나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 처리하고 있음.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내놓으면 자치구에서 수거 후, 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22개 자치구에서는 이를 자원회수시설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자치구는 중간 집하장으로 운반하여 압축한 후 대형 운반용 차량으로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해서 처리하고 있음.
- 서울시의 생활폐기물은 2012년 1일 평균 9,189톤이 발생해서 719톤을 매립하고 2,465톤을 소각, 6,004톤을 재활용함. 서울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65.3%에 달함.
- 연도별로 1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은 소득과 소비증가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9kg, 2009년 1.08kg, 2010년 0.95kg, 2011년 0.90kg, 2012년 0.88kg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쓰레기 배출 및 수거시간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미화원 3,096명이 종사하고 있음.
- 서울시는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으로 전환하여 세계 제일의 재활용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하고 있으며, 폐금속자원 재활용, 음식폐기물 감량 사업 등 폐기물 감량정책을 집중 추진하는 한편 녹색장터, 뚝섬나눔장터의 운영으로 생활속 재활용 실천을 장려하고 있음.

〈표 4-7〉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황

연도	총발생량 (톤/일)	처리현황			1일 1인당 발생량(톤/일)
		매립	소각	재활용	
2005	11,170	2,844 (25.6%)	1,139 (10.2%)	7,187 (64.1%)	1.08
2006	11,420	2,832 (24.8%)	1,242 (10.9%)	7,346 (63.5%)	1.10
2007	11,525	2,406 (20.9%)	1,673 (14.5%)	7,446 (64.6%)	1.11
2008	11,447	1,910 (16.7%)	2,027 (17.7%)	7,509 (65.6%)	1.09
2009	11,337	1,480 (13.1%)	2,135 (18.8%)	7,722 (68.1%)	1.08
2010	10,020	1,445 (14.4%)	1,982 (19.8%)	6,592 (64.4%)	0.95
2011	9,440	1,102 (11.7%)	2,345 (24.8%)	5,993 (63.5%)	0.90
2012	9,189	719 (7.8%)	2,465 (26.8%)	6,004 (65.3%)	0.88

출처: 환경부, 2013, 2012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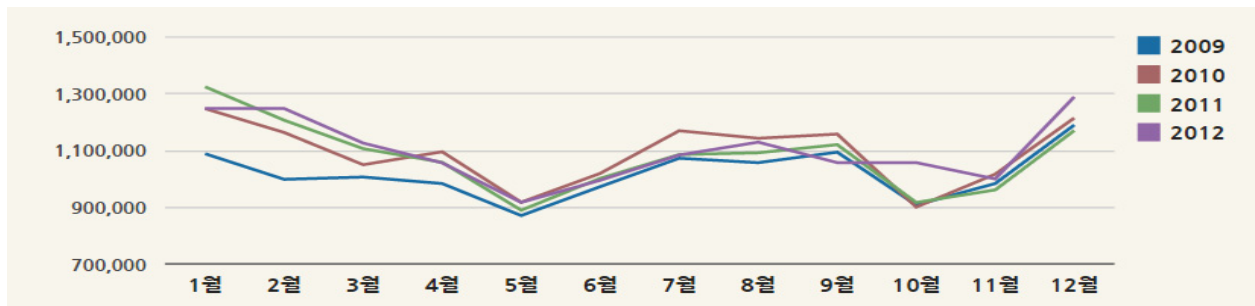
7) 에너지

- 서울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 특성으로 가정·상업, 수송의 에너지 소비량이 높게 나타남.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던 에너지 소비량은 2003년부터 증가추세로 변화하였으나 2007~2009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2010년 4.4%, 2011년 7.9% 증가하였으며, 2014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이 2007년 대비 1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소비의 56%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이 시 전력사용량의 87%를 차지함에 따라 2013년까지 건물 및 주택 부문 BRP를 실시하여 513천TOE/년 절감 성과를 이루었음.
- 5년간 건물(가정·상업)과 수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각각 12% 증가하였고, 산업 부문은 27%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고가의 에너지원(LPG, 등유)과 저효율 가전기기 사용으로 소득 중 연료비 지출 비중이 평균가구의 4.7배로 나타나 에너지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
- 소득이 낮은 계층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4%)이나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물에 주로 거주하여 연료비 지출이 많고 적정수준의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함.
-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 시설 및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표 4-8〉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증가율 ('06~ '11)
계	15,586 (100%)	16,008 (100%)	15,482 (100%)	15,027 (100%)	15,717 (100%)	16,958 (100%)	8.8%
가정·상업	8,847 (56.8%)	8,829 (55.2%)	8,493 (54.9%)	8,380 (55.8%)	9,153 (58.2%)	9,876 (58.2%)	11.6%
수송	4,674 (30.0%)	4,870 (30.4%)	4,942 (30.9%)	4,857 (32.3%)	4,846 (30.8%)	5,228 (30.8%)	11.8%
산업	1,512 (9.7%)	1,551 (9.7%)	1,380 (8.9%)	1,044 (6.9%)	1,023 (6.5%)	1,104 (6.5%)	△27.0%
공공·기타	553 (3.5%)	758 (4.7%)	667 (4.3%)	746 (5.0%)	695 (4.5%)	750 (4.5%)	35.8%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그림 4-13〉 서울시 연도별 전력 사용현황 (단위:kWh)

8) 신재생에너지

- 서울시는 에너지 생산 분야의 핵심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120GWh, 태양광 50MW)하고 있으며,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의 1차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을 살펴보면, 1차 에너지 소비량이 14,021천toe에서 11,847천toe로 약 15.5% 감소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39,059toe에서 232,626toe로 6배 증가함.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용률)도 2000년 0.28%에서 2012년 1.96%로 증가함.
- 2012년 서울시 신재생에너지원별 비율을 보면, 전체 중 76.3%를 차지한 폐기물에너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5.8%를 차지한 바이오에너지로 두 에너지원이 전체 에너지의 92%를 차지함. 나머지는 연료전지 2.7%, 태양광 2.5%, 기타 2.7%임.
- 2010년부터 녹색기술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010년 18개 분야 36억 원, 2011년 9개 분야 16억 원, 2012년 4개 분야 10억 원을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하였음.
- 신재생에너지 보급 증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08년 183천TOE, 2009년 207천TOE, 2010년 224천TOE, 2011년 305천TOE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신재생 에너지원별 에너지 생산비중은 폐기물이 62%, 연료전지가 14%, 바이오가 12%, 태양광이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9〉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비전체계도

비전	“시민이 에너지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			
정책 목표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	혁신으로 좋은 에너지 일자리	따뜻한 에너지 나눔공동체
핵심 지표	총에너지 생산·절감 400만 TOE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		온실가스 감축 1천만톤 CO ₂ eq
추진 전략	○ 천만 서울시민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어 자립 선도 ○ 에너지 생산과 효율화가 일상화되어 시민 삶속에 체화 ○ 에너지 산업 육성 통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에너지 참여자가 수익도 얻고 기부도 하는 선순환 구조 실현			

9) 녹색교통

- 전체 소비 에너지 중 31%가 수송부문에서 소비되며 대기오염 61.5%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의 승용차 및 통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녹색교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서울시 교통혼잡비용 2009년 7.5조에서 2030년 22조로 증가 추정(한국교통연구원, 2012).
- 2010년 기준 녹색교통 수송분담률³⁾은 약 70%이며 2020년 75%, 2030년 80% 달성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해 관심도 높아지고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보급대수가 증가하고 있음⁴⁾ 서울시는 2010년에 전기차 시범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2011년부터 국내 최초 전기승용차 소량 양산에 발맞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2010년에는 제작사와 협력하여 전기 버스를 개발 도입하여 남산순환 노선에서 9대가 운행 중임. 민간 영세 배달업소에서 운행 중인 노후화된 50cc급 엔진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교체 보급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자전거도로(676.7km)의 83.6%가 보행자 겸용도로이며, 자전거전용도로는 17.4%에 불과하여, 2030년까지 녹색교통수단 이용면적비율을 30%로 확장할 계획에 있음(2013년 현재 14.7%).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대중교통 수송분담율 2002년 60.6% → 2012년 65.6%〈지하철 38.2, 버스 27.4〉) 특히 버스의 경우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초기인 2004년 1월 서울시 전체 버스 이용객이 약 478만 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약 580만 명(1일 약 102만 명 증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버스+지하철, 버스+버스 간 환승요금제 도입과 더불어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으로 여겨짐. 시민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체계 개편 전인 2004년 서울시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22.4%였으나, 2011년에는 만족도가 88.5%로 조사되고 있어 시민의 만족도도 대폭 향상된 것으로 파악됨.

〈표 4-10〉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

단위: 천명/일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년대비
대중교통	10,195	10,135	10,224	10,411	10,554	10,783	10,844	61
지하철	4,533	4,532	4,577	4,730	4,835	4,984	5,114	130
시내버스	4,655	4,583	4,605	4,605	4,595	4,647	4,565	-82
마을버스	1,007	1,020	1,076	1,076	1,124	1,152	1,165	13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3) 대중교통(환승 포함), 도보, 자전거 수단분담률의 합(서울시, 2013).

4) 녹색성장 산업육성,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2010.12.6)에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그린카 산업 발전전략 및 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15년까지 그린카 120만대 생산으로 그린카 기술 4대 강국 달성과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차 등 그린카 개발과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10) 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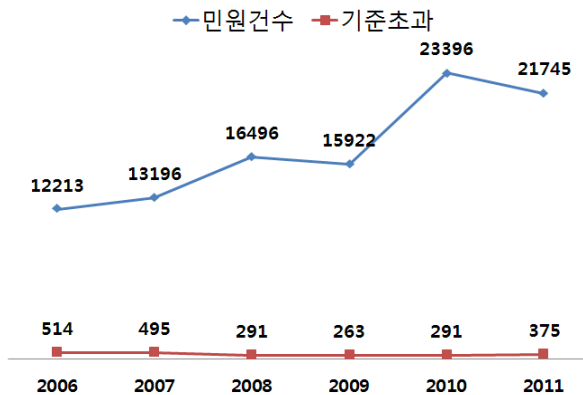
- 서울시는 소음도 측정을 위해 서울시내 30개 지역 150개 지점에 대해 분기별로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음. 소음환경기준 위반의 경우 2006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현장점검을 강화한 이후 2010년 291건에서 2011년 375건으로 증가하였음.
- 2011년 연평균 소음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지역 및 도로변 지역의 상업·준공업지역은 환경기준 이내를 유지하고 있음.

〈표 4-11〉 서울시 2011년 지역별 소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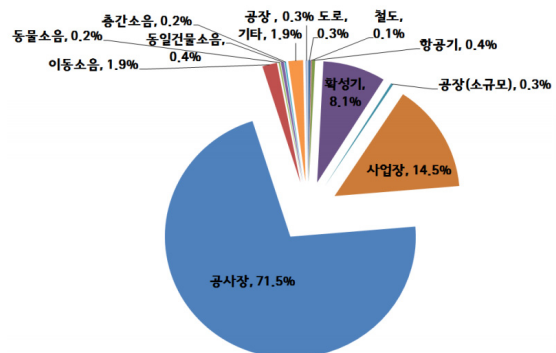
지역별	연도	환경기준 (dB)	2010 (dB)	2011 (dB)	전년 대비 개선 소음도
일반지역	전용주거	50	54.0	53.5	0.5
	일반·준주거	55	55.0	54.8	0.2
	상업·준공업	65	62.1	61.3	0.8
도로변지역	전용·일반·준주거	65	68.1	66.5	1.6
	상업·준공업	70	69.6	69.3	0.3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 소음민원은 매년 증가추세로 2006년 12,213건에서 2010년 23,396건으로 약 2배 증가하였음.
- 서울시는 소음민원 2010년 대비 10% 감소 추진 사업을 실시하여 2010년 23천 건이던 소음민원이 2012년 20천 건으로 감소하였음.
- 2013년도 기준 생활소음 민원 26천 건 중 공사장 소음이 79.1%(21천 건), 사업장 10.9%(3천 건), 확성기 8.2%(2천 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서울시민은 평소 도로차량소음(42.4%)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며 그 다음으로는 층간소음 23.1%, 공사장(건설)소음 12.9%, 오토바이소음 7.8% 순으로 나타남.
- 도로차량소음은 주간 65.4%로 가장 높고, 층간소음은 심야(46.4%)와 야간(42.4%)에 높게 나타남.



〈그림 4-14〉 소음민원 변화추이



출처: 환경부, 2012, 소음·진동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평가

〈그림 4-15〉 서울시 소음원별 소음민원 비율(2011년)

2.2 사회문화 분야

1) 지역불균형과 소득양극화

(1) 지역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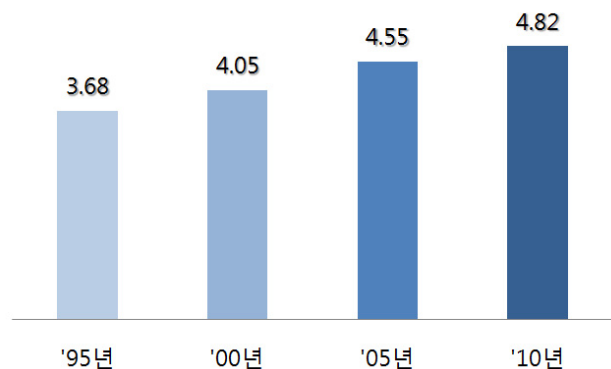
-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시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지역간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은 감소하고 빈곤층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서울시민의 지역별 1인 가구 평균소득은 21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초구, 용산구가 높은 평균소득을 보인 반면 중구, 양천구는 낮게 나타났으며, 강남권 380만원/월, 동북권 300만원/월로 지역별 소득격차가 나타남.
- 서울의 소득양극화 지수는 2000년 0.0209에서 2008년 0.0259로 악화되었으며, 지니계수 또한 같은 기간 0.31에서 0.35로 증가하였음.

(2) 소득양극화

- 4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어 소득 하위 20% 평균소득 대비 상위 20%의 평균소득 배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산층 비중 또한 2000년 71%에서 2012년 65%로 감소하였음.
-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근로자이나, 서울시의 실업률 및 비정규직 비율의 주목할 만한 감소 추세가 보이지 않고 있음.
- 물가 상승으로 여가 생활 등의 지출이 줄어들면서 삶의 질이 저하되어 중하계층과 빈곤층이 실제로 느끼는 소득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출처: 서울시, 2013, 서울서베이
〈그림 4-16〉 가구별 1인 가구 소득분포



출처: 서울시, 2014, 서울시정 4개년 계획
〈그림 4-17〉 소득 하위 20% 평균소득 대비 상위 20% 평균소득 배율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2002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실시(서울시 비수급 빈곤층 규모: 약 29만 명 추정)하였음.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설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정부의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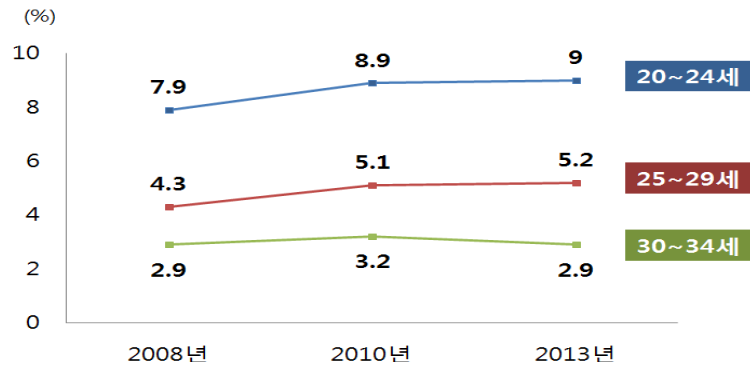
〈표 4-12〉 2013년 기준 자치구 별 기초생활보급자수

구분	서울시인구	인구대비 비율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합계		가구	수급자	가구	수급자	수급자
합계	10,442,426	1.919%	120,704	200,371	120,704	188,017	12,354
종로구	173,148	2.27%	2,323	3,934	2,323	3,057	877
중구	140,807	2.54%	2,647	3,574	2,647	3,498	76
용산구	255,294	1.78%	3,319	4,534	3,319	4,284	250
성동구	306,868	1.82%	3,472	5,581	3,472	5,488	93
광진구	384,269	1.31%	3,240	5,037	3,240	4,934	103
동대문구	375,683	2.28%	5,844	8,568	5,844	8,372	196
종랑구	423,655	2.34%	6,135	9,897	6,135	9,452	445
성북구	490,639	1.87%	5,832	9,182	5,832	8,890	292
강북구	346,493	3.02%	6,263	10,481	6,263	10,253	228
도봉구	364,454	1.43%	3,252	5,220	3,252	5,001	219
노원구	600,829	3.55%	11,814	21,315	11,814	20,472	843
은평구	505,902	2.44%	6,096	12,335	6,096	9,728	2,607
서대문구	324,733	1.65%	3,497	5,348	3,497	4,985	363
마포구	393,576	1.64%	3,852	6,438	3,852	6,164	274
양천구	500,533	1.40%	4,270	7,030	4,270	6,627	403
강서구	573,794	3.07%	10,263	17,596	10,263	17,175	421
구로구	454,478	1.33%	3,785	6,041	3,785	5,676	365
금천구	260,734	2.96%	4,683	7,712	4,683	7,418	294
영등포구	426,876	1.90%	5,340	8,106	5,340	7,590	516
동작구	416,268	1.39%	3,614	5,804	3,614	5,458	346
관악구	540,520	1.95%	6,580	10,561	6,580	10,164	397
서초구	439,998	0.68%	1,851	3,002	1,851	2,818	184
강남구	569,997	1.58%	5,122	9,017	5,122	8,504	513
송파구	680,150	0.93%	3,640	6,306	3,640	5,873	433
강동구	492,728	1.36%	3,970	6,691	3,970	6,136	555

출처: 서울통계

3)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 2013년 12월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여성 비전 정책 6대 분야⁵⁾ 중 2014년 시민이 원하는 정책 1순위는 여성일자리 분야로 나타남.
- 여성취업률은 2009년 이래로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30대 초·중반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청년여성의 연령별 실업률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서울시, 2014,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

〈그림 4-18〉 청년여성의 연령별 실업률

- 고령 1인 가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7.7%에 불과하고, 월평균 소득(42.5만원)은 남성의 79%에 불과하여 고령 여성의 일자리가 매우 불안정한 실정임(서울시, 2014).
- 특히 2013년 기준 성 격차지수가 135개국 중 111위를 기록하여 여성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WEF, 2013)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임신·출산 등에 의한 경력 단절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표 4-13〉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연도	여성			남성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2005	4,170	2,167	52.0	3,945	2,969	75.3
2006	4,199	2,180	51.9	3,961	2,958	74.7
2007	4,215	2,179	51.7	3,972	2,969	74.7
2008	4,246	2,167	51.0	4,012	2,955	73.7
2009	4,279	2,132	49.8	4,044	2,932	72.5
2010	4,315	2,208	51.2	4,069	2,971	73.0
2011	4,330	2,252	52.0	4,069	2,999	73.7
2012	4,370	2,286	52.3	4,072	2,972	73.0

출처: 통계청, 2014, 경제활동인구연보

5)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 6대 핵심 분야는 ①실질적 성평등 실현, ②여성의 일하는 환경개선 및 일자리 확대, ③여성의 평생건강돌보기, ④여성폭력제로, ⑤출산부터 육아까지 물심양면 지원, ⑥더불어 살기로 수립되었음.

4) 노인

- 서울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2.8%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됨.
- 그에 비해 출산율 감소 등으로 경제활동 인구비율은 65%로 감소하게 되어 노인부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12년 독거노인은 약 23만 8천명으로 전체 노인의 21.6%를 차지하여 노인 5명 중 1명이 독거노인으로 파악됨.
- 148천명(2006년) → 202천명(2010년) → 221천명(2011년) → 238천명(2012년)
- 남성 독거노인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으나(2002년 27.1% → 2012년 35.3%) 여전히 여성 독거노인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2012년 64.7%), 독거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은 16.8%로 서울시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율(1.8%)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4-14〉 성별 독거노인 비율

단위: 명, %

연도	전체	남성	여성
2002년	90,769(100.0)	24,631(27.1)	66,138(72.9)
2012년	238,551(100.0)	84,199(35.3)	154,352(64.7)

출처: 서울시, 2013,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

-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54.1명으로 OECD 최고 수준이며 전국 평균보다 2.3배 높게 나타남.
- 2011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31.9%로 전국(48.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OECD 국가 평균 노인빈곤율(13.5%)에 비해서는 높음.
- 보건복지부(2011)에 따르면 소득보다 사회적 관계와 건강 부문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노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65세 이상 서울시민 표본 1,93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에 부족함을 느끼는 노인의 비율이 49.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건강(48.5%), 소득(31.9%)으로 나타났음. 대인관계(13.1%)와 노동(19.9%)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는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시설⁶⁾’ 지표를 관리하고 있음.

6)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법 제36조)

5) 주거

- 서울시의 주택 수는 꾸준히 늘어나 2005년 3,102천호였던 것이 2013년에는 3,548천호로 8년 사이 44만 5321호(14.4%)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도 2005년 93.7%에서 2013년 97.5%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자가보유율은 51.3%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4-15〉 서울시 주택보급률 추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주택수(천호)	3,102	3,151	3,173	3,231	3,258	3,400	3,449	3,498	3,548
주택보급률(%)	93.7	94.1	93.2	93.6	93.1	97.0	97.1	97.3	97.5

출처: 서울통계

- 2013년 기준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44.5%(1,578천호), 단독주택 35.9%(1,275천호), 다세대주택 14.8%(526천호), 연립주택 4.0%(143천호),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0.7%(24천호)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

〈표 5-16〉 서울시 주택현황

단위: 가구, 호

연도	일반가구수	주택현황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계	단독주택 (영업겸용포함)	다가구 주택				
2005	3,309,890	3,102,404	1,236,312	248,880	987,432	1,258,658	146,877	430,502	30,055
2006	3,349,670	3,151,268	1,232,343	243,581	988,762	1,307,113	145,278	436,479	30,055
2007	3,403,152	3,172,505	1,225,171	236,477	988,694	1,330,658	143,852	442,769	30,055
2008	3,453,648	3,231,707	1,216,693	229,207	987,486	1,381,252	143,565	460,142	30,055
2009	3,500,895	3,257,736	1,209,551	224,319	985,232	1,407,114	143,135	467,899	30,037
2010	3,504,297	3,399,773	1,280,138	165,295	1,114,843	1,485,869	145,914	463,417	24,435
2011	3,552,453	3,449,176	1,269,741	157,185	1,112,556	1,522,637	144,419	487,944	24,435
2012	3,594,613	3,497,951	1,285,244	174,365	1,110,879	1,546,509	143,772	497,991	24,435
2013	3,637,605	3,547,725	1,275,387	167,516	1,107,871	1,578,361	143,370	526,172	24,435

출처: 서울통계

- 주택 수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주거 취약계층은 2011년 기준 11만 8,108명으로 나타나 전국의 주거 취약계층 26만 1,038명 중 47.9%가 서울시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거 취약계층의 분포를 살펴보면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7만 6,511명으로 가장 많았고, PC방·사우나·찜질방에서 거주하는 인구도 24,270명으로 나타남(보건복지부, 2011).

6) 임대주택

- 2년 반 이상 지속된 전세대란으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소득 1~2분위 서민의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부담이 59.5~50.2%로 과중하게 나타남.
 -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9.9배로 전국 4.2배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소득분위 4분위 이하 서민의 PIR은 17배에 달함.
 - 소득 6분위 이하 가구의 자가주택 점유율이 40% 정도에 불과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부담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와 LH공사에서 제공하는 영구·공공·국민임대 주택, 장기전세주택(Shift), 주거환경·재개발·다가구 매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이 있음.
 - 2013년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32.3%, 택지개발에 의한 임대주택 27.7%, 장기전세주택(Shift)이 11.9%를 차지하며, 추가로 LH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28.1%를 차지하고 있음. 2014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은 전체 주택의 6.8%(23.5만호)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시는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며, 2020년에는 OECD 평균(11.5%)에 가까운 10%에 도달하도록 공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나, 공공임대주택을 물량 위주로 공급해 일부 자치구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재고율이 평균 이하인 자치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더 보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전용면적 85㎡이하), 공공임대주택 6만호를 공급할 계획임.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서울시 1~2인 가구수는 46.7%로 전체 가구수의 약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소형임대주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노인가구, 신혼부부가구 등 저소득,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2~3인용 수요 확대에 따른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에 있음.
- 장기전세주택 114㎡ ➡ 85㎡ 이하, 국민임대주택 85㎡ ➡ 60㎡ 이하

〈표 4-17〉 서울시 임대주택 건설 현황

단위: 호

연도	전체	영구(LH)	국민임대	공공	장기전세	민간
2009	19,645	100	7,850	2,798	1,313	7,584
2010	29,231	653	6,995	5,686	7,868	8,029
2011	27,521	706	1,726	4,870	3,602	16,617
2012	48,316	0	8,355	7,123	862	31,976

출처: 서울시, 2013, 서울서베이

7) 교육

- 강남권 · 비강남권의 교육재정 차이로 인한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강남권 3구 교육재정(2013년 평균): 11,086백만원
 - 비강남권 자치구 교육재정(2013년 평균): 6,445백만원
-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의 계층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상위자가 소득 하위자에 비해 사교육비 6.3배, 사교육 참여도 2.5배 높음(2012년 사교육비조사, 통계청)
- 또한 저출산에 따른 취학 적령인구 감소, 교원 증원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표 4-18〉 교원 1인당 학생 수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초등학교	22.3명	20.6명	19.3명	18.1명	16.9명
중학교	19.2명	18.8명	18.6명	17.7명	17.1명
고등학교	16.2명	16.3명	15.9명	15.3명	14.8명

출처: 서울통계

- 거주지역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4-19〉 교육환경 만족도 현황

연도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서울시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2007	4.56	4.51	4.54	4.24	4.55	4.83
2008	4.86	4.87	4.63	4.63	4.70	5.62
2009	4.93	4.58	4.78	4.73	4.77	5.63
2010	5.14	4.96	5.09	4.96	5.10	5.46

출처: 서울시, 2012, 서울서베이

- 서울시는 매년 교육지원 전출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2012년에는 전년대비 약 5% 증가한 1,641억원을 투입하였으며, 2006년 6월 전국 최초로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였음. 또한 2011년 11월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여 급식부담률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표 4-20〉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현황

2011년 공립초등학교	⇒	2012년 초, 중1학년 (587천명)	⇒	2013년 초, 중1, 2학년 (670천명)	⇒	2014년 초, 중학교 전체
------------------------	---	------------------------------------	---	---------------------------------------	---	---------------------------

출처: 서울시, 2014, 2014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8) 평생교육

- 전 세계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가 사회적 목표로 부각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지속가능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평생교육 이슈가 부각되고 있음.
- 평생교육법 개정 등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다양한 관련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 서울시는 2014년 4월 법적 근거⁷⁾에 따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서울시민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008년 28.7%, 2009년 28.4%, 2010년 32.6%, 2011년 28%, 2012년 34.5%로 나타났으며, 2014년에는 40%로 지속적인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사이버강좌는 2009년 138개 프로그램에 5,081명 참여에서 2011년 151개 프로그램에 6,200명 참가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내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기관은 자치구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시민 참여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표 4-21〉 서울시 평생학습 기관 현황

지역	기관수	모집강좌수	지역	기관수	모집강좌수
도봉구	45개	196개	마포구	68개	60개
강북구	45개	64개	강서구	77개	160개
노원구	62개	12개	양천구	46개	67개
은평구	47개	99개	구로구	59개	144개
성북구	63개	70개	영등포구	86개	47개
종로구	94개	264개	금천구	55개	14개
동대문구	50개	69개	관악구	59개	140개
중랑구	40개	66개	동작구	55개	215개
서대문구	48개	87개	서초구	65개	0개
중구	105개	283개	강남구	104개	649개
성동구	56개	164개	송파구	84개	69개
광진구	45개	1121개	강동구	65개	178개
용산구	46개	84개			

출처: <http://sll.seoul.go.kr>

7)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평생교육법」 제20조 제1항(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9) 문화예술

- 서울에서 진행된 전시 비율은 전국의 52.4%로 서울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2〉 서울시 공연건수 및 전시횟수 현황

연도	시각예술 전시회 건수	공연건수				
		계	양악	국악	무용	연극
2006	5,624	4,119	2,678	—	372	1,069
2007	5,680	3,805	2,400	—	426	979
2008	6,240	3,173	1,501	397	488	787
2009	6,459	4,221	2,575	501	489	656
2010	6,811	4,886	2,746	587	576	977
2011	7,268	5,273	3,037	667	540	1,029
2012	7,102	4,905	2,702	733	648	822
2013	6,824	5,104	2,846	505	721	1,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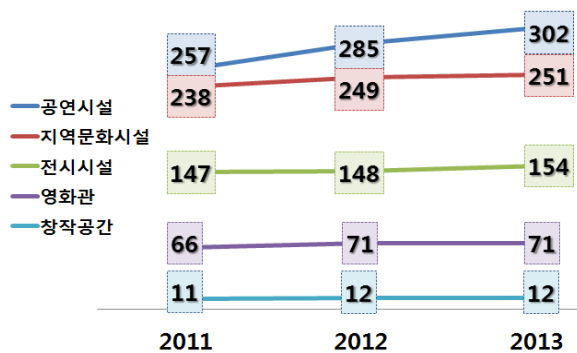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2012 문예연감

- 생활권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마을예술창작소를 운영 중이나 아직까지는 자립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소득격차로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보편적 기회 제공이 필요함.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문화예술교육 경험기회 증가(서울시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23.1% < 500만원 이상 52.3%)
- 2013년 서울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도는 6.41점으로 2009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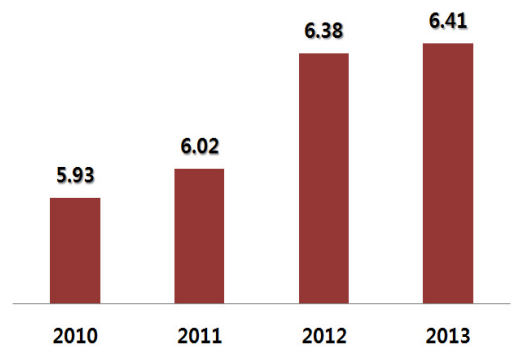
〈표 4-23〉 서울시민 문화환경 만족도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점수	5.18	5.37	5.56	5.54	5.93	6.02	6.38	6.41
만족율(%)	19.8	27.6	32.2	30.0	41.9	43.7	48.9	57.3

출처: 서울시, 2013, 서울서베이



〈그림 4-20〉 분야별 문화시설 현황



〈그림 4-19〉 문화환경 만족도 현황

10) 자살률

- 서울시의 자살률은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음.
 - 2000년 8.9명 → 2010년 26.2명
- 2012년 자살률은 23.8명/10만 명으로 전년대비 11.5%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감소현상이 나타남. 70세 이상은 1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자살률은 15.9명/10만 명으로 전년대비 28.4%로 크게 감소하였음. 이는 연령표준화 자살사망률⁸⁾로 볼 때 전국 25.1명/10만 명에 비해 서울시는 21.1명/10만 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자살률을 기록하였음.

〈표 4-24〉 서울시 자살률 현황

단위: 명, 10만명당 명

연도	자살 사망자수			자살률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2010	2,668	1,726	942	26.2	34.2	18.3
2011	2,722	1,872	850	26.9	37.4	16.6
2012	2,391	1,596	795	23.8	32.1	15.6
2013	2,560	1,764	796	25.6	35.7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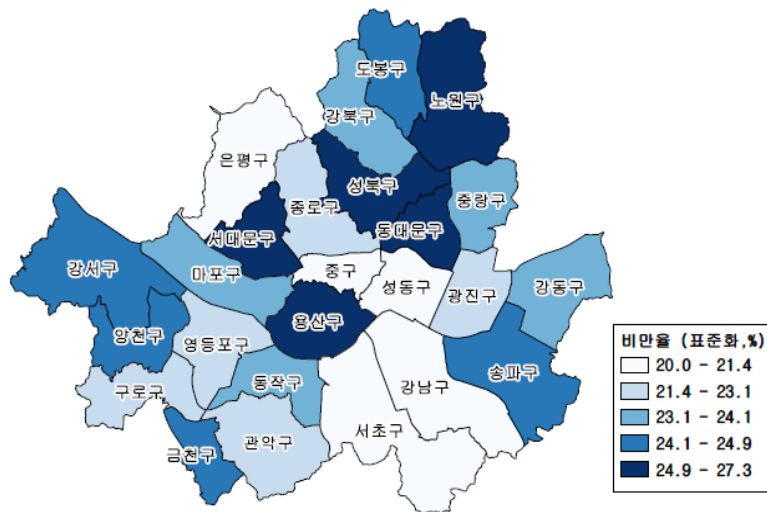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13, 사망원인통계

- 성별로는 남성이 2011년 37.4명에서 2012년 32.1명으로 14.2% 감소하여 여성 감소율 6%보다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약자(노인, 청소년 등)에서 자살률이 심각한 상황이며, 거주 취약지역 내 자살률 증가로 지역 간 자살불평등 발생이 나타났으나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자살률이 높은 취약 자치구인 관악, 성북, 노원, 강서, 은평구를 선정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자치구별 자살률 격차(최소치와 최대치 차이)는 2010년 17.8명에서 2011년 18.5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15.8명으로 감소하였음.
- 서울시는 2011년 「서울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2012년에는 ‘지역밀착형 자살예방사업’을 5개구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음
- 핫라인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제공은 2009년 5,330건에서 2012년 21,568건으로 증가, 자살시도자 긴급출동건수는 2012년 312건에서 2012년 1,182건으로 증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8)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 간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

11) 비만도

- 서울의 만19세 이상 성인 비만율은 23.4%(남자 31.6%, 여자 16.5%)로 2008년(20.6%)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26.9%, 20~30대 20.0%였으며, 지역적으로 비만율이 높은 구는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이며, 비만율이 낮은 구는 중구, 강남구, 은평구, 서초구, 성동구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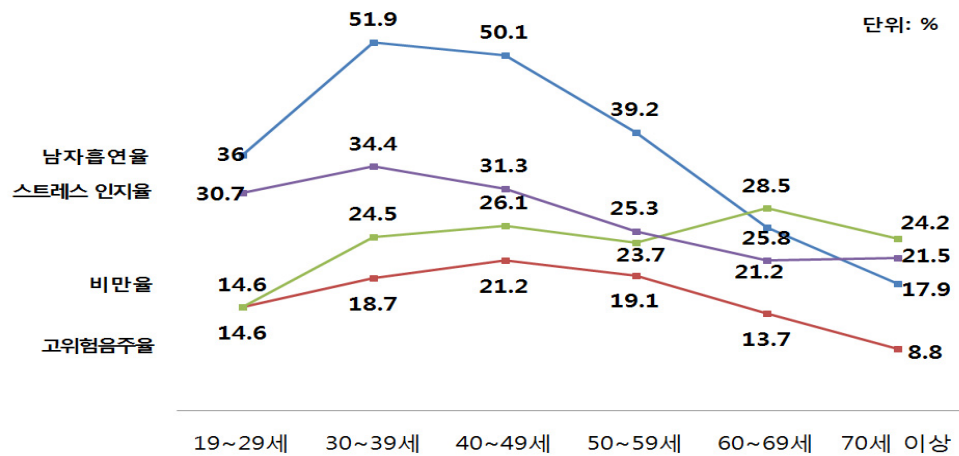


〈그림 4-21〉 비만율 분포도(2012년)

-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비만 인지율은 39.9%로 최근 4년간 10.0%p 증가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자 38.4%, 여자 41.6%로 여자가 높았으나 실제 비만율은 남자(31.6%)가 여자(16.5%)보다 높게 나타남.
- 2012년 기준 체중조절 시도율은 59.2%(남자 51.7%, 여자 65.8%)로 2011년(61.7%)에 비해 2.5%p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연령별로는 20대에서 64.8%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에서 33.1%로 가장 낮았고, 체중조절 시도율이 높은 지역은 양천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송파구 등이었음.
- 비만 감소와 관련이 있는 걷기,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등은 전년도보다 실천율 감소로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걷기 실천율은 52.1%(남자 54.7%, 여자 49.5%)로 2011년(54.1%) 대비 2%p 감소하였으며, 걷기 실천율이 높은 지역은 중구, 동대문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등임.
 -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16.8%로 2011년(19.2%)대비 2.4%p로 4년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성별로는 남자 20.6%, 여자 13.6%로 남자에서 높았음.

12) 건강

- 서울시민의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매우 좋음, 좋음)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2008년 50.9%에서 2013년 44.5%로 감소하였음.
 -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끼는 비율은 남성이 49.9%로 여성 29.2%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은 더 길지만 건강에 대한 불안감은 더 높음.
- 2013년 만13세 이상 서울시민은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38.8%)를 1위로 꼽았으며, 2위인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서비스(18.0%)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임.
- 2010년 기준 서울시 등록장애인은 2006년에 비해 약 28%, 독거노인은 약 42% 증가하여 건강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고혈압 유병률(인구 100명당 29.5명)이 일반시민보다 2배 이상 높아 건강격차가 심화되는 한편, 암 표준화 사망률, 자살률 등 건강지표의 지역간 격차가 존재함.
- 건강행태를 나타내는 음주율, 흡연율, 비만율과 스트레스 인지율로 보면 30~40대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서울시민 30세 이상 시민 30%가 대사증후군⁹⁾ 고위험군인 것으로 파악됨.
 -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2009년 기준 43.1%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



출처: 서울시, 2013, 통계로 본 서울시민 건강 및 사망원인

〈그림 4-22〉 연령별 건강행태

- 서울시 결핵환자 신고는 전국 발생의 26%를 차지하며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 1위임.
- 서울시민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2013년 전체 사망자 중 31.0%(13,028명)가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다음으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폐렴, 간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운수사고, 알츠하이머병 등의 순으로 나타남.

9) 고혈압, 고혈당, 높은 중성지방, 낮은 고밀도콜레스테롤, 복부비만 5가지 중 3가지가 있을 때 진단

13) 복지

- 서울의 경제규모는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으나 도시민의 삶의 질은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140개 도시 중 58위를 차지하여 중위권을 차지(EIU평가, 2013년 8월) 하였음.
- 계층별, 연령별 등 집단 간 복지서비스 수준 격차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치구별 복지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크고 복지수요도 편중되어 있음. 또한 초·중학생 무상급식, 무상교육,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등 교육복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자치구 복지예산 급증(총예산의 30~60%)과 복지대상자 증가(3년간 57%) 등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따라 서울시는 시 전체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전국 최초의 복지기준¹⁰⁾을 마련한 바 있음.
- 사회복지시설 또한 2008년 758개소에서 2010년 1,287개소, 2012년 1,393개소, 2013년 1,461개소로 매년 확충해나가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수준도 2012년 5.7%, 2013년 3.5%로 인상하였음.

〈표 4-25〉 서울시민복지기준 5개 분야 복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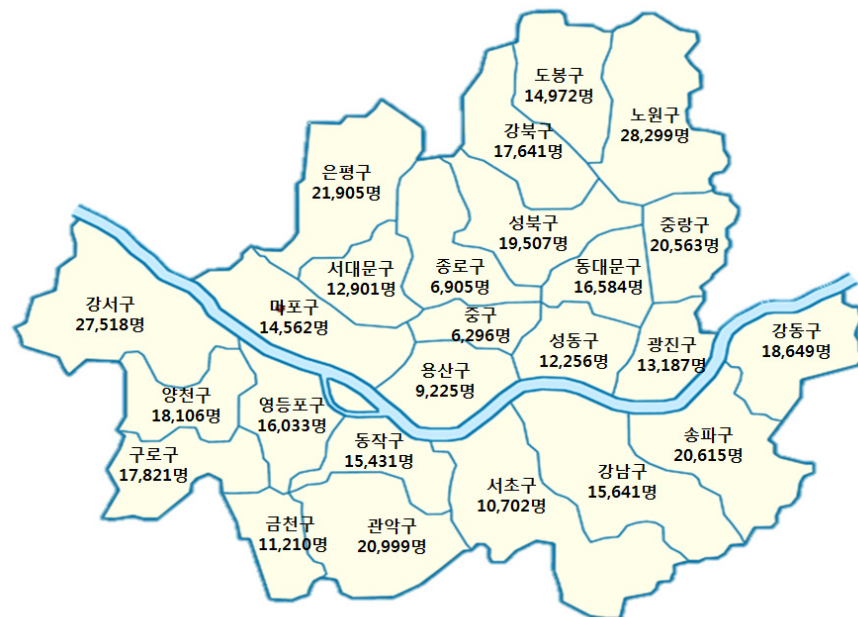
분야	최저기준	적정기준
소득	■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	■ 시민의 소득이 국제적 빈곤기준선인 전체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주거	■ 임대료 비중은 소득의 30% 이하로, 주거환경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한다.	■ 임대료 비중은 소득의 25% 이하로, 주거공간은 4인가구 기준 54㎡를 확보하도록 한다.
돌봄	■ 가구소득 10% 이내의 지출로 공공의 책임 하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 돌봄서비스 10분 이내 거리 접근, 서비스 품질은 OECD 평균수준이 되도록 한다.
건강	■ 경제적·지리적 이유로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한다.	■ 시민의 건강수준을 OECD 평균수준으로 향상 시키고 지역별 건강격차를 해소한다.
교육	■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학령기에 보장된 교육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의무교육의 질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이고 성인의 평생교육기회를 증진한다.

출처: 서울시, 2013, 서울시민 복지기준

10) 서울시민복지기준(2012)은 서울의 높은 물가, 지역별 생활격차 등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시민과 함께 만든 전국 최초의 복지기준으로 5개 분야(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복지기준 및 그의 실현을 위한 102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시민복지최저기준이란 소득·대상·거주지 등 개인이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권리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수준이며, 시민복지적정기준이란 서울시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수준을 고려할 때,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적절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수준임(서울시민복지기준, 2012).

14) 장애인

- 2012년 서울시 등록 장애인 수는 407,528명으로 전체 인구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등록 장애인은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증가율 둔화 후 2011년 말부터 증가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장애유형별 현황은 지체장애가 208,074명(51.1%), 뇌병변 45,041명(11%), 시각장애 42,937명(10.5%), 청각장애 41,977명(10.3%)으로 파악됨.



출처: 서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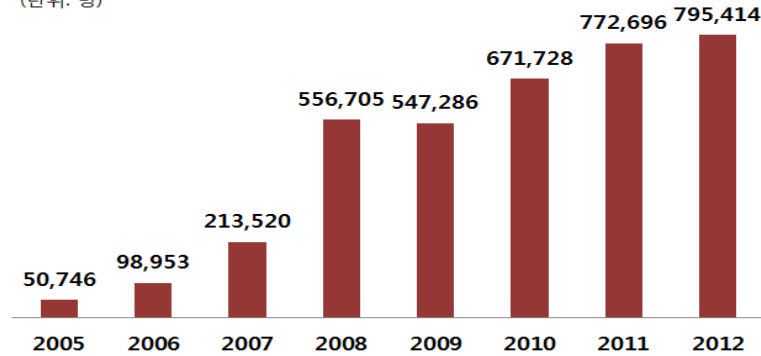
〈그림 4-23〉 서울시 구별 장애인 현황

- 전국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38.5%이나 서울시 장애인의 참가율은 31.8%이며 중증 장애인은 특히 낮게 나타남.
- 서울시 거주 청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율은 전체 장애인에 비해 11% 낮고 실업률은 10% 높으며, 고용률은 11.8%가 낮게 나타남.
- 이에 따라 2011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2012년 생활시설 장애인 인권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음. 또한 장애인 일자리 조성을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3년 장애인고용촉진조례를 제정함.
- 그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2010년 63.2%에서 2013년 67.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 중증장애인 140,579명(2011년 99천명)을 활동 지원하였음.

15) 청소년

- 위기청소년은 28만 8천명으로 전체 청소년 201만 6천명의 14.3%를 차지하고 있음.
- 연도별 상담시설¹¹⁾ 이용 청소년 수는 2007년 60,746명에서 2012년 795,414명으로 2005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음.
- 서울시는 청소년 문제 예방과 해결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2009년 13개소였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2012년 23개까지 확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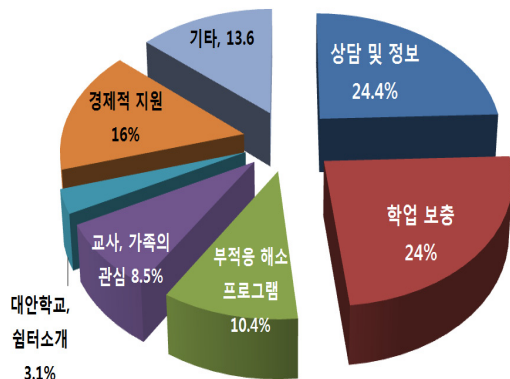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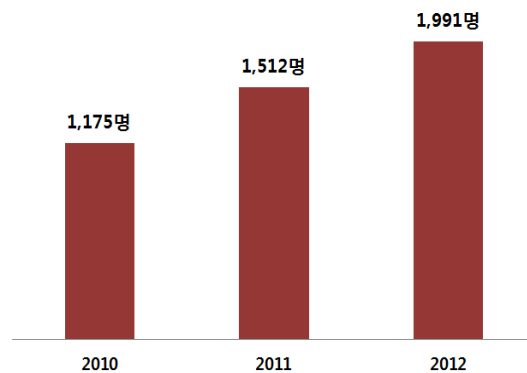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그림 4-24〉 연도별 상담시설 이용 청소년 수

- 2012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을 세워 대안교육 지원 대폭 확대, 대안학교 컨설팅 및 대안교육 교사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대안교육 지원은 2007년 492명에서 2012년 1,99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대안학교 지원을 17개교에서 29개교로 확대하고, 징검다리 학습과정도 1,100여명으로 늘려 시행하였음.



〈그림 4-25〉 학업중단 학생이 필요로 하는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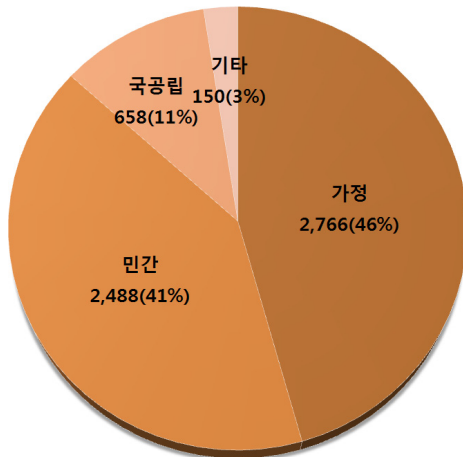


〈그림 4-26〉 서울시 대안교육 지원 인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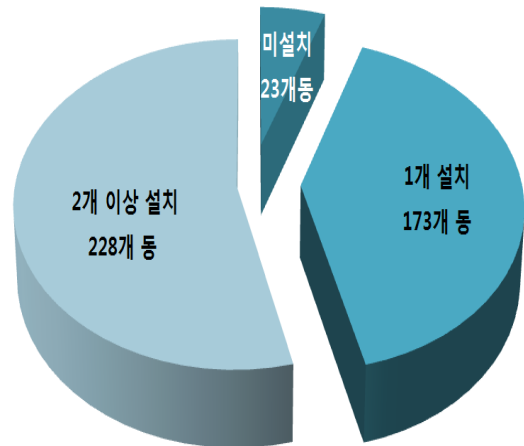
11)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등의 상담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즉각적으로 개입하기 위하여 24시간 연중무휴로 청소년전화 1388과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6) 아동과 보육

- 기혼 여성의 주요 출산중단 사유 1위가 자녀 양육부담으로 고품함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을 월 21만 명에 지원하고 아이돌보미 또한 연 28천 가정에 지원하고 있음.
- 2008년 35개, 2009년 18개, 2010년 15개, 2011년 36개, 2012년 108개소 등 최근 4년 동안 총 212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준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6,105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658개소로 1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 행정동별 설치 현황은 미설치동 23개, 1개 설치동 173개, 2개 이상 설치동 228개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7〉 서울시 보육시설 유형별 현황



〈그림 4-28〉 서울시 행정동별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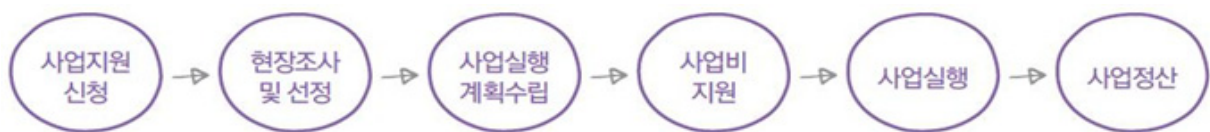
- 아이돌보미 서비스¹²⁾는 2007년 용산, 서대문, 동작, 서초 등 4개 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08년 18개 구청, 2009년 25개 구청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음.
-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2008년 68,137건에서 2011년 331,616건, 2012년 449,148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약 90.7%가 만족도에서 긍정적 답변을 보였음.
- 가정해체 증가, 가족기능 약화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2010년 1,153건에서 2011년 1,054건, 2012년 1,487건으로 증가하였음.
- 2012년 11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¹³⁾하여 청소년과 어린이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12)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 때문에 일시적으로 돌봄 문제가 생긴 경우 개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보육을 돕는 서비스로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누어 서비스 제공

13) 총 8장 6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기본권)를 기본으로 제정된 조례

17) 마을공동체

- 서울시는 2012년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2012년 3월 광역 집행기관으로서 서울시 마을담당관실을 설치하고, 2012년 8월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서울시민 10명 중 3명이 마을공동체¹⁴⁾ 사업을 인지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서울서베이, 2013).
-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 사업 제안, 계획 수립, 실행, 사후 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주민이 수립해 추진하는 주민 주도 사업으로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일과 공동의 관심을 찾아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도록 돕는 일체의 활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컨설팅,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음. 주민이 쉽게 언제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연중 주민 제안 방식으로 구성했으며, ‘공동의 문제 인식’과 ‘자발적 추진 의사’만 있다면, 어느 단위의 마을이라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2012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총957건(주민모임 256건, 단체 701건)이었으나 2013년 총 2,233건(주민모임 1,509건, 단체 724건)으로 1년 사이 135% 증가. 특히 2012년 총 지원 사업 신청자 중 26.7%를 차지했던 주민모임 건수가 2013년에는 67.6%에 달하여 마을공동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3).
-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과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마을 사업 제안, 계획 수립 · 실행 · 사후 관리 등 사업 전 과정을 주민 주도 시행
 - 공동의 문제 인식과 자발적인 추진의지가 있으면 어느 마을이나 지원 가능
 - 일회성 자금 지원 위주의 공모 방식 지양, 지속 가능하고 종합적인 지원 방식 추진
 - 주민의 추진 의지와 마을 사업의 필요성 등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 및 지원



〈그림 4-29〉 ‘마을공동체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 마을공동체 사업은 2012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2014년까지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의 기초 토대를 구축하고, 2017년까지 마을공동체의 확산과 전파를 통해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마을 지향 행정을 정착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2017년까지 3천 명의 마을활동가를 육성하여, 서울의 구석구석까지 마을공동체를 육성할 계획을 세움. 매년 동마다 1개 정도의 작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5년간 2천개가 넘는 다양한 마을 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14)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의미함. 서울서베이(2012) 조사 결과 소득이 높고 관리전문직/화이트칼라 일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30~40대 연령층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됨

18) 안전

- 최근 기상이변의 일상화로 자연재해 다양화와 피해규모 대형화 추세가 나타나 30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 도시시설물 증가와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며, 생활안전 위해요소 증가로 안전사고와 시민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음.
- 소득 양극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안전시설이 미흡하고 당사자들의 안전의식 불비로 재해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
 - 65세 이상 9.6%, 1인 가구 23.5%, 외국인 거주자 1.7%
-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음.
- 서울의 5대 범죄 발생은 2008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폭력과 절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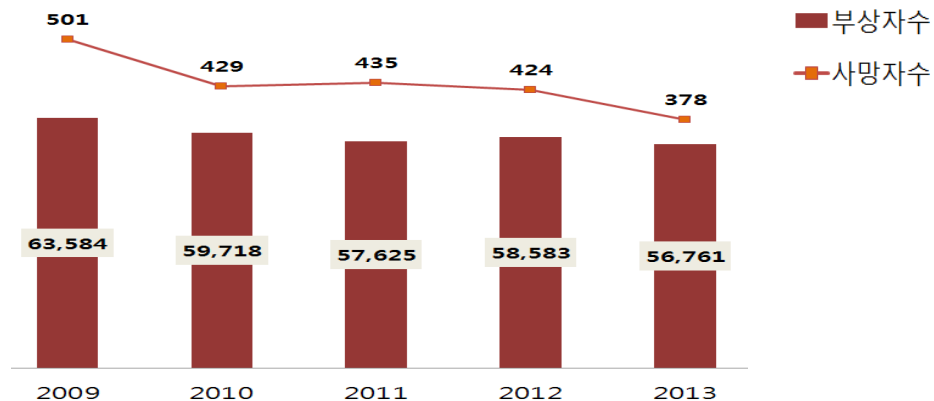
〈표 4-26〉 서울시 5대 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연도	합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2005년	113,382	219	1,481	2,913	33,960	74,809
2006년	104,848	199	1,200	3,480	29,246	70,723
2007년	108,644	219	1,076	3,388	29,962	73,999
2008년	107,771	221	948	3,421	28,894	74,287
2009년	115,752	250	1,510	3,758	37,167	73,067
2010년	124,447	294	1,029	4,939	49,387	68,798
2011년	132,939	258	956	5,252	54,412	72,061
2012년	137,725	179	570	4,908	61,436	70,632
2013년	132,966	152	420	5,387	61,585	65,422

출처: 서울통계

- 교통사고 및 사망자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횡단 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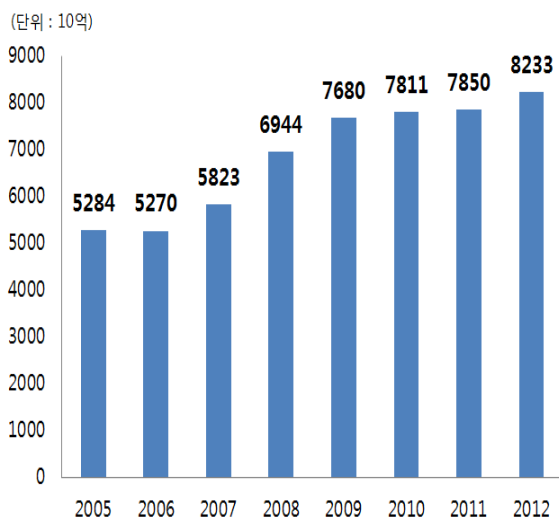
출처: 서울통계

〈그림 4-19〉 서울시 교통사고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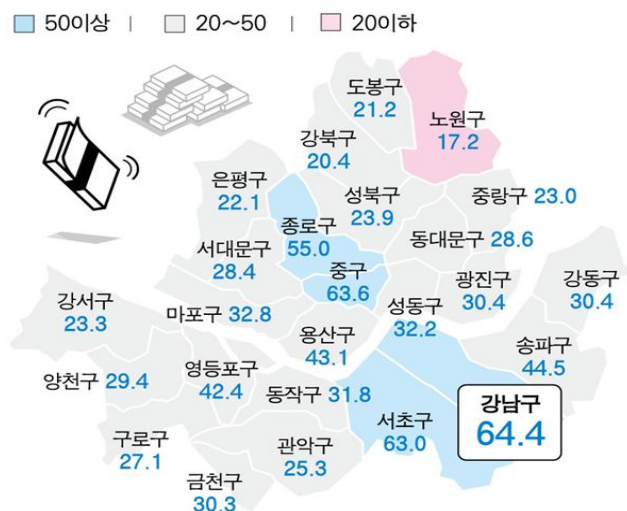
2.3 경제 분야

1) 재정규모

- 서울시의 재정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상대적으로 재정규모가 큼.
- 서울시의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자체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을 예산액으로 나눠 구하고 있음.
 - 2014년(2014년 상반기 기준)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역대 최저치인 33.6%임. 25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4.7%를 기록한 이후 2006년 53.1%, 2007년 50.5%, 2008년 51%, 2009년 50.8%, 2010년 49.3%, 2011년 47.7%, 2012년 46%, 2013년 41.8%, 올해 33.6%를 기록해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했음.
 - 2014년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곳은 종로구(55%) 중구(63.5%) 서초구(63%) 강남구(64.3%) 등 4곳뿐이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마저도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강북구(20.4%) 도봉구(21.2%) 등 재정자립도가 20%에 머물러 있는 자치구도 수두룩하고 특히 노원구(17.2%)는 10%대에 불과함.
- 재정자립도가 2014년에 떨어진 것은 해마다 세입은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 급식 등 국·시·구비 매칭으로 이뤄지는 보편적 복지사업 비용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그림 4-30〉 서울시 재정규모



자료: 한국일보, 2014. 8. 11

〈그림 4-31〉 2014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단위 %)

2) 지역내 총생산(GRDP)

- 서울시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8년 감소하였는데 이후 200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2년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함.
- 서울시내 총생산은 1985년 22조에서 1995년에 105조로 100조대에 들어섰으며, 2005년에 200조를 넘어 2012년 기준 전국의 22.73%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말 현재 1인당 총생산은 31,423천원임. 물가상승률을 제거한 실질총생산은 전년에 비해 2.0% 성장한 것으로, 이는 25년 전인 1985년(67조3,417억원)보다 4.5배 성장한 것임(1985~2010년간 서울시 연평균 성장률은 5.2%를 기록).
- 2012년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종이 90.0%('85년 78.8%)를 차지하며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광·제조업(6.5%), 건설업(2.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0.6%) 순임. 특이한 것은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농림어업(0.2%)도 서울의 산업생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임.
- 서울의 GRDP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대비 GRDP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1994년 서울시 지역총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8.9%에 달했으나 2011년에는 22.8%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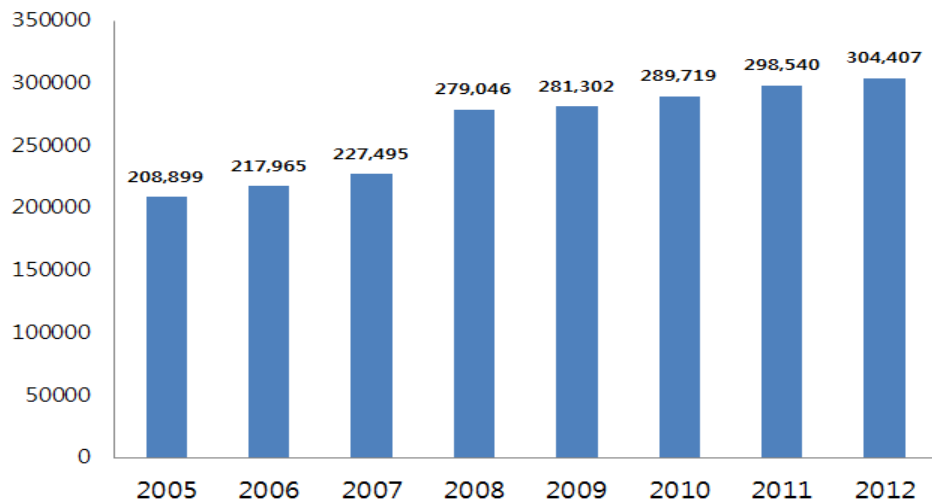
〈표 4-27〉 서울의 GRDP 추이(2010년 기준가격)

단위: 십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	1,179,447	1,187,344	1,265,146	1,308,882	1,338,986
서울특별시	279,046	281,302	289,719	298,540	304,407
전국 대비 비중 (%)	23.65	23.69	22.90	22.80	22.73

출처: 서울시, 2014, 2014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단위: 십억원)



〈그림 4-32〉 서울시 지역내 총생산 추이

3) 창조경제와 창조계층

- 서울은 전국 창조경제(문화콘텐츠 사업 기준) 매출액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25%의 연구소·대학이 모인 지식기반도시로 창조계층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핵심인력의 집중화현상이 높게 나타남.¹⁵⁾
- 2010년 서울시 창조계층¹⁶⁾은 약 136만 명으로 서울시 전체 직업군 중 29.5%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22.2%)에 비해 높음. 과학 및 인문사회 전문가 직종과 경영, 금융 전문가 직종이 지역 내 전체 창조계층 인력 수 가운데 가장 많음(구운모, 박정수, 2013).
- 창조계층 종사자를 산정하는 방식은 창조산업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해짐. 현재 서울시는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창조계층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표 4-28〉 주요 광역시별 창조계층 인력 수 산출 결과(2012)

단위 : 천명, %

	과학 및 인문사회 전문가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관리자	보건·의료· 건강·사회 복지 전문가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창조계층 인력 합계
서울	227 (15.9)	152 (10.7)	282 (19.8)	201 (14.1)	119 (8.4)	234 (16.4)	208 (14.6)	1,423 (100.0)
부산	16 (5.2)	46 (15.0)	77 (25.1)	23 (7.5)	38 (12.4)	74 (24.1)	32 (10.4)	306 (100.0)
대구	14 (5.7)	27 (11.0)	72 (29.5)	16 (6.5)	21 (8.6)	67 (27.4)	27 (11.1)	244 (100.0)
인천	29 (10.0)	51 (17.6)	64 (22.1)	29 (10.0)	26 (9.0)	54 (18.7)	36 (12.4)	289 (100.0)
광주	6 (4.1)	18 (12.2)	46 (31.1)	10 (6.7)	9 (6.1)	46 (31.1)	13 (8.8)	148 (100.0)
대전	26 (14.5)	28 (15.6)	40 (22.3)	14 (7.8)	13 (7.3)	43 (24.0)	15 (8.4)	179 (100.0)

출처: 구운모, 박정수, 2013, 우리나라 창조계층 인력의 추이 및 서비스직종의 창조인력화 방안

〈표 4-29〉 주요 광역시별 창조계층 인력 분포(2008~2012)

단위 : 천명, %

	핵심 창조계층 인력		창조적 전문가		창조계층 인력 합계		지역별 전직종 인구 수	
	2008	2012	2008	2012	2008	2012	2008	2012
서울	822 (16.7)	862 (17.1)	509 (10.3)	561 (11.1)	1,331 (27.1)	1,423 (28.3)	4,908 (100)	5,026 (100)

출처: 구운모, 박정수, 2013, 우리나라 창조계층 인력의 추이 및 서비스직종의 창조인력화 방안

15)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지식기반사업의 투자는 전국에 비해 정체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전국 연구개발비는 연평균(2000~2011년) 12.4%인데 반해 서울은 6.7%로 나타남

16) 창조계층(creative class)이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창의적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학자, 엔지니어, 대학교수, 예술, 디자인, 교육자 등)이나 지식집약적인 부문의 전문가(의료전문가, 경영전문가 등)를 말함(Florida, 2002).

4) 고용과 실업률

- 실업률은 200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고용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으나 2010년 이후 소폭 감소 추세를 보임. 그러나 시민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2013년 취업자는 5,097천명으로 전년대비 61천명(1.2%) 증가했으나 전국 취업자 중 서울지역의 비중(20.3%)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산업경제의 성장동력 약화에 따른 신규투자 위축과 숙련노동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고용전략은 청년실업률과 노인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파악됨.
- 서울의 청년취업자 비중은 2000년 129만 명에서 2012년 90만 명으로 9.8% 감소하였으며, 서울의 연평균(2000~2012년) 청년취업자 증감률은 -3.0%로 같은 기간 서울의 전체 취업자 증가율(0.7%)에 3.7% 하회한 것으로 나타남.
 - 청년취업자의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원인은 청년인구 감소와 대학진학률 증가로 파악됨. 구체적으로 청년 취업자 감소(-22천명)의 절반은 서울지역 청년인구 감소에 의한 인구효과(-11천명)으로 보이고 있음(인구효과 = 전년대비 인구증감 * 전년 고용률).

〈표 4-30〉 서울시 고용 및 실업률 현황

구분	전국				서울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	3.7	3.4	3.2	3.1	4.7	4.6	4.2	4.0
고용률(%)	58.7	59.1	59.4	61.5	58.9	59.7	59.7	59.8
청년실업률(%)	8.0	7.5	7.6	8.0	8.4	8.3	8.3	8.7

출처: 통계청, 2013, 경제활동 인구조사

-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30%를 상회하고 있어 고용불안감이 커지고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 서울의 약 400만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129만명이며 1년 미만 근무 근로자는 132만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158만원)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141만원)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고용의무 회피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2009년 13.2% → 2012년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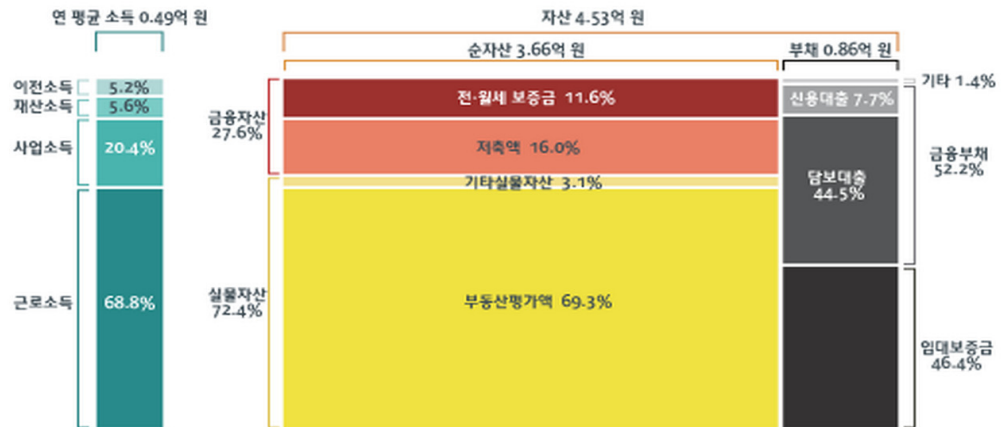
〈표 4-31〉 서울시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35.5%	35.9%	33.8%	34.9%	33.3%	34.2%	33.3%	32.6%
서울	42.0%	40.3%	38.2%	35.2%	34.4%	33.7%	33.7%	32.5%

출처: 통계청, 2013, 경제활동 인구조사

5) 가계 재무 상태와 부채

- 서울시민의 가구당 자산은 평균 4.53억 원, 중앙값 2.51억 원으로, 전국(평균 3.26억 원, 중앙값 1.81억 원) 대비 1.4배 높은 수준이며 자산의 평균과 중앙값 차이(서울 2.02억 원, 전국 1.45억 원)가 큰 것은 자산의 빈부격차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의미함.
- 자산 대비 부채는 19.1%로, 전국 17.9%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서울시민의 자산은 실물 자산 72.4%(부동산평가액 69.3%, 기타실물자산 3.1%), 금융자산 27.6%(저축액 16.0%, 전·월세 보증금 11.6%)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부채 0.86억 원을 제외한 3.66억 원이 가구당 평균 순자산. 부채는 임대보증금 46.4%, 금융부채 52.2%(담보대출 44.5%, 신용대출 7.7%), 기타 1.4%로 구성되어 있음.



출처: 서울연구원, 2014, 인포그래픽스 제 67호

〈그림 4-33〉 2014년 기준 서울시 가구당 평균 소득과 자산

- 서울 서베이(2012) 조사 결과 서울거주 가구의 50.9%는 ‘부채가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부채의 주된 원인으로 ‘주택 임차 및 구입’ (60.5%)이 매우 높게 나타남.
- 부채가 없는 경우는 20대 이하(76.8%), 60대 이상(69.0%), 중졸이하(71.2%), 월소득 200만원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32〉 서울시민의 가구부채 현황

연도	없다	부채이유						
		주택임차 및 구입	교육비	교육비, 의료비 제외한 기타 생활비	재테크 투자	의료비	기타	사업 자금
2007	54.9%	27.9%	4.9%	4.5%	3.5%	1.7%	2.5%	—
2008	54.4%	71.3%	7.6%	8.0%	8.2%	2.3%	0.7%	1.8%
2009	57.5%	71.3%	8.7%	6.9%	9.0%	1.9%	0.7%	1.4%
2010	55.0%	66.1%	10.9%	10.9%	8.2%	2.5%	0.2%	0.9%
2011	47.4%	67.3%	10.8%	8.5%	8.4%	3.2%	1.7%	—
2012	49.1%	60.5%	14.6%	8.8%	9.8%	5.7%	0.7%	—

출처: 서울시, 2013,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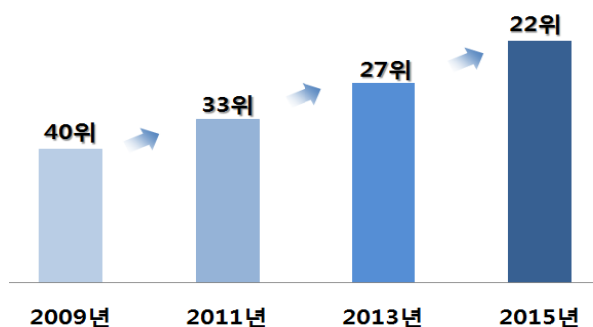
6) 도시경쟁력

(1) 서울시 도시브랜드지수

- 시민 34%, 전문가 36%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시정책의 중점 고려사항이라고 인식함.
- 2008년부터 글로벌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해외 주요 방송과의 협력, 한류 활용 마케팅 등 다양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도시브랜드지수¹⁷⁾는 2009년 40위에서 2011년 33위로 7계단 상승하였으며 특히 국제적 기여도 등 명성 부분에서 많은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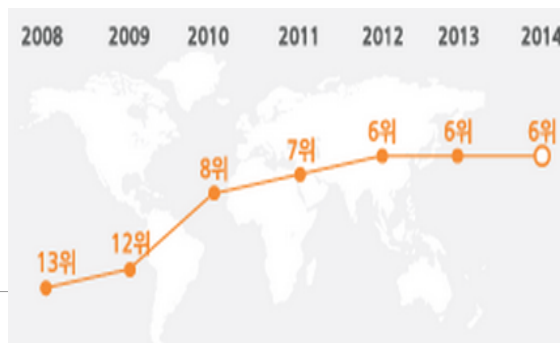
(2) 서울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 서울은 글로벌 도시경쟁력¹⁸⁾ 종합순위에서 세계 40개 도시 중 3년 연속 6위, 아시아에서는 도쿄와 싱가포르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음.
 - 일본 모리기념재단이 발표한 2014년 글로벌 도시경쟁력지수(GPCI : Global Power City Index)에서 서울은 세계 40개 도시 중 6위를 기록
 - 2008년 첫 순위발표 13위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3년 연속 6위
 - 아시아에서는 도쿄(4위), 싱가포르(5위)에 이어 세 번째
- 도시 기능 부문에서는 ‘교통접근성’ 5위, ‘연구개발’ 6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 ‘거주’ 분야는 23위로 6개 분야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 행위자(actor) 부문에서는 ‘연구원’이 7위, ‘경영자’가 11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인 반면, ‘예술가’ 분야는 35위로 현저히 낮은 수준임.
 - 행위자(actor) 부문은 도시 기능 부문의 지표를 도시에서 활동하는 5대 행위자의 관점에서 재조합하여 순위를 산정하며, GPCI 총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출처 : 희망서울 생활지표

〈그림 4-34〉 서울시 도시브랜드 지수 변화



출처 : 모리재단, 2014, 글로벌파워도시지수(GPCI)

〈그림 4-35〉 서울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순위변화

17) 2006년 국가 및 도시 브랜드 전문가인 사이먼 안홀트(Simon Anholt)는 도시의 국제적 명성, 기후 등 매력도, 도시의 안정도, 주거편리성, 문화공간 풍요성, 비즈니스 편리성 등의 6개 지표를 개발하여 세계 50대 도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시 브랜드 지수와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도시 브랜드 지수는 세계 10개 국가에서 대륙별 안내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있음

18) 글로벌 도시경쟁력(GPCI) 평가는 도시의 기능에 따라 경제, R&D, 문화교류, 거주, 환경, 교통접근성의 6개 분야 26개 평가 항목으로 나뉘며, 총 70개의 지표로 평가함

7) 관광

- 서울은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 자연자원 20,867개, 문화자원 3,132개, 사회적자원 87,740개 등¹⁹⁾
 - 관광산업 경쟁력 순위(2013년 세계경제포럼): 싱가포르 10위 > 일본14위 > 홍콩 15위 > 한국 25위
-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최근 5년간 방문객 증가율은 12%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4년 1월~6월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함. 2005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 일본인 관광객 중심에서 중국인 관광객 중심으로 유형이 변화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 2011년 방한 중국관광객은 222만 명으로 이 중 91.1%가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관광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락, 위락, 개별휴가를 목적으로 방한하고 있으며, 6일간 체류하면서 하루 평균 \$250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지출금액은 대부분(77%) 쇼핑에 쓰이며, 주요 방문지는 명동(69.2%), 동대문시장(66.7%), 남산·N서울타워(37.5%)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고전적인 장소가 아닌 쇼핑 장소를 방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서울연구원, 2013).
- 서울시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서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5대 대표명소, 관광거점, 동네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사업 추진 및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관광매력도를 향상시키고 있음. 서울시 등록 여행업 사업체수는 4,293개사, 관광종사자 수는 72,590명에 달함(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011).
- MICE²⁰⁾, 한류,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을 육성하여 관광 소비지출 확대 유도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서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표 4-33〉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 수	6,023	6,155	6,448	6,891	7,818	8,798	9,795	11,140	12,176
서울 방문 비율	78.1	76.8	73.4	74.5	77.4	80.3	79.7	82.5	80.9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수 (추정)	4,704	4,727	4,733	5,134	6,051	7,065	7,806	9,191	9,850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증가율	-	0.5	0.1	8.5	17.9	16.8	10.5	17.7	7.1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연도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19) 서울연구원, 2011, 관광자원 현황조사

20) 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ference), 전시사업(Exhibition)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에서 첫 머리를 딴 것임. 서울시는 세계 3위 컨벤션 도시 달성을 위한 MICE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013년 글로벌 트래블러가 주관한 시상식에서 Best MICE City상을 수상하였음

8) 사회적경제

- 서울시는 서울플랜 2030의 전략 중 하나로 ‘공존과 협동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선정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가 증가하였음.
- 2013년 서울의 사회적경제기업²¹⁾은 총 1,503개로 사회적기업 425개, 마을기업 11개, 협동조합 967개로 파악되고 있음. 또한 2014년 6월 기준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364개, 마을기업 133개, 협동조합 1,378개 등 총 1,875개로 나타남.

〈표 4-34〉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2013년)

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계	서울형	지역형	인 증		
1,503	425	121	106	198	111	967

출처: 서울시, 2014, 2014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 서울의 사회적 인증 기업은 전국의 22.5%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3.9배 증가하였음.
- 사회적경제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치구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은 마포구(7.8%), 강남구(7.5%), 종로구, 영등포구, 서초구 순이며, 강북구(1.7%)와 중랑구(1.6%)에서 가장 적게 분포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마포구(66개, 12개)에 가장 많으며, 협동조합은 강남구(97개), 자활기업은 노원(26개), 강서(18개), 구로(13개)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 업종별 현황은 기타서비스(17.6%, 택배, 컨설팅, 세탁 등), 교육서비스(16%), 문화(14.2%), 복지(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익이 낮거나 혹은 시장 형성 초기의 생활 서비스 영역에서 성장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4-35〉 사회서비스 분야별 사업체수와 매출액

	매출액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
간병·가사지원	51,536,386	3,681,170
교육	18,630,899	1,863,090
기타	336,598,788	8,209,727
문화·예술·관광·운동	41,524,703	1,297,647
보건	7,881,474	3,940,737
보육	7,021,109	7,021,109
사회복지	82,409,554	5,886,397
환경	116,381,982	10,580,180
합계	661,984,895	(평균) 5,310,007

출처: 고용노동부, 2012,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개요집

2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음.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이 포함됨.

-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53.1억 원으로 평균 매출액을 상회하는 분야는 환경(105.8억 원), 기타(82.1억 원), 보육(70.2억 원), 사회복지(58.9억 원) 순으로 나타남.
- 보건(39.4억 원), 간병·가사지원(36.8억 원), 교육(18.6억 원), 문화·예술·관광·운동(13억 원)은 평균 매출액을 밑돌고 있음.
-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일자리 비율은 2013년 1.6%에서 2030년 15%, GRDP 중 사회적경제의 비율은 2013년 0.5%에서 2030년 7%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표를 관리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9) 공유경제

- 서울시는 공유의 활성화를 위해 2012년 9월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²²⁾를 제정하여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에 발맞추어 성북구, 서대문구, 구로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서대문구, 강북구,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등에서도 공유 촉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상정 중에 있음.
- 공유단체 및 기업은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곳에 지정되며, 지정된 단체·기업에게는 공유서울 BI(Brand Identity)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음.
- 2013년 37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지정하여 지정서 발급, 공유서울 BI 사용권 부여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2014년 8월 기준으로 50개 단체 및 기업이 지정·운영 중에 있음.
- 일부 연매출 10억 이상의 기업도 탄생하였으나,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유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유기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공유경제 시작학교를 운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22)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2조(정의)에 따르면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함.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장 지정된 단체·법인을 말하며,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장 지정된 기업을 의미함.

10) 도시농업

- 도시생태계 복원의 일환으로 도시농업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정부는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서울시는 2012년 11월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2년을 도시농업 원년으로 선포하였음. 이와 더불어 2012년 기준 12개 자치구가 도시농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 2010년 강동구, 송파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가 제정하였음.
- 그간 서울시의 일반 농업은 경지이용률이 매우 높고, 논보다는 밭의 이용률이 매우 높아 토지이용이 집약되어 있었음. 또한 채소와 화훼류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적 농업으로 발전해왔으며, 전업보다는 겸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서울시, 2013).
- 강동구는 2020년까지 1가구 1텃밭을 목표로 도시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농업 전담부서인 도시농업과를 설치하였음. 종로구도 2012년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계획과 마을공동체 도시농업 실천 지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 또한 노들섬 도시농업공원은 서울시 제1호 도시농업공원으로서 서울시의 도시농업 육성 의지와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랜드마크로서 도시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시민참여에 의한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이창우, 2012).
- 서울시내 도시농업 면적은 2011년 29.1ha에서 2014년 117ha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도시텃밭은 2011년 100개소에서 2012년 1,673개소로 약 17배 증가하였음. 특히 서울 변두리에 많이 있는 주말농장이 서울시 도시농업 실천공간의 65%를 차지하며, 이 중 강동·도봉·서초구의 개발제한구역과 팔당호 주변이 전체 주말농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표 4-36〉 서울시 도시농업 면적 현황

구분	총 농지면적 (670ha)				
	전업농 경작지	도시농업 공간			
		주말농장 (공영, 민영)	도심 자투리 및 공원텃밭	학교 텃밭	기타 (옥상, 상자)
면적 (ha)	553	76.0	18.3	15.1	7.6
비율 (%)	82.5	11.3	2.7	2.3	1.1

출처: 서울시 민생경제과 내부자료

11) 산업구조

- 2012년 기준 서울시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총 780,887개의 사업체 중 서비스업종이 약 90%('85년 7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광·제조업(6.5%), 건설업(2.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0.6%)이 차지하고 있음.

〈표 4-37〉 서울시 사업체 현황

단위: 개, 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합계	723,086	4,177,336	729,728	4,490,081	752,285	4,498,312	780,887	4,541,393
농업 임업 및 어업	22	587	23	477	21	369	20	296
광업	32	242	22	507	25	518	32	200
제조업	54,947	282,583	53,969	272,847	56,027	275,387	59,217	286,67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26	12,505	106	11,858	114	11,473	118	9,889
하수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366	6,062	379	6,470	414	6,639	446	6,303
건설업	19,354	222,352	19,075	379,995	20,156	359,900	20,767	309,602
도매 및 소매업	208,443	792,686	209,972	782,830	215,874	786,971	225,830	800,698
운수업	92,575	263,903	92,888	270,811	91,773	265,736	92,212	259,781
숙박 및 음식점업	114,473	401,205	115,410	405,057	119,320	417,162	122,439	431,55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408	263,721	13,688	295,536	16,175	302,726	18,597	307,787
금융 및 보험업	9,259	247,385	9,582	270,540	9,942	267,602	10,293	261,894
부동산업 및 임대업	35,979	148,312	35,102	142,546	35,207	144,271	35,214	141,1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467	362,489	26,414	367,037	29,043	389,003	32,515	395,28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201	291,719	10,039	353,645	11,277	324,573	12,423	342,89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64	130,980	1,281	129,240	1,307	127,407	1,286	136,603
교육 서비스업	29,330	281,404	30,044	297,624	31,181	299,858	31,810	310,88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923	216,581	22,042	240,163	23,275	249,466	24,231	264,2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1,580	72,681	21,467	75,243	21,383	74,919	21,450	75,8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67,337	179,939	68,225	187,655	69,771	194,332	71,987	199,877

출처: 통계청, 2013, 전국사업체조사

- 산업 세분류별로 볼 때 사업체가 가장 많은 업종은 일반 음식점업이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일반은행으로 나타남

〈표 4-38〉 산업세분류별 사업체수·매출액 상위 업종

단위: 천개, 십억원

순위	사업체수 기준		매출액 기준	
	사업체수	세분류	매출액	세분류
1	55.7	일반 음식점업	269,859	일반은행
2	49.7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64,793	주거용 건물 건설업
3	36.7	화물자동차 운송업	41,651	증권 및 선물 중개업

출처: 통계청, 2010, 경제총조사

- 서울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1~4인 사업체)은 총 사업체의 81.5%인 54만 개에 이르고 있으나 영업이익률은 6.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4-39〉 1~4명 개인사업체 현황

단위: 천개, 천명, 십억원, %

시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이익률	
	전체	1~4명 개인	구성비	전체	1~4명 개인	구성비	전체	1~4명 개인	구성비	전체	1~4명 개인
전국	3,355	2,563	76.4	17,647	4,541	25.7	4,332,293	270,541	6.2	8.3	25.9
서울	730	544	74.6	4,487	961	21.4	1,365,791	61,267	4.5	6.6	26.6

출처: 통계청, 2010, 경제총조사

- 서울시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576.6조원이며, 도·소매 부분이 65.5%(377.9조원)를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는 출판·영상·방송 56.9조원(9.9%), 전문·과학·기술 33.1조원(5.7%), 숙박·음식점 23.8조원(4.1%) 순으로 나타남. 서비스업 사업체 당 평균 매출액은 10.1억 원으로 전국의 1.8배에 달함(서울연구원, 2014).

〈표 4-40〉 서울시 서비스업 부문별 매출액 현황

단위: 조, %

업종	도매 소매	출판·영상 방송	전문·과학 기술	숙박 음식점	보건 사회복지	부동산 임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예술·스포츠 여가	교육 서비스	수리 개인서비스	하수·폐기 원료재생
매출액	377.9	56.9	33.1	23.8	22.5	18.0	16.8	11.5	8.4	7.0	0.8
비율	65.5	9.9	5.7	4.1	3.9	3.1	2.9	2.0	1.5	1.2	0.1

출처: 통계청, 2012, 서비스업부문 조사

- 2013년 전국 75,574개 신설법인 중 24,747개(32.7%)가 서울에서 형성되었으며, 신설법인 중 서비스업이 19,874개(80.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 3,375개(13.6%), 건설, 전기, 가스관련 산업 1,369개(5.5%) 순으로 나타남. 전국에 비해 금융·보험업, 출판·영상·방송, 전문·과학·기술 등 지식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중소기업청, 2013).

- 서울시의 산업구조 변화를 종합해보면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업의 증가는 신설법인의 약 90%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산업 세분류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업종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음식점업의 평균 존속기간(5년 6개월)이 전국(5년 10개월)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총사업체의 81.5%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영업이익률 또한 전국에서 가장 낮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3. 정책적 시사점

3.1 환경 분야

-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생산 다각화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세계적인 기후보호 선도도시로 도약해야 함.
- 인체 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불안이 증대하고 있어, 초미세먼지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 산과 강은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함.
- 서울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계 최고의 재활용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거체계와 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이 요구됨.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 등 녹색교통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서울수도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개편을 통해 녹색교통을 활성화하여야 함.

3.2 사회문화 분야

- 남녀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형평성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함. 또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9년 이후로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실정²³⁾이므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23) 2013년 기준 OECD 국가별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아이슬란드 83.3%, 스웨덴 77.9%, 스위스 77.2%, 노르웨이 75.9%이며 OECD의 평균은 62.3%이다(OECD, 2013, Employment Outlook).

- 서울은 노인인구 100만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예비노인인구라고 볼 수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48~64세)까지 고려한다면 노인 정책에 통합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됨.
- 복지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교육, 주택분야를 포함한 모든 시정 분야에서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를 조성한다는 전략을 추진해나가야 함.
- 다양한 도시재난 발생 위험이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사람 중심의 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안전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 시민 문화여가활동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 환경 조성이 필요함.

3.3 경제 분야

- 서울의 경제는 꾸준히 발전해왔으나 최근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창조경제 육성 등 새로운 비전을 추진하여 고용률을 높여나가야 함.
- 글로벌 경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외국인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서울에 대해 느끼는 매력도를 상승시켜야 함.
- 산업구조의 다양화 측면에서 사회적경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며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3.4 종합의견

- 서울시 현황을 검토한 결과 양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던 기존의 성장방식에서 탈피하여 질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있었으며, 환경 분야에서도 환경성의 회복과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음. 또한 형평성과 관계의 회복 등을 통한 사회가치의 실현을 비롯하여 시민의 문화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 공유수도 서울의 추진, 도시농업 활성화 등과 같이 환경, 사회문화, 경제를 모두 포괄하는 정책이 수립되고 있어 서울시정 곳곳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여 서울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고려되는 분야들은 지표로 관리하여 기본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05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 2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원칙
- 3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정
- 4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1.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 서울시는 2002년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녹색서울 시민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지속가능성 평가를 시행해왔을 만큼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음.
-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하였으며, 지속가능성 평가대상 및 절차와 방법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행되어 왔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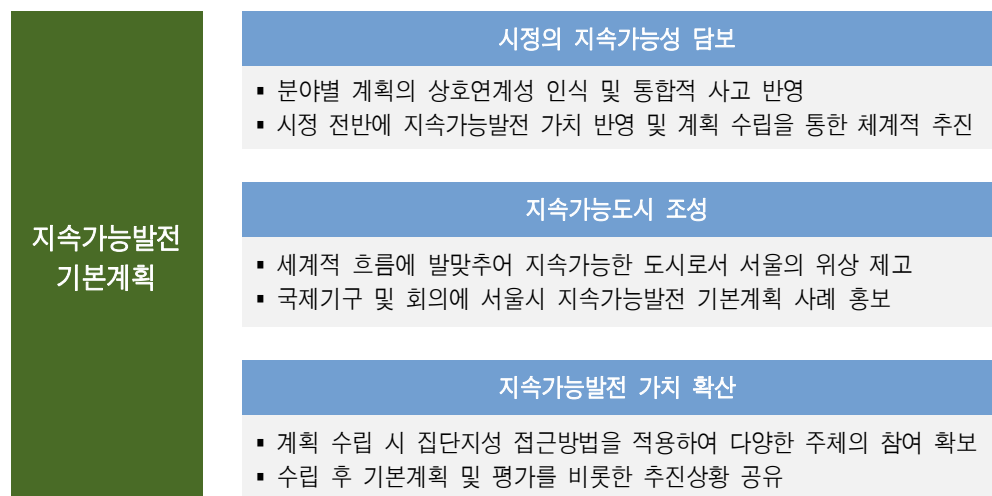
제10조 (평가대상안건 선정) ① 조례 제16조에 의한 지속가능성 평가대상안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사업(이하 "사전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중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선정한다.

1. 환경정책과 통합적으로 조정·연계가 필요한 별표 1의 주요행정계획(변경 계획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2 개발사업)
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2009년 3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 위원회 구성 등이 규정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이하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1년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업무 수행근거 부재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폐지됨.
- 2012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시의 주요정책과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시정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이관됨.
- 2013년 5월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이하 서울시 지속위 조례)를 제정하고 자문기구로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함.
- 서울시 지속위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①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 ②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자문, ③주요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④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음.

1.2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유엔의 SDGs(지속가능발전 목표) 설정에 따라 다시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음.
- 서울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지속가능성 평가를 시행하는 한편 2030 서울플랜을 비롯한 각 부문별 기본계획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고 있음. 또한 2013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의 핵심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손꼽히는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현재 서울시 여러 분야의 기본계획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계획체계가 부재하여 체계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의 부문별 정책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비전과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기본계획의 수립과정과 추진상황을 여러 행정부서를 비롯해 시민과 공유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됨.



〈그림 5-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필요성

2.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원칙

2.1 지속가능성을 시정의 기본원칙으로 정립

- 서울시가 수립하는 모든 분야의 기본계획과 정책 결정에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반영되도록 함.
- 시정 모든 분야에 지속가능성이 적용되기 위해서 기본계획은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함.

2.2 각 분야의 상호연계성을 인식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

- 경제, 환경, 사회문화는 상호의존적이며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시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 세 분야의 상호연관성이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되도록 서울의 지속가능발전 개념모델로 ‘동심원 모델’을 적용함. 현재 서울시는 경제의 무분별한 양적 성장을 지양하는 한편 마을공동체 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중시하고 있음. 또한 모든 경제·사회적 활동은 환경용량을 최대한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을 취하고 있어¹⁾ 동심원 모델이 서울시가 지향하는 환경·사회문화·경제의 상호연계성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판단하였음.
- 경제 발전은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 사회문화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되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사회통합, 형평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
- 모든 의사결정과 활동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전 지구적 관점에서 환경을 보존하고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함.

2.3 서울시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지속가능성 이슈에 주목

- 서울시의 일반현황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함.

2.4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지성 접근방법 적용

-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협력하는 집단지성 접근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상향식 의사결정 방법을 채택하고 기본계획의 실행력과 타당성을 확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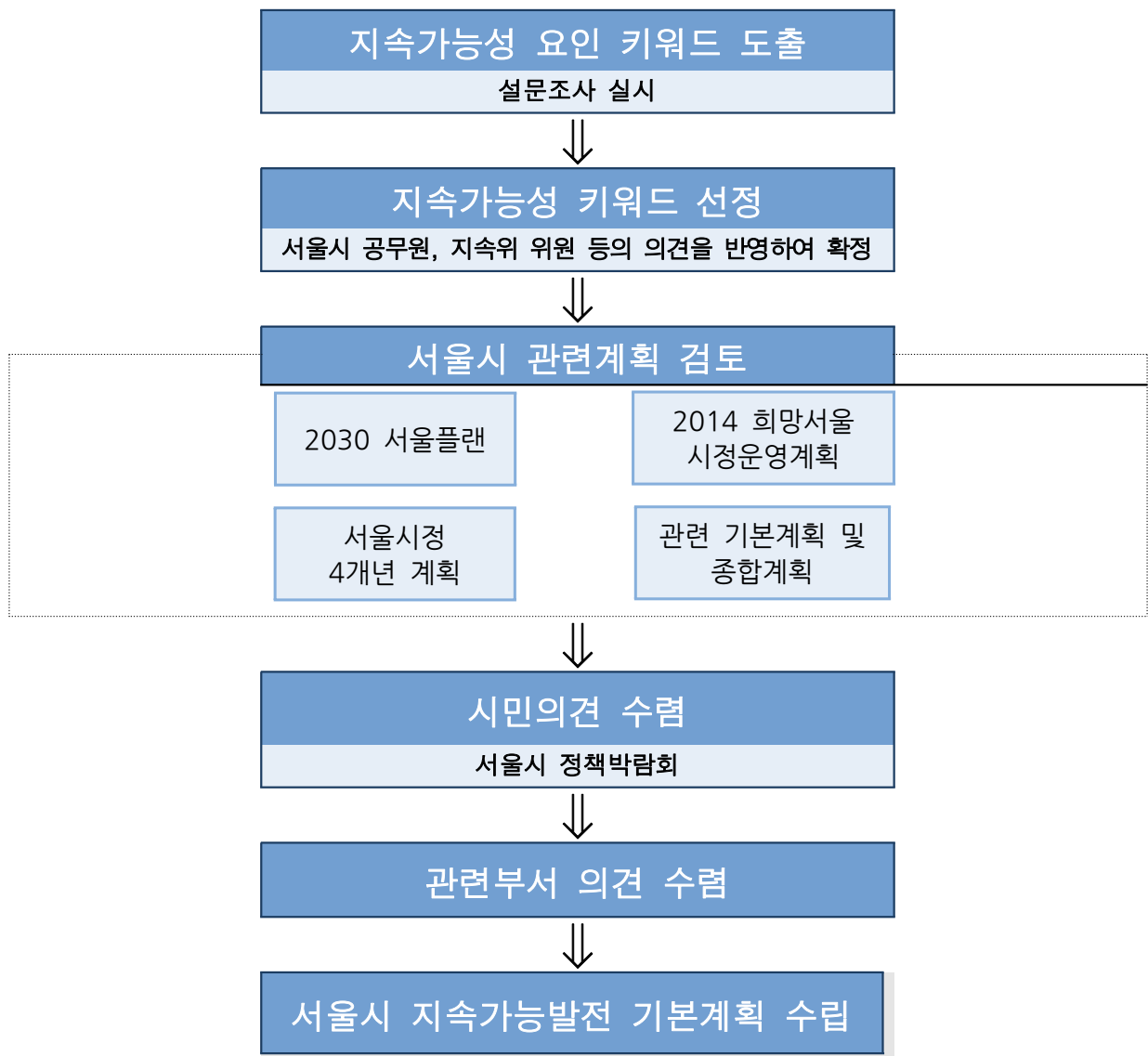
1)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2」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산·소비로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전력자립률 향상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도 고려하는 한편 사회적 측면으로는 에너지 나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함.

3.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정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타 계획의 가장 큰 차별성은 키워드 접근방법임.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속가능성 요인 키워드를 도출한 후 서울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전략과 과제를 수립할 때 타 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였음. 이후 서울시 정책박람회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참여성을 확보하였으며,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였음.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은 다음과 같음.

〈표 5-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정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와 논의과정을 거쳤으며 회의 내용은 <표 5-2>와 같음.

<표 5-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회의 결과

회의	내용
제2차 기획조정회의 (2014.0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조사 검토 결과를 수정·보완하여 지속가능성 최종 키워드 선정 서울시 정책박람회에서 시민의견 수렴 방안 토론
제2차 실무회의 (2014.0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타 계획과의 차별성 확보 방안 논의
제3차 기획조정회의 (2014.0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 비전 논의 전략과 과제 수립 시 과제의 차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안 중심으로 포함하도록 수정 복지 및 양성평등, 시민의식 분야의 세부 과제 논의
제2차 중간보고 (2014.0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교통 분야 과제와 경제 분야 세부 과제 보완
제5차 실무회의 (2014.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정책박람회 결과를 반영하여 경제 분야의 일자리 분야 보완
경제 분과위원회 (2014.1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분야 외국인 관련 과제 보완 사항 제시 ‘산업의 다양성’ 키워드 관련 과제 논의
제3차 사회문화 분과위원회 (2014.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 평등 분야 과제와 사업 보완 주거분야 과제와 사업 보완 문화, 건강분야 과제와 사업 보완
최종보고 (2014.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안) 최종 검토와 확정

3.1 서울시 지속가능성 요인 설문조사

1) 지속가능성 요인 설문조사

(1) 조사기간

- 2014년 7월 7일 ~ 2014년 7월 21일(2주간 실시)

(2) 조사목적

- 서울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요인과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설문 조사를 통해 도출하여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비전체계와 지표를 수립하고자 함.

(3) 조사방법

- 설문지 이메일 및 직접 작성

(4) 대상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직 위원 31명
- 서울연구원 박사 60명
- 서울시 공무원 약 120명

(5) 답변 방식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과 서울연구원 박사 대상 설문지는 주관식으로 응답하였음.
- 서울시 공무원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고려하여 객관식으로 응답하였음.
- 서울의 지속가능성 요인과 지속불가능성 요인에 대하여 각각 10개의 문항을 작성함.
- 경제·사회·환경 각 분야에 대한 응답 개수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음.

2) 설문조사 결과

(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 설문조사를 주관식으로 실시한 결과 서울의 지속가능성 요인과 지속불가능성 요인에 대하여 다양한 주제로 응답하였음.
- 상대적으로 경제, 환경 분야 답변보다는 사회문화 분야 답변이 더 많았음.
- 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지속가능성 요인으로는 우수한 인력과 협동조합, 세계적 도시를 꼽았으며 지속불가능성 요인으로는 양극화와 고용문제라고 응답하였음.
- 특히 ‘양극화’는 10명 이상이 지속불가능성 요인으로 선정할 정도로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남.
- 사회문화 분야의 지속가능성 요인으로는 시민의식 관련, 문화 인프라 및 다양성, 역사 문화, 마을공동체 등이었으며, 지속불가능성 요인으로는 주거불안, 저출산·고령화, 난개발 및 투기 등으로 나타남.
- 지속가능성 요인으로 역사문화 이외에도 문화적 다양성, 문화 인프라 등이 손꼽혀 서울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음.
-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 요인은 한강, 북한산과 남산을 비롯한 자연환경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지속불가능성 요인으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라고 답변하였음.
- 세 가지 분야 중 환경 분야의 답변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한강과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표 5-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속가능성 요인	지속불가능성 요인
경제	우수한 인력 자전거도로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마을기업 세계적 도시 사회혁신 창조·공유·상생경제	양극화 및 지역불균형 초경쟁사회 고용불안 및 청년실업 식량위기 가계부채
사회문화	공무원의 역량 시민의식 및 시민사회 높은 교육열 문화다양성 서울의 역사 문화 마을공동체 사업	저출산·고령화 주거 불안 이기주의 높은 사교육비 북핵 및 안전 난개발과 투기 문화와 여가 생활 부족
환경	한강 자연환경 북한산과 남산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주) 설문조사 형식이 주관식인 관계로 답변의 형태가 다양하여 2개 이상 중복 응답한 문항만 표시하였음.

(2) 서울연구원 박사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이하 지속위 위원)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주관식 답변 결과를 보였음.
- 경제 분야의 지속가능성 요인으로는 대중교통 편의성, 소비구매력 있는 인구, 금융 및 서비스업 발달, 경제중심지, 우수 인력 확보, 사회적기업 등으로 답변하였고, 지속불가능성 요인으로는 소득 양극화 및 지역불균형, 고용불안, 청년실업, 교통정체 및 쾌적성 약화, 난개발과 과도한 도시개발 등이 있었음.
- 지속위 위원과 마찬가지로 소득양극화 및 지역불균형, 고용불안, 청년실업의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남.
- 대중교통 편의성은 지속가능성 요인인 반면, 교통정체는 지속불가능성 요인으로 손꼽혀 대중교통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 사회문화 분야의 답변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지속가능성 요인에 안전한 도시, 다양성, 마을공동체, 외래 관광객, 역사문화 유적 및 전통성이 있었고, 지속불가능성 요인에 남북대치 등 안보불안, 복지수요 증가, 저출산·고령화, 주거불안 등이 있었음.
- 환경적 지속가능성 요인으로는 환경이슈에 대한 이해도, 자연환경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지속불가능성 요인은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이 있었음.

〈표 5-4〉 서울연구원 박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속가능성 요인	지속불가능성 요인
경제	우수·숙련 인력 확보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술발전 금융 및 서비스업 발달 경제중심도시 대중교통 편의성 인구(소비구매력)	소득 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 고용불안 청년실업 교통정체 및 쾌적성 약화 난개발과 과도한 도시개발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증대
사회문화	안전한 도시 다양성과 다문화 공존 높은 교육열 및 교육 경쟁력 마을공동체 외래관광객 유입 국제화, 한류 역사문화 유적 도시 역사문화의 전통성 참여적·민주적 의사결정	재난사고 안보불안(남북대치) 치안문제 복지수요 증가 이기주의 및 무관심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주거불안
환경	환경이슈에 대한 이해 자연환경	기후변화 대기오염 소음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

(3) 서울시 공무원

- 서울시 공무원은 경제 분야의 지속가능성 요인으로 글로벌 도시, 우수인력 확보, 대중교통 편의성, 정보화를 선정하였고, 지속불가능성 요인으로는 소득양극화, 지역불균형, 고용불안, 청년실업, 가계부채 증대, 과도한 도시개발, 교통정체 등을 꼽았음.
- 사회문화 분야의 지속가능성 요인으로는 안전한 도시, 문화적 다양성, 높은 시민의식, 문화 인프라, 공무원의 역량 등의 답변이 많았으며 지속불가능성 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이기주의, 복지수요 증가 등의 답변이 많이 나타났음.
-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 요인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도 한강, 에너지 절약 장려, 기후변화 적응 등으로 답변하였음. 지속불가능성 요인으로는 대기오염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의 순으로 나타남.

〈표 5-5〉 서울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속가능성 요인	지속불가능성 요인
경제	글로벌 도시 대중교통 편의성 정보화 우수인력 확보 금융 서비스업 발달 남대문 및 동대문 시장 사회적경제	소득 양극화 지역 불균형 빈곤 고용불안 청년실업 가계부채 증대 초경쟁사회 과도한 도시 개발 난개발 투기 교통정체 식량안보
사회문화	안전한 도시 문화적 다양성 높은 시민의식 마을공동체 역사문화의 전통성 문화관광 문화 인프라 공무원의 역량 높은 교육열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활발한 청년문화	세대 간 갈등 이기주의 주민참여 부족 인구 감소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재난 사고 안보 불안 정치 불안 및 불신 저출산 고령화 주거 불안 복지수요 증가 정치 불안 및 불신
환경	한강 북한산과 남산 환경이슈에 대한 이해 기후변화 적응 쾌적한 도시환경 에너지 절약 장려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대기오염

(4)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지속위 위원과 서울연구원 박사, 서울시 공무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분야별 Top 10은 아래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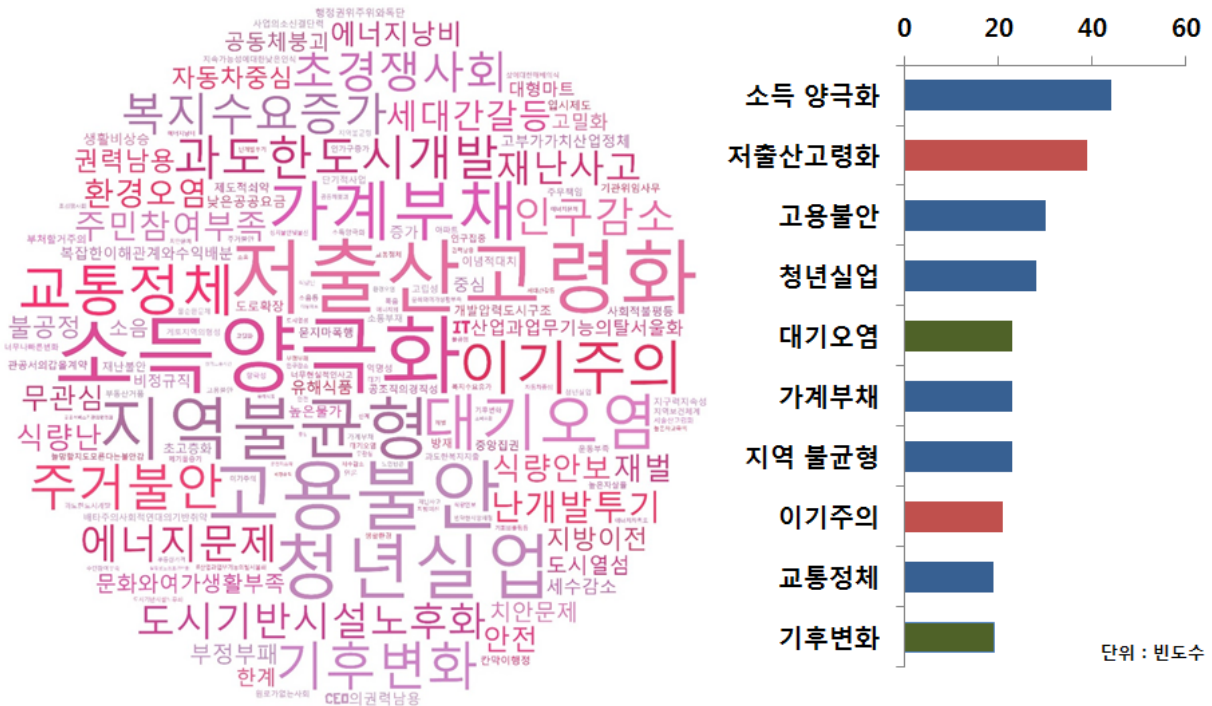
〈표 5-6〉 지속가능성 요인 설문조사 종합결과 (분야별 Top 10)

	지속가능성 요인	지속불가능성 요인
경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글로벌도시(30) 2. 우수·숙련 인력 확보(24) 3. 대중교통 편의성(23) 4. 금융 서비스업 발달(17) 5. 정보화(17) 6. 사회적경제 활성화(8) 7. 협동조합(4) 8. 남대문 및 동대문시장(4) 9. 인구(소비구매력)(3) 10. 사회혁신(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양극화(44) 2. 고용불안(30) 3. 청년실업(28) 4. 지역 불균형(23) 5. 가계부채 증대(23) 6. 교통정체(19) 7. 과도한 도시개발(17) 8. 초경쟁사회(15) 9. 난개발 투기(11) 10. 빈곤(7)
사회문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의식(22) 2. 문화 인프라(21) 3. 안전한 도시(19) 4. 문화다양성(18) 5. 공무원 역량(17) 6. 마을공동체(15) 7. 높은 교육열(15) 8. 도시 역사문화의 전통성(15) 9. 문화관광(11) 10. 시민사회단체 역량(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출산 고령화(39) 2. 이기주의(21) 3. 주거 불안(18) 4. 복지수요증가(16) 5. 인구감소(14) 6. 안보불안(남북대치, 북핵)(14) 7. 도시기반시설 노후화(13) 8. 재난사고(12) 9. 정치불안 및 불신(12) 10. 세대간 갈등(11)
환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쾌적한 도시환경(18) 2. 한강(17) 3. 에너지절약 장려(10) 4. 환경이슈에 대한 이해(9) 5. 기후변화 적응(9) 6. 자연환경(8) 7. 북한산과 남산(3) 8. 도시농업(2) 9. 풍부한 수원지 확보(2) 10. 생물다양성(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오염(23) 2. 기후변화(19) 3. 에너지문제(14) 4. 환경오염(5) 5. 에너지 낭비(3) 6. 도시열섬(2) 7. 소음(2) 8. 에너지의 한계(2) 9. 에너지 자립도(2) 10. 폐기물 증가, 지하개발과 지하수 고갈(물순환 문제), 생활환경, 자연과 괴리되는 생활

주) 괄호 안 숫자는 빈도수를 나타냄.



〈그림 5-2〉 서울의 지속가능성 요인 설문조사 결과(통합)



〈그림 5-3〉 서울의 지속불가능성 요인 설문조사 결과(통합)

주) 우측 그래프 내에서 ■: 경제, ■: 사회문화, ■: 환경 분야를 나타냄.

- 경제 분야에서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서는 서울이 글로벌 도시라는 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대중교통 편의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힘.
-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외래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 R&D와 교육 분야 투자 확대, 대중교통 수송객 증가에 따른 교통정책 강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경제적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는 소득양극화와 고용 문제가 매우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이는 서울시 현황 분석 결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고용불안에 따른 체감 실업률이 높다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임.
- 경제 분야의 지속가능성 설문조사 분석 결과 세계적 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 관련 정책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대중교통 편의성이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되면서 대중교통체계를 더욱 선진화하는 한편 녹색교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소득양극화와 고용불안은 설문조사 대상 세 그룹에서 모두 매우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항목으로서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의 해소와 고용 불안 해소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음.
- 사회문화 분야의 지속가능성 요인으로서는 시민의식, 문화인프라, 안전한 도시, 문화적 다양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선정됨.
- 사회문화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는 저출산·고령화, 이기주의, 주거 불안, 복지수요 증가, 안전 문제 등이 있었음.
- 특히 안전은 지속가능성 요인과 지속불가능성 요인에 모두 선정되어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음.
- 시민의식이 지속가능성 요인으로 꼽힌 반면, 이기주의가 지속불가능성 요인 상위권에 속한다는 점은 시민단체 수와 활동의 증가로 외형적인 시민의식은 성장하였지만 근본적으로 공동체의식 붕괴와 같은 문제점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환경 분야에 대한 응답률은 경제·사회문화에 비해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으나,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및 한강, 북한산과 남산과 같은 자연자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함.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대기오염, 기후변화, 에너지의 세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기본계획과 지표 수립 시 이와 관련된 정책 및 지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3) 지속가능성 키워드 선정

(1) 환경

- 기후변화는 대표적인 지속불가능성 요인으로 선정되었음. 실제로 서울의 최근 30년간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기후변화는 환경적 지속불가능성 요인에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기후변화’를 환경 분야의 대표 키워드로 선정함.
- 최근 기상이변의 빈번한 발생으로 에너지 사용 절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기후변화가 서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에너지’를 대표 키워드로 선정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표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서울시 또한 「Zero Waste, Seoul 2030」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적 동향과 서울시 정책을 고려하여 ‘폐기물’을 대표 키워드로 선정함.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물재이용 관리계획」,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따라서 ‘수자원’을 대표 키워드로 선정하여 이를 관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그림 5-4〉 환경 분야 대표 키워드 선정

- 서울시는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 활동 결과 미세먼지 농도의 환경기준을 달성하였으나 초미세먼지, NO₂ 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질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설문조사 결과 또한 서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기오염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질의 관리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대기질’ 을 대표 키워드로 선정하였음.
- 지속가능성 키워드 조사 결과 쾌적한 도시환경, 자연환경, 북한산과 남산, 한강 등이 서울의 환경적 강점으로 나타났음.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을 대표 키워드로 선정함.
- 서울시는 환경친화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편의성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친환경 저탄소 녹색교통을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교통 분야는 일반적으로 경제 분야에 포함되나, 교통 분야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녹색교통’ 으로 키워드를 수정하여 대표 키워드로 포함하였음.

(2) 사회문화 분야

- 사회문화 분야의 키워드 조사 결과 지속불가능성 요인으로 소득 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이 매우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현황 분석 결과 서울의 지니계수와 소득양극화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과 일맥상통함. 그러나 사회문화 분야에 적합하게 키워드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사회적 양극화’ 를 대표 키워드로 선정함.
-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또한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고려하여 ‘양성평등’ 을 사회문화의 대표 키워드로 선정함.
- 키워드 설문조사 결과 사회문화 분야의 지속가능성 요인으로 높은 교육열, 교육 경쟁력 등이 꼽힌 반면 지속불가능성 요인으로 높은 사교육비 등의 응답이 존재하여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교육’ 을 대표 키워드로 선정함.
- 주거불안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이며,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와 도시들은 주택 분야에 많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따라서 ‘주택’ 을 대표 키워드로 선정함.
-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초저출산 사회에 접어들어 생산인구 감소 등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 설문조사 결과 또한 저출산·고령화가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그러나 저출산 문제보다는 노인 문제가 도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고 보아 ‘고령화’ 를 대표 키워드로 선정함.
- 설문조사 결과 지속가능성 요인으로 시민의식, 시민역량, 시민사회, 시민단체 역량 등 시민의식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답변이 도출되었음. 그러나 이기주의, 공동체 붕괴, 사회갈등 심화 등이 지속불가능성 요인으로 나타나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따라서 ‘시민의식’ 을 대표 키워드로 선정함.

-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서울의 지속가능성 요인과 지속불가능성 요인 모두에 안전과 관련한 응답이 존재하였음. 따라서 안전을 지속가능성 이슈로 인식하고 ‘안전’ 을 대표 키워드로 선정함.
-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는 건강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OECD 삶의 질 지수,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등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대부분에서 건강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만큼 시민의 건강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필수적인 요인이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건강과 관련한 응답이 존재하였음. 따라서 ‘건강’ 을 사회문화 분야의 대표 키워드로 선정함.
- 2001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에서는 경제, 사회, 환경 이외에 문화 다양성을 지속가능발전의 추가 개념으로 언급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문화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만큼 문화는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음. 이와 같은 세계적 동향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축을 경제, 사회문화, 환경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화에 대한 관심도는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문화생활’ 을 대표 키워드로 선정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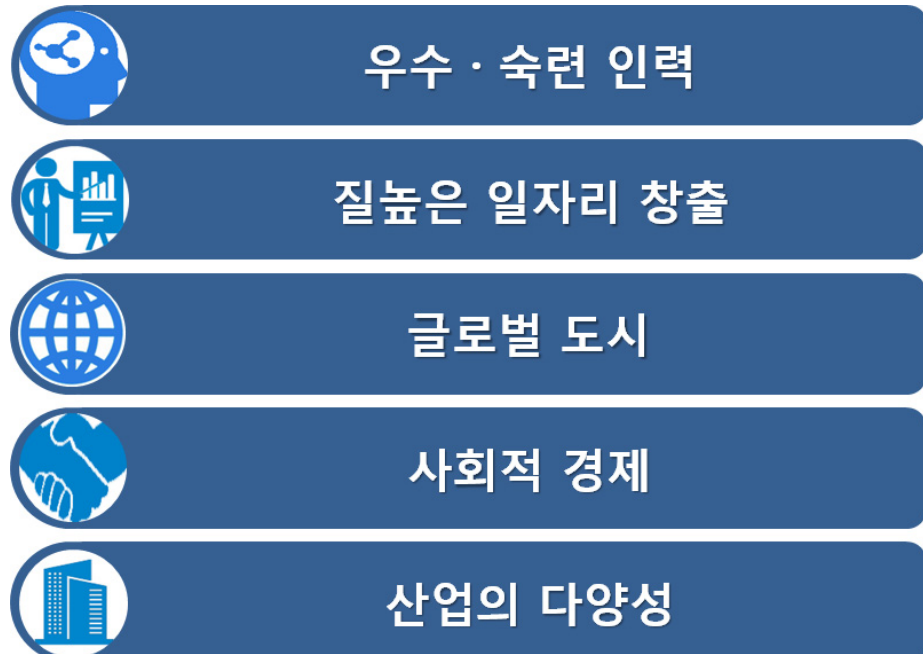


〈그림 5-5〉 사회문화 분야 대표 키워드 선정

(3) 경제 분야

- 지속가능성 요인 키워드 설문조사 결과 서울의 강점으로 우수·숙련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높은 응답률이 나타나 ‘우수·숙련인력’을 대표 키워드로 선정함.
- 서울을 지속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고용불안, 청년실업, 비정규직 증가 등이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현황 분석 결과 또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었음. 이와 같은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 키워드로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선정함.
- 서울을 글로벌 도시, 세계적 도시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많은 점을 반영하여 ‘글로벌 도시’를 대표 키워드로 선정함.
- 경제적 지속가능성 요인 Top10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협동조합 등이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또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따라서 대표 키워드로 ‘사회적경제’를 선정함.
- 설문조사를 주관식으로 실시함에 따라 서울의 지속가능성 요인으로 금융·서비스업 발달, 상업업무 활성화, 제조업 보호, 남대문 및 동대문 시장 등 산업 부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이 존재하였음. 다양한 답변을 종합하여 ‘산업의 다양성’을 대표 키워드로 선정함.

지속가능성 키워드 설문조사 결과 경제 분야에서 선정된 대표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그림 5-6〉 경제 분야 대표 키워드 선정

(4)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키워드 최종 선정

-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면서 해결하여야 할 이슈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 요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키워드를 선정하였음. 키워드 선정은 기본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분야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하였음.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속가능발전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표 5-7〉 서울의 지속가능발전 키워드

키워드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폐기물 수자원 대기질 쾌적한 도시환경 녹색교통
	      
사회문화	양성평등 사회적 양극화 교육 주택
	   
	고령화 시민의식 안전 건강 문화생활
	    
경제	우수·숙련 인력 질높은 일자리 창출 글로벌 도시 사회적경제 산업의 다양성
	    

3.2 서울시 관련계획 검토

서울시의 주요 계획과 분야별 관련 계획을 검토한 결과 많은 계획들이 지속가능발전 전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표 5-8〉 서울시 주요 계획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내용

계획		지속가능발전 관련 내용
2030 서울플랜		2030 서울플랜은 시민합의에 의한 미래서울의 가치와 이슈별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한 장기 비전계획의 성격을 강화함.
2014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한 시정 목표 - 기본에 충실하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환경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원전하나줄이기 취지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	계획은 쾌적한 삶의 질 달성,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도시 건설, 지속가능한 성장 을 위한 환경관리기반 구축, 지구환경의 보전이란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 및 예산을 담고 있음.
	서울특별시 제1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적인 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지역)의 산림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10년 단위 장기계획임.
	서울특별시 물재이용 관리계획	물의 재이용 정책에 대한 국가기본방침을 반영하여 서울시 특성에 맞는 물재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사회 문화	서울시민 복지기준	복지기준의 정치적 지속가능성 과 시정의 생명력 부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서울시가 중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마을 공동체의 비전은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 행복한 서울,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서울 ’로 설정하였음.
	다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시민과 민간단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다문화 생태계 조성
	여성정책 시행계획	지속가능 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어 적극적 지원 필요
경제	2020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	스마트 경제성장을 위한 4대 정책원리 (지속가능성 , 지식, 창의성, 균형성) 극대화 추진
	도심부 전통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상권활성화 계획의 시작부터 실제 시행까지 지속적인 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전통산업을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이 되도록 함.
	제2차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교통에 대한 이동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효율성과 경제적 가치를 균형적으로 추구
	서울시 정보화 기본계획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서 친환경 녹색기술의 빠른 성장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산업·복지·문화·사회적경제 등 시책과 직업훈련·창업지원·고용장려금 등 고용정책 수단 연계,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진입 경로 제공

3.3 서울시 정책박람회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정책 제안 수렴과 시민투표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핵심지표 선정을 위하여 서울시 정책아이디어마켓을 운영하였음.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제언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참고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였음.

(1) 운영 개요

〈표 5-9〉 서울시 정책박람회 운영 개요

행사명	「지속가능발전 도시 '서울'」 - 시민 아이디어로 만든다
일시/장소	2014.9.20(토) 10:00~18:00, 서울시청 광장
참여	서울시민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 핵심지표 선정: 시민투표를 통해 60개 지표 중 분야별 상위 10개 선정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정책제언: 정책박람회 홈페이지 및 현장 의견 제시 지속가능발전 리플렛 300부 제작 및 배부

(2) 운영 결과

지속가능발전 이해 향상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리플렛 300부를 배부하였음.

〈표 5-10〉 서울시 정책박람회 부스 운영 현황

지속가능발전 핵심지표 선정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제언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정책 제언에는 24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음.

〈표 5-11〉 지속가능발전 도시 ‘서울’ 관련 시민 정책제언

제 안 내 용	
제 목	주 요 내 용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은 모두를 살기 좋게 하는 것으로서, 서울시에서 많은 정책을 하고 있으니 미래에도 살기 좋은 서울이 될 것이라 생각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식산업 육성 필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이 중요
유기동물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인 것 같음. 유기동물에 대한 정책 강화 필요
교통안전관련 정책을 제안합니다.	서울시에서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음.
노인과 젊은이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서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
칼퇴문화 정착하게 해주세요~	맞벌이부부는 퇴근이 늦어지면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정시 퇴근하여 사람답게 사는 지속가능한 삶 필요
올바른 자전거 문화를 만듭시다	야간 자전거를 탈 때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조등과 후미 등을 다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치매어르신들 신경써 주세요	치매노인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었으면 함.
파리의 벨리브 같은 공공자전거 서비스 확대	유럽에서 확대되고 있는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서울시에 도입하여야 함.
마을공동체 사업과 지역화폐 제도 연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지역화폐 제도를 상호 연계하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임.
버스노선표 및 버스에 영문 병기	외국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노선표, 버스에 영문을 정확히 병기해야 함.
층간소음 괴로워요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다툼도 많아지고 있음.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듯함.
빛공해 줄여주세요	빛공해 관련 정책수립으로 에너지도 절약하고 시민이 편히 잘 수 있는 밤을 만들었으면 함.
공공주택공급 및 고용촉진정책 필요	부모의 도움 없이도 안정적 거주, 경제적 생활독립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 고용촉진 정책이 필요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필요	장애인을 위한 정책(저상버스 등)은 적은 것 같음.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에너지 절약 제안	에너지 절약은 베란다 태양광 설치보다는 각 가정 절수기로 수도물을 아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됨.
민간인 개방 화장실 운영관련 지원 필요	민간인 개방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이 과다함, 수도요금 할인, 절수 등을 위한 조치가 필요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석유 등의 고갈 전에 친환경적 에너지 개발과 더불어 경제성·효율성·실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힘써주었으면 함.
공유경제 서울을 만들어 주세요	한번 입은 면접용 정장 대여 공유, 비싼 유아용 장난감 대여 공유 등
한강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세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파리의 세느강, 영국 런던의 템즈강보다 훨씬 더 멋진 한강만들기
임대주택공급 필요	임대주택 공급이 더 필요함. 아직 많은 어려운 계층이 집도 없이 전세난에 허덕이고 있음.
시민과 공무원을 넘어서 도시농업을 혁신하자	학교 텃밭 살리기 정책, 텃밭 트러스트운동, 텃밭 맵핑 자치구 공유, 시민의 지적에서 협력으로 정책살리기 등
김포공항 습지를 지켜주세요	강서구 오곡습지에 많은 생명이 살고 있는데 골프장을 만든다고 함. 귀한 생명이 살고 있는 김포공항 습지를 지켜주기 바람.

(3) 운영 결과와 시사점

- 세대 간 격차 줄이기, 치매 어르신 돌봄과 같은 노인 관련 정책이 제안되어 이 분야의 전략과 과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안전 관련 정책, 자전거 문화, 공공 자전거 서비스와 같은 녹색교통 관련 제안이 많은 것으로 보아 기본계획 수립 시 녹색교통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
- 공유경제와 같은 제안은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며, 공유를 통한 사회적 연대감 확대와 경제적 이점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시에 참고함.
-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급 등의 의견이 제안된 것은 시민들의 주거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따라서 기본계획과 지표 수립 시 주택 분야의 논의를 더욱 진행하도록 함.

3.4 서울시 관련부서 의견 수렴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의지와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함. 특히 모든 관련 부서들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추진해야 할 역할과 사항을 인지해야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서울시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속가능발전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하였음. 또한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참여성을 확보하고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제고하였음.

4.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4.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지속가능성을 시정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속가능성 요인을 더욱 더 증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비전은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로 설정함.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 사회문화, 경제 각 분야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4.2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전략과 과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환경, 사회문화, 경제의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로 전략과 과제를 수립하였음.

“회복력 증대와 쾌적한 환경 조성(환경 분야)”, “문화적 활력과 사회적 형평 제고(사회문화 분야)”, “창조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경제 분야)”를 목표로 하여 12개의 전략과 28개의 과제를 설정함.

환경 분야에는 세계적인 기후보호 선도도시로 도약,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조성,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푸른 도시 조성, 녹색교통의 활성화 총 4가지 전략을 수립하였고 하위 과제는 9개를 설정함.

사회문화 분야는 양극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서울의 인구 특성을 반영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문화생태계 조성 및 향유기회 확대 등 4가지 전략 아래 10가지 과제를 설정함.

경제 분야는 첨단 융·복합 산업과 창조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과 취업기회 확대, 글로벌 경제 도시 육성, 중소기업 육성과 사회적경제 확대 등 4가지 전략과 9개 과제를 설정함.

〈표 5-1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체계

비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목표	환경	사회문화	경제
	회복력 증대와 쾌적한 환경 조성	사회적 형평성 및 문화적 활력 제고	창조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전략	01. 세계적인 기후보호 선도도시로 도약	01. 양극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01. 창조경제 중심도시 조성
	0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조성	02.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	0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03.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푸른도시 조성	03.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03. 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
	04.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04.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	04. 사회적경제 확대와 산업 다양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 사회를 만든다.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한다. 양질의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조산업을 육성한다. 창조전문인력을 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소비·생산의 효율을 높인다.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한다. 물순환을 개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율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든다. 주민참여를 활성화로 생활거버넌스를 구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청년일자리를 활성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질을 개선한다.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이 우선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이 살기좋은 서울을 만든다. 서울형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밀착형 보행 및 자전거를 활성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생활주변의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확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를 확대한다.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 다양한 산업기반을 강화한다.

목표	12개 전략 28개 과제
 <p>회복력 증대와 쾌적한 환경 조성</p>	<p>전략 01 세계적인 기후보호 선도도시로 도약</p> <p>과제 1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과제 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p> <hr/> <p>전략 0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조성</p> <p>과제 3 에너지 소비·생산의 효율을 높인다. 과제 4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한다. 과제 5 물순환을 개선한다.</p> <hr/> <p>전략 03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푸른 도시 조성</p> <p>과제 6 대기질을 개선한다. 과제 7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과제 8 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한다.</p> <hr/> <p>전략 04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p> <p>과제 9 생활밀착형 보행 및 자전거를 활성화한다.</p>
 <p>사회적 형평성 및 문화적 활력 제고</p>	<p>전략 01 양극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p> <p>과제 1 양성평등 사회를 만든다. 과제 2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한다. 과제 3 양질의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과제 4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p> <hr/> <p>전략 02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p> <p>과제 5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든다. 과제 6 주민참여 활성화로 생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p> <hr/> <p>전략 03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p> <p>과제 7 시민이 우선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과제 8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p> <hr/> <p>전략 04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p> <p>과제 9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과제 10 생활 주변의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확대한다.</p>
 <p>창조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p>	<p>전략 01 창조경제 중심도시 조성</p> <p>과제 1 창조산업을 육성한다. 과제 2 창조전문인력을 양성한다.</p> <hr/> <p>전략 0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p> <p>과제 3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과제 4 청년 일자리를 활성화한다.</p> <hr/> <p>전략 03 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p> <p>과제 5 외국인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든다. 과제 6 서울형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한다.</p> <hr/> <p>전략 04 사회적 경제 확대와 산업 다양화</p> <p>과제 7 사회적경제를 확대한다. 과제 8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 과제 9 다양한 산업기반을 강화한다.</p>

4.3 분야별 과제 추진계획

1) 환경 분야 과제 추진계획

‘회복력 증대와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4개 전략, 9개 과제를 추진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사업을 설정하였음.²⁾

〈표 5-14〉 환경 분야 과제 추진계획

전략 01		세계적인 기후보호 선도도시로 도약
과 제		사 업
1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원전하나줄이기 2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을 적극 추진하며 그 성과를 공개한다.
		공공부문 및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침수취약지역을 해소한다.
		산사태 방지시설을 확충한다.

전략 0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 도시 조성
과 제		사 업
3	에너지 소비·생산의 효율을 높인다.	에너지 복지·지역 공동체를 확대한다.
		건축물 신축, 리모델링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효율 고려를 의무화한다.
		서울형 건물 미니발전소 등 분산형 전원을 보급한다.
		시민이 건설하는 건물 태양광발전소를 확대한다.
4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한다.	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를 도입한다.
		생활폐기물의 자체처리기반을 구축한다.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주도형 나눔장터를 확대 운영한다.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확대 구축한다.
5	물순환을 개선한다.	물사용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재이용 교육 및 홍보를 한다.
		중수도 시설 설치 시 다양한 지원을 한다.
		소규모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2) 환경 분야 세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통계자료, 그림 등은 대부분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4-2018)이 출처임. 사회문화 분야와 경제 분야 세부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전략 03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푸른 도시 조성

과 제		사 업
6	대기질을 개선한다.	전기승용차, CNG하이브리드 버스 등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한다.
		초미세먼지 노출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 배출량 감축과 생활주변 대기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동북아, 수도권 등과 대기환경협의를 구성하고 대기개선 노하우를 공유한다.
7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한강의 수변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경관의 한강 숲을 조성한다.
		시민이 한강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자연형 호안을 조성한다.
		생태거점을 조성한다.
8	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원을 조성한다.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등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한다.
		공원녹지를 시민이 돌보고 가꾸고 즐기는 녹색문화를 확산한다.
		도시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도시문화공원을 조성한다.

전략 04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과 제		사 업
9	생활밀착형 보행 및 자전거를 활성화한다.	도심 차도를 축소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도시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공원화한다.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한다.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전략 01

세계적인 기후보호 선도도시로 도약

과제 1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건물·수송 등 주요 배출원별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정책을 통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

원전하나줄이기2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을 적극 추진하며 그 성과를 공개한다.

서울시는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 4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실시하여 원전 1기에서 생산하는 전력량만큼의 에너지 사용감축(2014년까지 200만TOE)을 목표로 추진하였음.

서울시 에너지 수급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2014년 상반기 생산 26만, 효율 87만, 절약91만 TOE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서울시, 2014).

〈표 5-15〉 원전하나 줄이기 달성 성과

(단위: 천TOE)

	목표	달성 성과			
		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2,000	2,040	331	921	788
에너지생산	410	260	35	78	147
에너지효율화	1,110	869	145	328	396
에너지절약	480	911	151	515	245

서울시가 새로 수립한 「원전하나줄이기2」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은 1단계에서 200만 TOE의 에너지를 절감한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사업의 강화와 확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활용할 계획임.

「원전하나줄이기2」는 에너지 자립·나눔·참여의 지향가치를 바탕으로 총에너지 생산·절감 400만 TOE, 2020년까지 전략자립률 20%, 온실가스 감축 1천만톤 CO₂ eq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관리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 혁신으로 좋은 에너지 일자리, 따뜻한 에너지 나눔공동체”라는 4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4개 분야(생산, 효율화절약, 산업일자리, 공동체 복지) 23개 과제 88개 사업을 수립하였음.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원전하나줄이기2」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을 적극 추진하며 그 성과를 공개한다는 세부 사업을 설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서울을 세계적인 기후보호 선도도시로 도약시킬 것을 제안함.

사업	공공부문 및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
----	-------------------------------------

2011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제정 고시됨에 따라 공공부문 기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2007년~2009년 3개년 연평균 배출량 대비, 2015년까지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행연도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 이행실적을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환경부, 2012).

서울시는 2012년 공공부문 및 폐기물부문의 96개 관리대상에서 온실가스 총 357,992톤CO₂를 저감하여 여의도면적의 110배에 해당하는 숲을 조성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감축량을 에너지로 환산할 때 168,785TOE에 달함.

폐기물부문은 2012년부터 목표관리제에 포함되었으나 25개 사업장에서 당초 목표인 3.3%보다 훨씬 높은 13.2%를 감축하였음(서울시 기후환경본부, 2013).

서울시 마포구는 ‘2013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행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부문 2위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함.

목표관리제는 LED 조명 사용 확대, 폐열 재활용 및 대기전력 차단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정책과 연동되어 추진되는 계획으로 향후 서울시의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제안함.

〈표 5-16〉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성과

구 분		기준배출량 (톤CO ₂)	실적배출량 (톤CO ₂)	감축량 (톤CO ₂)	감축율 (%)
2011년	공공부문	112,606	104,943	7,663	6.8
2012년	소 계	2,784,451	2,426,459	357,992	12.9
	공공부문	129,194	122,560	6,634	5.1
	폐기물부문	2,655,257	2,303,899	351,358	13.2

사업	온실가스 감축사업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

서울시는 가정, 상업, 공공, 수송, 에너지, 기타 등 6대 부문을 선정하여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으나 성과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사업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한 바 있음.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달성 평가지표는 감축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평가(사업 효과성)와 정성평가(사업성, 적절성)로 구분하여 검토됨.

정량평가는 서울시에서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부문별(수송, 가정, 상업, 공공, 폐기물) 정량 평가 대상 감축대책을 분류한 후, 감축사업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효과를 산정함.

정성평가는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감축과 연계되지 않아 감축성과를 계량화할 수 없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부합성, 감축목표 달성의 수월성, 추진가능성, 구체성, 연계 통합성 등 5개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서울시, 2012).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이행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전략 01

세계적인 기후보호 선도도시로 도약

과제 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자연재해 취약지역의 방재성능 강화 및 지역맞춤형 대책을 시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사업

침수취약지역을 해소한다.

최근 10년간 강우량이 7% 증가하고, 30년간 피해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서울시는 2010년과 2011년 집중호우 이후 침수취약지역(34개소)을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기준으로 침수취약지역 7개를 해소하였음.

침수취약지역을 해소하여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울시는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유·무형의 다양한 수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첫째, 2018년도 우기 전까지 침수취약지역 27개소 해소를 추진하며 둘째, 유역단위별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특별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 가능한 모든 긴급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함. 셋째, 관로 확충, 빗물저류조, 빗물펌프장 등 구조적 대책과 더불어 물순환 회복 등 친환경적 치수대책을 함께 시행하며 넷째,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홍보·교육을 시행하고 침수피해 시민에 대한 심리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침수취약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활용하여 방재시설물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재난 초기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침수우려지역 대피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사업

산사태 방지시설을 확충한다.

서울시의 산사태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과거 10년간은 산사태에 의한 재해발생이 많지 않았으나,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2010년 37개소, 2011년 81개소의 산사태가 발생하였음.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 이후 산사태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는 산사태 복구와 예방공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표 5-17〉 산사태 방지시설 확충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249개소	315개소	210개소	210개소	210개소

추후에도 위험등급이 높은 지역,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 시민이 신청하는 산사태 위험지역 등 우선순위에 따른 지속적인 정비 및 안전우선과 생태환경 및 경관을 고려한 사방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전략 0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 도시 조성

과제 3

에너지 소비·생산의 효율을 높인다.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건물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사업

에너지 복지·지역 공동체를 확대한다.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고가의 에너지원(LPG, 등유)과 저효율 가전기기 사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에너지자립마을 등 공동체 에너지 생산절약의 초기 형태는 조직되어 운영 중이나 체계적인 확산모델 개발 및 지역 특화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정책에 임대가구, 도시 빈민층 등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서울시와 민간의 역량이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구체적으로 에너지 복지조례 제정,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 현장 제정 등을 제도화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사업,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인하, 노후 공공 임대주택 단열효율 개선 등을 통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환·효율화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미 조성되어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지역 에너지공동체 기반으로 확대하고, 『시민 절전소』를 마을공동체 에너지 선순환 생태계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나눔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의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는 한편, 시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할 것을 제안함.

사업

건축물 신축, 리모델링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효율 고려를 의무화한다.

서울시 총 에너지 소비량의 56%는 건물 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시 전력사용량의 87%에 달함. 따라서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따라 2023년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설계기준 적용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2018년까지 공공건축물 신축 시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LED 100% 적용을 추진할 계획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공시설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 심의 기준」을 강화하여 신재생설비와 LED조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설비 11% LED 조명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설비 21% (2018년) LED 조명 100% (2018년) BEMS 의무화 3천 m² 이상 공공업무시설(2014.4월)

또한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공공건축물과 마찬가지로 LED 조명 설치를 확대하여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13년	2015년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D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D 25% 이상 주차장 조명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D 65%

사업	서울형 건물 미니발전소 등 분산형 전원을 보급한다.								
	<p>서울시는 「건물 미니발전소」 등 분산형 전원을 보급하여 분산형 에너지 생산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p> <p>분산형 전기 생산으로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아파트·빌딩 등 대형건물의 전기·열 직접 생산량을 2014년 90MW에서 2018년 150MW로 확대할 계획이며, 건물 신축 시 분산형 발전을 의무화할 예정임.</p> <p>주택용 노후보일러를 전기까지 생산하는 초소형 열병합보일러로 교체하여 2020년까지 아파트, 빌라 등 개별가구에 스팀링엔진 보일러 1만대를 보급할 것으로 기대됨</p> <p>전력자립 및 민간투자 유치효과가 큰 연료전지를 2018년까지 195MW 설치하여 비상시 전력공급으로 도시기반시설의 가동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1kw급 소형 연료전지를 전력 및 열에너지 24시간 사용하는 호텔·병원 등에 우선 보급할 예정임.</p> <p style="text-align: center;">〈표 5-18〉 분산형 전원 보급 추진계획</p> <table border="1"> <thead> <tr> <th>제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단계적 강화</td><td>(현행)신재생 10% → (개선) 신재생+열병합 12~20% [신재생은 10% 이상]</td></tr> <tr> <td>연료전지 및 열병합발전용 도시가스 요금제 개선</td><td>발전용 소매전용 요금제 신설 및 잉여전력을 계통연계하여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병행</td></tr> <tr> <td>비상발전기를 자가 열병합 발전 시설로 대체 유도</td><td>소방방재청 화재안전기준 협의·개선 및 설비비용 융자</td></tr> </tbody> </table>	제도	내용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단계적 강화	(현행)신재생 10% → (개선) 신재생+열병합 12~20% [신재생은 10% 이상]	연료전지 및 열병합발전용 도시가스 요금제 개선	발전용 소매전용 요금제 신설 및 잉여전력을 계통연계하여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병행	비상발전기를 자가 열병합 발전 시설로 대체 유도	소방방재청 화재안전기준 협의·개선 및 설비비용 융자
제도	내용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단계적 강화	(현행)신재생 10% → (개선) 신재생+열병합 12~20% [신재생은 10% 이상]								
연료전지 및 열병합발전용 도시가스 요금제 개선	발전용 소매전용 요금제 신설 및 잉여전력을 계통연계하여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병행								
비상발전기를 자가 열병합 발전 시설로 대체 유도	소방방재청 화재안전기준 협의·개선 및 설비비용 융자								
사업	시민이 건설하는 건물 태양광발전소를 확대한다.								
	<p>서울햇빛발전 1단계 사업은 양적 확대와 더불어 혁신적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3년간(2012~2014.9) 48.0MW를 설치하여 전체용량 70.6MW의 68%를 보급하였음.</p> <p>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건물 태양광(학교·빌딩 등) 발전소를 확대하여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주체로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p> <p>학교건물(옥상) 태양광 발전시설은 2018년까지 500개교에 설치하며, 시 산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민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이는 교육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전과 공익사업 측면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p> <p>서울시 시설 이외에 정부 및 민간건물 등 민자 투자대상의 다변화를 유도하여 햇빛발전소의 설치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건물주·발전사업자에게 ‘태양광 설치비’를 설치비의 60~70%까지 확대하고 연 1.75%, 8년 상환의 장기저리융자로 지원할 계획임.</p> <p>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에게 시 공공기간의 유휴공간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 부지로 임대 제공하여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시 재정증가, 온실가스 감축, 전력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p>								

전략 0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 도시 조성

과제 4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한다.



생활폐기물을 획기적으로 감량하고 다양한 재활용 강화수단을 마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달성한다.

사업

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2016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 2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도입하였음.

〈표 5-19〉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 추진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감량목표(톤/일)	—	—	300	600
감량후 발생량(톤/일)	3,023	3,000	2,700	2,400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공공청사 폐기물 제로화,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 강화, 봉제원단 재활용, 공공용 봉투 재활용, 재활용 컨설팅 등의 다양한 감량 수단을 추진할 경우 생활폐기물 발생량 20% 감량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반입량 관리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량 목표 초과 달성시 반입수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감량 목표 미달 시에는 공공시설 반입금지, 반입료 대폭 부과 등의 패널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사업

생활폐기물의 자체처리기반을 구축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은 총 4개소이며, 21개 자치구의 생활쓰레기는 시의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소각되나, 구로·은평·금천·관악 4개 자치구는 수도권 매립지 이용 등 타 지역의 시설을 통해 처리되고 있음(서울시, 2013).



〈그림 5-7〉 권역별 공동이용 현황

권역	시설	용량 (톤/일)	공동이용 자치구(21개구)
동북	노원	800	노원,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동대문
동남	강남	900	강남, 성동, 광진, 동작, 서초, 송파, 강동
서북	마포	750	마포, 용산, 중구, 종로, 서대문
서남	양천	400	양천, 강서, 영등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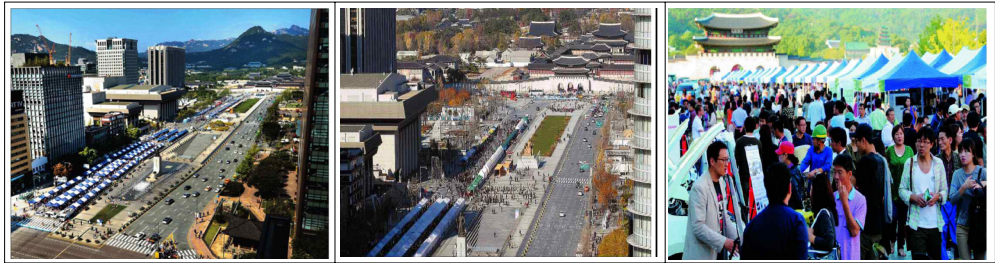
2018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외부의존도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 반입 할당제 도입 추진,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및 인접 시 공동이용 추진, 음식물쓰레기 자체 공공처리시설 신설 및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사업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주도형 나눔장터를 확대 운영한다.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재활용 장터를 운영하여 재사용 및 재활용 실천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서울시는 2012년 독섬 나눔장터, 차없는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위·아·자 나눔장터 등을 운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음. 이를 바탕으로 시민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함. 또한 세종문화회관과 나눔장터를 연계하여 건전한 시민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야외 공연 프로그램 개최 시기 조정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서울의 대표 관광브랜드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그림 5-8〉 재활용 장터 운영 현황

사업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확대 구축한다.

서울시는 이동식 거점수거방식인 재활용 정거장을 확대하여 공공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 개념을 단독주택 지역에 도입하고, 재활용품 수거율을 향상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정에서 이동식 거점수거함까지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가져와 분리배출



지역의 저소득 어르신들을 선정하여 이동식 수거함 관리



수집된 재활용품은 재활용 업체가 직접 계근하고 현장에서 전표 발급



재활용 업체는 전표만큼의 현금을 어르신들 예금계좌로 송금

이를 추진할 경우 취약계층인 폐지수집 어르신을 정거장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재활용품 관리주체로 안정적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약 1만여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014년
56개동, 983개소



2018년
370개동, 9,100개소(전 자치구)

재활용 정거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재활용 가능자원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종량제 쓰레기량을 5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의 분리배출 습관화로 재활용 시민의식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철저한 분리수거로 자치구별 20~40억원에 이르는 재활용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재활용 매각수입의 현실화로 저소득 노령인구의 안정적인 소득지원이 가능함.

전략 0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 도시 조성

과제 5

물순환을 개선한다.



체계적인 물순환시스템 도입으로 물 재이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환경을 조성한다.

사업

물사용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를 한다.

물 재이용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재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물 재이용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친환경 수자원 확보와 물절약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교육·홍보 대상을 세분화하고, 그룹별 특성에 맞춘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실효성과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표 5-20〉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대상

교육대상	특성
시민	물재이용의 필요성, 친환경적 인식 등 정책 공감의 기본 그룹
기업	물재이용사업의 신규 투자 및 재이용수 이용 그룹
시민단체 및 전문가	물재이용 정책의 지지 및 지원 그룹
공공기관	물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확대 주체
언론	물재이용 홍보활동 확산의 매개체

대상 주체별로 물 재이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인식변화 단계), 효과적인 교육·홍보 프로그램으로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고(태도변화 단계), 물 재이용으로 직접 연계 되는 혜택을 체감하게 하여 향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행동변화 단계) 순차적인 단계의 교육·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표 5-21〉 물재이용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구분	내용
인식변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수자원 확보 및 물 절약 필요성 교육 수자원 관리를 위해 빗물이용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 물 재이용수의 안전성 및 경제성 적극 홍보
물재이용 관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대·계층 등 물사용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물재생센터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 지역사회와 연계한 물재이용 활성화 교육 다양한 매체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물재이용 관련 정책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 재이용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정책 홍보 물 재이용시설 및 물 재이용수 공급체계 및 보급정책 홍보 공공시설 및 학교의 물 재이용수 공급 및 유지관리 방안 홍보

사업

중수도 시설 설치 시 다양한 지원을 한다.

중수도는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정의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연면적 8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와 1일 물사용량이 4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서울시는 중수도 시설 설치 시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중수도시설 투자금액의 10%까지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였으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서 최초로 부담하는 분기의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의 25/100을 감면하고 있음.

이 외에도 중수도 개별시설 당 설치자금을 융자하는 「환경개선 및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운용요강」이 마련되어 있음.

직접적인 중수도 시설 지원기준 이외에도 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우수등급 이상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중수도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서울시, 2013).

사업

소규모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분산식 빗물관리란 연간 발생하는 총강우를 대상으로 유출 총량을 저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침투와 이용시설이 이에 해당됨.

서울시는 2005년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왔으며, 2012년 5월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붕면적 1,0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급속한 도시화로 불투수 면적과 빗물의 표면 유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빗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으며, 침수피해 저감과 친환경적 물순환 회복을 위해서 대규모 시설에 적용되던 빗물관리 시스템을 소규모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으로 확대하고자 함. 규모에 따른 접근방향은 다음과 같음.

〈표 5-22〉 공간계획 규모에 따른 분산식 빗물관리

구분	개별대지	단지차원	도시·지역차원
처리단계	발생지점에서의 처리	단지에서의 처리	지역·지구에서의 처리
주요이용형태	빗물이용, 침투	이용, 침투, 저류	침투, 저류
목적	수원확보	자연적 물순환 체계의 회복	수해방지, 유출억제
계획시설	집수/저장시설, 전처리시설, 이용시설, 투수포장재, 침투시설 등	투수포장재, 개거형 침투시설, 저류연못, 인공구조물 형태의 침투시설 등	도로 주변의 침투시설, 자연 형태의 저류연못, 인공 형태의 저류시설

전략 03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푸른 도시 조성

과제 6

대기질을 개선한다.



초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 시민이 건강하게 숨쉬는 서울을 구현한다.

사업

전기승용차, CNG 하이브리드 버스 등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한다.

에너지 비용 상승과 기후변화에 따라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서울시에 전기승용차 및 천연가스(CNG)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질을 개선할 것을 제안함.

이미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 결과로 2013년 CNG차량을 총 10,376대 보급하였으며, 전기승용차 등 그린카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 바 있음.

〈표 5-23〉 친환경자동차 보급 추진계획

구분	내용
전기승용차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목표: 2018년까지 15,000대 보급 전기택시 실증사업: 2018년까지 1,436대 보급 정책금융공사와 「그린카 펀드」 운영, 민간부문 전기차 보급 추진 서비스 수준 제고 등을 통한 전기차 세어링 확대
친환경버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CNG 하이브리드 버스 도입: 정책금융공사, 제작사와 협력모델 구축 2015년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시범 도입: 2018년까지 300대 보급
충전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속충전기 확충: 2018년까지 500기 보급 및 이용편의 증진 콘센트만 있으면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한 휴대용 충전 시범사업 추진

〈표 5-24〉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전기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품격 전기택시 실증사업 민자활용, CNG하이브리드 버스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속충전기 확충(30분) 휴대형(콘센트형) 충전기 시범도입
시장형성기 (2015~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 시민 보급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도입 연비 향상을 위한 에코타이어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속충전기 확충(15분) 태양광 충전 시범단지 조성 인프라 광역화 (수도권→전국)
시장발전기 (2017~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도입 경유청소차 등 전기차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속충전기 확충(10분) 민간 충전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사업

초미세먼지 노출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여 왔으며, 초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왔음.

시민건강의 보호,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초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초미세먼지 대응 시민교육을 실시하여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의 시민 행동 요령 등 대시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 배출량 감축과 생활주변 대기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제도개선을 통한 자동차 배출가스의 원천적·근본적 감축을 위하여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우수한 경유차 저공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이에 2005년 이전 생산된 노후경유차를 2018년까지 39만대를 저공해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형차의 PM-NOx 동시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삼원촉매장치 부착 등으로 운행차 질소산화물(NOx) 저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함.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대상차량 확대, 경유차 제작기준 및 운행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추진하여 정보와 기업의 협력을 통한 자동차 배출가스 원천 감축의 틀을 마련하고자 함.

〈표 5-25〉 경유차 제작기준 및 운행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추진계획

신규 경유차	(측정항목) 탄화수소(HC) (평균배출량) 미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x, PM 추가 ▪ 경유차도 평균배출량 적용
운행 경유차	(NOx 규제) 미적용 (건설기계) 규제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x 규제 신규 도입 ▪ 매연, NOx 등 규제 신설

자동차 배출량 감축뿐만 아니라 난방·연소 등 생활주변 대기오염 관리를 강화하고자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한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임. 중소사업장에 저녹스버너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NOx 배출을 감축하는 한편, 보일러 제작사와 협력 강화로 노후보일러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자 함.

시민생활 불편발생시설 또한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100㎡(50석) 이상 신규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30㎡이상 찜질방을 배출시설에 포함시켜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사업

동북아, 수도권 등과 대기환경협의를 구성하고 대기 개선 노하우를 공유한다.

2014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환경부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협약하였으며, 특히 미세먼지 발생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이동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미세먼지의 발생지역을 살펴보면, 국외영향 30~50%, 국내 타 지역 26%, 서울시 자체 21%로 나타나 서울시 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울란바토르시(2014.2), 산둥성(2014.6)과 대기질 개선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4년 4월에 서울시·베이징시 양 시장 간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음.

서울·베이징·도쿄 등 동북아 도시의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공동 개최를 추진하여 2014년 서울, 2015년 베이징, 2016년 도쿄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포럼에는 한국·중국·일본·몽골 등 10여개 주요도시와 연구기관이 참여할 계획임.

전략 03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푸른 도시 조성

과제 7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한강 생태계 복원 및 생태적 기능 회복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사업

한강의 수변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경관의 한강 숲을 조성한다.

한강은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매우 중요한 생태거점임을 인식하고 서울이 숨쉴 수 있는 한강변 대표 숲을 조성하고자 함. 2030년까지 여의도공원의 5배 규모(104만7천㎡)를 조성할 계획이며 형태는 생태숲, 이용숲, 완충숲으로 구성하게 됨.

생태·이용숲은 여의도·잠원·잠실·반포·난지 5개소 22만5천㎡, 완충숲은 8개 지구에 82만2천㎡를 조성할 계획임. 이는 둔치면적의 11.7%를 차지하며, 이때 나무심기는 1기업 1한강숲과 같은 민간기업의 기부,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 시민 등의 참여로 함께 조성됨. 생태숲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강수변에 버드나무, 갈대 등 생태복원 위주로 조성하며, 이용숲은 시민 접근성이 좋은 둔치에 느티나무, 조팝나무와 산책로가 있는 시민이용 녹음숲으로 조성할 계획임. 완충숲은 강변도로변 밑 완충지대에 조성하게 됨.

〈표 5-26〉 한강 숲 조성 계획

구분	세부내용
거점 한강숲 조성 (8개소)	▪ 생태숲: 수변부 하천 특성을 고려한 버드나무숲 조성(444,849㎡)
	▪ 이용숲: 둔치 내부 느티나무림 및 느릅나무림 조성(289,865㎡)
강변도로변 완충숲	▪ 강변도로 옆 폭 30~50m 수림대 조성 ▪ 강변도로 완충기능 침찰흔효숲 조성(1,497,116㎡)

사업

시민이 한강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2013년 서울시는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를 개최하여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여름 휴가처 한강으로 자리매김하였음.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강을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한강마라톤, 자전거 몽땅 한바퀴 등의 행사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상음악회, 영화제, 수상레포츠 등 인기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한강 역사·문화·생태를 활용한 공간 및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친환경적 가족 캠핑장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역사 스토리존을 조성 확대하였고 명소를 활용한 체험 탐방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할 예정임.

프로그램의 시민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 기획 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참여 기획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사업	자연형 호안을 조성한다.
----	---------------

콘크리트 구조물로 직강화된 하안구조를 치수를 위한 세굴보호 공법 등이 추가된 '자연형 호안' 으로 복원하고자 함. 세굴지역이란 유속이 빨라 토사가 씻기는 지역을 의미하며, 자연형 호안 조성은 자연 하안과 같이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방법은 동일하나 치수안전과 홍수대비를 위해 수제 설치공법을 적용하여 모래톱 형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자연형 호안 이외에도 유속이 완만한 퇴적지역은 자연하안으로 복원할 계획이며, 2018년까지 광나루, 독섬, 이촌, 망원의 4개소 9.8km가 복원될 예정임.

사업	생태거점을 조성한다.
----	-------------

한강 자연성 회복 중 생물서식처 복원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서 지천합류부 등 치수 안전성이 확보되고 습지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생태거점으로 우선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비오톱, 야생동물 출현 현황, 치수안전성(퇴적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탄천 합류부, 중랑천 합류부, 여의샅강 수구부 등이 생태거점의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거점 서식처를 복원하여 한강의 생태적 잠재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을 제안함.

〈표 5-27〉 한강 생태거점 조성 계획

분야	구분	내용
생태거점 조성	탄천 합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호안 구조개선: 453m 수변식생 개선: 버드나무-물억새 경관 복원 43,479㎡ 이용 및 시설물 개선: 낙차공 구조개선 4,076㎡, 시설지 조성 3,969㎡ 생물서식처 조성: 고라니 서식처 8.688㎡, 합류부 서식기능 보존 5,512㎡
	중랑천 합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안 구조개선: 인공호안 560m, 퇴적지 44,000㎡ 유지 수변식생 개선: 갈대 식재 65,900㎡ 이용 및 시설물 개선: 조류관찰대 4개소,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철거 900m 생물서식처 조성: 물웅덩이 1개소 조성 사면식생 개선: 느릅나무 29,000㎡ 식재
	여의샅강 수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안 구조개선: 자연형호안 430m, 퇴적지 26,000㎡ 유지 수변식생 개선: 갈대, 물억새 식재 18,000㎡ 이용 및 시설물 개선: 조류관찰대 3개소,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철거 1,200m 사면식생 개선: 느릅나무 37,000㎡ 식재



〈그림 5-9〉 한강 생태거점 조성 대상지 위치도

전략 03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푸른 도시 조성

과제 8

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한다.



생활권 공원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생태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한다.

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원을 조성한다.

최근 여가에 대한 인식변화와 웰빙에 대한 관심 증대로 친환경·친자연적 힐링 공간의 요구와 그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이를 반영하여 녹색자원의 활용을 통해 모든 시민이 일생동안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생애 주기에 맞춘 특화된 ‘맞춤형 공원’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표 5-28〉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원 조성 계획

대상	사업	내용
어린이	유아숲체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유아들이 마음껏 자연을 체험하며 교육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자연형 숲속 놀이터 조성
청소년	청소년 모험의 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들에게 가까운 도시숲에서 자연과 친화하며 모험을 통한 숲체험의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인재 양성에 기여
시민	치유의 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민들의 스트레스 완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 도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녹색공간 확충
가족	가족캠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캠핑장 6개소 368면을 확대 조성하여 온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기고 캠핑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함

사업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등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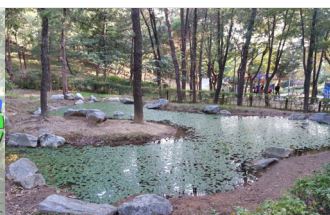
산업화·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산림 생태계 단절 및 생물 서식공간 부족에 따라 통합된 생물다양성 관리체계 구축 및 생태계 자연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해 생물다양성 증진 전략을 수립할 계획임. 수립 과정에서 시민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액션플랜을 설정하고 인식 증진을 추진할 예정이며, 산림·하천·공원을 망처럼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 구축이 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시민참여를 통해 조성대상지를 선정하여 소규모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에는 생태연못 조성, 먹이식물 및 수생식물 식재의 추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먹이사슬 아랫단계에 있는 생물종을 복원하고 서식처를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음.



주요 녹지축(환상축, 남북축)



생물서식처 조성(용산구 효창공원)



곤충호텔(광진구 아차산)

사업	공원녹지를 시민이 돌보고 가꾸고 즐기는 녹색문화로 확산한다.								
	<p>시민들의 식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공원 및 나무를 관리함에 있어 기존의 관 위주에서 탈피하여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가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따라 공원 및 가로수 주변의 단체·주민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2,612개의 공원 및 2,038여주의 나무를 일반시민이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제안함.</p> <p>실내외 정원조성 및 기타 전문분야에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정원사를 양성하며, 녹색문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환경위기와 자원고갈 등 공동체 문제를 해소할 실천주체로서 삶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표 5-29〉 녹색문화 확산 사업 추진계획</p>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공원·나무의 아빠, 엄마가 되는 돌보미 사업</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녹지관리 및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시민, 시민단체 및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 2,612개 공원, 2,038여주 나무를 대상으로 함 </td></tr> <tr> <td>너도 나도 시민정원사 되기</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이론·실습과정을 3개 학교별 4주 특화 과정으로 로테이션형의 교육으로 실시 시 직영공원 2곳을 선정, 서울정원사학교 및 전문가드너를 활용하여 실습위주의 맞춤교육 실시 </td></tr> <tr> <td>녹색문화 교육프로그램</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자기주도적 환경·생태교육 콘텐츠로 보강하여 개편 녹색문화,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확대 </td></tr> </tbody> </table>	사업	내용	공원·나무의 아빠, 엄마가 되는 돌보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녹지관리 및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시민, 시민단체 및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 2,612개 공원, 2,038여주 나무를 대상으로 함 	너도 나도 시민정원사 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이론·실습과정을 3개 학교별 4주 특화 과정으로 로테이션형의 교육으로 실시 시 직영공원 2곳을 선정, 서울정원사학교 및 전문가드너를 활용하여 실습위주의 맞춤교육 실시 	녹색문화 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자기주도적 환경·생태교육 콘텐츠로 보강하여 개편 녹색문화,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확대
사업	내용								
공원·나무의 아빠, 엄마가 되는 돌보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녹지관리 및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시민, 시민단체 및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 2,612개 공원, 2,038여주 나무를 대상으로 함 								
너도 나도 시민정원사 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이론·실습과정을 3개 학교별 4주 특화 과정으로 로테이션형의 교육으로 실시 시 직영공원 2곳을 선정, 서울정원사학교 및 전문가드너를 활용하여 실습위주의 맞춤교육 실시 								
녹색문화 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자기주도적 환경·생태교육 콘텐츠로 보강하여 개편 녹색문화,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확대 								
사업	도시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도시문화공원을 조성한다.								
	<p>서울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미래도시에 적합한 공원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서울의 문화적 특징을 활용한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서울시가 조성하는 도시문화공원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인공시설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연요소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됨.</p> <p style="text-align: center;">〈표 5-30〉 도시문화공원 조성 추진방향</p>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th><th>추진방향</th></tr> </thead> <tbody> <tr> <td>마곡 중앙공원 조성</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과 물을 주제로 자연과 문화가 접목된 대규모 특화공원 조성 (도시형 식물원+호수공원) 즐거움 배움을 통하여 식물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물다양성을 보존·증진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미래시민 양성을 위한 식물원 조성 지속가능한 공원 조성을 위한 물순환 체계 구축 한강과의 연결, 주변과 연계 등을 통한 열린 공간 조성 </td></tr> <tr> <td>이야기가 있는 테마공원 조성</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시설물 도입 및 설치 최소화하고 공원 곳곳에서 테마가 은은히 묻어나도록 사업 방향 추진 공원디자이너, 생태학자, 역사문화학자, 공공조경가 등과 함께 숲과 공원을 둘러보면서 점검하고, 테마화 방안 및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여 사업 시행 </td></tr> </tbody> </table>	사업	추진방향	마곡 중앙공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과 물을 주제로 자연과 문화가 접목된 대규모 특화공원 조성 (도시형 식물원+호수공원) 즐거움 배움을 통하여 식물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물다양성을 보존·증진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미래시민 양성을 위한 식물원 조성 지속가능한 공원 조성을 위한 물순환 체계 구축 한강과의 연결, 주변과 연계 등을 통한 열린 공간 조성 	이야기가 있는 테마공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시설물 도입 및 설치 최소화하고 공원 곳곳에서 테마가 은은히 묻어나도록 사업 방향 추진 공원디자이너, 생태학자, 역사문화학자, 공공조경가 등과 함께 숲과 공원을 둘러보면서 점검하고, 테마화 방안 및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여 사업 시행 		
사업	추진방향								
마곡 중앙공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과 물을 주제로 자연과 문화가 접목된 대규모 특화공원 조성 (도시형 식물원+호수공원) 즐거움 배움을 통하여 식물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물다양성을 보존·증진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미래시민 양성을 위한 식물원 조성 지속가능한 공원 조성을 위한 물순환 체계 구축 한강과의 연결, 주변과 연계 등을 통한 열린 공간 조성 								
이야기가 있는 테마공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시설물 도입 및 설치 최소화하고 공원 곳곳에서 테마가 은은히 묻어나도록 사업 방향 추진 공원디자이너, 생태학자, 역사문화학자, 공공조경가 등과 함께 숲과 공원을 둘러보면서 점검하고, 테마화 방안 및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여 사업 시행 								

전략 04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과제 9

생활밀착형 보행 및 자전거를 활성화한다.



도심 차도를 줄이고 자동차보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우선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사업

도심 차도를 축소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보행, 자전거 등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세종대로 보행 전용거리,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 등의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보행친화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해왔음.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보행자 우선의 신호운영 체계 개선, 정책 부문별 보행관련 사업 확산 등을 통해 보행친화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추진방향은 첫째, 차도는 축소하고 시민활동 공간은 넓히는 방향으로 도심 도로구조를 재편하여 도심권 도로 공간 재편 및 사람중심 교통 환경을 조성해야함. 둘째, 생활 속의 보행전용거리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확산하여 보행권을 확보해야 함. 셋째, 차량 속도제한 강화 등 보행자를 배려한 도로운영 확산, 보행 이동 서비스 제공 등 보행 중심의 교통 운영 체계 개선 및 보행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함.

〈표 5-31〉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계획

사업	내용
도심 도로공간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양도성 안 도로공간 재편 사업 추진 도심 대표 보행전용거리 운영 확대 및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지구 확대 및 명소화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속의 보행전용거리 확대 생활권 이면도로에 보행자가 보호받는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내실화
보행 중심 교통운영 시스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행량이 많은 곳 위주로 대각선, 광폭 횡단보도 설치 확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신호시스템 구축
보행관련 정보제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교통포털 서비스 개발 및 제공 「One Click, One Call」 기반 이동성 케어 센터 시범 운영

사업

도시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공원화한다.

서울시는 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 등을 통해 확보된 공간을 친환경으로 조성하여 대규모 지상 도로로 인한 생활권 단절 등 생활환경 및 지역발전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친환경 도로로 재조성하고자 함. 이를 위해 국회대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를 추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국회대로와 서부간선도로 지상부에 225,000㎡(광화문광장의 약 12배)의 녹지·다목적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이 단절되고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할 예정임. 설계단계부터 전문가와 주민 참여로 시민이 함께하는 도로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유치 및 국비지원 등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사업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한다.
----	---------------------

생활밀착형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의 도심 연계성 미비,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장소 부적절 등으로 생활 속의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전거이용 저변 확대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이 필요함.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심부 자전거도로 조성, 자전거 편의시설 공급, 공공자전거 확대·구축, 자전거 교육 정규과정 개설 등을 추진하기를 제안함.

〈표 5-32〉 자전거 관련 사업 추진계획

사업	내용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간 내 추진가능한 노선 및 유형 선정 시행 후 단계적 확대 간선기능의 하천 내 자전거도로와 연결하는 인프라 확충 및 정비 개발사업 조속 추진을 통한 연평균 75km의 자전거도로 조성 개발사업 시행 시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화 도심 도로공간 구조개편과 자전거우선도로 연계 시행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기반시설 활용, 민간자본 유치 등으로 재정부담 최소화를 통한 공공자전거 확대·구축
자전거 편의시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간 내 성공사례 도출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로 지속적 확대 운영 민간추원 유치로 재정부담 최소화 및 운영안정성 확보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 안전교육을 학교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
시민주도형 자전거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함께하는 자전거 정책 추진 자치구 및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자전거 정책 추진

사업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
----	---------------------

서울의 도시철도망은 해외 선진도시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수도권 광역화로 인한 주요 서울 접근도로 교통 혼잡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어느 곳에서나 10분 안에 지하철역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와 보행중심으로 서울시 교통체계를 구성하고, 철도망을 중심으로 버스 연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울내부 거점 간 대중교통으로서 철도의 연계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표 5-33〉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 추진계획

사업	내용
교통소외지역 도시철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개 노선 89.17km 신설 계획 ※10개 노선: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 노선 적기 개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이신설선(우이동~신설동역)은 정거장, 본선 구조물 등 공사중으로 2016년 11월 개통 예정 9호선 2단계(논현동 차병원 사거리~ 잠실 종합운동장) 2015년 2월 개통 예정 9호선 3단계(잠실 종합운동장~둔촌동 보훈병원) 2016년 3월 개통 예정
기존 도시철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4호선(당고개~진접), 5호선(상일동~창우동), 8호선(암사동~별내) 연장
광역철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건의 광역철도 노선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 적극 협의 추진

2) 사회문화 분야 과제 추진계획

‘사회적 형평성 및 문화적 활력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4개 전략, 10개 과제를 추진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사업을 설정하였음.

〈표 5-34〉 사회문화 분야 과제 추진 계획

전략 01		양극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과 제		사 업	
1	양성평등 사회를 만든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역연계형 일자리 등 여성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여성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하여 서울형 성평등 선도모델을 제시한다.	
2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한다.	찾아가는 복지플래너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균형적으로 실현한다.	
		동 주민센터를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주민 주도의 복지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소득불평등을 줄인다.	
3	양질의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시민들의 긴급한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민대학을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으로 확대 개편 운영한다.	
		지역여건·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간 균형을 도모한다.	
4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	
		주거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5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든다.	지역사회 주거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거복지를 향상시킨다.	
		서울형 전월세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전략 02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	
과 제		사 업	
5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든다.	다양한 가족유형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한다.	
		노후설계 및 여가·건강 프로그램 활성화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공공 노인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한다.	
6	주민참여 활성화로 생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마을공동체의 자생적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한다.	
		정책참여를 위한 시민제안을 활성화한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해나간다.	
		시민참여 감사를 확대한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전략 03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과 제		사 업
7	시민이 우선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를 실행한다.
		재난 초기 시민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노후전동차 교체 및 SMART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지하철 안전 운영을 강화한다.
8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시민이 참여하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의료 취약계층에 의료, 보건,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예방 우선 정책을 추진한다.
		민간중심의 소생활권 건강생태계를 조성한다.

전략 04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

과 제		사 업
9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클래식, 국악, 영화,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공공·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책 읽는 서울을 구현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센터를 확충한다.
		서울의 역사문화 가치를 공유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한다.
10	생활주변의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확대한다.	마을예술창작소를 내실화한다.
		마을미디어 교육 및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시민들의 생활문화제작 프로그램 지원 및 기반을 조성한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를 만든다.

전략 01

양극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과제 1

양성평등 사회를 만든다.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하고 보편적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역연계형 일자리 등 여성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난 10여년간 5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30대 초·중반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또한 지속되고 있음. 여성의 불안정한 고용상황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들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양성평등을 저해하고 있음. 서울시에서는 여성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여성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청년여성, 결혼이민여성, 경력단절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인턴십과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지역연계형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제안함.

〈표 5-35〉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사업	내용
사회서비스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 보육, 보건·건강, 여성·아동, 안전, 교육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 충족으로 사회서비스 강화 추진
지역연계형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설계사 등 '서울형 및 굿 뉴딜' 일자리 급식, 보육, 돌봄 등 '서울형 여성 협동조합' 집중 선정·육성 도전형 벤처창업, 1인 창조기업 등 '굿 스타트' 일자리 정보화, 공공서비스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공일자리 발굴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2013년 기준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11.1%에 머물고 있어 보육서비스를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는 형태를 갖고 있음.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육품질지원센터 설립으로 우수보육교사를 공급하고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함.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총 1000개소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특히 지역별 특성과 수요 분석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균형 있게 배치할 것으로 기대됨.

〈표 5-36〉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안

확충방안	내용
비용절감형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민관연대, 공공기관 활용 등 기존 사업 방식 지속 추진
기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 대기자 해소를 위한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화 추진 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전환
학교·공원 등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내 유휴교실 활용 설치 중소기업을 위한 국공립-직장 혼합형어린이집 설치 1만㎡이상 근린공원 내 설치

사업

여성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하여 서울형 성평등 선도모델을 제시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시행 이후, 대상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 53개 과제가 2014년 71개로 증가함. 그러나 평가의 양적 증가에 비해 정책개선에 대한 실행률은 낮은 편으로, 일회성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는 평가가 필요함.

민선6기 주요 핵심과제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정책 환류를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젠더전문가·행정의 삼각 연대를 구축하여 ‘젠더 옴부즈만’을 구성할 것을 제안함. 정책분야별 통합 분석평가로 성인지적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책수립단계부터 사업내용과 수행방식에 대한 성인지적 정책제안과 성평등을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함.

〈표 5-37〉 젠더옴부즈만 운영 추진계획

사업	내용		
젠더옴부즈만 구성	▪ 젠더 전문가, NGO, 성평등위원회 위원, 성주류화 관련 기관·단체 추천 인사 등 30명 내외로 구성		
	시민, NGO	젠더전문가	서울시
	<div>▪ 정책 모니터링 ▪ 이슈 제기 및 평가</div>	<div>▪ 정책모니터링 및 환류 평가 ▪ 공무원 및 시민 대상 성인지 교육 ▪ 핵심과제 성별영향 분석 및 정책 제언</div>	<div>▪ 성인지 정책 수립·집행·환류 ▪ 성인지적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div>
	▪ 5개 분야별 옴부즈만 구성·운영		
젠더옴부즈만 운영	<div>〈주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별고용영향평가 병행〉 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대상: 창조전문인력, 뉴딜일자리, 문화산업 육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등 주요 사업 목적: 사전적·사후적 평가 실시로 여성일자리 질적 개선</div>		
	▪ 역 : 핵심과제별 성(gender) 분석, 정책제안, 모니터링, 정책환류 등의 활동을 통해 해당부서의 사업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감독 ▪ 연계·협력: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등 관련기관 및 위원회와 활동 사항 공유		

전략 01

양극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과제 2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한다.



계층간, 지역간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

사업

찾아가는 복지플래너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균형적으로 실현한다.

최근 기초연금, 수급자제도 개편 등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인력의 증가는 미흡한 실정이며,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여 복지인력의 확충과 전달체계의 혁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균형적으로 실현할 것을 제안함.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플래너’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 인력의 증원이 기반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실행력 제고 방안으로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를 현재 대비 2배 증원할 것을 제안함.

〈표 5-38〉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사업 추진계획

사업	내용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방문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직 2명, 방문간호사 2명으로 구성 ▪ 사회복지인력 1명과 방문간호사 1명은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전담 ▪ 1일 5회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아, 65세 어르신, 위기가정 최초 방문 : 1일 2회 – 잔여 3회는 기존 및 신규 방문대상자 중 집중관리군 등 추가 방문 지원
어르신 복지플래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대 도래 모든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노후복지 및 건강 설계
우리아이 복지플래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터 태어난 영아가 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가정방문 건강 관리로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의 발판 제공
위기가정 복지플래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과금 체납, 기초수급 탈락가구 등 질병, 실직, 사고, 장애, 노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시행

사업

동 주민센터를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주민 주도의 복지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종전 행정위주의 기능만을 시행하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 및 커뮤니티 위주의 동주민센터로 변화하였으나, 복지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복지업무의 갈래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근본적 인력부족과 자체 복지사업 확대의 한계, 자발적 민간자원 부족 등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동 단위 지역주민 중심의 자발적인 복지생태계의 활성화가 필요함.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의 기존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복지행정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복지·보건·고용 등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주민이 찾아오는 행정에서 찾아가는 방문복지 중심의 복지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관 주도 행정에서 주민 주도의 복지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복지행정 패러다임의 혁신을 추구할 것을 기대함.

사업	<p>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소득불평등을 줄인다.</p>						
	<p>2013년 기준 1인가구의 월 최저임금(1,1015천원)은 서울지역 최소주거기준 주거비(60만원), 식료 품비(40만원) 지출액만으로도 빠듯한 실정이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으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 하기가 힘든 상황임. 또한 근로자가구의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p> <p>생활임금제를 통하여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고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한 후 제도개선, 홍보 등을 통해 민간으로의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488 664 858 1019"> <p>〈표 5-39〉 생활임금 결정구조</p> <pre> graph TD A[생활임금(안) 수립 (서울특별시장)] --> B[생활임금(안) 심의·의결] B --> C[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장)] </pre> </div> <div data-bbox="892 664 1354 1019"> <p>〈표 5-40〉 생활임금 조정률 결정모델(안)</p> <pre> graph TD A[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생활임금 기준액) 126만원] --> B[정부가고시 최저임금액 100만원] A --> C[생활임금 가산액 26만원] B --> D[최저임금 × 126%(생활임금 조정율) = 서울시 생활임금(2014년 기준)] </pre> </div> </div>						
사업	<p>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시민들의 긴급한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p>						
	<p>그간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신청제도를 취한 기존 제도의 특성상 미신청 또는 비신청으로 공적지원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이 여전히 존재함. 또한 실직, 부채 등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나 제도권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음.</p> <p>서울형 기초보장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신청주의 한계의 극복을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 발굴체계를 가동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소득·재산·금융 등 기준 완화로 수혜가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표 5-41〉 서울형 기초보장·긴급복지 2.0 사업 추진계획</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사업</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서울형 기초보장 2.0</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실적, 전산데이터 및 그 동안 축적된 경험으로 연차별 추진목표 변경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내용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 업그레이드 </td></tr> <tr> <td>서울형 긴급복지 2.0</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80% 확대, 재산기준은 현재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 135백만원에서 국기초 수급자 기본 재산액 공제액 54백만원을 더한 수준으로 완화 지원대상 확대: 기존 지원대상에 6개월 이상 실직 및 과다 채무 가구, 임대료 6개월 및 공과금 3개월 이상 연체자 추가 지원기간 연장: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원 다양화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전문인력 한시적 채용 분기별 대상자 발굴실적 등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선정기준, 지원대상, 발굴방식 등 미흡사항을 개선 </td></tr> </tbody> </table>	사업	내용	서울형 기초보장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실적, 전산데이터 및 그 동안 축적된 경험으로 연차별 추진목표 변경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내용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 업그레이드 	서울형 긴급복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80% 확대, 재산기준은 현재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 135백만원에서 국기초 수급자 기본 재산액 공제액 54백만원을 더한 수준으로 완화 지원대상 확대: 기존 지원대상에 6개월 이상 실직 및 과다 채무 가구, 임대료 6개월 및 공과금 3개월 이상 연체자 추가 지원기간 연장: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원 다양화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전문인력 한시적 채용 분기별 대상자 발굴실적 등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선정기준, 지원대상, 발굴방식 등 미흡사항을 개선
사업	내용						
서울형 기초보장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실적, 전산데이터 및 그 동안 축적된 경험으로 연차별 추진목표 변경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내용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 업그레이드 						
서울형 긴급복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80% 확대, 재산기준은 현재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 135백만원에서 국기초 수급자 기본 재산액 공제액 54백만원을 더한 수준으로 완화 지원대상 확대: 기존 지원대상에 6개월 이상 실직 및 과다 채무 가구, 임대료 6개월 및 공과금 3개월 이상 연체자 추가 지원기간 연장: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원 다양화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전문인력 한시적 채용 분기별 대상자 발굴실적 등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선정기준, 지원대상, 발굴방식 등 미흡사항을 개선 						

전략 01

양극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과제 3

양질의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학습하는 평생교육체계를 도입한다.

사업

서울시민대학을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으로 확대 개편 운영한다.

서울시는 인문학 대중강좌 산실로 자리매김한 시민청 시민대학, 대학별 특화된 강좌 중심의 권역별 시민대학, 전문가 역량강화 현장실무 중심의 은평학습장 시민대학 등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학습하는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함.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은 비학위 평생교육체계를 도입하며, 기존 시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비학위 정규과정을 운영할 계획임. 또한 서울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등 시민의식을 고양 하며, 세계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무료 또는 민간기관 1/10 수준으로 제공하여 학습자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됨.

〈표 5-42〉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계획

정규교육 과정 (10~15주)	학점과정(15주)	은평학습장 시민대학
	전문과정(10주)	은평학습장/청계천/대학연계/네트워크 시민대학
교양 과정(5주)	시민청 / 청계천 / 대학연계 / 네트워크 시민대학	

사업

지역여건·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간 균형을 도모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교육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4년 11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교육 우선지구 사업을 실시하였음. 교육우선지구는 「교육도시 서울 플랜」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지자체 간 네트워크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열 약한 자치구를 지원하여 지역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었음.

2015년에는 공모를 통해 자치구를 추가 선정하여 총 9개 자치구를 지원(기존 자치구 중 사업평 가 결과 우수 지역은 공모 없이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간 교육격차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표 5-43〉 교육우선지구 사업 추진계획

필수 프로그램 2개 사업 및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테마 체험활동 학습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 3학년, 중 1학년 교과와 연계한 체험활동 경비 지원 - 문화예술학교·예술캠프 등에 연계하여 야외수업 실시 ■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계 고교 직업교육 확대(방과후, 토요일 활용 포함) - 관련 교육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실습·훈련 프로그램 운영 ■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자치구 특화사업 추진(초·중·고)

사업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그간 서울의 평생교육학습 체계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따로 작동함으로써, 교육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이 적재적소에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따라서 학교교육과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교-지역사회 네트워크화 및 평생학습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고령화 사회 도래와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율은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공자 중심의 일회성 소비교육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주도로 지역에 뿌리를 둔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평생학습 확대를 추진하여 2014년까지 1동 1교(총 424개교)의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공원 등 자치구별 지역시설을 최대한 개방할 것을 제안함.

평생학습 거버넌스 체계 확립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술단체, 예술단체 등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표 5-44〉 평생학습체계 구축 사업 추진계획

주요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1	2012	2013	2014	
마을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지원	151 (151)	219 (370)	372 (742)	524 (1,266)	1,000 (2,266)
시민제안, 주제지정 등 평생학습 운영 지원	90 (90)	67 (157)	84 (241)	100 (341)	150 (491)
지역학교 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7 (7)	50 (57)	100 (157)	150 (307)	300 (607)
자치구 시행사업	54 (54)	102 (156)	188 (344)	274 (618)	550 (1,168)
평생학습 거버넌스 체계 확립	-	협의체 구성 운영	-협의체 운영 -지역활동가 양성과정	-협의체 운영 -지역활동가 양성과정	-협의체 운영 -지역활동가 양성과정
평생학습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시스템 구축	기능 확충	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

전략 01

양극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과제 4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주택의 공공성을 확대한다.

사업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

최근 핵가족화와 고령화, 1인가구와 외국인의 증가로 주택 수요가 다변화되고, 주택 소유 중심에서 주거권을 누리는 가치 지향으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다양한 임대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

〈표 5-45〉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계획

사업	내용
공공임대주택 6만호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인용 수요확대 등 임대 수요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 추진 노후주택 리모델링, 모듈러주택, 두레주택 등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 개발 사회초년층을 위한 도전숙, 대학생용 임대주택 등 확대 도시재생사업구역 특성을 반영한 임대주택 공급 공공주택 공급 관련제도 정비
서울형 민간임대 2만호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세대 융합형 룸셰어링 추진, 임대형 공동체주택 공급, 빈집 활용 공동체 주택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 상향 조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위탁관리형 임대주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건물을 SH공사에서 위탁받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개수수료 지원, 부동산 포털과 연계하여 공가관리 지원

사업

주거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복지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서울형 희망의 집수리 지원 등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더욱 더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됨. 이에 비주택거주자, 노인, 청년, 외국인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택바우처의 수혜대상은 주거취약계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중에서 추가발굴하고, 지원액 또한 평균 5.3만원에서 7.6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함.

〈표 5-46〉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대상 확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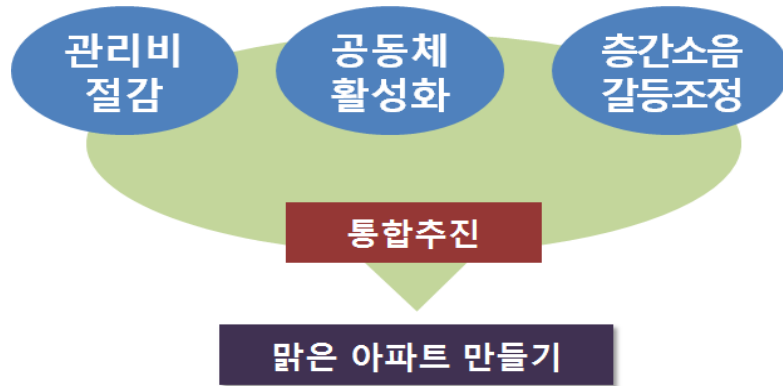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가구 주거용주택 거주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홀몸노인(우선선정), 대학생, 청년가구 추가 고시원, 쪽방, 여관 등 非주거용 주택' 거주자 추가
--	---	---

더불어 주거복지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형 희망의 집수리의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난위험시설 거주자의 이주를 지원할 것을 제안함.

사업	지역사회 주거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거복지를 향상시킨다.
----	--------------------------------

기존의 정비사업 방식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아 지역 커뮤니티 등 정주 환경이 붕괴되고 이웃 간의 소통이 단절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 또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자생력, 지속성과 확장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민 무관심과 정보 독점으로 폐쇄적 아파트 관리가 지속되고 있어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층간소음 갈등조정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사업들을 「맑은 아파트 만들기」로 통합 추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를 제안함.



〈그림 5-10〉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추진방향

「맑은 아파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사·용역 종류별 표준공사비 가이드라인 제시와 관리비 절감 매뉴얼을 발간하고,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주민학교, 우수사례 경연대회, 커뮤니티 전문가 컨설팅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층간소음 생활수칙 제정 및 주민홍보, 전문 컨설팅단 구성 및 지원 등을 통해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것을 제안함.

사업	서울형 전월세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	---------------------

최근 2년간 전세가가 11% 급등하고 월세거래 비중이 2011년 34%에서 2013년 4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거래 시장 안정화 및 법제화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전·월세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임대차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전·월세표준계약서 확대, 정보불균형 해소, 전월세 단기자금 규모 확대를 함께 시행하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운영 강화로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해소할 것을 제안함.

〈표 5-47〉 서울형 전월세제도 기반 마련 추진계획

사업	내용
서울형 전월세제도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임대차제도 운영 개선방안 마련 임차인 보호 강화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 확산 임대차 갈등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운영 강화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정보공시시스템과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단기자원자금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월세 단기자원자금 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 조성액 상향 조정 : 50세대 상향 지원세대 상향조정 : 2014년 당초예산 5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규모 증대

전략 02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

과제 5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든다.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종합적인 고령화 대책을 수립한다.

사업

다양한 가족유형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서울의 1인가구는 지난 30년간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 가구 비율 또한 1995년 8.1%에서 2010년 10%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가족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이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정책 개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임.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부모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마음 편히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5-48〉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 강화 추진계획

미혼모·부자 가족 자립지원	미혼모·부자가족 소집단 공동체 지원	미혼모 시설 '공동육아방' 점진적 확대
양육미혼모 자립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사례관리 및 자조모임 운영 활성화	운영성과 및 시설 여건에 따라 추가 설치

〈표 5-49〉 가족문화 확산 및 가족유형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계획

서울가족학교 프로그램 연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소통교실과 좋은 아버지 교실에 대상자 참여 가족종합정보지 '희망서울, 행복가족' 발간
한부모가족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 가정 이해 관련 교실 운영 인식개선 공모전 및 캠페인 실시

사업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한다.

최근 어린이집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아이를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직장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보육사업 안내 등에 어린이집 건강·위생·급식·시설안전·차량안전 등이 전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아동보호 수칙이 미흡한 실정임.

어린이집이 지켜야 할 '아동보호 수칙'을 어린이집과 부모님에게 제정·배포하여 수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실시할 것을 제안함.

어린이집 안전수칙 제정 계획

- 아동학대 사례 및 아동보육실내에서 아동보호 수칙 등을 집중 개발 및 보완
- 마련된 '아동보호 수칙'을 모든 어린이집에 교육하고 부모들에게도 배포
 - 맞춤형 안전관리 가이드북 집합교육 실시
 -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체험위주 교육 실시
 -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사업	노후설계 및 여가·건강 프로그램 활성화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	--

기대수명 연장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진행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2011년 여가시설 충족률은 60.1%로, 급증하는 어르신인구와 신노년층의 새롭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과 요양시설 확충 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표 5-50〉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 사업 추진계획

사업	내용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착공) : 30개소(2011년) → 83개소(2014년) 생활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확충 : 32개소(2011년) → 57개소(2014년)
노인 요양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442개소(2011년) → 470개소(2014년)
경로당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로당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시행
노인복지관 운영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복지관 기능개편 추진 T/F팀 운영(월 2회)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 : 일반 어르신 대상 건강, 여가, 인문학 위주 운영 제2인생설계 지원 : 은퇴후 인생설계, 사회공헌·재능나눔, 창업 교육
어르신 문화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과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사업 세대간 갈등 해소와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 1~3세대간 화합을 유도하는 문화·스포츠 경연 프로그램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별 특화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동기 부여

사업	공공 노인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한다.
----	--------------------------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치매환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요양수요 대비 시설이용 충족률은 2013년 말 62.3%로 낮은 상황이며, 데이케어센터 또한 충족률이 71%로 부양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공공노인요양시설 30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대기수요를 완화하고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하여 가족의 부담률을 완화하는 한편 센터 충족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서울형 인증제를 데이케어센터에도 적용하여 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것을 제안함.

〈표 5-51〉 어르신 건강·요양시설 확충 및 개선 계획

	확충계획	추진내용
공공 노인요양시설	신규 부지확보 및 지방이전 청사 리모델링 등을 통해 30개소 추가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인구 대비 요양시설을 고려하여 권역별 확충시설 수 조정
데이케어센터	2013년 말 확충시설 228개소 ⇒ 2018년 32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구별 시설이 부족한 자치구에 우선으로 설치비를 지원 설치비는 설치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전략 02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

과제 6

주민참여 활성화로 생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민 주인 관점의 시정패러다임을 정착시킨다.

사업

마을공동체의 자생적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한다.

2012년 3월 마을공동체 지원조례가 공포·시행되고, 2012년 9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주민주도의 다양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었음.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의 욕구와 마을발전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주민주도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의 자생적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할 것을 제안함.

〈표 5-52〉 마을공동체 지원 추진계획(안)

사업	내용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의 욕구와 마을발전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주민주도형 지원사업 적극 추진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마을공동체 지원 시스템 마련 및 마을공동체 활동정보 공유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 확산 및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마을공동체 사례 적극 발굴
마을공동체 주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주민교육 실시 자치구 마을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주민교육 활성화

사업

정책참여를 위한 시민제안을 활성화한다.

시민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시민제안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시민제안의 방법과 창구를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서울시는 희망서울 정책박람회, 희망씨앗, 천만상상 오아시스 등의 창안제도를 통해 시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향후에도 찾아가는 「좋은제안 콘테스트」 통해 대학교, 복지시설, 기업체 등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에서 시민제안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개편하여 “시민참여 사회혁신 플랫폼” 기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희망서울 정책박람회 개최를 통해 시민·공무원·전문가가 함께 제안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시킬 것을 제안함.

〈표 5-53〉 시민제안 활성화 추진계획(안)

사 업	추진실적				장기 (2020)
	2011	2012	2013	2014	
시민제안 서울시 정책 반영	84건	125건	131건	135건	135건
좋은제안 콘테스트	5회	3회	3회	3회	3회
정책 박람회 (정책 아이디어 마켓)	—	1회	1회	1회	1회

사업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해나간다.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정보 대상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의 질과 접근성에 대한 개선 요구 또한 커지고 있음. 더불어 정책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책화하고자 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위하여 열린 광장 문화 조성 및 현장 중심의 쌍방향 소통으로 개방형 시정을 운영하는 한편, 정보인프라 구축 등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공개 대상 확대로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을 제안함.

〈표 5-54〉 행정정보 공개 성과 및 추진계획(안)

구 분	지 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장기 (2020)
시민의 정보접근성 및 알권리 강화	희망서울 생활지표 발굴·공개	건	—	300	300	300	—
	공공데이터 개방 종수 (누계)	(종)	20	60	100	150	300
	정보공개율 제고	%	94.6	97.5	98	98	98

사업

시민참여 감사를 확대한다.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감사 분야에 대한 시민참여는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었음. 이에 서울시는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참여 옴부즈만의 감사 참여 확대와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내실화를 적극 추진해왔음. 그 결과 시민감사 옴부즈만 증원, 시민참여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직권감사·참여 옴부즈만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민감사·참여 옴부즈만 활동의 시민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및 자치구 옴부즈만과 교류를 확대할 것을 제안함.

〈표 5-55〉 시민참여 감사 확대 추진계획(안)

직권감사·참여 옴부즈만 활동 강화

-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시민감사 옴부즈만의 직권감사로 민원인의 불만 해소
- 시장(감사관), 시의회의 시민감사·조사 요청에 따른 감사 활성화

일상감사와 연계한 청렴계약 감사 활성화

- 하도급 비리, 부당 설계변경 등 위법 부당한 사항 적발 시 직권감사
- 입찰활동에서 입찰담합, 부당한 입찰조건 등의 문제점 적발 시 즉시 입찰과정을 중단시켜 직권감사 실시

시민감사·참여 옴부즈만 활동 시민홍보 강화

- 민원인들이 쉽게 시민·주민감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 제도 홍보” 책자 발간 및 배포
- 서울시 홈페이지를 이용 홍보 및 “감사 청구” 메뉴 신설·운영

국가 및 자치구 옴부즈만과 교류 확대

- '14년 아시아옴부즈만 협회(AOA) 이사회에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참석하여 사례발표 및 정보교환

2012년 5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이 제안한 예산사업을 시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사, 선정하게 되었음. 선정된 사업은 예산안에 포함되어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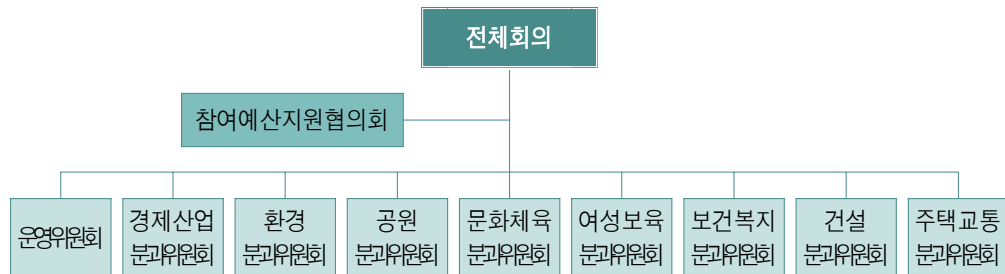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추진한 결과 2013년 참여예산사업은 132개 사업(499억원, 확정 471억원)이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223개 사업(503억원, 확정 448억원)으로 증가하였음.

현재 참여예산위원회는 참여예산위원 250명을 순수시민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는 총 9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지역대표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공모위원수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음.

심사시스템은 총3단계를 거치는데, 참여예산 심사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안단계에서 심사단계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참여를 일체 배제하여 순수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기존 구축되어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참여 민주주의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표 5-56〉 참여예산위원회 구성현황



〈참여예산위원 공개추첨〉



〈예산학교 운영〉



〈분과위원회 제안사업 심사〉



〈참여예산한마당 (총회)개최〉

전략 03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과제 7

시민이 우선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시민 중심의 안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안전시스템을 개선한다.

사업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를 실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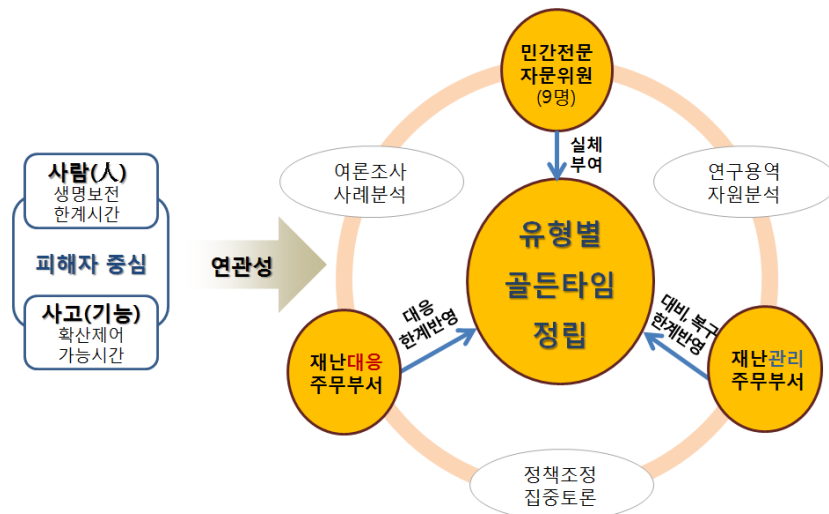
다양한 도시위험요소의 증가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재난약자를 위한 통합 대응관리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며, 재난 유형별 황금시간 목표가 정립되지 않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핵심 행동요소 도출 및 목표 중심의 대응체제 개편을 위해 55개 유형별 황금시간을 정립하여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표 5-57〉 유형별 황금시간 목표 정립

55개 유형별 황금시간 정립	시민	재난초기 시민대응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문화 확산 교육 제도화
	官	집단대응력 및 지휘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출동시스템 개선
	기반	통합자원, 신속출동 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요인(시설) 제거 소방통로 확보

황금시간이란 재난 징후 인지 또는 사고발생시점부터 생명 보존과 재난 확산 제어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한계시간을 의미하며, 서울시는 재난 유형별 목표와 수단의 연계 및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간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됨. 예를 들어 건축물 붕괴는 72시간, 지하철 화재 3분, 심정지 4분, 산사태 30분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세부 단위 목표를 정립하여 황금시간 목표 실현 중심으로 매뉴얼을 재편할 예정임.



〈그림 5-11〉 골든타임 정립 거버넌스 구축

그동안의 재난 대응은 관·관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시민초동조치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였으며 재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더 확산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재난초기의 시민초동조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위기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고, 안전생활을 정착시키는 한편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표 5-58〉 재난 초기 시민 대응역량 강화 추진계획

구분	내용
민과 관이 연계된 현장중심 매뉴얼 보완	기 보급중인 시민행동 매뉴얼의 행동패턴에 적합한 구조대 행동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시민 ↔ 관 ↔ 기반시스템에 적합한 행동지침 마련 사람중심·생명중심의 대피 및 구조와 이에 따르는 가이드라인 제시
	시민 자율훈련 프로세스 정립, 실천을 통한 체화로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중심, 반복적인 자율 훈련 실행 제도 강화
재난약자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프로그램 운영	재난약자 자율대응역량 및 긴급구조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어르신·유아 등 재난약자에 적합한 매뉴얼 추가 개발 보급 언어·행동장애에 적합한 “안전벨” 개발 보급 ※안전벨: 장애인 등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시민이 표준화된 일정한 소리를 표시하면 주변에 있던 시민이 직접 도움을 주거나 119로 신고하는 시스템 재난 시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보호체계 구축 학교·유치원의 『어린이·청소년 단체여행 119 동행프로그램』 운영
	사회취약계층, 취약지역에 대한 초기대응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래시장, 쪽방촌, 소방차 불통지역 골목길마다 “보이는 소화기” 비치 지역별 안전지킴이 중심의 마을공동체 단위 대응 역량 제고 의용소방대 재난현장 출동구역 세분화 → 문자전송, 초기 대응활동 전개
안전파수꾼 양성 및 시민에 의한 위기대응역량 강화	각 부서별 관리되고 있는 안전분야 NGO, 공공시설물 관계자 등 통합표준교육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안전교육 기반 보강(현재 2개소인 시민안전체험관 4개소 확대) 거주지·생활거점 중심 황금시간 내 초기 조치 및 구조대와 네트워크 형성
	오피니언 리더 대상 『시민안전 아카데미 운영』 → 선도적 안전문화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 방재 재난전문 학계 + 공공기관장 등으로 회원 구성 ※건물주, CEO 중심의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변화가 사회전문의 안전문화 확산에 선도

사업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주요 선진도시의 2~4배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추진으로 사상자 수가 24.5% 감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현장응급 조치, 교육, 홍보 등 사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표 5-59〉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추진계획

대상	내용
노인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용품 지원, 노인보호구역 확대(매년 20개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지수집어르신 전원(6,354명) 야광조끼, 손수레 안전표시물 지원 어르신 교통안전체험교실, 운전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
어르신	어린이보호구역 확대(매년 50개소 이상), 교통안전수호천사 운영(1,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5~6학년 대상 교통안전수호천사단 구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시설 개선 아마존 운영 활성화, 녹색어머니회 안전지도 확대(초교, 등교시→유치원·초교 등하교시)
기반	횡단보도 확대(총105개소, 대각선50), 보도상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13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자 감응신호기, 교차로 안전알리미 등 시범운영, 일단멈춤 표지 확대 설치

사업 **노후전동차 교체 및 SMART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지하철 안전 운영을 강화한다.**

1~4호선은 개통 후 29~40년이 경과되어 보유전동차(1,954량)중 600량(30%)이 사용연수가 21년 이상 된 노후 전동차로 잦은 고장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지하철 관제센터를 운영기관별, 호선별, 장소별로 분리 운영함에 따라 상호 유기적인 지원이 곤란하고 운영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지하철 안전 운영 강화를 위하여 노후전동차를 교체함으로써 지하철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시민불안을 해소하며, 공간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상호간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할 수 있는 SMART 통합관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표 5-60〉 연도별 노후전동차 교체계획

구 분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구매발주	2호선(1차) 200량		2호선(2차) 224량		2·3호선(3차) 196량 (2호선 46, 3호선 150)
전동차제작		2호선(1차) 200량	2호선(1차) 200량	2호선(1차) 100량 2호선(2차) 224량	2호선(2차) 224량
전동차교체				2호선(1차) 100량	2호선(1차) 100량

과제 8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해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구현하고 공공보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시민이 참여하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화한다.

최근 재난의 증가와 다양화로 인해 다수사상자의 발생을 대비한 응급의료 체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체계 등 안전망 구축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시민이 시민을 살리는 응급대응 교육 강화(Seoul Heart Saver Project)

- 1가구당 1인 심폐소생술 교육이수'를 위한 다양한 교육운영
 - 학생, 주부, 직장인 등 일반시민 CPR 교육 : 20만명('14년) → 누계 100만명('18년)
 - 모범 운전자, AED 관리자 등 특정집단 대상의 찾아가는 이동교육
- 시민 CPR 서포터즈 양성 및 심장지 환자발생시 문자안내 서비스 지원
 - 서포터즈 양성·등록 : 18,000명('14년) → 매년 20,000명 → 100,000명('18년)
 - 심장정지환자 발생시 서포터즈(인근 AED지참) SMS호출을 위한 119전산망 탑재

생활터에서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 신규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및 설치(근거: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
 - 심장정지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신규설치 : 총6,000대('14년) → 총 10,000대('18년)
 -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우선설치 지원
 - 경찰차 탑재, 지역별 모범운전자지부 설치로 심장정지발생시 기동성 강화
-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실태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
 - 1대당 관리책임자 지정 및 월1회 점검 강화(16개 항목점검)
 - AED 활용관련 시민홍보를 위한 AED사용법 경진대회 및 UCC 공모전 개최

서울형 심장정지 치료센터 지정운영

-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 퇴원을 및 뇌기능 회복률 향상을 위해 집중 치료센터 선정 지원
- 서울형 심장정지 치료센터 선정기준 및 예산 지원
 - 심장정지 중환자 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 지원(개소당 1억원)
 - 집중치료 가능 시설·인력·장비를 일부 보유한 응급의료센터(총30개) 중 선정

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 구성·운영 및 현장의료지원 실행체계 마련

- 재난의료지원단 구성 : 79팀 438명 (팀당 의사1, 간호사2, 지원 2)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응급의료Bag 비축 : 137개('15년) → 240개('18년)

사업

의료 취약계층에 의료, 보건,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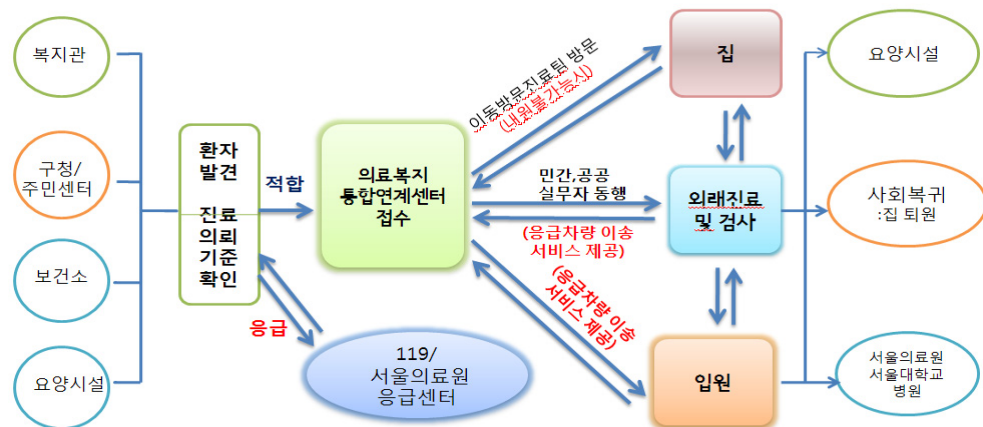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활 및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 병원 제공서비스가 진단·치료 및 환자상담에 머물러 있어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환자를 발굴하는 한편, 의료 취약계층에 보건·복지·의료자원을 연계한 301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함.

〈표 5-61〉 301네트워크(보건·의료·복지 연계) 확대 체계

지역사회	통합사례관리기관	급성기 진료기관	
복지관, 요양시설, 구청, 주민센터	북부병원 등 참여의료기관	서울의료원	서울대학교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사례 발굴 및 의뢰 대상자 치료과정 참여 대상자 퇴원계획수립 참여 사회복귀후 사례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의료복지지원통합사례 관리 치료계획 수립 지역사회 복귀계획 수립 퇴원 및 사회복귀 지원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환자진료 수술 등 급성기 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수술 급성기 환자 치료 지원

지역사회 대상자 의뢰체계(절차)



〈그림 5-12〉 301네트워크(보건·의료·복지 연계) 확대 체계도

지역사회에서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를 발굴하여 301 네트워크 병원으로 입원 의뢰를 하고, 301 네트워크 병원에서는 의뢰된 환자를 치료 후 개인 맞춤형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양시설 및 지역사회 등 복귀를 지원하게 됨.

301 네트워크를 제공할 경우,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으로 방치된 환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에 속한 환자에 대한 필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업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예방 우선 정책을 추진한다.
----	-------------------------------

어린이집 미세먼지, 환경호르몬 노출실태 조사 결과 어린이용품 등에서 환경호르몬이 다수 검출되어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 우선 정책 추진이 요구됨.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유해물질 예방을 위한 정보체계 및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사회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소통과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함.

〈표 5-62〉 어린이 대상 환경호르몬 관련 정책 추진계획

사업	내용
환경호르몬 노출실태조사 및 환경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2018년까지 400개소 초등학교, 어린이집 장판, 가방, 매트, 학습용품 및 어린이 소변 대사물 환경호르몬 검사·분석 실내오염원인 미세먼지, CO₂ 등 환경유해인자 검사·분석 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관리 및 개선방안 제시 등
친환경 벽면녹화 등 환경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컨설팅 결과 실내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설 및 노후된 어린이집 등 1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보육실 및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준수사항 점검 및 유해성 여부 검사 추진
환경호르몬 노출 예방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호르몬 예방 리플릿, 만화 동영상 등 홍보물 제작 생활 주변 환경호르몬 노출 저감을 위한 심포지엄 등 대시민홍보

사업	민간중심의 소생활권 건강생태계를 조성한다.
----	-------------------------

그간 서울시는 구/동 단위로 건강관련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구 단위 접근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주체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불가능한 규모이며, 동 단위 접근은 지역주민 건강을 지원하는 다양한 자원의 확보가 불가능함.

소생활권(인구 10만 정도의 3~4개 동 규모) 단위 건강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건강을 지원하는 민간자원의 참여를 최대화할 것을 제안함.

〈표 5-63〉 소생활권 건강협의체 구축 추진계획

사업	내용
소생활권 건강협의체 구축 및 운영	2015년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지역 중심 4개소 시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협의체 위원장 1명(비상임), 협의체 간사 1명(민간, 상임) 참여: 다양한 민간분야 건강관련업체 및 기관, 건강소모임, 주민모임, 자원봉사조직 등
	<p>기능 및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실천 주민 조직 발굴, 조직화, 지원 동 마을복지센터의 건강 문제 연계, 지원 소생활권 단위의 민간의 다양한 건강관련 자원 연계 민관 건강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 조사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소생활권 건강실천공간 거점 조성(洞 마을복지센터, 보건지소, 민간기관 등 활용)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활동가, 시민단체, 전문가, 보건소 관계자 등 다양한 관련자로 구성된 사업지원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전략 04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

과제 9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수요에 대응하고 계층별 특색 있는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한다.

사업

클래식, 국악, 영화,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2013년도 서울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도는 6.41점으로 2009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시민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아직 부족한 실정임. 문화활동 기회 확대와 다양한 장르의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클래식·대중음악·국악 전용공연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표 5-64〉 문화시설 기반 확충 추진계획

사업	내용
클래식 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부지: 세종로 공원 등 대상부지 검토 중 ■ 추진현황: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14.5.~12월)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부지: 도봉구 창동 1-23번지(舊창동열린극장 부지) ■ 추진현황: 행복4구추진단에서 업무 통합 추진
국악예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부지: 종로구 와룡동 12-2외 6 ■ 추진현황: 운영프로그램(안) 마련 및 건립공사 시행중

사업

공공·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책 읽는 서울을 구현한다.

현재 공공(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장서·시설 다양화에 대한 시민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도서관 1관 당 사서직 법적 최소기준 3명에 미달하는 도서관이 68개관에 이르다보니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서비스 제공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지역(자치구)간 사서확보율에도 격차가 있음(최소: 구로 2.3%, 최대: 강서 50.9%).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도서관 운영 인력을 확대하고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비스망을 강화하여 책 읽는 서울을 구현할 것을 제안함.

〈표 5-65〉 공공·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확대 추진계획

기본원칙	책 읽는 서울 구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서비스 향유 지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시민 도서관서비스 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정보복지 실현 ■ 도서관 운영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립도서관 시비보조율(30%)에 근거하여 자치구립과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공공도서관과의 연계사업을 통한 지원, 전담사서 확충) ■ 도서관 운영인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과 신규 인력 확보 추진을 통한 수준 높은 도서관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으로 '독서문화 조성' 과 '책 읽는 서울' 구현 ■ 서울시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소재 공공도서관을 통합 연계하여 '통합도서관서비스' 구축 확대

사업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센터를 확충한다.
----	---------------------------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경험 정도를 조사한 결과 18%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문화예술교육 경험 기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확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문화적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것을 제안함.

〈표 5-66〉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센터 확충 추진계획

추진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1개소 시범 조성(서남권) 후 권역별 확대(4개소)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회관 등 유사시설 기능개편 조성(6개소) 교육청·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전문예술가,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추진
추진방법	<p>권역별 안배, 유사시설 기능개편 원칙을 적용,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별 지역예술교육센터 조성 : 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 생활권역별로 미디어, 도서, 놀이터, 휴식공간 등을 종합한 복합공간 조성 전문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공유하는 광역센터로서의 역할 시범사업(서남권) 실시 후 권역별(서북권, 동북권, 동남권) 추가 확대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예술회관 등 유사시설 기능 개편: 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및 공간특성을 고려하여 연극, 뮤지컬 등 장르 특성화 프로그램, 대상별 세분화 프로그램 도입과 서울문화재단 TA(Teaching Artist) 파견 서울문화재단 및 자치구와 협의, 기능개편 시설 확정('15년) 후 연차별 확대

사업	서울의 역사문화 가치를 공유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한다.
----	--------------------------------

서울의 정체성을 살리고, 관광자원으로서 역사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생활 속 역사자원 보전과 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서울의 대표 역사유산인 한양도성에 대한 가치 재발견이 필요한 시점임.

시민과 함께 유산 가치를 공유하고 참여를 활성화하여 서울의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더욱 제고할 것을 제안함.

〈표 5-67〉 유산가치 공유 및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

사업	내용
시민참여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양도성문화제, 순성프로그램, 해설사 역량강화교육, 문화유산교육 등 축성 후손 및 마을주민의 한양도성 보존 참여
도보여행기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성길 조성·정비, 순성안내센터 개설, 종합안내시스템 정비
한양도성 아카이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양도성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 조사, 정리, DB화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센터 구축 및 한양도성 관련 연구 기반 조성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전문가 및 성곽도시와 네트워크 구축 이코모스 CIWIH(역사도시마을문화위원회) 총회 유치 및 세계역사도시기구(OWHC) 가입 추진

전략 04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

과제 10

생활주변의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확대한다.



지역과 마을단위로 자생적 문화활동을 하는 생활권내 시민 문화예술활동을 강화한다.

사업

마을예술창작소를 내실화한다.

2013년 기준 마을예술창작소 25개소(주민자율형 17, 민관협력형 8)를 조성·운영중이나 자립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마을예술창작소 및 지역예술단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전시·공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맞춤형 교육 확대로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을 내실화할 것을 제안함.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 선정된 마을예술창작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아카이빙, 공동브랜드 제작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있음. 또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마을예술창작소 운영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표 5-68〉 마을예술창작소 내실화 추진계획

계획	내용
보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율형 6개소(~2015년), 민관협력형 5개소(~2016년) 지원 운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후 우수 마을예술창작소 연장 지원(주민자율형 최대 2년, 민관협력형 최대 3년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카이빙, 공동브랜드 제작, 홍보 등 아마추어 예술가들 성장을 위한 전시·공연 공간 지원 공공아트숍을 개설하여 우수 전시작품 판매 및 수공예품/회화 교육 추진
운영모델 발굴·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 및 컨설팅,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마을예술창작소 역량 강화

사업

마을미디어 교육 및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마을미디어센터를 연간 1개소씩 지정하여 운영해 왔으며, 마을미디어 교육 2,206명, 마을미디어 활동지원 51개 단체 등을 추진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인구 대비 미디어센터(민간포함)는 150만명 당 1개소로 전국 평균 65만명 당 1개소의 2배를 증가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향후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서울마을미디어센터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통해 주민간 소통문화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됨.

〈표 5-69〉 마을미디어 교육 및 활동지원 추진계획

사업	내용					
마을미디어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디어 활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미디어 교육 지속적 실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원	700명	750명	900명	1,000명	1,050명
마을미디어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신문, 마을잡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단체	25개	30개	40개	45개	50개

사업	시민들의 생활문화제작 프로그램 지원 및 기반을 조성한다.
----	---------------------------------

현재 성북예술창작센터 옥상공방 커뮤니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창작공방 운영 등 서울시 창작 공간 등에서 시민 생활문화제작 프로그램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생활권내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생활권 내 시민 생활문화제작 프로그램 지원 및 DIY 창작공간(마켓) 조성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층이 문화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적 문화생태계를 형성 하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함.

〈표 5-70〉 시민 생활문화제작 프로그램 사업 추진계획

사업	내용
시민 생활문화제작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공간(신당창작아카데미, 성북예술창작센터 등)에서 시민 생활문화제작 (DIY) 프로그램 운영 마을예술창작소 신규 선정 시 DIY 프로그램 지원단체 지정공모지원을 통한 시민 생활문화제작 분위기 조성 (’ 15년도 5개소 예정) 공예교육 전문업체를 선정(위탁)하여 생활공예(DIY)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주민센터 등 유휴공간 활용, 동네로 찾아가는 DIY 프로그램 운영, 희망기관 강사 파견 등)
시민 생활문화제작 프로그램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도 개관 예정인 서울공예문화박물관 내에 가족들과 함께 직접 공예품을 만들며 체험해볼 수 있는 공방 프로그램 등 운영 예정
DIY 창작공간(마켓)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서울호수공원과 지역예술교육센터(공원 내 부지 조성 추진중, 15.8월 개관 예정) 연계, 경춘선·경의선 폐선부지 공원 활용(15.5월 개장 예정, 공원조성과 협조)

사업	생활체육 활성화로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를 만든다.
----	---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체육활동 미참여율이 50%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 생활체육시설 대비 서울 체육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은 시민들의 편리한 체육활동 참여를 저해하고 있어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스포츠 문화의 형성이 필요함.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를 만들기 위해 ‘내 집 앞 5분거리’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스포츠 문화사업을 지원함. 또한 단순한 체육경기 관람 문화에서 참여, 응원, 기부 문화로 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며, 시민이 함께하는 ‘서울시민 주말리그’ 를 운영할 것을 제안함.

스포츠가 문화가 되는 ‘서울시민 주말리그’

- 추진개요: 생활체육 주말리그전과 함께 스포츠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서울시민의 스포츠 문화 만들기
- 운영종목: 6개 종목, 연차별 확대 추진
- 참여대상: 서울시민 누구나(개인, 가족, 동호회 단위 참여 가능)
- 장 소: 서울시 일원(공공시설 경기장 및 체육관 등)
- 운영방법
 - 주말리그 운영: 종목별 특성에 따라 동호인, 가족, 직장, 학교리그 운영
 - 스포츠투어: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스포츠 현장 체험
 - 강습회, 클리닉 운영(재능기부): 연고구단, 동호인과 함께하는 스포츠 교실
 - 기부문화 전개·확산, 스포츠 용품 교환 및 기증

3) 경제 분야 과제 추진계획

‘창조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4개 전략, 9개 과제를 추진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사업을 설정하였음.

〈표 5-71〉 경제 분야 과제 추진 계획

전략 01		창조경제 중심도시 조성	
과 제		사 업	
1	창조산업을 육성한다.	홍릉을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핵심거점으로 조성한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를 디자인, 창조산업의 발신지로 육성한다.	
		신촌, 홍대, 합정을 창조밸리 창업생태계로 구축한다.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를 조성한다.	
		상암 DMC·수색 서북권을 창조경제거점으로 육성한다.	
2	창조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신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소셜 이노베이터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산업 필수인력 양성소와 기술교육원을 운영한다.	

전략 0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과 제		사 업	
3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세대별 적합업종, 민간진입이 용이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서울시 취약계층 종사자의 보편적 노동권익 향상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4	청년 일자리를 활성화한다.	청년의 자기실현을 위한 창업기반을 조성한다.	
		청년의무고용제를 확대 시행하고 구인, 구직 매칭을 강화한다.	
		청년층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전략 03

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

과 제		사 업
5	외국인이 살기좋은 서울을 만든다.	교육, 주거, 의료, 투자 등 외국인이 살기 편한 글로벌 생활환경을 구축한다.
		내·외국인간 상호 다양성을 인정하며 세계인과 함께 어울리는 다문화사회를 조성한다.
6	서울형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명소화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
		MICE 중심도시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한다.
		K-pop, K-drama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여 한류관광을 활성화한다.

전략 04

사회적경제 확대와 산업 다양화

과 제		사 업
7	사회적경제를 확대한다.	자치구별로 사회적경제 특구를 육성한다.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한다.
		지역단위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8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	마을 공동체와 연계한 일상생활 속 공유문화를 확산한다.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성장가능성 있는 공유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9	다양한 산업기반을 강화한다.	도심형 제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지역별 특화상권에 대한 특구 지정으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중소기업의 체계적, 전략적 육성 지원을 확대한다.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
		도시농업 공간을 확대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전략 01

창조경제 중심도시 조성

과제 1

창조산업을 육성한다.



IT·융복합 기반 위에서 콘텐츠, 앱, 패션, 디자인 산업 등 창조산업을 육성한다.

사업

홍릉을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핵심거점으로 조성한다.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2026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친화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음.

홍릉 지역을 인구·사회적 변화수요를 반영한 미래사회 선제적 대응 핵심거점으로 조성하며,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구축·연계·확산을 통해 클러스터를 확대·발전시킬 것을 제안함. 또한 대학·연구소·기업 등 지역사회 역량을 활용하여 산·학·연·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동북권 균형발전을 위해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함.

〈표 5-72〉 홍릉일대 현황



- 반경 8km 대학 24개, 대학창업보육센터 11개 밀집
- 홍릉월곡벤처기업촉진지구 내 첨단기업 147개 집적
- KIST, 고대·경희대 병원, 약령시 등 연구임상 역량 풍부

홍릉지역은 R&D가 집적된 지역으로서 산업화 잠재력이 풍부하고 지난 50여 년 간 서울의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으며 수도권 유일의 연구단지로서 역사성 보존이 필요한 곳임.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핵심거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능은 R&D → 기술이전 · 창업 · 기업육성 → 산업육성 생태계 조성 · 연계 · 확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표 5-73〉 홍콩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핵심거점 기능

종합지원	고령친화산업 육성 종합계획, 인력양성·네트워킹, 국제협력, 해외진출 등
R&D 연구	원천기술 사업화, 특허·기술거래, 연구공간·기술·인력·장비 공동이용 협력
기업육성	기술집약형 창업 촉진, 기술이전, 교육, 사후관리, 자금(융자+투자)지원 창업공간 제공
수요확대	체험전시장 구축, 판로개척, 내수확대, 홍보 및 인식 개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디자인·창조산업의 발산지’를 모토로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2014년 3월 21일 개관한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랜드마크 건축물임. 뿐만 아니라 DDP 주변에는 도심 산업과 상권이 집적되어 있음.

동대문 창조경제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핵심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특화산업·상권과 연계한 동반성장과 글로벌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DDP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산업·상권·문화예술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창조경제클러스터 구축 및 육성효과를 전파하는 한편,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표 5-74〉 동대문 창조경제클러스터 육성 추진계획

DDP중심의 지역 비즈니스(특화산업·상권) 지원 기능 강화

- DDP 내 연계·협력을 위한 온·오프라인 공간 구축
- 특화산업·상권 DDP 등 주변 연계 관광루트 개발
- 마케팅, 홍보, 인력양성, 런칭패드 등 비즈니스 지원체계 구축

서울형 제조업 육성 및 산업협력기반 강화 ⇨ 제조업 업그레이드

- 제조업 연관산업, 서비스업, 문화·관광 연계 협력기반 마련
- 제품, 서비스, 기술, 학문, 산업 등 다양한 융합을 통한 글로벌 브랜드 창출

- 종로 주얼리: 과거(종묘)와 현재(주얼리)가 공존하는 문화관광 메카 육성
- 중구 인쇄: R&D 지원으로 21C 첨단창조서비스산업 육성
- 을지로 조명·가구: 자연발생 형성지 보호로 도심 제조업 기능 회복 및 활성화
- 제기동 약령시: 전통한의학과 바이오산업 융복합을 통한 한방산업 활성화
- 동대문 패션의류: DDP 중심의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



동대문 창조경제클러스터 활성화

- 지역단위의 특화산업·상권 육성을 위한 특구(산업·유통·고용) 지정
- 다양한 산업·상권간 융합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 핵심거점 육성·강화를 통한 산업파급효과 전파 및 서울경제 활성화
- DDP 및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한 산업환경 조성 연구용역

사업

신촌, 홍대, 합정을 창조밸리 창업생태계로 구축한다.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합정역 사이에 위치한 신촌, 홍대, 합정 지역은 IT 기반 중심의 다양한 스타트업·청년창업 기업이 밀집해있는 곳으로, 업종은 IT에서 제조업, 여행, 교육, 사회적기업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

〈표 5-75〉 홍합밸리 현황



자생적 기업협의체인 “홍합밸리” 및 지역 인프라와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자생적 기업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 환경을 보장하여 신·홍·합을 창업생태계로 구축하기를 제안함.

연차별 체계적 전방위 지원체계(공간, 인력, 자금, 콘텐츠) 구축 및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 및 프로그램 연계·공유를 토대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다양한 초기 창업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위한 상생·교류 네트워킹 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제안함.

〈표 5-76〉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추진계획

신·홍·합밸리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 2015년 우선사업 추진(예산 10억) + 지역자원실태조사, 종합발전계획 마련

市 지원센터 활용, 신·홍·합밸리 창업지원체계 구축 ⇨ 확대·발전

- 디자인·출판 종합지원센터 확대·개선 : 기업교류·소통공간 구축, 협력사업 추진
- 신·홍·합밸리 초기창업기업 자생적 산업생태계 구축 프로그램 개발·추진
- 서울창업허브('16년 개관), 은평 서울혁신센터 연계·협력사업 발굴

초기 스타트업·창업기업 공간 구축·운영

- SH공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기업업무공간 제공

스타트업·초기창업자 멘토링시스템 구축

- 선도기업, 대학교수, 투자자 등 멘토단 구성, 매칭지원 활성화

서울시는 ICT(정보통신기술)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간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을 느끼고, 소통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글로벌하고 창의적인 IT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하여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는 개발자, 스타트업,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창업 아이디어를 키우는 교육을 제공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오픈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개포를 중심으로 한 창업 생태계 지원을 통해 테헤란 밸리 IT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제 진흥 2030 계획과 연계한 강남권 핵심 섹터로 조성할 계획임.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는 해외 우수 인력이 들어오고, 교류하는 글로벌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24시간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고, 놀고, 즐기고, 협업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임.

- 위치: 강남구 개포동 개포동길 416 (16,077.9㎡)
- 건물현황: 신관, 본관, 체육관, 수영장 (연면적 6,502㎡)
- 공간구성

테마	1. 글로벌	2. 교육	3. 만들어가는 곳 (개발자, 공방)	4. ICT융합	부대공간
개념	글로벌한 인재들이 창의적 실험을 할 수 있는 곳	창조를 디자인하는 교육의 장	놀며, 즐기고, 협업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곳	IT를 중심으로 인문, 예술, 문화가 융합되어 창조되는 공간	문화+여가+일
공간	글로벌 오픈센터, 코워킹센터, 글로벌 지원센터	교육장, ICT도서관	IT공방, 테크샵, 오픈센터, 코워킹 룸, 커뮤니티룸	융합 관련 민간, 대학 연구소, 융합 전문가 공간, 융합센터	체육관(다목적 홀), 운동장, 카페테리아, 세미나실, 휴게공간, 체력단련실 등

※ 전문가 공청회, 민간 자문, 자문위원회(소그룹 회의 등 총 4회) 의견을 수렴하여 공간개념 정립

- 운영방안: 서울시 공간 조성 ⇨ 민간의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운영



사업

상암 DMC · 서북권을 창조경제거점으로 육성한다.

서북권은 경제활동 기반 부족으로 도심과 강남으로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특화·발전시켜 서북권 전체 경제·문화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함.

향후 (구)질병관리본부 이전부지를 혁신 선도지역을 표방하는 지역마케팅으로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고, 서울혁신파크 조성을 통해 인구유입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또한 신촌 일대 통합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지역을 특화시키고, (구)질병관리본부의 장단기 활용방안 및 사회혁신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상암·수색권역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그림 5-13〉 DMC(디지털미디어시티) 전경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집적지로서 DMC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DMC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위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IT-Complex 건립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를 기대함.

〈표 5-77〉 DMC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 생태계 구현 추진계획

사업	내용
DMC 기반조성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DMC 역세권 인접 상업용지의 복합개발로 대형 판매시설, 전시장 등 유치 DMC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교육기관, 콘텐츠 기업 등 유치
산업다양성 확보 및 중소기업 입주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콘텐츠, IT 관련 중소기업, SOHO기업 등의 DMC 유치로 문화콘텐츠 산업 다양성 확보 출판산업, 모바일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업체의 문화콘텐츠 생산기지로 DMC 조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입주공간 제공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동반성장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DMC CoNet의 활성화를 통한 입주기업 간 교류 지원 콘텐츠 기업과 IT, SW 등 원천기술기업들의 정기포럼, 연구활동을 통한 R&D 네트워크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유도 등을 통한 상생 협력체계 구축 입주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한 DMC 컬처오픈 개최
입주지원 지원 프로그램 및 DMC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기업, 1인기업 등 입주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DMC 사원 통합채용 및 원스톱 일자리지원시스템 구축 지원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보육설치 및 운영
IT-Complex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DMC 단지내 우수한 IT역량과 기반을 브랜드화하고, 다양한 디지털 문화콘텐츠 인프라 조성

과제 2

창조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창조적 인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구조를 고도화한다.

사업

신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크리에이티브랩(SCL), 창조 아카데미 운영, 캠퍼스 CEO 육성, 모바일산업 선도 인력 양성, 기술지주회사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하여 창조인재를 양성하고 있음.

〈표 5-78〉 창조인재 양성 세부 추진사업 현황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서울크리에이티브랩(SCL)	아이디어 구체화 교육 및 핵심영역의 융합연구 병행
창조 아카데미 운영	서울소재 대학을 통한 산업별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캠퍼스 CEO 육성	대학 내 예비창업자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인력 양성
모바일산업 선도 인력 양성	모바일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애로기술 연구
기술지주회사 사업화 지원	자회사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1차년도(2012년 7월 ~ 2013년 6월) 4,631명, 2차년도(2013년 7월 ~ 2014년 6월) 6,215명으로 총 10,846명의 인재를 양성하여 당초 1만명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음.

이에 그치지 않고 창조적 인재들이 역량을 극대화하고 취업 및 창업능력도 제고하여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신규 인력양성사업(가칭 장영실 프로젝트)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이를 통해 창조인재양성 사업의 질과 양을 동시에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표 5-79〉 신규 인재양성 사업 추진계획

사업	내용
신규 인재양성 사업 (장영실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소재 초·중·고교생 및 교사 대상 창의역량 강화를 위한 ‘차세대 프론티어 양성’ 사업 추진 대학생 및 시민대상 창의융합교육[기본(5주)+심화(10주)교육 및 실행 단계지원]을 추진하는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 추진 인구고령화, 다문화 사회 등 인구·사회·경제·문화 분야의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사회변화 대응형 인재양성’ 사업 추진

사업

소셜 이노베이터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소셜이노베이터 양성사업(사회적경제 아카데미)은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역량모델(기업가, 실무자, 전문가 등)을 기초로 한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음.

서울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사명, 혁신, 협동, 소통’이라는 사회적경제인들의 공통역량을 기를 수 있는 참여형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일반시민과정, 사회적기업가과정, 실무자과정, 전문가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음.

〈표 5-80〉 2014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업

모든 교육정보를 하나로 묶는 웹사이트(www.sehub.net)운영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역할에 맞춘 교육과정	사회적기업가·실무자·행정가·전문가·코디네이터 대상 교육
사회적경제 인재상과 목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교육과정	
일반시민을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사회적경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원 교육과정	

사업

서울산업 필수인력 양성소와 기술교육원을 운영한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비진학청소년, 실업자 등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에게 무료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서울산업경제 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2011년~2013년 직업교육을 약 16천명이 수료하였으며, 취업률은 2012년 86.2%, 자격취득률은 동년 73%에 달하고 있음.

향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을 추진하여 비진학·미취업 청년들이 대학을 가지 않고도 사회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산업구조에 맞도록 학교별 특성화를 진행하고, 산업체 맞춤형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임.

〈표 5-81〉 서울시 기술교육원 현황

기술교육원	구분	특화 선도 산업 현황
중부	도심·서북권	디자인·패션, 인쇄출판, 귀금속, 관광·MICE, 디지털콘텐츠
북부	동북권	IT융합, 바이오메디컬, 의류봉제, 녹색산업
남부	서남권	IT융합, 바이오메디컬, 금융, 녹색산업, 기계
동부	동남권	비즈니스서비스, 디자인·패션

‘1교수 10기업 전담제’ 실시로 기업과 기술교육원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취업률을 제고하는 한편, 일반계고 비진학생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교육원 일반과정 선발 기준에 고졸 비진학 청년층 우대제도를 시행할 계획임.

산업체 수요 결과를 반영한 학과 및 커리큘럼을 개편하여 민간 등 기타훈련기관에서 훈련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을 재조정하고, 4개 기술교육원에 청소년 직업관 형성 지원을 위한 커리어 코칭 전문가를 추가 배치할 것으로 기대됨.

전략 0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과제 3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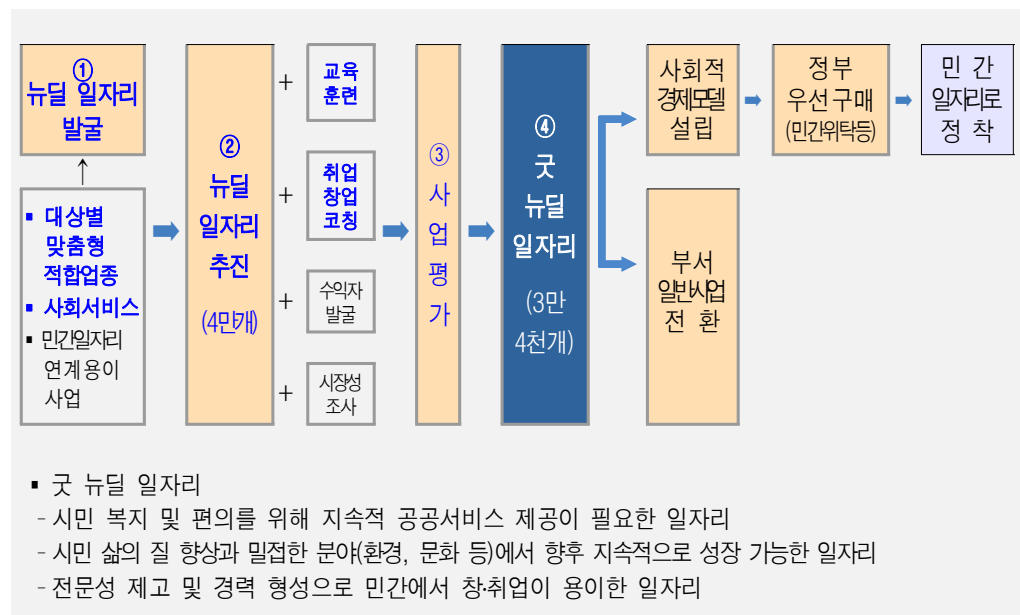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사업

세대별 적합업종, 민간진입이 용이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굿 뉴딜 일자리 추진을 통해 대상별(청년·어르신·여성 등)적합업종 일자리를 발굴·확산시키는 한편, 참여자의 직업능력 배양 및 취·창업 코칭 지원 등으로 민간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그림 5-14〉 굿 뉴딜 일자리 추진계획



청년,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대별 맞춤형 적합업종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발굴단(가칭) 운영으로 외국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연 25개 이상을 발굴할 것을 제안함.

직업능력 배양 및 경력 형성으로 사회적기업, NPO, 정보화 관련 기업 등 민간 일자리 진입이 용이한 일자리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뉴딜매니저 활용으로 진로상담 및 설계, 직업능력 배양 교육, 취·창업 코칭 등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 1년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안내, 취·창업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후 지속적 공공서비스 제공 필요성, 민간일자리 연계 실적, 민간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로 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굿 뉴딜 일자리'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사업

서울시 취약계층 종사자의 보편적 노동권의 향상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지역의 약 400만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고용형태)는 129만명, 저임금 근로자(소득 구조)는 106만명에 달하며,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로 노동시장의 사회적 양극화 및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함.

취약계층 종사자의 보편적 노동권의 향상 및 보호를 위하여 노동정책 기본방향 수립, 노사민정 및 시민사회단체 협치, 노동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실행기구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노동과 같이 걷는 서울, 나무그늘 프로젝트(Tree Shade Project)”

- 서울지역 취약계층 종사자의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하나하나 찾아가며 노동권의 향상 및 보호 사업 진행
- 노동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각 주체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치 체계 구현

※ 나무그늘 프로그램: 미국 환경단체의 녹지 확대 프로젝트

- 인공위성 사진으로 열 배출 밀집지역을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녹지를 조성, 열섬현상 감소 및 냉방전력수요 저감 성과 창출

〈표 5-82〉 취약계층 종사자의 노동권의 향상 및 보호사업 추진계획

노동정책 기본방향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그늘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 수립과 기반 조성 - 서울시 노동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노동취약계층 보호,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발굴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노사민정 및 시민사회단체 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역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촉진 컨설팅 추진 및 사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대상 서울시 노사정 모델협의회 운영 - 시 투자출연기관 노사현안의 원만한 합의·조정 및 노사분규 발생 예방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 패러다임 구축 ■ 노동정책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운영 -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자문역할 수행 - 노동 분야의 전문가, 노동·시민단체, 시의원 등 다양한 주체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협치 체계 구축
노동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실행기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정책 기본계획 마련 후 노사시민단체 등과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립된 나무그늘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실행기구로서의 기능 수행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상담체계 구축, 노동시장 실태조사 등을 통한 노동정책 개발 등 사전예방적 정책 활동 수행

과제 4

청년일 자리를 활성화한다.



청년의 일과 삶의 자립을 위한 청년일 자리를 활성화하며 청년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한다.

사업

청년의 자기실현을 위한 창업기반을 조성한다.

산업구조와 경제환경 변화로 청년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취업난의 대안 및 창조 경제 등으로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30대 청년층 대상의 우수 창업 아이템 보유자를 선발·지원하여 성공한 창업가를 양성함으로써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의 자기실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는 청년창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해왔으며, 특히 청년창업 ‘챌린지 100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연 250팀을 지원하고 있음.

‘챌린지 1000 프로젝트’는 생계형 위주에서 기회추구형 업종 선발로 전환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창업가를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공간(독립 입주공간, 공용 창업공간) 및 자금, 멘토링 등 지원, 경진대회형 오픈심사 방식을 통해 역량 있는 창업가를 선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표 5-83〉 청년창업기반 조성 추진계획

창업공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사무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여, 기업별로 공간 배분, 사무용 집기 무상 지원 ■ 지원시설 : 회의실, 공용장비실, 제품촬영실, 휴게실, 창고, Biz-test room 등
모니터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Mentoring, Teaching, Coaching, Consulting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창업멘토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CEO에 대한 상시 사업지원 및 초기 문제점 조기 발견을 통한 창업 리스크 관리 실시 ■ 창업티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CEO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집체교육 및 참여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창업기반 마련 및 창업 생존률 제고 ■ 창업코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아이템을 유사·동일한 아이템별로 그룹핑하여 전문가를 통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창업 초기 위험 최소화 및 체계적인 사업 성공 지도 ■ 창업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진행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1:1 상담 진행
마케팅 및 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각종 전시회 참가, 특별 판매전 지원, 나눔행사전 참여 및 지원, 온·오프라인 전시 및 판매 지원 ■ 입주업체 홍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사례집 제작, 언론매체를 통한 아이템 홍보, 서울시 매체를 통한 홍보 ■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바이어 발굴
창업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에 의한 창업활동비 지원 ■ 융자알선 등 창업자금 지원

사업	청년의무고용제를 확대 시행하고 구인, 구직 매칭을 강화한다.
----	-----------------------------------

공공부문의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매년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효성 확보방안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공부문 청년 의무고용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출연기관의 청년의무고용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표 5-84〉 공공부문 청년의무고용제 추진계획

- 의무고용비율 단계적 확대 : '13년(2.5%)→ '14년(2.5%)→ '15년(3.0%)
- 청년의 범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특별법보다 확대함으로써 실효성 제고
- 대상기관: 투자기관 5개, 출연기관 7개
 - 투자기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 출연기관: 서울의료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디자인재단, 복지재단, 세종문화회관(사무국), 문화재단
- ※ 서울연구원, 시립교향악단, 자원봉사센터, 장학재단 등은 기관의 특수성 고려 적용 제외
- 이행 확보 수단: 대표평가·경영평가 반영

사업	청년층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	------------------------------

서울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적절한 임금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자아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등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노동법 교육 확대, 권리보호센터 설치 운영(4개소), 캠페인 전개, 무료건강검진 실시 등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청년층의 채무조정을 위한 이자지원, 생활안전망, 주거, 건강 등 일자리를 넘어서 청년층의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표 5-85〉 청년층 노동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추진계획

사업	내용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및 유급휴일 등이 명시된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여 임금체불 및 부당한 대우로부터 청년 보호
노동법 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와 청년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의 지속적 실시 ▪ 서울소재 대학교에 노동관계법 교과목 설치와 취업 특강시 교육 유도, 청소년 대상 노동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
알바신고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바신고센터를 서대문, 구로, 성동, 노원에 설치하여 부당한 처우로 인한 피해 해결
무료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생 밀집지역에 이동진료실 운영, 무료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캠페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행복한 첫 일터 만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

과제 5

외국인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든다.



글로벌 인프라 구축 및 생활환경 조성으로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사업

교육, 주거, 의료, 투자 등 외국인이 살기 편한 글로벌 생활환경을 구축한다.

외국인 주민이 약 40만에 달하며,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원시설(17개)은 시행 초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정책대상에 대한 서비스 밀착도와 지원시설 간 연계 기능이 부족하며, 非OECD국가에 대한 교육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본격적으로 도래한 다문화시대에 대응하고 글로벌 도시에 걸맞게 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종합지원시설인 ‘글로벌센터 빌딩’을 건립하는 등 외국인이 살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향후에도 외국인 주민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외국인 주민의 창업지원으로 내수경제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표 5-86〉 글로벌 환경 구축 추진계획

제 3글로벌센터(가칭: 동대문글로벌센터) 설치

- 설치위치: 중국 광희동 1가(몽골타운 인근) 등 동대문 주변거리
- 추진방법: 민간건물 임대 후 시설 개보수
- 규 모: 230㎡ 내외(약 70평)/ 운영인력 1~2명
- 운영방법: 몽골, 중앙 아시아인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제공
 - 상담지원실, 비즈니스 지원시설(사무실·회의실 등), 커뮤니티 공간 등
- 소요예산: 400백만원(예정)
 - 인건비 60, 사업비 50, 임대료 150, 시설비 140
- 추진사항: 건립방향 수립 및 2015년 예산편성 준비

다문화 창업 지원

- 창업 인큐베이션 오피스 운영
 - 대 상: 외국인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
 - 제 공: 사무실 공간(서울글로벌센터, 비즈니스센터 등), 상담·코칭, 세미나 등
- 비즈니스 협업 라운지 운영
 - 대 상: 내·외국인 기업인 및 창업준비자 등
 - 운 영: 연중 상시개방(주중 오전9시 ~ 오후8시), 회원제 운영(최대 100명)
- 비즈니스 현장 클리닉 운영
 - 대 상: 중소기업 외국인주민 창업기업 25개 내외
 - 운 영: 상담 및 전문 컨설턴트(무역, 세무, 마케팅 등) 현장 파견
- 외국인 창업대전 개최
 - 대 상: 창업희망 외국인주민
 - 운 영: 외국인 창업아이디어 오디션 개최, 입상자 사후관리(오피스 입주 등)

사업

내·외국인간 상호 다양성을 인정하며 세계인과 함께 어울리는 다문화사회를 조성한다.

지난 10년간 내국인 수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외국인 거주자와 국제결혼 등의 증가로 외국인 수가 약 5배 증가하여 다문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사회구성원이 다양해졌음. 특히 다문화가정은 2020년에 10가구 중 1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다문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인권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다양성이 존중되고 외국인이 참여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함.

〈표 5-87〉 다문화사회 조성 사업 추진계획(안)

사업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자립 강화 : 생활지도사(19명), 멘토링 실시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확대 지원 : 태국·러시아어 추가 제공
결혼이민여성 경제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창업 특화사업 추진 다문화가족 밀집 거주지역 내 취·창업 중점기관 운영 (서남권 1개소)
사회통합보육 인큐베이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보육 및 교육, 지역보육기관 연계 및 가족 지원, 지역사회와 일촌맺기 멘토링, 언어 영재 및 발달교실 운영 등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여성과 동반자녀 긴급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등 인권 보호 의식주 생활서비스, 치료프로그램, 의료·법률지원 등(한울타리 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자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서비스 확대: 2013년 5개 시설 → 2014년 7개 시설(쉼터4, 그룹홈2, 자활1) 자활교육 후 취창업 퇴소세대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5백만원)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 교육 실시
다문화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주민 대상 창업·세무·법률 등 교육프로그램 창업 인큐베이션 오피스 운영 비즈니스 협업 라운지 운영 비즈니스 현장 클리닉 운영 외국인 창업대전 개최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운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 기준 24개소의 다문화 통합어린이집을 2020년 57개로 확대

과제 6

서울형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한류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

사업

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명소화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

외래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광상품 고품격화 등을 통한 방문객 만족도 향상이 필요함.

국가별 관광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하여 서울의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활용한 거점 및 테마별 스토리텔링 명소화 등 다양한 고품격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것을 제안함.

〈표 5-88〉 관광콘텐츠 개발 추진계획

사업	내용
서울이야기 스토리텔링 명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 테마별 스토리 발굴 및 스토리텔링 명소화(5개소→2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거점과 전통, 대학, 한류 등 테마를 중심으로 관련 이야기를 발굴, 관광수요와 여행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연차적 콘텐츠 개발 ▪ 독특한 골목·마을문화 활용, 커뮤니티 관광자원 개발(7개소→3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특한 마을·골목 등 이야기를 발굴하여 체험형 동네관광상품으로 육성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등과 협업체계 구축,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성 확보 ▪ 시민참여를 통한 스토리 발굴, 공유, 확산 및 관광자원화
관광코스 개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핑/랜드마크(중국), 이색문화/뷰티(일본), 한류체험(동남아), 전통문화(구미주) 등 국가별 관광객의 여행성향을 고려한 추천코스 개발 ▪ 언어권별 여행매체, 여행작가 등과 협력, 관광객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코스 개발 ▪ 매월 테마 선정 및 관련 신규관광자원(콘텐츠) 발굴, DB화 ▪ 발굴 콘텐츠를 여행사에 제공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 유도
우수관광상품 인증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준 마련 및 고품격 관광상품 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성 있는 기준설정 및 인증 시행으로 상품의 질 개선 촉진 ▪ 숙박, 음식, 쇼핑, 가이드 등 분야별 관광상품 고품격화 유도정책 추진 ▪ 배리어프리(Barrier-Free) 관광상품 인증제 도입 및 상품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유형별 인증기준 및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여행사)

사업

MICE 중심도시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한다.

MICE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창출효과가 뛰어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일반관광객 지출의 1.8배 소비, IT산업의 5배 고용창출, 외화가득률 90%의 효과를 가짐. 그간 서울은 지속적인 MICE 육성을 통해 ‘매력적 MICE도시’로 부상하였으며, 4년 연속 세계 국제회의 개최도시 5위내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5위의 컨벤션 도시에서 2018년 세계 3위까지 도약하기 위해서는 MICE 중심도시의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표 5-89〉 MICE 중심도시 기반조성 추진계획

사업	내용						
MICE 유치 시스템 운영	MICE 신규 발굴·지원을 통한 유치 확대						
	<div>MICE 유형별 유치 전략 다각화</div> <table> <tr> <td>국제회의</td><td>축적된 국제 DB 활용, 체계적으로 유치</td></tr> <tr> <td>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td><td>글로벌 기업 및 해외 현지여행사 활용 마케팅 강화</td></tr> <tr> <td>해외전시회</td><td>경제적 파급효과 고려 유치 지원제도 신설</td></tr> </table>	국제회의	축적된 국제 DB 활용, 체계적으로 유치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글로벌 기업 및 해외 현지여행사 활용 마케팅 강화	해외전시회	경제적 파급효과 고려 유치 지원제도 신설
	국제회의	축적된 국제 DB 활용, 체계적으로 유치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글로벌 기업 및 해외 현지여행사 활용 마케팅 강화					
	해외전시회	경제적 파급효과 고려 유치 지원제도 신설					
	<div>국제회의 및 기업회의 단계별 지원금 지원</div> <div>MICE 행사 서울 유치 희망 학회·협회·단체 대상 ‘유치 클리닉 서비스’ 지원</div>						
	MICE 해외유치마케팅 강화						
<div>서울의 매력 및 MICE 지원정책 해외 홍보 확대</div> <div>해외현지여행사 등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으로 신규 유치회의 발굴</div>							
MICE 기반조성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div>MICE 지원인력(서울 컨벤션 서포터즈, 1천5백명 등록·활동중) 인증제 도입</div> <div>MICE 교육-취업 간 연계를 위한 ‘실무 중심 전문인력양성과정’ 신설</div> <div>서울시 고용지원제도(중소기업 청년인턴십)와 연계, 전문인력 고용촉진 지원</div>						
	MICE 참가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div>서울만의 역사·문화, 자연환경,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서울 유니크 메뉴’로 공모·선정</div> <div>MICE 맞춤형 특화관광프로그램 개발·제공</div> <div>프리미엄 해설전문가 제공</div>						
	MICE 유치 민·관 협력 체계 강화						
	<div>서울 MICE 자문위원회 구성·운영</div> <div>서울 MICE 얼라이언스 확대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div>						
	국내 MICE의 국제화 지원						
	<div>‘서울’ 하면 떠오르는 ‘서울 대표 MICE’ 개발·지원</div> <div>서울 개최 국내 컨벤션 중 성장가능성 큰 행사 집중 지원</div>						

K-pop과 드라마 같은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3년 천만 명을 돌파하였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속적인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및 관광 정책의 질적 내실화를 위하여 한류콘텐츠·고부가가치 테마 연계 관광 상품개발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왔음.

최근 5년간 국내외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었던 서울 시내 270여 곳을 자체 조사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관광객 접근성이 뛰어나고 콘텐츠가 매력적인 곳 위주로 추린 후, 서울에 살고 있는 내·외국인 한류팬 30명으로 구성된 ‘한류관광자원발굴단’이 추천한 명소와 코스를 반영하여 한류콘텐츠를 연계한 한류관광명소(120개) 및 권역별 코스(7개)를 개발하였음. 그 외에도 한류관광 온·오프라인 거점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5개 언어로 한류관광 테마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고 VisitSeoul과 연계하여 한류관광 웹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음.



홍대놀이터 ‘신사의 품격’ 포토존



N서울타워 포토존

향후에도 민간협력을 통한 체험형 명소 및 코스 개발과 한류관광 정보 제공 강화 등을 통하여 K-pop, K-drama 등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한류관광을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됨.

〈표 5-90〉 한류관광 활성화 추진계획

민간협력을 통한 체험형 명소 및 코스 개발(120곳 명소, 15개 코스)

- K-Pop, K-Drama 및 한식·패션 등 한류체험명소 발굴·코스 개발
- 민간이 신청하고 서울시가 선정하는 ‘한류명소 자기추천제’ 운영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한류관광 정보 제공 강화

- 한류관광 웹페이지를 통해 다국어 한류관광 정보 제공
- QR 코드, NFC 등을 통한 주변 관광명소 상세정보 소개

전략 04

사회적경제 확대와 산업 다양화

과제 7

사회적경제를 확대한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협동조합을 지원한다.

사업

자치구별로 사회적경제 특구를 육성한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사회혁신이 지역 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사회적경제 특구를 육성하여 다양한 지역 거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함.

현재 성북, 금천 등 13개소를 선정하여 기초단위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공간지원 사업을 성북, 영등포, 관악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음.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단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단위의 부문별, 주체별 협업체계 구축으로 유기적 연계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됨.

〈표 5-91〉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추진계획

자치구별 ‘사회적경제특구’ 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추진역량이 우수한 특정지역(생활권)을 특구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 ▪ 예비특구 지정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 후, 사회적경제 특구 본격 운영 	
1단계	사회적경제 특구 지정을 위한 기준 및 근거 마련
	기초조사 및 지정기준 마련(용역 및 자문회의),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개정
2단계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지정: 시범사업 추진
	지역자원 수요조사 및 참여자원 발굴(지역특화사업 연계), 지역 아젠다 설정 등
3단계	사회적경제 특구 지정 운영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형성,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아젠다 해결 프로젝트 추진

〈사회적경제 지역허브〉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휴공간을 확보한 자치구에 리모델링 사업비 등 공사비 지원 ▪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동협력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협력 공간 조성 - 사회적경제 네트워킹, 인큐베이팅, 공동작업장, 교육장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 	

사업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한다.

그간 서울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5대 전략분야 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해 왔음(사업 당 100백만원 이내, 1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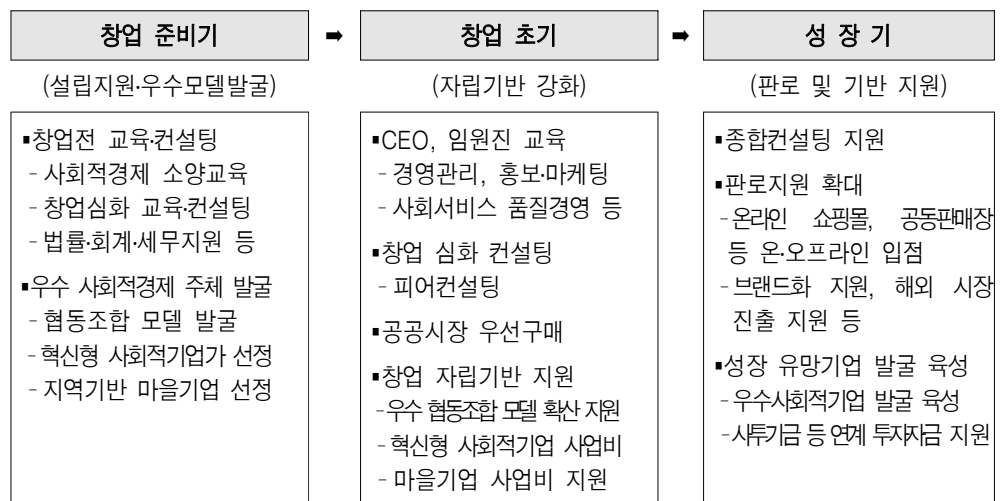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단위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함.

〈표 5-92〉 혁신형 생활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추진계획

사업	내용
혁신형 사회적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예비 창업자를 발굴, 사회적 기업가로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업개발비, 일자리 창출사업비 지원 등 ■ 지역단위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형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업 사업비 지급: 1년간 100백만원 이내 사업비 지원 ■ 혁신형 생활서비스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경진대회, 창업 컨설팅
혁신형 생활서비스 협동조합 모델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형 생활서비스 적합 협동조합 모델개발 및 매뉴얼 보급을 통한 협동조합 확산 주력 ■ 부문별 연합회 및 협의회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연합회 사업비 지급: 1년간 30백만원 이내 사업비 지원
생활서비스 제공형 마을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지정 마을기업 중 지역기반의 생활서비스 제공형 마을기업 육성 추진 ■ 선정기업 국비 매칭 사업비 지급: 8천만원(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활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우수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표 5-93〉 생활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계획



사업

지역단위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서울시 협동조합은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출자금 1천만원 이하(70%), 조합원 10인 이하(74%)의 소규모 협동조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3차 산업 위주의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서울시는 협동조합 안내 및 홍보, 상담센터 운영 등 협동조합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립 지원과 함께 경영 및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단위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민간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임.

〈표 5-94〉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추진계획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 협동조합 상담의 전문성 강화
 - 전화, 방문 및 온라인 상담 지원
 - 상담사례 연구, 상담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상담지원 강화
- 설립필수 및 분야별 전문교육 운영, 설립컨설팅, 운영멘토링 등
 - 센터내 교육, 찾아가는 방문 교육, 온라인 교육 등 접근경로 다양화
 - 비즈니스 필수 및 인문심화교육, 운영이슈 및 분야별 전문교육 추진
 - 협동조합 설립절차 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원
 - 협동조합 설립 후 운영멘토링 및 우수사례 전략적 지원
 -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등록지원제(설립의 쉼 과정 패키지형 지원)
- 협동조합 지원역량 강화
 - 강사, 컨설턴트 및 자치구 담당 공무원 워크숍
 - 지역 및 업종 경청 간담회, 지원기관 네트워크, 민관 합동 전략워크숍 등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지역기반 생활밀착형 우수 모델 발굴 및 운영내실화 지원
 - 우수모델 육성 및 판로지원, 지역별 클러스터 구축,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구축
- 기초단위 협동조합 상담 및 교육활동 지원
 -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영지원 워크숍 및 우수사례 탐방 등

골목경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업사업 지원

- 지역 및 업종별 협동조합 연합회 및 협의회 지원역량 강화
 - 세무, 회계 등 일상적인 사무 및 경영지원 서비스 제공
 - 조합 내부 갈등 중재 및 조정 컨설팅, 갈등관리 교육 등 지원
 - 협동조합간 공동사업 지원으로 판로확대 및 경영역량 제고
 - 공동생산, 구매, 유통, 판매를 위한 공동사업장 운영
 - 공동브랜드 및 물류(배송) 시스템 개발, 온·오프라인 공동마케팅 추진
- ※ 서울소재 협동조합연합조직: 연합회 9개, 협의회 8개

전략 04

사회적경제 확대와 산업 다양화

과제 8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



시민의 삶 속에 공유를 정착시키고 공유기업을 육성 지원한다.

사업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일상생활 속 공유문화를 확산한다.

복지, 환경, 일자리 등에서 사회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이를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급격한 도시화로 공동체 의식이 실종되었고, 과잉소비에 따른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해결이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공유'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완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유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경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문화가 확산되면 사람들 간의 교류가 증가하고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5-95〉 공유문화 확산 추진계획

사업	내용
마을공동체 연계 공유 확산	공유서가, 주거공유 등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주민친화 공유사업 발굴·확산
홍보 강화	시민들에게 공유를 쉽게 소개하는 '찾아가는 공유마당' 운영 및 공유체험수기, UCC공모 등을 통한 생활속 사례위주 홍보 확대
교육청과 공유사업 확대	교육청,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학생용품 공유를 위한 강연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등



〈그림 5-15〉 금천구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잇슈'

사업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공유경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2년 9월 공유도시 서울선언, 2012년 12월 조례제정 등 「공유서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의 삶 속에 공유가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공유경제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도적 기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첫째, 공유활동 안전망 확보를 위한 맞춤형 보험 및 서비스 표준화를 마련하는 한편, 전문가 토론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둘째, 시, 공유기업, 시민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통하여 「서울형 공유모델」을 국가 전체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사업

성장가능성 있는 공유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공유서울」 추진을 위한 기반을 토대로 공유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2014년 8월 기준 50개 공유 단체·기업을 지정·운영 중에 있음. 일부 연매출 10억 이상의 기업도 탄생했으며, 일부 공유기업은 서울시 지원 전후 대비 회원수, 매출 등이 100%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으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표 5-96〉 공유단체·기업 지원 현황

추진현황		내용
201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 지정현황: 37개 단체·기업 - 지정혜택: 지정서 발급, 공유서울 BI 사용권 부여, 행·재정적 지원
	공유경제 기업 창업 지원	- 20여개 팀 선발, 사무공간, 활동비(최대 월1백만원), 교육컨설팅 등 지원
	공유단체·기업 컨설팅 및 보조금 지원 평가	- 컨설팅: 6회차 17개 기관 실시 - 사업비 지원평가: 15개 기관 평가, 14개소 정상추진, 1개소 미흡(사업비 환수)
	3차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2건, 공유촉진사업비 1건 (20,000천원)
2014	공유경제 시작학교(2기) 운영	- 예비 공유창업가 또는 공유활동가 대상 공유기업 창업지원, 29명 수료
	'14년 1차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5건, 공유촉진사업비 9건 (140,000천원) - 자치구(13개소) 사업비 15건(185,000천원)
	'14년 제2차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8건, 공유촉진사업비 3건 (37,000천원) - 자치구(9개소) 사업비 11건(102,000천원)

성장가능성 있는 공유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공유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유 수도 서울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함.

〈표 5-97〉 공유기업 및 자치구 공유사업 지원 추진계획

- 신생기업 맞춤형 지원
 - 공유기업 예비 창업자를 위한 「공유경제 시작학교」 확대 운영
 - 신생기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법률, 재무,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
- 유망 공유기업 지원 강화
 - 공유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홍보관 설치 등 「공유기업 박람회」 개최
 - 공유기업과 자치구 연계, 홍보 지원 등 공유기업 활성화 위한 행정적 지원 강화
- 자치구 공유사업 지원
 - 자치구 공유촉진을 위한 지역 특화 사업 지원(주차장, 아이웃, 공간공유 등)
 - 마을공동체와 공유기업을 연계한 자치구 공유사업 발굴 및 지원



제조업 기반 강화 등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하며,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시농업을 육성한다.

도심형 제조업은 서울 도심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나, 저가의 수입 제품과 경쟁 열위 및 낙후된 작업 환경 등으로 사업 활력이 저조한 실정임. 특히 성수, 종로, 중구 등에 대해서는 그간 공동매장, 앵커시설 설치 및 특구지정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을지로 조명·가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시 및 자치구 차원의 지원이 없어 유통거리가 침체되어 있음.



자치구 관계자, 외부 전문가와 협의하여 기획 단계부터 산업협력기반을 고려한 도심형 제조업을 육성하는 한편, 서울형 제조업의 선도 사업으로 관련 산업, 문화·관광 및 서비스업을 연계하여 을지로 조명·가구 업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표 5-98〉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사업	내용
을지로 일대 도심산업 생태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을지로 도심산업 집적지역의 6개 업종에 대한 현황·실태분석을 통해 상가활성화 및 산업육성 전략 수립 ※6개 업종 : 공구, 타일·도기, 조명, 조각, 미싱, 가구
을지로 도심산업 집적지역 환경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 및 건물환경 개선작업,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 도심산업 집적지역 주변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특화거리 조성 기반 마련 이륜차 주차장 보관소 유지관리, 도로 가로녹지 정비 사업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도심산업 특화거리 조성
IT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을지로 일대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모바일 앱 개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홍보를 통해 조명가구거리에 대한 시민 접근성, 편리성 도모 영세업체 홈페이지 제작 및 조명·가구거리 지도제작 홍보 지원
청계천 연계 관광 상품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 특화거리 상징물 조성을 통한 테마거리 랜드마크화 특화거리 기반 마련 후 청계천 관광과 연계하여 조명·가구축제 개최 등 관광 상품화

사업

지역별 특화상권에 대한 특구 지정으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현재 개별법에 따른 관광, 문화, 전통시장, 산업 특구 등 각 분야별 지역진흥특구가 존재하나 정책의 분절적 지원으로 실질적인 상업적·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유통(상업)·관광·문화를 아우르는 종합적·융합적 특구의 조성으로 규모의 경제 형성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서울 내 특화 상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유통특구로 지정하여 쇼핑·관광·문화를 아우르는 서울의 대표적 명소이자 아시아 대표 상업지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또한 지역별 특화상권 집적현황의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서울시 유통산업을 재조명하고 각 특화상권의 업종별, 규모별 적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표 5-99〉 특화상권 활성화 선정 지원 추진계획

서울 전역 특화상권 전수조사 및 실태 분석

- 서울 전역 특화상권 집적현황 전수조사 결과 재분류(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 기존 자연발생적 특화상권에 대한 역사적·지리적·산업적 연구 자료 분석 및 실사 확인을 통한 실증적 특화상권 지도(통계) 등 관련 DB 구축
- 서울 특화상권 활성화(유통특구) 조성 연구 용역 실시
 - 지역별 특화상권 현황 실태 분석 및 특구로서 실질적 발전 모델 마련

특화상권(유통 특구) 지정을 위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

- 유통 및 관광 등 특구지정 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
- 특화상권별 해당 자치구 및 소상공인 등 의견 수렴
 - 자치구, 지역별 상권을 구성하는 협의체 및 상인과의 간담회 개최

특구지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및 실질적 구현 방안 마련

- 서울시 유통특구 지정 및 지원 조례(가칭) 제정
- 특화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통특구 지정 및 종합지원계획 수립
 - 지정방식, 지정규모 및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지침 마련

핵심 특화상권지역 유통특구 선정 시범 실시

- 기존 상권의 부흥을 기반으로 소규모 집적지를 시범 지정 후 확산
 - 을지로 조명·가구 집적지 유통특구 시범모델로 선정 지원
- 장기적·종합적 관점에서 대규모 유통특구(랜드마크) 조성 방안 마련
 - 남대문·명동·남산을 연계한 유통·관광·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종합 상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미국의 도시재생 기법인 BID 제도를 서울형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로 도입 검토

200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중소기업 사업체는 68만 여개로 서울 전체 사업체의 99.8%를 차지하여 절대다수이나, 고용비중은 80.9%에 불과함. 또한 대기업에 비해 글로벌 경제변화에 취약하고, 금융불안 및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에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중소기업 교육 강화, 맞춤형 종합대응체계 구축 등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자금융자 및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체계적·전략적 육성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더불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성장기반이 취약한 우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것을 제안함.

〈표 5-100〉 중소기업 육성 지원 추진계획(안)

사업		내용
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의 적극적 FTA 활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인식 확산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자금, 판로, 인력 등 종합 지원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컨설팅, 창업상담, 자금상담 → 1:1 대면상담 (인터넷 상담 병행) 업체성장을 위한 주기적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내실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방향 :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규모 : 1조원 규모내에서 적정 운용
	신용보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조원 내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원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수출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로 강소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전략적 해외판로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통한 수출환경의 안정화
	중소기업 국내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홈쇼핑 활용,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기업 전시박람회(전시회) 개최: 연 2회

사업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

현재 전통시장은 행정기관 위주의 활성화 운영방식으로 의존 분위기가 확산되어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의식이 부족하고,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위사업 위주의 획일적 지원과 시설 위주 지원으로 상인의 경영마인드 혁신이 미흡한 실정임.

서울시는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여 서울형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5개를 집중 육성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추진전략 “함께”

- 시장으로 기본 바로 세우기
- 상인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기
- 시장주변 역사, 문화, 주민을 고려하기
- 시장으로 필요조건 충족하기
- 시장으로 충분조건 채우기

〈그림 5-16〉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추진전략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는 서울형 신시장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5개 시범 선도시장을 통한 서울형 신시장 모델을 확립한 후, 우수사례를 타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표 5-101〉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추진계획

연도별 사업추진 내용	2014년 (1년차)	<div>기반구축</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및 시장별 개선방안 마련 ■ 소요예산 산출 및 확보(연차별) ■ 추진체계 구성(컨설팅단 및 사업단 구성 등) <div>사업수행</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특성화, 브랜드육성, 상인교육 등 ■ 시범사업 위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환경개선·점포환경·매대 진열정비,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등
	2015년 (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 사업의 정착으로 시장 자생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개선 등 계속 사업 추진 - 1차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
	2016년 (3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마무리 ⇒ 평가 및 모니터링 후 타 전통시장 확대추진 여부 결정
	사업 추진체계	<p>서울상인연합회 ↔ 서울시</p> <p>시장상인회 ↔ 자치구</p> <p>컨설팅단구성운영 기본계획 컨설팅 등</p> <p>“함께” (선도시장5개육성)</p> <p>시장별사업단구성 및 사업추진 (상인+전문가+공무원+지역주민)</p>

도시민의 농사에 대한 관심 증가와 농업을 통한 여가와 휴식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노들섬 부지를 임시 활용하여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고, 갈현 도시농업체험원을 조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많은 동네뒷산이 무단경작과 무허가 건물로 훼손되어 있으며, 도시농업 실천공간 대부분이 서울 번두리에 위치하여 공동체문화로 흡수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텃밭 등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도시농업 공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도시농업을 확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여 시민소통의 장, 건강한 생활유지 공간으로 조성하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함.

〈표 5-102〉 도시농업 공간 확대 추진계획(안)

사업	내용
갈현근린공원 도시농업체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은평구 불광동 458-1일대, 24,615㎡ ■ 사업내용: 체험장(텃밭), 습지원, 관리사무소 조성 등
삼성산도시농업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관악구 신림동 산156-1번지 일대 29,700㎡(공원) ■ 공원내 녹지이나 훼손되어 밭으로 이용되고 있어 공원 조성 적합
불광 도시농업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은평구 불광2동 32번지 일대 33,000㎡
동네뒷산 공원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초안산 근린공원 등 25개소(면적 : 194,000㎡) ■ 사업내용: 텃밭공원 등 지역별 수요에 맞춘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추진방법: 주민참여형으로 추진(주민 의견수렴 → 주민의견반영 → 사업 추진)

도시농업 공간 확대 및 시민교육,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시민공감대 확산 등 도시농업 저변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더불어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세계적인 도시농업 수도인 Agro-City 서울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를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도시농업이 가진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시민 교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서울 국제 도시농업 컨퍼런스(Seoul International Urban Agriculture Conference)를 조직하여 세계 주요 도시의 도시농업 단체 및 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을 제안함.

06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 1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의의와 필요성
- 2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원칙과 기본방향
- 3 지속가능발전 지표 수립과정
- 4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 5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방안

1.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의의와 필요성

1.1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의의

-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사회, 환경, 경제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주는 통계적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지속가능성을 얼마만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음.
- 일반적인 지표와 지속가능발전 지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환경, 경제, 사회 각 지표 간의 상호연계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임.

1.2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과정

- 1992년 리우 회의 이후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함.
- 그 결과 1996년과 2001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개발되었으며 많은 국가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만들기 위한 기본 틀로 적용됨.
- 이후 2002년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지역 및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돕는 지표 또한 개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7년 세 번째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발표하게 됨.

1.3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필요성

- 지표는 서로 다른 분야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보를 제공함.
-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환경과 관련된 발전 정도, 자연자원·생태학적 기능·사회 발전 과정에 대한 영향 및 결과, 서로 다른 발전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데 필수적임.
- 지표는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기본계획의 전략, 목표, 과제의 이행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음.

2.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원칙과 기본방향

2.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원칙

■ 스마트(SMART) 원칙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스마트(SMART) 원칙에 따라 작성하였음.



〈그림 6-1〉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원칙

1) 구체성(Specific)

- 지표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지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함.
- 지표는 현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 결정자와 시민에게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2) 측정가능성(Measurable)

- 지표는 평가를 위해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사용에 제약이 크지 않아야 함.
- 제3자가 검토하더라도 일관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통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3) 달성가능성(Achievable)

- 기본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지표에 반영되어야 함.
- 지표의 목표는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지 않도록 달성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상황의 개선과 발전을 가져와야 함.

4) 연관성(Relevant)

- 기본계획의 목표와 전략, 과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와 지표가 연관성을 가져야 함.
-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연관성을 높여 계획과 지표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5) 시한성(Time-bound)

- 지표의 목표를 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기본방향

1) 키워드 접근방법

-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의 지속가능성 요인과 지속불가능성 요인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지표 수립과정에 반영함.
- 서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성을 확보하고 지표의 타당성을 높임.

2) 지표의 유연성

-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와 서울시 여건 변화에 따라 지표의 추가·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표의 유연성을 제고함.
- 지표 풀(pool)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핵심지표를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함.

3) 동심원 모델 적용

-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특히 경제·사회문화·환경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는 특성 때문에 지표 간 연관성이 높음.
- 지표 간 상호연계성과 의존성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체계에 동심원 모델을 개념모델로서 적용

4) 수레바퀴 모델로 지속가능성 평가

- 최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지표를 수립한 국가와 도시에서 다양한 평가방안이 적용됨에 따라 서울시만의 독창적인 평가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지표의 현황과 목표치까지의 도달 정도를 수레바퀴 모델로 제시하여 목표달성도를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지표의 정보전달력을 높임. 이때 목표 달성도는 $\frac{(\text{현황}-\text{기준연도})}{(\text{목표연도}-\text{기준연도})} \times 100$ 으로 계산함.

5) 기본계획과의 높은 연관성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모두 키워드 접근방법에 기반하고 있음. 즉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본계획과 지표가 높은 연관성을 가지게 됨.

6) 문화 분야 강조

- 서울의 지속가능성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응답자가 문화 인프라, 문화적 다양성, 역사문화 등을 서울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답하였음.
- 키워드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문화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서울의 지속가능성 세 가지 분야를 경제, 사회문화, 환경으로 설정

2.3 지표의 목적과 기능

1)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와 변화과정을 모니터링함.

2) 정책수요 파악

- 지표의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정책수요를 파악할 수 있음.

3) 목표 공유와 통합적 접근

-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알림으로써 서울의 시민, 기업, 행정부문이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를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4) 소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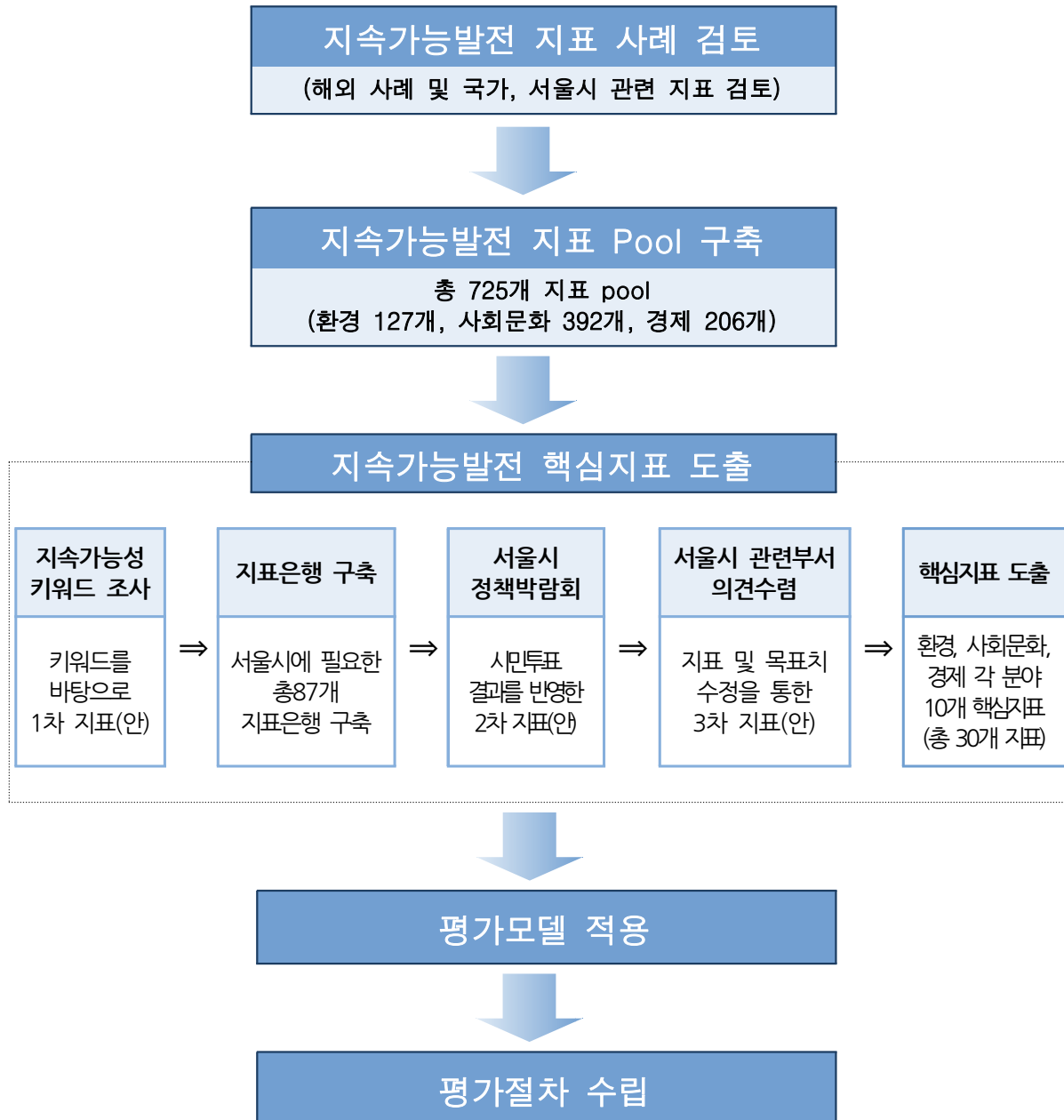
- 필요시 지표의 평가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를 공유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한 소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5) 지속가능발전의 주류화

- 서울시의 관련 정책과 시정 전반에 걸쳐 평가를 시행하여 행정에 지속가능발전을 주류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지속가능발전 지표 수립과정

〈표 6-1〉 지속가능발전 지표 수립과정



3.1 지속가능발전 지표 풀(Pool) 구축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표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표 풀을 구축하였음.

지표 검토과정에서 서울시 여건과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는 제외하였으며(예를 들어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갯벌면적 증감 등), 중복되는 지표 또한 제외하였음.

서울시의 현황 및 정책방향과 정합성을 갖는 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환경 127개, 사회문화 392개, 경제 206개의 총 725개 지표 풀을 구축하였음.

지표 풀 구축 시 사용된 데이터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희망서울 생활지표, 서울 도시정책지표(서울 서베이),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지표를 기준으로 하였음.

〈표 6-2〉 지속가능발전 지표 풀 구축 참고 자료

지표	내용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사회·경제·환경의 3개 분야, 14개 영역, 33개 항목, 77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국내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
희망서울 생활지표	서울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성 지표, 기존 시정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 새로운 서울시 역점사업을 보여주는 지표의 3개 파트로 구성되었으며, 15개 분야(복지, 경제, 주거, 여성, 교육, 환경, 문화, 건강, 안전, 도시재생, 교통, 마을공동체, 열린시정, 재정, 시민일반)의 300개 지표
서울 도시정책지표	서울시의 변화와 방향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립된 지표로서 12개 분야(인구, 경제, 도시발전과 주거, 문화, 관광, 복지, 여성과 가족, 환경, 교통, 정보와 지식, 안전과 재난, 가치와 의식). 42개 영역, 217개 지표로 구성됨.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주요 정책 지표	15개 분야(시민복지, 주거안정, 시민건강, 여성·가족, 산업경제, 일자리 경제, 문화관광, 교육, 도시재생, 환경, 교통, 안전, 마을공동체, 시민참여행정, 재정)의 총 16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도 목표치를 설정하여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특징

그 외에도 서울시가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지표가 없는 경우 각종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지표를 추가하였음.

3.2 서울시 지속가능성 요인 설문조사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기본계획과 지표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키워드 접근방법을 기반으로 수립하였음.

따라서 지표 수립 시 참고한 지속가능성 키워드는 기본계획의 키워드와 같으며, 조사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지표 pool의 725개 지표를 분류하여 1차 지표(안)을 도출하였음.

〈표 6-3〉 서울의 지속가능발전 키워드

키워드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폐기물 수자원 대기질 쾌적한 도시환경 녹색교통
	      
사회문화	양성평등 사회적 양극화 교육 주택
	   
	고령화 시민의식 안전 건강 문화생활
	    
경제	우수·숙련 인력 질높은 일자리 창출 글로벌 도시 사회적경제 산업의 다양성
	    

3.3 지표은행 구축

지속가능성 키워드를 기반으로 지표를 분류한 결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지표도 있었으며, 세부사업 단위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 지표 또한 존재하였음.

따라서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립한 1차 지표(안)을 바탕으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 87개(환경 23개, 사회문화 43개, 경제 21개) 지표은행을 구축하였음.

〈표 6-4〉 환경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은행

키워드	지표	산출방법
대기질 및 소음	초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mu\text{m}$ 이하인 먼지)의 농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적합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군의 실내공기질 기준 적합률
	소음도	일반지역 및 도로변 지역의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소음도(dB)
수자원	물 재이용률	빗물 + 중수도 시설 + 하수처리수 재이용 비율
	빗물활용량	서울시 연간 빗물 재활용량
	아리수 음용률	서울시민의 연간 아리수 음용률
	1일 1인당 물소비량	서울시 시민고객 1명이 하루에 소비하는 아리수 사용량
기후변화	풍수해 가구수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주택 수
	침수취약지역 수	시간당 강수량 40~60mm 수준 폭우 시 침수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수
	온실가스(CO ₂)배출량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쾌적한 도시환경	한강방문 시민수	문화·스포츠 행사, 체험 프로그램 참여, 시민공원 방문 시민 수
	한강수계 수질오염도	잠실, 노량진, 행주의 BOD
	가로경관 녹시율	자치구별 3개 지역의 도로 유형별(간선, 보조간선, 집산, 국지도로) 및 보도 종류별(차도, 보도) 녹색비율을 측정하여 평균 산출
	보전녹지 증가율	용도지역 분류상 보전녹지 면적의 증가율
	1인당 공원면적	(도시공원+자연공원+기타공원)/인구수
	지천 생태복원 개소 수	생태하천 복원사업 + 복개하천 복원사업
에너지	총 에너지 소비량	가정·상업, 수송, 산업, 공공·기타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의 합
	신재생에너지 비율	(태양광, 풍력 등 11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량 / 총 에너지공급량) × 100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참여 개소 수	서울시 연간 학교, 기업 등 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 참여 개소수
폐기물	생활폐기물 배출량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의 배출량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생활폐기물 재활용량 / 생활폐기물 발생량) × 100
녹색교통	녹색교통 수단분담률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를 이용한 통행량 / 교통수단 전체 통행량) × 100
	자전거 출퇴근 인구수	자전거로 통근하는 인구의 수

〈표 6-5〉 사회문화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은행

키워드	지표	산출방법
형평성	지니계수	소득의 모든 쌍을 대칭적으로 잡은 후, 그 차이의 절대치의 총합계를 총소득으로 나눈 것 $\left\{ \frac{1}{2n^2\mu} \sum_{i=1}^n \sum_{j=1}^n y_i - y_j \right\}$, 단, μ =평균값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여성인구/15세 이상 여성인구)×100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
사회적 양극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서울시 인구) ×1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 서울시민 중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서울시 전체가구 중위소득 50%이상 인구수 / 서울시 전체 인구수) ×100
	비수급 빈곤층 지원인원 수	최저생계비 이하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초과되거나, 수급자 신청을 포기해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지원 인원 수
가계부채	가구부채액	가구조사
지역 불균형	강남·북 지역의 1인당 개인소득	강북 지역의 연간 1인당 개인소득 / 강남 지역의 연간 1인당 개인소득
복지	노인의 월평균 소득	가구조사
	사회복지인력 1인당 시민 수	사회복지인력 1인이 담당하는 시민의 수
	공공분야 장애인 일자리 수	복지센터, 동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수
	영유아 보육 월 이용자 부담 50% 이하 자치구 비율	(월 이용자 부담액 50% 이하 자치구 수 / 전체 자치구 수) × 100
건강	환경성질환 유병률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유병률
	도시보건시설 수	보건소, 보건소 분소, 보건지소 수
	비만도	$BMI<\text{체중(kg)} \div \text{신장(m)}^2> 25.0$ 이상
	자살률	연간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건강기대여명	전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
시민의식	서울시민중 자원봉사자 비율	(서울시 등록 자원봉사자 수 / 서울시 인구) × 100
	시민기부율	설문조사
	시민제안 건수	희망서울 정책박람회, 천만상상 오아시스, 시민참여 사회혁신 플랫폼을 통한 시민제안 건수
공동체 의식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공동체 수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공동체 수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건수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건수

키워드	지표	산출방법
문화다양성	다문화 사회에 대한 태도	가구조사
문화생활	마을형 문화공간 수	마을예술창작소, 우리동네 북카페, 미디어센터 등의 수
	공연건수 및 전시횟수	1년 동안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공연건수 및 전시횟수(미술전시회, 국악행사, 음악행사, 무용행사, 연극행사 건수)
	서울시 활동 예술가 수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수
	문화소의 시민대상 문화나눔 추진횟수	사랑티켓, 문화바우처, 천원의 행복, 우리동네 음악회 등 이용건수
	문화환경 만족도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조사
안전	흉악사건 발생건수	흉악사건(5대 범죄 중 살인, 강도사건) 발생건수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재난 및 안전사고 인명피해자 증감률	연간 교통사고 및 화재사건 사상자 증감률
	119 구급차 5분내 현장 도착률	119 구급차가 5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확률
	재난위험시설 (D·E급) 해소 수	연간 재난위험시설 해소 수
	재난취약가구 안전서비스 지원 가구수	연간 재난취약가구 안전서비스 지원 가구수
저출산 고령화	출산율	출산 가능한 나이(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
	고령자 비율	$(65세 이상 인구 / 서울시 인구) \times 100$
	노인취업률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노인 /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times 100$
교육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초·중·고등학생 1명이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 학교 밖 보충교육을 하기 위해 부담하는 연간 비용
	평생교육 참여율	평생교육장 및 온라인강좌를 통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
주택	공공임대주택 수(누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수(누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액	녹색건축물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지원액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연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표 6-6〉 경제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은행

키워드	지표	산출방법
글로벌 도시	외국도시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추진 건수	자매·우호도시 등 공무원 초청 및 파견건수 + 국제기구 유치 및 국제회의 참가건수 + 서울개최 국제회의(행사) 지원건수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주거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 도시안전, 개방 및 친밀정도, 의사소통 정도의 7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
	도시브랜드 지수	도시의 국제적 명성, 기후 등 매력도, 도시의 안정도, 주거편리성, 문화공간 풍요성, 비즈니스 편리성 등 6개 지표를 개발하여 세계 50개 도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외국인 관광객 수	연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 × 서울방문율(연도에 따라 조정)
우수·숙련 인력	대학부설 창업보육센터 우수기업 지원 개소 수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BI) 우수기업 지원 개소 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액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액수
	벤처기업 수	서울시 내 벤처기업 수
	창조산업 종사자 비율	$(\text{서울시 8대 산업 종사자 수} / \text{전체 직업 종사자 수}) \times 100$ * 8대 산업 :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MICE, 녹색, 금융, 바이오메디컬, 콘텐츠, IT 융합, 디자인·패션
산업의 다양성	전통시장 이용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농부의 시장 수	서울시내 농부의 시장(산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개소수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	주말농장, 자투리 텃밭, 옥상텃밭 등 서울시내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
	제조업 종사자 수	9차 산업분류 상의 제조업 업체 종사자 수
고용불안	실업률	$(\text{실업자} / \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고용률	$(\text{취업자} / \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노동분쟁 건수	연간 노동분쟁(분규발생) 건수
청년실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수	청년 인턴 고용 기업 수
	청년창업기업 수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20~30대 청년층이 재화를 생산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설립한 수
	청년고용률	$(\text{만 15~29세 취업자 수} / \text{만 15~29세 생산가능인구}) \times 100$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설립 수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서울시에 설립된 협동조합 수
	사회적경제기업 수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수
	공유기업 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수

3.4 서울시 정책박람회

87개 지표 은행 중 시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환경, 사회문화, 경제 각 분야에서 20개씩 총 60개 지표를 다시 선정하였음. 이후 서울시 정책박람회에서 시민투표를 통해 60개 지표 중 분야별 상위 10개를 선정하고 지속가능발전 핵심지표 수립 시 결과를 반영하여 2차 지표(안)을 수립하였음.

시민 724명이 지속가능발전 핵심지표 선정에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환경, 사회문화, 경제 분야 상위 10개 핵심지표는 다음과 같음.

〈표 6-7〉 지속가능발전 핵심지표 선정결과(상위 10개)

환경분야 지표		사회문화분야 지표		경제분야 지표	
순 위	비율	순 위	비율	순 위	비율
1. 1인당 공원면적	10.3	1. 자살률	11.9	1. 청년고용률	13.2
2. 신재생에너지 비율	9.4	2. 학생1인당 사교육비	11.2	2. 실업률	11.7
3. 물 재이용률	9.3	3. 출산률	9.8	3. 사회적경제기업 수	8.8
4. 보존녹지 증가율	8.9	4. 평생교육 참여율	7.1	4. 외국인 관광객 수	7.8
5. 폐기물 배출량	7.1	5. 공공임대주택 수	6.8	5.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수	7.8
6. 초미세먼지 농도	5.8	6. 마을형 문화공간 수	5.7	6. 노동분쟁건수	7.3
7. 소음도	5.3	7. 문화소외 시민대상 문화나눔 추진횟수	5.4	7. 협동조합 설립 수	6.8
8. 가로경관 녹시율	4.9	8. 다문화 사회에 대한 태도	5.1	8. 전통시장 이용고객 만족도	4.8
9. 온실가스(CO ₂) 배출량	4.9	9.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4.7	9.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	4.8
10.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참여 개소수	4.7	10. 가구부채액	4.7	10.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액	4.5

환경 분야 투표 결과 지속가능성 키워드 조사 당시 전문가 및 공무원 그룹에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던 것과는 달리 시민들은 1인당 공원면적과 같이 가까운 주변 환경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에너지 문제는 전문가와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지속가능성 이슈임을 확인하였음.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마을형 문화공간 수, 문화소외 시민대상 문화나눔 추진횟수, 다문화 사회에 대한 태도 등 문화와 관련된 지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증대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투표 결과 서울시 시민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분야에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음. 특히 청년고용률과 실업률에 투표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시민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필수적인 요소로 여기고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3.5 서울시 관련부서 의견 수렴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서울시 주요 정책방향의 정합성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화하였음. 지표의 내용뿐만 아니라 목표치의 현실적인 달성을 위하여 목표치 또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3차 지표(안)을 수립하였음.

3.6 핵심지표 선정

지속가능성 키워드 조사, 정책박람회, 부서이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구축된 총 87개의 지표은행 중에서 핵심지표 30개를 선정함.

핵심지표는 환경 10개, 사회문화 10개, 경제 10개의 총 30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시민들과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공유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발전을 주류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핵심지표는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1년마다 평가되며, 서울시의 여건 및 정책방향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될 수 있음.

〈표 6-8〉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핵심지표

<div>  환경 </div>		<div>  사회문화 </div>		<div>  경제 </div>	
키워드	지표	키워드	지표	키워드	지표
기후변화	온실가스(CO ₂)배출량	양성평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우수·숙련 인력	벤처기업 수
	침수취약지역 수	사회적 양극화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창조산업 종사자 비율
에너지	총 에너지 소비량	교육	평생교육 참여율	질 높은 일자리 창출	고용률
	신재생에너지 비율	주택	공공임대주택 수(누계)		청년고용률
폐기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고령화	노인취업률	글로벌 도시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수자원	물 재이용률	시민의식	시민제안 건수		외국인 관광객 수
대기질	초미세먼지 농도	안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업 수
쾌적한 도시환경	한강방문 시민수	건강	건강기대여명		공유단체 기업 수
	1인당 공원면적		문화환경 만족도	산업의 다양성	제조업 종사자 수
녹색교통	녹색교통 수단분담률	문화생활	마을형 문화공간 수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

4.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4.1 환경 분야 지표

〈표 6-9〉 환경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키워드	지표(안)	산출방법	기준연도 (2010)	현황 (2013)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기후변화	1.온실가스(CO ₂)배출량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49,751천톤 CO ₂	48,551천톤 CO ₂ (12)	35,562천톤 CO ₂	28,450천톤 CO ₂
	2.침수취약지역 수	시간당 강수량 40~60mm 수준 폭우 시 침수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수	34개 소	29개 소	0개 소	0개 소
에너지	3.총 에너지 소비량	가정·상업, 수송, 산업, 공공·기타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의 합	15,717천 TOE	15,496천 TOE(12)	13,787천 TOE	12,960천 TOE
	4.신재생에너지비율	(태양광, 풍력 등 11개 분야의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량 / 총 에너지 공급량) × 100	0.6%	1.4%(12)	5%	10%
폐기물	5.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생활폐기물 재활용량 /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 × 100	43.0%	45.9%	57.3%	66.0%
수자원	6.물 재이용률	빗물, 중수도 시설, 하수처리수 재 이용 비율	3.86%	9.1%	14.4%	20%
대기질	7.초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μ m 이하인 먼지)의 농도	30 μ g/m ³ (07)	25 μ g/m ³	20 μ g/m ³	15 μ g/m ³
쾌적한 도시환경	8.한강방문 시민수	문화·스포츠 행사, 체험 프로그램 참여, 시민공원 방문 시민수	684만명(12)	944만명	1,150만명	2,000만명
	9.1인당 공원면적	(도시공원+자연공원+기타공원)/ 인구수	16.06m ²	16.37m ²	17.5m ²	20m ²
녹색교통	10.녹색교통 수단분담률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를 이용한 통행량 / 교통수단 전체 통행량) × 100	70%	71.3%(12)	75%	80%

전략 01

세계적인 기후보호 선도도시로 도약

과제 1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지표

온실가스 배출량

■ 키워드

기후변화

■ 지표 정의

서울시의 연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

■ 필요성

최근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저탄소 기후보호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표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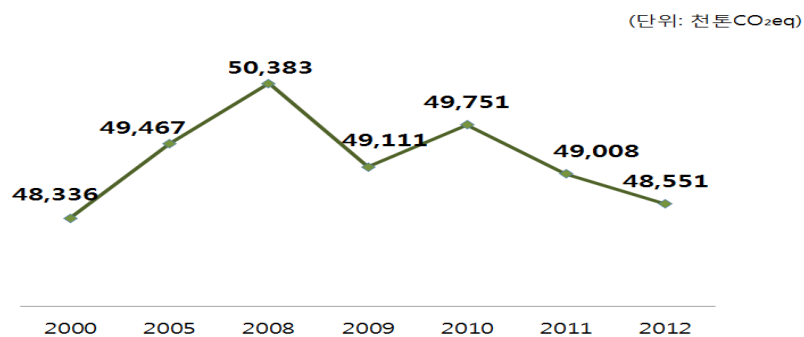
■ 산출방법

서울시의 연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

■ 자료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 현황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온실가스 배출량	49,751천톤 CO ₂ eq	48,551천톤 CO ₂ eq('12)	35,562천톤 CO ₂ eq	28,450천톤 CO ₂ eq	8.5%

■ 목표치 산정근거

국가 및 서울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외 온실가스 산정 방법론에 따라 산정

전략 01

세계적인 기후보호 선도도시로 도약

과제 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지표

침수취약지역 수

■ 키워드

기후변화

■ 지표 정의

시간당 강수량 40-60mm 수준 폭우 시 침수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수

■ 필요성

침수취약지역을 해소하여 안전특별시 서울을 구현하는 한편, 지표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지역맞춤형 해소대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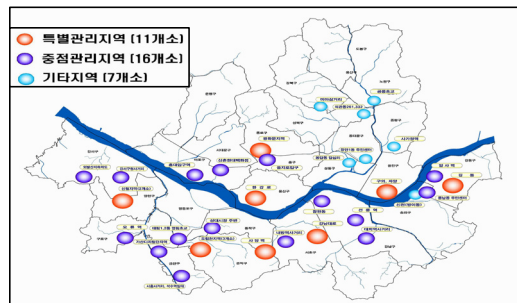
■ 산출방법

시간당 강수량 40-60mm 수준 폭우 시 침수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수

■ 자료출처

서울시정 4개년 계획

■ 현황



- 2010, 2011년 집중호우 이후 침수 취약 지역(34개소)을 중점 관리해 왔음.
- 2014년 6월 기준 침수취약지역 7개소 해소 혹은 해소 중
(구의·자양, 면목동, 미아삼거리, 장위동, 가산디지털단지주변, 영림초교, 장안1동 주민센터)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침수취약지역 수	34개소	29개소	0개소	0개소	14.7%

■ 목표치 산정근거

서울시정 4개년 계획 도시안전 분야의 침수취약지역 해소 관련 정책을 참고하여 산정

전략 0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 도시 조성

과제 3



에너지 소비·생산의 효율을 높인다.

지표

총 에너지 소비량

■ 키워드

에너지

■ 지표 정의

서울시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

■ 필요성

에너지 소비량 지표를 모니터링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동시에 전력자립률을 높이고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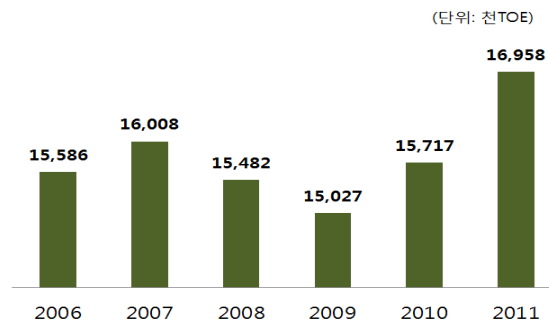
■ 산출방법

가정·상업, 수송, 산업, 공공·기타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의 합

■ 자료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너지경제연구원)

■ 현황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총 에너지 소비량	15,717천TOE	15,496천TOE (2012)	13,787TOE	12,960천TOE	11.5%

■ 목표치 산정근거

국가 및 서울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외 온실가스 산정 방법론에 따라 산정

전략 0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 도시 조성

과제 3



에너지 소비·생산의 효율을 높인다.

지표

신재생에너지 비율

■ 키워드

에너지

■ 지표 정의

서울시의 총 1차 에너지 공급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 필요성

에너지 사용량 증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고자 함.

■ 산출방법

(태양광, 풍력 등 11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 총 에너지 공급량) × 100

■ 자료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너지경제연구원)

■ 현황

단위: 천TOE,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	4,747 (2.6)	4,867 (2.7)	5,346 (2.8)	5,833 (2.8)	7,124 (3.4)
서울	95 (0.6)	94 (0.6)	97 (0.6)	211 (1.4)	218 (1.4)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신재생에너지 비율	0.6%	1.4%(12)	5%	10%	18.2%

■ 목표치 산정근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정

전략 0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 도시 조성

과제 4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한다.

지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 키워드

폐기물

■ 지표 정의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비율

■ 필요성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향상시켜 분리배출 수거체계 개선,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 및 문화 확산, 재활용 가능자원 확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세계 제일의 재활용 도시로 거듭나고자 함.

■ 산출방법

(생활폐기물 재활용량 /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 × 100

■ 자료출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 현황

(단위: 톤/일)

구분	2011년	2013년	2016년	2020년	2030년
합계	6,054	6,054	6,054	6,054	6,054
재활용	2,607 (43.0%)	2,779 (45.9%)	3,124 (51.6%)	3,469 (57.3%)	3,995 (66.0%)
소각	2,345 (38.7%)	2,407 (39.8%)	2,578 (42.6%)	2,275 (37.2%)	1,820 (29.9%)
매립	1,102 (18.2%)	868 (14.3%)	352 (5.8%)	310 (5.5%)	248 (4.1%)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43.0%	45.9%	57.3%	66.0%	20.3%

■ 목표치 산정근거

서울특별시 「세계제일의 재활용도시 Master Plan」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목표치와 부합하도록 설정

전략 0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조성

과제 5



물순환을 개선한다.

지표

물 재이용률

■ 키워드

수자원

■ 지표 정의

빗물, 중수도 시설,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물 재이용률

■ 필요성

빗물이용·중수도 시설의 유희화 방지 및 관리체계 개선과 하수처리수 이용 확대를 통한 물 재이용률 향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물 순환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 산출방법

빗물, 중수도 시설, 하수처리수의 물 재이용 비율

■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2013)

■ 현황

- 빗물이용시설은 2010년 214개소이며, 빗물이용량은 2010년 393.4천m³/년
- 중수도시설은 2010년에 총 52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중수도시설 재이용량은 2010년 2,837천m³/년
- 서울시는 중랑, 탄천, 서남, 난지 등 4개 물재생센터에서 처리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은 2010년 47,266천m³/년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물 재이용률	3.86%	9.1%	14.4%	20%	49.7%

■ 목표치 산정근거

「서울특별시 물재이용 관리계획」의 목표치와 부합하게 설정

전략 03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푸른 도시 조성

과제 6



대기질을 개선한다.

지표

초미세먼지 농도

■ 키워드

대기질

■ 지표 정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의 농도

■ 필요성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대중교통이용 및 친환경 교통정책을 병행하여 환경질 개선과 녹색교통 확산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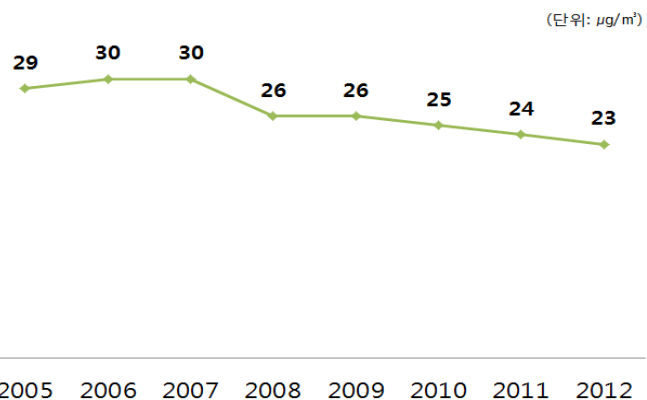
■ 산출방법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mu\text{m}$ 이하인 먼지)의 농도

■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 현황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초미세먼지 농도	$30\mu\text{g}/\text{m}^3$ (07)	$25\mu\text{g}/\text{m}^3$	$20\mu\text{g}/\text{m}^3$	$15\mu\text{g}/\text{m}^3$	50%

■ 목표치 산정근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목표치(2018년까지 초미세먼지 20% 감축)와 부합하게 설정

전략 03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푸른 도시 조성

과제 7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지표

한강방문 시민 수

■ 키워드

쾌적한 도시환경

■ 지표 정의

연간 한강을 방문하는 시민의 수

■ 필요성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선정됨에 따라 서울의 강점인 한강을 보존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산출방법

문화·스포츠 행사, 체험 프로그램 참여, 시민공원 방문 시민 수

■ 자료출처

서울시정 4개년 계획

■ 현황

- 서울시는 2013년 처음 시행한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상음악회, 영화제, 수상 레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2014년 한달간 37개 프로그램, 847회 공연 개최).
- 2013년 944만 명이 방문(전년 대비 38% 증가)하여 여름휴가처 역할을 하는 한강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됨.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한강방문 시민 수	684만명(12)	944만명	1,150만명	2,000만명	67.8%

■ 목표치 산정근거

서울시정 4개년 계획 환경분야 목표치(2018년 1,120만명)를 고려하여 설정

과제 8



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한다.

지표

1인당 공원면적

■ 키워드

쾌적한 도시환경

■ 지표 정의

서울시 공원면적을 서울시 총 인구로 나눈 것

■ 필요성

2013년 서울 전체의 4.6%가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으로 나타남에 따라 1인당 공원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쾌적한 자연환경 향유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며, 공원지역 확충을 통하여 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회복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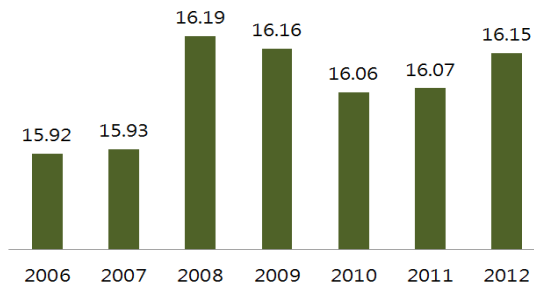
■ 산출방법

(도시공원+자연공원+기타공원) / 인구수

■ 자료출처

서울통계

■ 현황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1인당 공원면적	16.06m²	16.37m²	17.5m²	20m²	40.3%

■ 목표치 산정근거

2014년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목표치(2020년 17.5m²)와 부합하게 설정

전략 04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과제 9



생활밀착형 보행 및 자전거를 활성화한다.

지표

녹색교통 수단분담률

■ 키워드

녹색교통

■ 지표 정의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등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교통수단이 전체 통행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 필요성

자동차보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우선하는 녹색교통을 활성화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켜 나가는 데 의의가 있음.

■ 산출방법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를 이용한 통행량 / 교통수단 전체 통행량) × 100

■ 자료출처

2030 서울플랜

■ 현황

구분		총합	승용차	버스	지하철·철도	택시	기타
2002년	통행량	29,680	7,983	7,705	10,285	2,195	1,513
	분담률	100.0	26.9	26.0	34.6	7.4	5.1
2006년	통행량	31,196	8,188	8,616	10,839	1,959	1,592
	분담률	100.0	26.3	27.6	34.7	6.3	5.1
2010년	통행량	31,155	7,502	8,746	11,289	2,236	1,382
	분담률	100.0	24.1	28.1	36.2	7.2	4.4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2010)	현황	목표치(2020)	목표치(2030)	달성도
녹색교통 수단분담률	70%	71.3%(12)	75%	80%	26%

■ 목표치 산정근거

2030 서울플랜 목표치(2020년 75%, 2030년 80%)와 부합하게 설정

4.2 사회문화 분야 지표

〈표 6-10〉 사회문화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키워드	지표(안)	산출방법	기준연도 (2010)	현황 (2013)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양성평등	1.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경제활동인구 / 서울시 만 15세 이상 전체 여성인구) × 100	51.2%	52.6%	60%	65%
사회적 양극화	2.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서울시 전체가구 중위소득 50% 이상 인구수 / 서울시 전체 인구수) × 100	84.4%(13)	84.4%	88.2%	89.2%
교육	3.평생 교육 참여율	평생교육장 및 온라인강좌를 통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	32.6%	34.4%	50%	70%
주택	4.공공임대주택 수(누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수(누계)	164,581호	215,530호	357,000호	450,000호
고령화	5.노인취업률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노인 /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 100	23.6%	24.8%	35%	50%
시민의식	6.시민제안건수	희망서울 정책박람회, 천만상상 오아시스, 시민참여 사회혁신 플랫폼 등을 통한 시민제안건수	7,878건(12)	8,178건	11,000건	15,000건
안전	7.교통사고 사망자 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429명	371명	212명	70명
건강	8.건강기대여명	전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	73.18세	74.38세	77세	81.4세
문화생활	9.문화환경 만족도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조사	5.93점	6.41점	7.10점	8.0점
	10.마을형 문화공간 수	마을예술창작소, 우리동네 북카페, 미디어센터 등의 수	11개소(11)	135개소	375개소	1000개소

전략 01

양극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과제 1



양성평등 사회를 만든다.

지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키워드

양성평등

■ 지표 정의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의 비율

■ 필요성

결혼·출산 등의 이유로 직장 내 불이익을 받는 여성이 아직도 상당수 존재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은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산출방법

$$(\text{여성경제활동인구} / \text{서울시 만15세 이상 전체 여성인구}) \times 100$$

■ 자료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 현황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52.0%	51.9%	51.7%	51.0%	49.8%	51.2%	52.0%	52.3%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51.2%	52.6%	60%	65%	15.9%

■ 목표치 산정근거

2013년 기준 OECD 국가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평균 62.3%로 서울시 여성 관련 정책 및 해외 평균 수준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



■ 키워드

사회적 양극화

■ 지표 정의

서울시 전체 인구 중 국제적 빈곤기준선인 전체가구 중위소득 50%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필요성

절대빈곤층에만 맞추어져 있던 기존 소득보장정책에서 벗어나 간접적 소득지원정책 등을 통하여 적정 소득기준을 보장함으로써 상대적 빈곤 축소와 소득 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 산출방법

(서울시 전체가구 중위소득 50% 이상 인구수 / 서울시 전체 인구수) × 100

■ 자료출처

서울복지실태조사, 서울시민복지기준

■ 현황(2013년)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중위 50% 기준 상대빈곤율	18.5%	15.6%	15.0%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실적치(중위50% 이상)	81.5%	84.4%	85.0%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84.4%(13)	84.4%	88.2%	89.2%	-

■ 목표치 산정근거

서울시민복지기준 목표치(2018년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88.2%)를 참고하여 산정하였음. 다만,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지표가 2013년부터 관리되었기 때문에 기준연도 데이터의 구득이 불가능하여 달성도의 계산이 불가함. 향후 지표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해나가는 한편, 이를 토대로 목표치 달성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임.

전략 01

양극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과제 3



양질의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지표

평생교육 참여율

■ 키워드

교육

■ 지표 정의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의 비율

■ 필요성

평생교육 참여율은 시민의 교육 욕구 및 성숙도를 가늠하는 핵심지표이며, 지표의 모니터링을 통해 평생교육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산출방법

평생교육장 및 온라인강좌를 통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

■ 자료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 현황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생교육 참여율	28.7%	28.4%	32.6%	28%	34.5%	34.4%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평생교육 참여율	32.6%	34.4%	50%	70%	10.3

■ 목표치 산정근거

2030 서울플랜 목표치(평생교육 경험률 2020년 50%, 2030년 70%) 참고

전략 01

양극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과제 4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지표

공공임대주택 수(누계)

■ 키워드

주택

■ 지표 정의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의 수(누계)

■ 필요성

인간의 기본욕구인 주거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 충족시키는 한편, 부담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 산출방법

기준연도(2010년)부터 누적된 공공임대주택의 수(호)

■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서울연구원

■ 현황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공임대주택 수 (누계)	164,581호	172,000호	188,000호	215,530호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공공임대주택 수(누계)	164,581호	215,530호	357,000호	450,000호	26.3%

■ 목표치 산정근거

2014년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의 목표치(2020년 357,000호)와 부합하게 설정

전략 02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

과제 5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든다.

지표

노인취업률

■ 키워드

고령화

■ 지표 정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어르신의 비율

■ 필요성

어르신을 위한 경제적 여건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험이 많은 어르신이 경제활동에 참가함에 따라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산출방법

$$(\text{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노인} / \text{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times 100$$

■ 자료출처

통계청(2014), 경제활동인구

■ 현황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노인취업률	21.9%	22.5%	23.6%	23.5%	24.7%	24.8%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노인취업률	23.6%	24.8%	35%	50%	10.5%

■ 목표치 산정근거

「서울특별시 어르신 종합계획」의 목표치(2015년 30%)를 고려하여 설정



지표

시민제안건수

- 키워드

시민의식

- 지표 정의

시민이 서울시에 정책을 제안한 건수

- 필요성

정책수립 과정에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여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거버넌스를 구현하고자 함. 또한 시민의 실생활을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의 실효
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산출방법

희망서울 정책박람회, 천만상상 오아시스, 시민참여 사회혁신 플랫폼을 통한 시민제안건수

- 자료출처

부서 내부자료

-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시민제안건수	15,897건	7,878건	8,178건

주) 2011년까지는 시민제안에 따른 인센티브제도가 있었으나, 2012년 제도가 없어지면서 제안
건수가 감소하였음.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시민제안건수	7,878건(12)	8,178건	11,000건	15,000건	9.6%

- 목표치 산정근거

시민제안건수 증가 추이 및 관련 정책을 고려하여 산정

전략 03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과제 7



시민이 우선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표

교통사고 사망자 수

■ 키워드

안전

■ 지표 정의

연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서울시민의 수

■ 필요성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표로 관리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수립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고가 많은 지역은 특별 관리하여 도시안전성을 향상하도록 함.

■ 산출방법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 자료출처

서울통계(교통사고 현황)

■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부상자수	63,584명	59,718명	57,625명	58,583명	56,761명
사망자수	501명	429명	435명	424명	378명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429명	371명	212명	70명	26.7%

■ 목표치 산정근거

서울특별시 교통비전 2030의 목표치(2030년 212명, 2010년 429명 대비 1/6 수준으로 감소)와 부합하도록 설정



지표

건강기대여명

■ 키워드

건강

■ 지표 정의

전체 평균 수명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

■ 필요성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 수명에 대한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음. 건강기대여명은 비만, 당뇨와 같은 질병에서부터 사고로 인한 부상까지 시민의 전반적인 건강 및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복합지표의 성격을 가짐.

■ 산출방법

전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

■ 자료출처

부서 내부자료

■ 현황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대여명	79.18세	79.56세	80.08세	80.55세	80.79세	81.2세	81.44세

주) 전국 단위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건강기대여명	73.18세	74.38세	77세	81.4세	31.4%

■ 목표치 산정근거

보건복지부의 전국 건강기대여명 현황과 목표치(2010년 71세, 2020년 75세 목표)를 참고하여 산정

전략 04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

과제 9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지표

문화환경 만족도

■ 키워드

문화생활

■ 지표 정의

시민이 느끼는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

■ 필요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시민투표 결과 문화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타 기본계획과 달리 문화 분야를 강조하였음. 문화환경 만족도는 서울시민의 문화생활을 측정하는 데 있어 통합적 지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산출방법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만족도 조사(가구조사)

■ 자료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서울 도시정책지표

■ 현황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점수	5.18	5.37	5.56	5.54	5.93	6.02	6.38	6.41
만족율(%)	19.8	27.6	32.2	30.0	41.9	43.7	48.9	57.3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문화환경 만족도	5.93점	6.41점	7.10점	8.0점	41%

■ 목표치 산정근거

관련부서 의견 수렴 및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정

전략 04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

과제 10



생활주변의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확대한다.

지표

마을형 문화공간 수

■ 키워드

문화생활

■ 지표 정의

생활주변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을형 문화공간의 수

■ 필요성

생활권 내 시민·마을 단위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종전의 시설위주 지표에서 발전하여 실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마을형 문화공간 수를 지표로 설정하여 시민문화 활동기회를 넓히는 한편,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자생적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산출방법

마을예술창작소, 우리동네 북카페, 미디어센터 등의 수

■ 자료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 현황

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마을형 문화공간 수	11개소	73개소	135개소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마을형 문화공간 수	11개소(11)	135개소	375개소	1,000개소	34.1%

■ 목표치 산정근거

서울시정 4개년 계획 목표치(마을형 문화공간 2020년 375개소) 참고

4.3 경제 분야 지표

〈표 6-11〉 경제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키워드	지표(안)	산출방법	기준연도 (2010)	현황 (2013)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우수·숙련 인력	1. 벤처기업 수	서울시 내 벤처기업 수	3,706개 (08)	6,237개	10,000개	20,000개
	2. 창조산업 종사자 비율	(서울시 8대 산업 ¹⁾ 종사자수 / 전체 직업 종사자 수) × 100	23.4%	23.7%	30%	33%
질 높은 일자리 창출	3. 고용률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100	63.5%	64.9%	70%	72%
	4. 청년고용률	(만 15~29세 취업자 수 / 만 15~29세 생산가능인구) × 100	43.6%	43.9%(12)	50%	60%
글로벌 도시	5.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주거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 도시안전, 개방 및 친밀정도, 의사소통 정도의 7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	6.78점	6.86점	8점	9점
	6. 외국인 관광객 수	연간 방한 외국인 관광객수 × 서울방문율(연도에 따라 조정)	707만명	985만명	2,000만명	3,000만명
사회적 경제	7. 사회적경제기업 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수	522개	1,503개	8,000개	17,000개
	8. 공유단체·기업 수	서울시에 설립된 공유단체 및 공유 기업의 수	37개(13)	50개(14)	100개	200개
산업의 다양성	9. 제조업 종사자 수	9차 산업분류 상의 제조업 업체 종사자 수	272,510명	286,674명 (12)	310,000명	350,000명
	10.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	주말농장, 자투리 텃밭, 옥상텃밭 등 서울 시내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	29.1ha(11)	108ha	430ha	500ha

1) 8대 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MICE, 녹색, 금융, 바이오메디컬, 콘텐츠, IT, 융합, 디자인·패션



■ 키워드

우수·숙련 인력

■ 지표 정의

서울시 내 벤처기업 수

■ 필요성

2013년 서울의 6,237개 벤처기업 중 정보처리 및 S/W 산업의 비중은 47.0%, 전자부품, 의료 등의 제조업은 3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창조산업의 발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특허출원 및 기술지식 자본의 측면에서 벤처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이를 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산출방법

서울시 내 벤처기업 수

■ 자료출처

벤처인(기술보증기금), 서울특별시 경제비전 2030

■ 현황

지표	합계	제조업	건설, 운수	도소매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기타
벤처기업 수 (2013년도)	6,237	1,916	119	183	2,933	104	982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벤처기업 수	3,706개 (08)	6,237개	10,000개	20,000개	41.8%

■ 목표치 산정근거

서울특별시 경제비전 2030 목표치(2030년 20,000개)를 참고하여 산정

전략 01

창조경제 중심도시 조성

과제 2



창조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지표

창조산업 종사자 비율

■ 키워드

우수·숙련 인력

■ 지표 정의

전체 산업종사자 중 창조산업에 종사하는 서울시민의 비율

■ 필요성

서울은 전국 창조경제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식기반도시로서 연구소·대학 등 기반 인프라가 풍부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창조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조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 산출방법

$$(\text{서울시 8대 산업 종사자 수} / \text{전체 직업 종사자 수}) \times 100$$

*8대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MICE, 녹색, 금융, 바이오메디컬, 콘텐츠, IT, 융합, 디자인·패션

■ 자료출처

서울연구원 내부자료

■ 현황

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창조산업 종사자 비율	23.4%	23.6%	23.7%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창조산업 종사자 비율	23.4%	23.7%	30%	33%	4.5%

■ 목표치 산정근거

서울시 창조경제 및 창조산업 관련 정책을 참고하여 산정

전략 0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과제 3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지표

고용률

■ 키워드

질높은 일자리 창출

■ 지표 정의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필요성

일자리 관련 정책의 성과를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서 기능하는 한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인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산출방법

$(\text{취업자} / \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 자료출처

서울고용노동청(2014)

■ 현황

지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고용률	62.5%	63.5%	64.6%	64.6%	64.9%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고용률	63.5%	64.9%	70%	72%	21.5%

■ 목표치 산정근거

중앙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참고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정

전략 0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과제 4



청년 일자리를 활성화한다.

지표

청년고용률

■ 키워드

질높은 일자리 창출

■ 지표 정의

만 15~29세의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 필요성

청년실업이 고착화되면 경제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며,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체감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므로 지표를 모니터링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산출방법

$$(\text{만 15~29세 취업자 수} / \text{만 15~29세 생산가능인구}) \times 100$$

■ 자료출처

서울고용노동청(2014)

■ 현황

지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청년고용률	44.0%	43.6%	45.1%	43.9%	43.3%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청년고용률	43.6%	43.9%(12)	50%	60%	4.3%

■ 목표치 산정근거

중앙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목표치(청년고용률 2017년 47.7%)를 참고하여 서울시 적용



■ 키워드

글로벌 도시

■ 지표 정의

서울거주 외국인이 느끼는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 필요성

외국인을 위한 편의 인프라 및 지원기능 강화로 전반적인 생활환경 만족도를 향상시켜 투자 유치를 유도하고 글로벌 경제 도시로 거듭나고자 함.

■ 산출방법

주거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 도시안전, 개방 및 친밀정도, 의사소통 정도의 7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구조사)

■ 자료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서울 도시정책지표

■ 현황

지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6.52점	6.78점	6.81점	6.82점	6.86점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6.78점	6.86점	8점	9점	6.6%

■ 목표치 산정근거

만족도 변화 추이 및 관련 정책을 참조하여 추정

전략 03

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

과제 6



서울형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지표

외국인 관광객 수

■ 키워드

글로벌 도시

■ 지표 정의

연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

■ 필요성

관광수입을 통한 경제발전, 고품격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관광정책의 내실화를 통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함.

■ 산출방법

연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 × 서울방문율(연도에 따라 조정)

■ 자료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연도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현황

지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외국인 관광객 수(추정)	605만명	707만명	708만명	919만명	985만명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외국인 관광객 수	707만명	985만명	2,000만명	3,000만명	21.5%

■ 목표치 산정근거

서울시정 4개년 계획 목표치(외국인 관광객 2018년 2000만명)를 고려하여 산정



■ 키워드

사회적 경제

■ 지표 정의

서울시에 설립된 사회적경제기업의 수

■ 필요성

사회적경제기업은 청년·여성·고령자 대상의 혁신 일자리 창출, 대안적 주거 및 사교육 해소 방안 제시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으므로 이를 지표로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산출방법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수

■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현황

지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예비	인증		행안	서울형
사회적경제 기업 수	933개	431개	212개	171개	71개	40개

주) 2014년 1월 기준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사회적경제 기업 수	522개	1,503개	8,000개	17,000개	13.1%

■ 목표치 산정근거

서울시 사회적경제 현황 및 활성화 전략을 참고하여 목표치 설정

전략 04

사회적경제 확대와 산업 다양화

과제 8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

지표

공유단체·기업 수

■ 키워드

사회적경제

■ 지표 정의

서울시에 설립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수

■ 필요성

공유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이웃과 공동체 의식 형성, 과잉소비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사회문화·환경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의미 있는 지표임.

■ 산출방법

서울시에 설립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수

■ 자료출처

2014년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 현황

- 공유도시 서울선언('12.9), 조례 제정('12.12), 공유서울 BI 제작('13.2)
-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 2013년 37개, 2014년 50개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공유단체· 기업 수	37개(13)	50개(14)	100개	200개	20.6%

주) 공유촉진조례가 2012년 12월 제정됨에 따라 2013년부터 데이터 확보 가능

■ 목표치 산정근거

1년에 약 10개 단체·기업 지정을 목표치로 설정

전략 04

사회적경제 확대와 산업 다양화

과제 9



다양한 산업기반을 강화한다.

지표

제조업 종사자 수

■ 키워드

산업의 다양성

■ 지표 정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서울시민의 수

■ 필요성

도심형 제조업을 육성할 경우 간접고용 유발효과 및 국제경쟁력 향상 등의 파급효과가 발생하며, 그 결과 제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다양성 측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산출방법

9차 산업분류 상의 제조업 업체 종사자 수

■ 자료출처

부서 내부자료

■ 현황

지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제조업 종사자 수	294,649명	282,583명	272,510명	274,809명	286,674명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제조업 종사자 수	272,510명	286,674명(12)	310,000명	350,000명	37.8%

■ 목표치 산정근거

중앙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의 목표치를 참고하여 서울시 현황에 맞게 적용

전략 04

사회적경제 확대와 산업 다양화

과제 9



다양한 산업기반을 강화한다.

지표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

■ 키워드

산업의 다양성

■ 지표 정의

서울시민이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의 면적

■ 필요성

지역 먹거리 생산으로 식량안전 확보 및 도농상생, 시민의 건강 증진, 여가활동 증가, 공동체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사회문화·환경 모든 측면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며, 산업의 다양성 측면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산출방법

주말농장, 자투리 텃밭, 옥상텃밭 등 서울시내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

■ 자료출처

부서 내부자료

■ 현황

-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은 2011년 29.1ha에서 2012년 84.2ha, 2013년 108ha로 증가
- 도시텃밭은 2011년 100개소에서 2012년 1,673개소로 약 17배 증가

■ 달성도(2020년 목표치 기준)

지표	기준연도 (2010)	현황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달성도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	29.1ha(11)	108ha	430ha	500ha	19.7%

■ 목표치 산정근거

서울시 도시농업 관련 정책자료를 참고하고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목표치 산정

5.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방안

5.1 평가모델

1) 평가모델의 특징

- 최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지표를 수립한 국가와 도시에서 다양한 평가방안이 적용됨에 따라 서울시만의 독창적인 평가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가 시행하던 지속가능성 평가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가 시행하는 평가의 차별성이 요구됨. 녹색위와 지속위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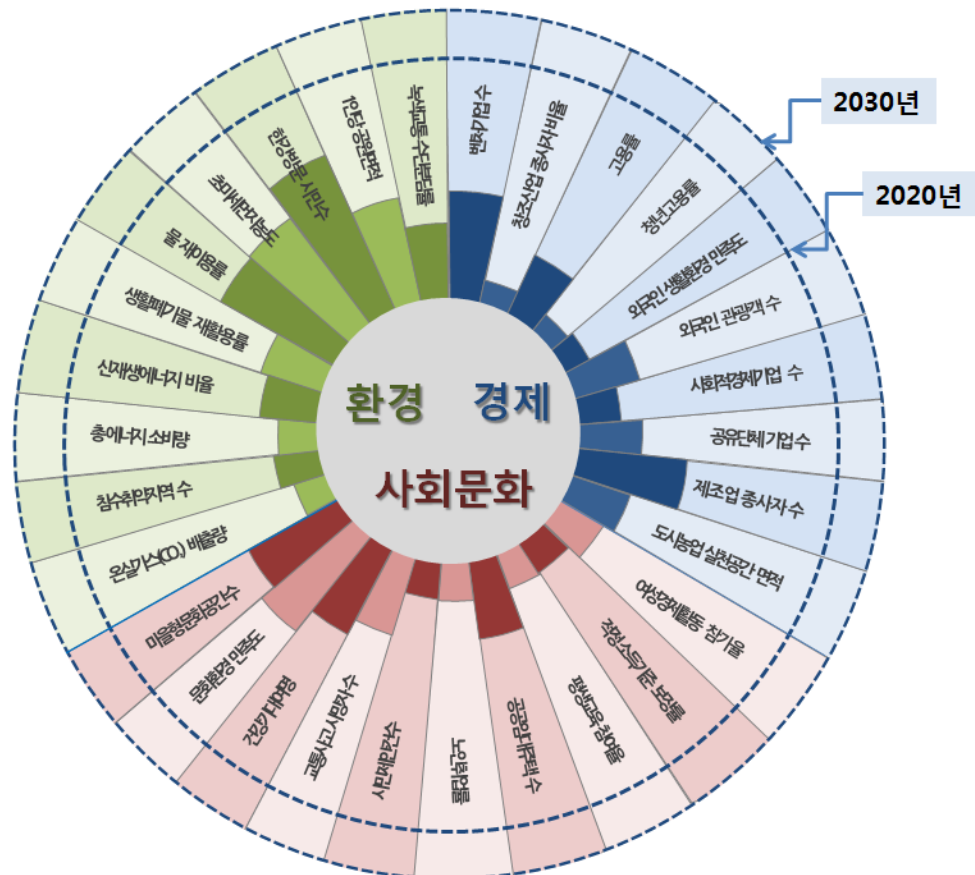
〈표 6-12〉 지속가능성 평가와 지속가능발전 평가의 차이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 평가
평가시기	행정계획 및 사업 입안 시 사전평가	과제, 전략, 사업 및 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에 대한 사후평가
평가주체	녹색위 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위원회	지속위 내 시정평가 T/F
평가방법	평가안건별로 위원들의 의견이 종합된 평가서가 작성되는 정성적 평가	정성적 평가와 더불어 지표 및 수레바퀴 모델을 활용한 정량적 평가도 함께 시행
평가절차	주관부서가 지속가능성 평가 사전협의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 간사(환경과장)에게 당해 행정계획 또는 사업안을 제출한 후 지속위에서 평가 안건으로 결정되면 부서가 다시 지속위에 해당계획 및 사업안을 설명하는 방식	관련부서가 지속위 시정평가 T/F에 자료를 송부하면 평가 T/F가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시행한 후 피드백
특징	환경 중심으로 시정의 주요 행정계획 및 사업들이 환경정책과 통합 연계하여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환경, 사회문화, 경제에 동일한 비중을 두는 한편 통합적 관점에서 고려

- 녹색위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차별화를 위해 정성적 평가뿐만 아니라 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계산을 통한 정량적 평가를 시행하여 구체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또한 체계화된 평가방식의 도입으로 정책 적용의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평가결과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표의 현황과 목표치까지의 도달 정도를 수레바퀴 모델로 제시하여 목표달성도를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지표의 정보 전달력을 높이고자 하였음.

2) 수레바퀴 모델

- 본 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15~2019년이지만 지속가능발전의 이론적 배경 및 특성 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2020년의 중기 목표치와 2030년의 장기 목표치를 각각 설정하여 거시적인 시각에서 목표의 달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수레바퀴 모델에서 원둘레의 점선부분은 각 지표의 2020년, 2030년 목표치를 나타냄.
- 바퀴살의 끝부분은 각 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현재의 달성도(2013년 현황)를 나타내며, 30개 지속가능발전 지표(환경 10개, 사회문화 10개, 경제 10개)의 달성도를 비율로 표시 가능함.
- 30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각각의 목표치를 달성하여 원 모양에 근접할수록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며, 수레바퀴 모델은 환경, 사회문화, 경제의 통합적 관점에서 어떤 지표가 목표치에 얼마나 접근하였는가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음.



〈그림 6-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모델(수레바퀴 모델)

$$\text{달성도} = \{ (\text{현황} - \text{기준연도}) / (\text{목표연도} - \text{기준연도}) \} * 100$$

5.2 평가절차

1) 평가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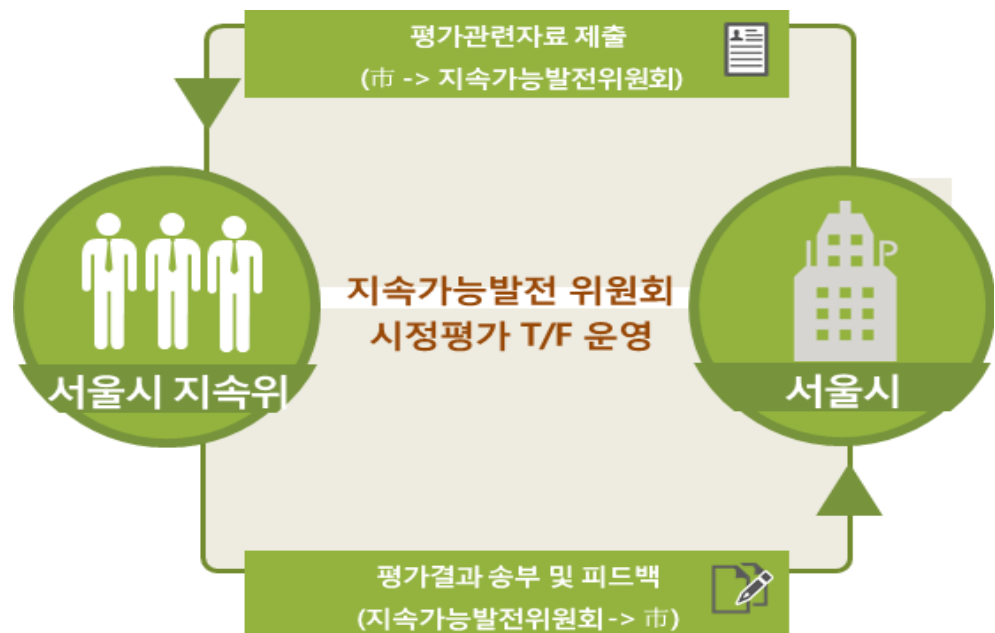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시정 전반 및 그 밖에 지속가능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평가대상으로 함.

2) 평가주기 및 시행주체

- 서울시정 전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함.
- 지속가능성 평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에 시정평가T/F를 구성하여 운영함.

3) 평가방법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모델인 수레바퀴 모델을 활용하여 평가함.
-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해당되는 자료의 관련 데이터를 각 부서에서 시정평가 T/F에 송부하면 T/F는 각 지표의 산출식을 적용하여 분석한 후 수레바퀴 모델에 적용함. 모델 적용 결과를 검토하여 각 분야의 지속가능성이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에 자리매김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평가결과를 다시 관련부서에 송부하여 피드백(Feedback)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속가능성의 증진을 위하여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보완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림 6-3〉 지속가능발전 평가절차

5.3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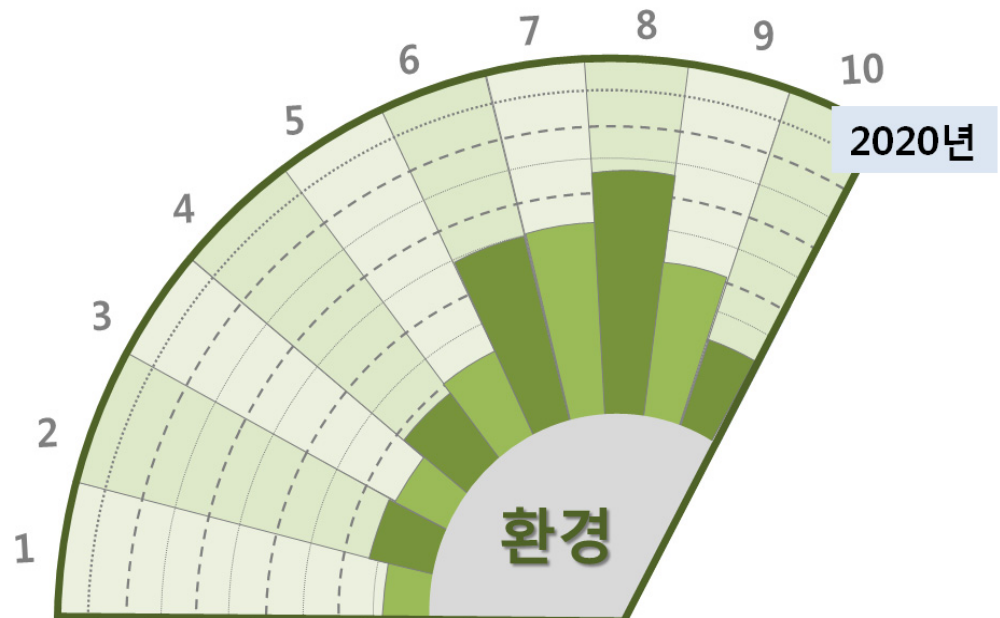
1) 환경 분야 평가

수레바퀴 모델 평가 시 기준연도는 2010년,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바퀴살은 각 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2013년도의 달성도를 나타냄.

〈표 6-13〉 환경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지표(안)	기준연도 (2010)	현황 (2013)	목표치 (2020)	달성도
1. 온실가스(CO ₂)배출량	49,751천톤CO ₂	48,551천톤CO ₂ (12)	35,562천톤CO ₂	8.5%
2. 침수취약지역 수	34개 소	29개 소	0개 소	14.7%
3. 총 에너지 소비량	15,717천TOE	15,496천TOE (12)	13,787천TOE	11.5%
4. 신재생에너지비율	0.6%	1.4%(12)	5%	18.2%
5.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43%	45.9%	57.3%	20.3%
6. 물 재이용률	3.86%	9.1%	14.4%	49.7%
7. 초미세먼지 농도	30 $\mu\text{g}/\text{m}^3$ (07)	25 $\mu\text{g}/\text{m}^3$	20 $\mu\text{g}/\text{m}^3$	50%
8. 한강방문 시민 수	684만명 (12)	944만명	1,150만명	67.8%
9. 1인당 공원면적	16.06 m^2	16.37 m^2	17.5 m^2	40.3%
10. 녹색교통 수단분담률	70%	71.3% (12)	75%	26%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모델인 수레바퀴 모델을 적용하여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음.



〈그림 6-4〉 환경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결과

- 온실가스(CO₂) 배출량의 최근 데이터는 2012년도 자료이며, 총 48,551천톤을 배출하여 2020년 목표치를 8.5%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원전하나줄이기 1」의 성과를 바탕으로 「원전하나줄이기 2」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지표로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계속 된다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10년 침수취약지역은 34개소였으나, 풍수해를 방지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3년간 총 7개소를 해소하였음. 그러나 2013년 기준으로 목표치 달성도는 14.7%에 불과하여 향후에도 하수관거 개선, 빗물펌프장 17개와 빗물저류배수시설 1개 운영, 하천 3곳 확장 등을 통해 침수취약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시행할 것이 요구됨.
- 총 에너지 소비량의 최근 데이터는 2012년 자료이며, 총 15,496천TOE를 소비하여 목표치를 11.5% 달성하였음. 특히 서울시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극심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기본계획의 에너지 분야 과제를 ‘에너지 소비·생산의 효율을 높인다’로 설정하고 에너지 절약 생활화, 분산형 전원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총 에너지 소비량 지표를 모니터링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 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최근 데이터는 2012년 자료로서 총 에너지 공급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1.4%로 파악되었음. 이는 2020년 목표치의 18.2%에 달하는 수치로서 기본계획에서는 달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시민이 건설하는 건물태양광발전소 확대’를 세부 사업으로 설정하였음. 그러나 시민을 대상으로 민선 5기 시정운영을 평가한 결과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확대’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또한 총 에너지 소비량 목표치의 달성도가 낮은 상황이므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된다면 두 개 지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2013년 45.9%로 나타나 2020년 목표치의 달성도가 20.3%로 나타남. 현재 서울시는 세계제일의 재활용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로서 2020년까지 57.3%, 2030년까지 66%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기본계획에서도 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도입, 생활폐기물의 자체처리기반 구축, 시민주도형 나눔장터 확대 운영,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확대 구축 등의 사업을 설정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시민참여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목표치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물 재이용률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및 수질오염의 발생빈도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임.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3년 「서울특별시 물재이용 관리계획」을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수립한 바 있으며, 그 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지표에 포함하였음. 2013년 기준

물 재이용률은 9.1%로 목표치를 49.7%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달성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물 사용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이용 교육 및 홍보, 중수도 시설 설치 시 다양한 지원, 소규모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면 2020년 목표치를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기준연도를 2010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나, 초미세먼지 농도의 2010년 현황은 $25\mu\text{g}/\text{m}^3$ 으로서 2013년의 현황과 동일하게 나타나 달성도 산출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시 달성도가 0%로 나타남. 따라서 목표치 달성도의 계산과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준연도를 2007년으로 조정하였음. 계산 결과 2013년 기준 목표치 달성도는 50%로 나타났으며, 이는 그간 초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한강방문 시민 수는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의 시행으로 한강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수를 집계하여 계산되며, 프로젝트가 최근에 시행됨에 따라 기준연도를 2012년으로 조정하였음. 목표치 달성도는 67.8%로 나타나 환경 분야의 지표 중 가장 높은 달성도를 기록하였음. 지속가능성 요인 설문조사에서 서울의 강점으로 한강과 같은 자연환경의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바 있음. 서울시민은 한강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음.
- 서울시는 1인당 공원면적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목표치 달성도는 40.3%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음. 그러나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의 구별 편차가 크고, 걸어서 10분 거리 내 공원서비스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40%에 달하고 있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목표 달성도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기본계획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며 공원녹지를 시민이 돌보고 가꾸고 즐기는 녹색문화로 확산하여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도시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세부 사업으로 설정하여 지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 녹색교통 수단분담률의 최근 자료는 2012년 71.3%로서 목표치를 26% 달성하였음. 특히 서울시는 보행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통비전 2030 또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보행·자전거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이를 지속가능발전 지표로 설정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특히 녹색교통 수단분담률 지표를 ‘초미세먼지 농도’ 지표와 병행하여 관리하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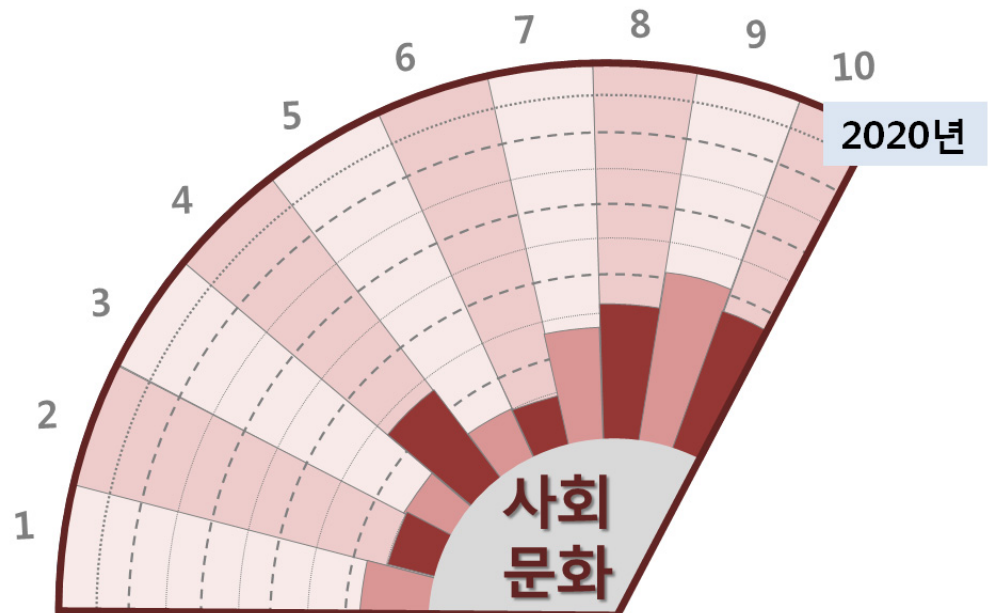
2) 사회문화 분야 평가

수레바퀴 모델 평가시 기준연도는 2010년,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바퀴살은 각 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2013년도의 달성도를 나타냄.

〈표 6-14〉 사회문화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지표(안)	기준연도 (2010)	현황 (2013)	목표치 (2020)	달성도
1.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51.2%	52.6%	60%	15.9%
2.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84.4%(13)	84.4%	88.2%	—
3. 평생교육 참여율	32.6%	34.4%	50%	10.3%
4. 공공임대주택 수(누계)	164,581호	215,530호	357,000호	26.3%
5. 노인취업률	23.6%	24.8%	35%	10.5%
6. 시민제안건수	7,878건(12)	8,178건	11,000건	9.6%
7. 교통사고 사망자 수	429명	371명	212명	26.7%
8. 건강기대여명	73.18세	74.38세	77세	31.4%
9. 문화환경 만족도	5.93점	6.41점	7.10점	41%
10. 마을형 문화공간 수	11개소(11)	135개소	375개소	34.1%

평가모델인 수레바퀴 모델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레바퀴 모형이 도출되었음.



〈그림 6-5〉 사회문화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결과

주) 수레바퀴 바퀴살 2번은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지표로, 2013년부터 데이터가 구축되어 달성도 계산에 제약이 있음. 사회분야 지표들의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사회문화 분야의 가장 낮은 달성도(시민 제안건수, 9.6%)를 이 지표에 적용하여 표시하였음. 향후 데이터가 보완되는 대로 달성도를 산출하여 적용할 계획임.

- 2013년도 현황 기준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목표치 달성도는 15.9%로 파악되었음. 앞서 현황에서 살펴보았듯 참가율은 2005년 이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OECD 국가별 평균(62.3%)과 비교하면 여전히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지표는 양성평등의 구현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의 잠재적 노동력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로서 목표치 달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기본계획의 전략과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표를 꾸준히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은 서울시민의 상대적 빈곤 축소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설정된 지표임. 이 지표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성과지표이기도 하며, 절대빈곤층에만 맞추어져 있던 소득보장정책에서 벗어나 서울의 경제사회적 발전 정도를 반영하고 소득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적정 소득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러나 지표 데이터의 구축이 2013년도부터 시행된 관계로 기준연도의 설정과 달성도의 계산에 제약이 있음. 그러나 2014년도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에 따르면 당해연도의 목표치를 95.7%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서울시의 정책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향후 지표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서울시민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3년 34.4%로 2020년 목표치를 10.3%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러나 2020년 50%, 2030년 70%로 현황 대비 약 두 배 이상의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다는 점, 2008년 26.4%이던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달성도가 낮은 상황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님. 하지만 평생교육 수요의 증가와 예비노인(120만), 베이비부머(149만)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서울시민대학을 개방형 자유시민대학으로 확대 운영,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의 세부 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음.
- 최근 주택 수요가 다변화됨에 따라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이를 주택분야의 핵심지표로 선정하여 관리하고자 하였음. 서울시는 1989년 이후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왔으며, 2020년 목표치 달성도 또한 26.3%로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남.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임대주택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주거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강화, 주거복지 활성화, 선진임대차 도입 등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할 계획임.
- 65세 이상 노인취업률은 2013년 24.8%로 2020년 목표치를 10.5% 달성하였음. 노인취업률 지표는 여러 분야와 연계되어 있는 지표로서 목표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노인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으며, 취업률의 상승은 노인자살률을 낮추고 건강기대여명을 증가시킬 수 있음. 또한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청년들과의 소통을 도모할 수 있고, 보충적 소득지원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서울시는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제2인생설계를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목

표치 달성에 더욱 힘써야 함.

- 2011년까지 서울시는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제안건수가 상당히 많았음(2011년 기준 15,897건). 그러나 2012년 인센티브가 폐지됨에 따라 제안건수가 7,878건으로 감소하였음. 따라서 2010년 기준연도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달성도가 마이너스로 계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정책의 일관성 또한 유지되지 않아 기준연도를 2012년으로 조정하였음. 기준연도를 2012년으로 하였을 때, 달성도는 9.6%이나 기준연도와 현황연도가 1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서울시는 시민제안을 2011년 84건, 2012년 125건, 2013년 131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반영건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시민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화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의 전략과 과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한다면 목표 달성도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기대됨.
-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여 목표치 달성도는 26.7%로 양호하게 나타남. 이는 서울시가 2002년부터 매년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해왔으며, 2013년부터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추진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온 결과라고 판단됨. 그러나 주요 선진도시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사망자 수가 높아 관련 정책을 꾸준히 시행할 필요 있음. 이를 위해 안전 분야 세부사업으로 교통안전 사전대책의 종합적 수립,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추진을 설정하고 지표와 함께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건강기대여명은 2010년 73.18세에서 2013년 74.38세로 증가하여 목표치를 31.4% 달성하였음. 그러나 건강기대여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의료 취약계층 또한 증가하고 있어 건강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따라서 건강 분야의 과제를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로 정하고, 의료·보건·복지 통합서비스의 제공, 마을건강 생태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기대여명을 효과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을 제안함.
- 서울시민이 느끼는 문화환경 만족도는 2010년 5.93점에서 2013년 6.41점으로 상승하여 사회문화 분야에서 달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문화환경 만족도는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서 서울시 문화환경의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함께 향상되었다고 판단됨.
- 서울시는 마을형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011년 11개소였던 공간 수가 2013년 135개로 12배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목표치 달성도 또한 34.1%로 양호하게 나타남. 문화환경 만족도와 더불어 달성도가 상위권에 있어 전반적으로 문화 분야의 지속가능성이 증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지표 관리를 통해 생활주변의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문화생태계를 조성해나가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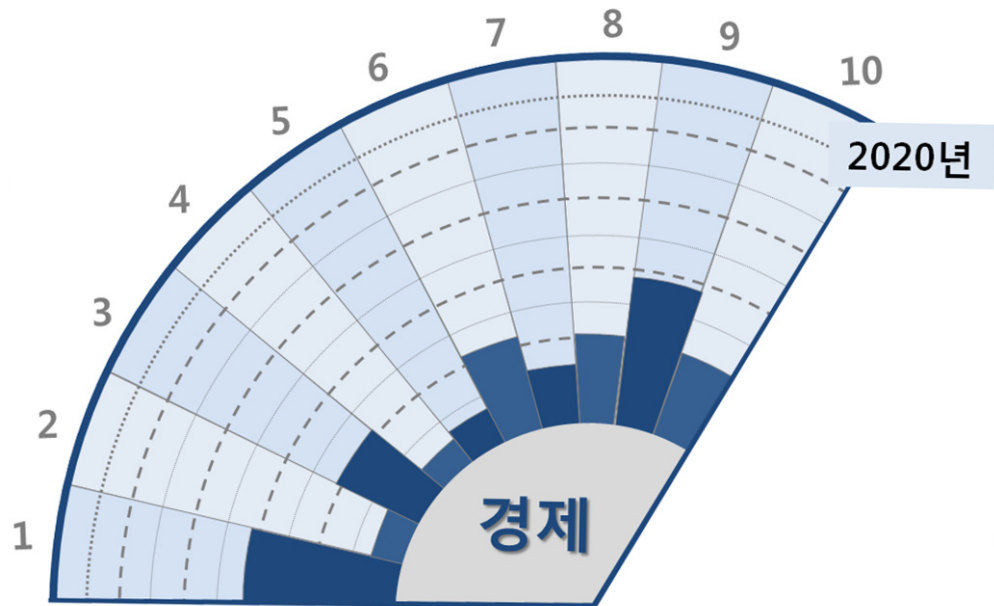
3) 경제 분야 평가

수레바퀴 모델 평가 시 기준연도는 2010년,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바퀴살은 각 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2013년도의 달성도를 나타냄.

〈표 6-15〉 경제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지표(안)	기준연도 (2010)	현황 (2013)	목표치 (2020)	달성도
1. 벤처기업 수	3,706개 (08)	6,237개	10,000개	41.8%
2. 창조산업 종사자 비율	23.4%	23.7%	30%	4.5%
3. 고용률	63.5%	64.9%	70%	21.5%
4. 청년고용률	43.6%	43.9%(12)	50%	4.7%
5.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6.78점	6.86점	8점	6.6%
6. 외국인 관광객 수	725만 명	985만명	2,000만명	21.5%
7. 사회적경제기업 수	522개	1,503개	8,000개	13.1%
8. 공유단체·기업 수	37개 (13)	50개 (14)	100개	20.6%
9. 제조업 종사자 수	272,510명	286,674명(12)	310,000명	37.8%
10.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	29.1ha(11)	108ha	430ha	19.7%

평가모델인 수레바퀴 모델을 적용하여 경제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평가 결과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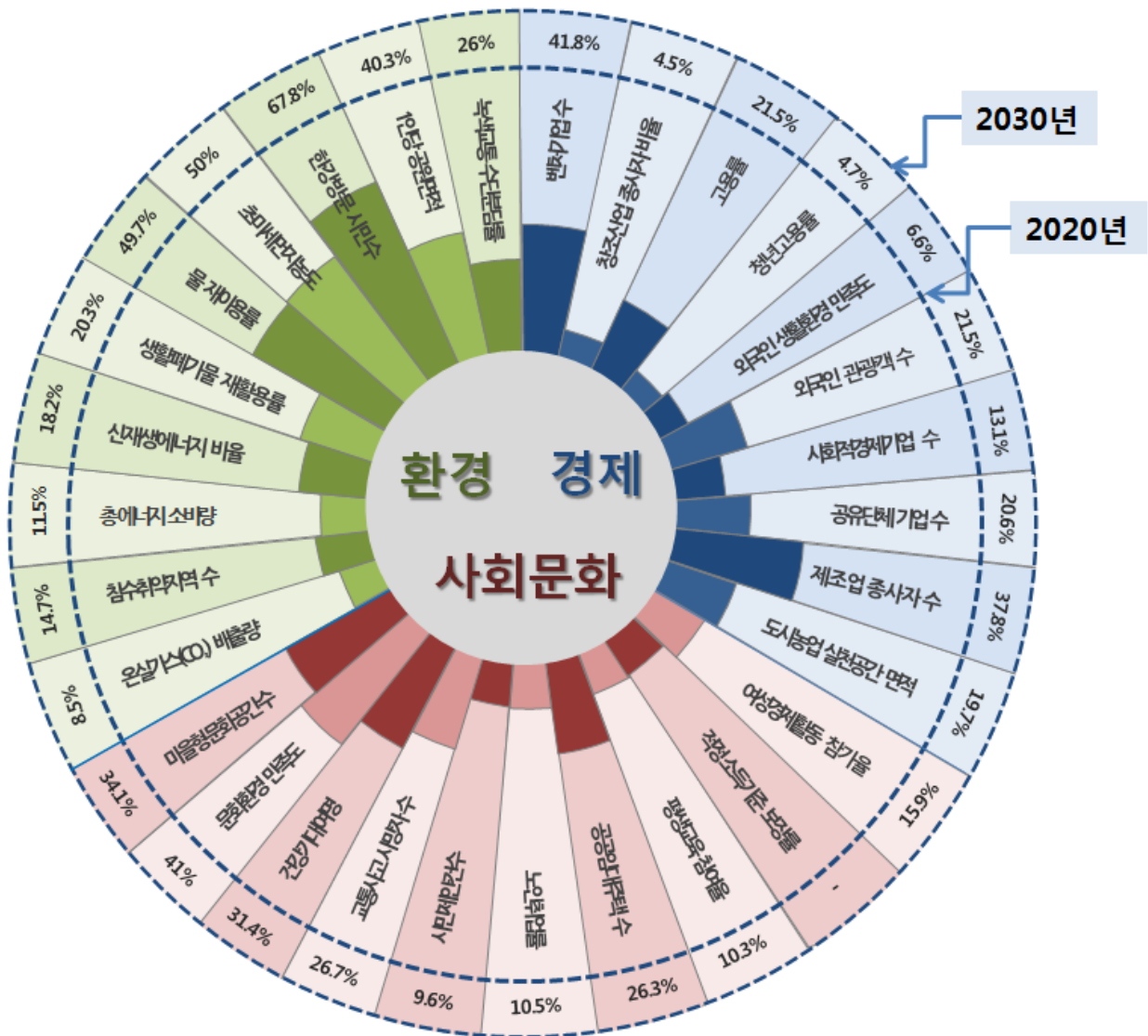
〈그림 6-6〉 경제 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결과

- 벤처기업 수 지표의 목표치 달성도는 41.8%이며, 2010년도 자료가 없어 2008년을 기준연도로 사용하였음. 벤처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며, 창조산업 육성의 중요한 축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를 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경제비전 2030」 또한 서울형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2030년 벤처기업 수 2만개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였음. 목표 달성을 위해 홍릉을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핵심거점으로 조성하고, 신홍합 밸리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등이 필요함.
- 서울시는 창조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하기 위하여 창조계층의 양성에 힘써 왔음. 그러나 현황에서 살펴보았듯 창조계층 종사자의 산정은 창조산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서울연구원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MICE, 녹색, 금융, 바이오메디컬, 콘텐츠, IT, 융합, 디자인·패션의 8개 산업을 창조산업으로 규정하였음. 이를 적용하여 산출했을 때, 2013년 기준 창조산업 종사자의 비율은 23.7%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달성도는 4.5%로 미미하게 나타나 목표치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창조적 인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인재양성 사업과 소셜 이노베이터 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음. 특히 서울시는 전국 창조경제(문화콘텐츠 산업 기준) 매출액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창조산업 종사자 비율’ 지표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의 고용률은 2013년 64.9%로 나타나 2020년 목표치의 21.5%를 달성하였음. 특히 여성, 중장년, 서비스업, 상용직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여 고용률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서울고용노동청, 2014).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이 아직도 30%를 상회하고 있어 고용률의 질적 내실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청년고용률은 2013년 43.3%로 나타났으나 달성도 산출식 적용 결과 마이너스 수치로 계산되어 타 지표와의 용이한 비교를 위해 2012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음. 청년고용률 지표의 달성도는 4.7%에 불과하며, 2013년 30대, 40대, 60세 이상의 고용률이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한 것에 비해 약 0.5%p 하락하였음. 특히 2000년 이후 최저로 2012년부터 2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청년고용률은 전국적으로 낮으며, 서울의 청년고용률은 7개 특별시·광역시 중 가장 높고, 16개시·도 중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청년고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됨.
-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는 2010년 6.78점에서 2013년 6.86점으로 상승하여 2020년 목표치를 6.6% 달성하였음. 특히 경제환경(6.55점), 의사소통정도(6.46점)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외국인 투자유치 유도 및 글로벌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지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다문화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교육, 주거, 의료, 투자 등 외국인이 살기 편한 글로벌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다문화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기본계획의 과제와 사업으로 제안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지표의 목표치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010년 522개에서 2013년 1,503개로 3배가량 증가하였으나 달성도는 13.1%에 불과함. 이는 2020년 목표치를 8,000개로 높게 설정하였기 때문임.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사회, 문화, 경제 분야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유의 활성화는 환경, 사회문화, 경제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또한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2년 ‘공유도시 서울’ 만들기를 선언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음. 지표의 기준연도는 2010년이 원칙이지만 서울시 공유촉진조례가 2012년 12월에 제정됨에 따라 2013년부터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여 기준연도를 2013년, 현황연도를 2014년으로 설정하게 되었음. 2020년 목표치는 20.6%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서울시는 향후에도 1년에 약 10개의 공유단체·기업을 지정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의 과제와 같이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일상생활 속 공유문화를 확산하고, 공유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가 병행된다면 목표치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 다양화를 대표하는 핵심지표로 ‘제조업 종사자 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최근 자료인 2012년 자료를 기준(286,674명)으로 했을 때 2020년 목표치를 37.8% 달성한 것으로 파악됨. 만약 제조업이 약화되어 유휴인력이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집중된다면 서비스업의 포화현상 및 과다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 실정을 고려할 때 제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성수, 종로, 중구, 을지로 등에 밀집되어 있는 도심형 제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의 추진동력을 창출하기를 기대함.
-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 데이터는 2011년부터 축적되어 기준연도를 2011년으로 조정하였으며, 2011년 29.1ha에 비해 2013년 약 4배 증가한 108ha로 나타나 달성도는 19.7%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전체 면적 중 서울변두리를 활용한 주말농장이 65%, 개개발제한구역과 팔당호 주변이 전체 주말농장의 약 70%를 차지하여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이 일상화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지금까지 실천공간 확보에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생활주변에 텃밭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4)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결과 종합

지속가능발전 평가모델인 수레바퀴 모델을 적용하여 서울시의 환경, 사회문화, 경제 각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그림 6-7〉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결과

- 평가모델을 적용한 결과 201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13년 현황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환경 분야의 달성도는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의 달성도가 다른 환경 분야 지표들보다 낮게 나타나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에너지 관련 지표

의 달성도가 10%대(총 에너지소비량 11.5%, 신재생에너지 비율 18.2%)에 머물러 있어 에너지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초미세먼지 농도(50%), 한강방문 시민수(67.8%), 1인당 공원면적(40.3%) 지표 달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서울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자연환경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회문화 분야는 전반적인 수준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평생교육 참여율, 시민제안건수 지표의 달성도가 낮게 나타나 양성평등 및 교육 분야의 관리가 필요하며,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또한 초고령화 사회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를 대비하여 어르신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함.
- 문화 관련 지표의 달성도는 사회문화 분야의 타 지표들보다 높게 나타나(문화환경 만족도 41%, 마을형 문화공간 수 34.1%) 서울시가 문화환경과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음.
- 경제 분야는 지표 간 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남. 특히 창조산업 종사자 비율과 청년고용률,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의 목표치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벤처기업 수 및 제조업 종사자 수, 공유단체·기업 수의 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서울의 산업 다양성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서울시는 1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치 달성도를 평가하여 수레바퀴 모형을 새로 작성할 계획임.
- 30개 바퀴살의 전체적인 형태가 원모양에 근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표 관리를 해야 함.

5) 향후 추진방안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수레바퀴 모델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수치로 제공하고자 하였음. 평가결과의 공유와 홍보를 통해 시정에 지속가능발전을 주류화하는 한편 소통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지표의 소통 기능은 비단 서울시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타 지자체 나아가 해외 국가와 도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수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시 차원의 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와 같은 ‘도시 지속가능성 지수(Urban Sustainability Index)’를 개발하여 세계도시들과 서울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기초로 지속가능발전 지수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임. 이 지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세계 도시들과 비교하는 한편,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에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6-16〉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지수 산출 체계(안)



- 지표별 가중치, 키워드별 가중치, 분야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속가능발전 지수를 산출할 수 있을 것임. 가중치는 일반적인 지수 산출방법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결정하는 방법이 있음. 또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수립과정에서 구축된 725개의 지표 풀(pool)을 분석하여 여러 지표체계에 중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지수는 산출된 값을 통한 비교를 목적으로 개발됨. 따라서 서울시가 향후 지속가능발전 지수를 개발하게 된다면, 세계 도시들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역적 특색이 강한 지표보다는 보편적인 지표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역시 지표은행 및 지표 풀(Pool)을 참고할 것을 제안함.

07 실행력 확보방안

- 1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 2 지속가능발전 의제 발굴
- 3 사회적 인식기반 확대
- 4 지속가능발전 교육 추진
- 5 법규와 제도 개선
- 6 지속가능발전 조직 체계 개편
- 7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8 총괄과 재정계획

1.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1.1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 평가와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1) 지속가능발전 평가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주요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평가 및 자문을 수행하며,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기반으로 서울시정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함.
- 평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 시정평가 T/F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자 함. 시정평가 T/F를 운영함으로써 통합적인 시각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예를 들어 경제 분야의 ‘공유단체 기업 수’ 지표의 경우, 공유단체의 활성화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이웃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켜 사회문화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며, 과잉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문제도 해결하는 지표이므로 경제·사회문화·환경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협력하여 지표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평가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핵심지표 30개(환경 10개, 사회문화 10개, 경제 10개)를 수레바퀴 평가모델에 적용하고 2020년 목표치 대비 현 시점의 지속가능발전 달성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핵심지표 이외에도 지표은행(87개 지표)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 평가 결과 핵심지표가 정책여건 및 상황의 변화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목표치 또한 수정·보완될 수 있음. 핵심지표를 변경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지표은행의 지표를 고려하기로 함.

2)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또한 지속가능발전 평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에 시정평가 T/F를 구성하여 운영함.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각 실·국·본부 및 자치구 등과 공유할 계획임.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따른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기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절성 검토와 이에 대한 보완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됨.

1.2 민선 6기 핵심정책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평가

-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대한 환경·사회문화·경제의 통합적 접근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선 6기 핵심과제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평가를 시행하고자 함. 구체적인 평가대상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25개 핵심과제 중 지속가능발전 고려가 필요한 정책을 선정하여 진행하고자 함.

〈표 7-1〉 서울시정 4개년 계획 25개 핵심과제

분야	과제
안전한 도시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를 실행하겠습니다
	도심차도를 줄이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침수 취약지역을 해소하겠습니다
	여성·어린이 안전특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따뜻한 도시	평생동안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천 개 더 늘리겠습니다
	쾌적하고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치료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도시마을을 삶의 터전으로 되살리겠습니다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요양과 장애인 돌봄, 서울시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꿈꾸는 도시	서울만의 창조경제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심산업 활력의 촉매, 세운상가를 되살리겠습니다
	2천만이 찾는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MICE 개최순위 세계 3위 도시가 되겠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육성을 지원하고 청년과 여성일자리를 더 늘리겠습니다
	5대 문화기반시설을 만들어 문화향수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서울혁신파크를 만들겠습니다
숨쉬는 도시	초미세먼지를 20% 이상 줄여 시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를 늘리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를 공원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한강을 재미있고 신나는 생태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시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시민문화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 평가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에 정책평가 T/F가 주체가 되어 실행하고자 함.
- 핵심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성평가의 방법으로 이루어짐. 정책평가 T/F 및 기획조정회의에서 의제를 선정한 후, 관련 부서에 정책 보고를 하는 단계를 거쳐 정책평가 T/F에서 평가를 시행하게 됨. 이 때 필요시 관련 부서와 추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평가 결과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며, 의결된 평가의견을 송부한 후, 각 부서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2. 지속가능발전 의제 발굴

2.1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제 논의와 새로운 정책 의제 제안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는 시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규·복합 의제를 발굴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의제발굴 T/F가 이를 추진함. 의제는 지속위 위원, 공무원, 시민 중 누구나 수시로 제안할 수 있음.
- 의제 발굴대상은 크게 신규의제, 지표개선, 복합의제로 구분할 수 있음. 신규의제란 환경, 사회문화,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의제를 의미함. 복합의제란 환경, 사회문화, 경제 각 분야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의제를 말하며,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선방안과 신규지표의 발굴 또한 대상이 됨.
- 지속위 위원, 시민, 공무원이 제안한 의제는 우선 의제발굴 T/F에 회부되어 타당성과 적용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기획조정회의에서 검토된 의제를 채택함.
- 채택된 의제는 의제발굴 T/F에서 연구조사를 시행하게 됨. 그러나 의제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연구용역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연구된 의제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최종 채택되며, 각 부서에 연구결과를 송부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함.

〈표 7-2〉 지속가능발전 의제 발굴 및 채택 과정

단계	주체	내용
제안 ↓	지속위, 시민, 공무원	신규의제, 지표개선, 복합의제 제안
검토 ↓	의제발굴 T/F	타당성 및 정책 적용가능여부 검토
의제채택 ↓	기획조정위원회	2차 검토 및 논의 후 의제 채택
연구조사 ↓	의제발굴 T/F	채택된 의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수행
의결 ↓	전체회의	연구조사 결과 검토 및 의결
연구결과 송부	관련부서	관련부서에 연구결과를 송부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3. 사회적 인식기반 확대

3.1 라운드테이블 개최

1) 추진대상

- 다양한 주체들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고자 함. 참여대상은 시 위원회, 공무원, 시민 모두를 포함함.

〈표 7-3〉 라운드테이블 참여대상

세부구성(안)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관련 논의가 필요한 20개 주요 위원회 (건축위, 교통위, 녹색서울시민위, 도시계획위, 문화도시정책자문위 등)
공무원	구청 공무원, 자치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포함
시민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2) 추진방향

- 다양한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사례 공유, 정책제언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공론 활성화 및 거버넌스 강화를 추진하고자 함.

3) 운영내용

- 운영내용은 참여대상별로 세분화하였음. 서울시 위원회 대상 라운드테이블은 기본계획, 지속가능보고서 등의 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운영되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라운드테이블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담당자, 자치구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임. 또한 은평혁신파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라운드테이블’을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개최할 예정임.

3.2 시민 지속가능참여단(가칭) 운영

1) 대상

- 대학생, 회사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여러 분야에 속해 있는 20~30대 청년층 약 40명을 대상으로 함.

2) 운영기간

- 2015년 3월~11월까지 약 9개월간 운영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인식 확산 T/F가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됨.

3) 구성방법

- 지속가능발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고 싶거나 정책 제언을 원하는 일반시민을 지원형식으로 공개 모집함.
-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높은 대학생 혹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관련 학과의 지원을 받아 대학에서 추천함.
- 관련 분야 시민단체 활동가의 지원 및 추천을 통해 구성함.

4) 활동내용

(1) 지속가능발전 이해 향상

- 서울시 정책박람회 운영 결과 일반 시민들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음.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평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 서울시정 핵심정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현장방문을 병행할 예정임. 또한 교육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시민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시키고자 함.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평가 의견 제시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보고서는 책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며, 평가 의견을 열람한 시민 중에서 이의가 있거나 수정·보완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사람은 시민참여단 참가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시민들은 시정 및 주요정책 평가 등 지속위 평가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배심원 역할을 수행하게 됨.

(3) 시민참여 활성화

-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UCC 등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여 시민의 지속가능발전 참여 기회를 제공함. 또한 지속가능성 키워드(지표)은행을 운영하여 우수 키워드(지표)의 경우 서울시 평가지표에 반영을 검토하는 한편 홍보카피로 활용하고자 함.

(4)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제언 등

- 서울시 정책박람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제언 부스를 운영한 결과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특히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이 많이 제안되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지표 수립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음.
- 미국 뉴욕시와 캐나다 킹스턴의 경우에도 시민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성한 바 있음.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지표 수립 시 집단지성 접근방법 및 키워드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계획의 보완 및 평가 과정에서도 시민 참여가 확보되어야 함.
-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정책 제언을 수렴하는 한편,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또한 적극 반영할 계획임.
- 시민참여단에서 제안된 정책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회부되어 타당성과 적용가능성 여부를 논의하게 됨. 필요시 외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의 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음.

4. 지속가능발전 교육 추진

4.1 공무원 직급별 교육 실시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추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고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바탕으로 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역량을 배양하고자 함.

1) 추진방법

-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향상과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교육은 함께서울 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임.
- 교육대상은 시장단, 실·본부·국장, 4급 이상 공무원 및 시 공무원 약 200여 명이며, 직급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표 7-4〉 대상별 교육내용

대상	내용	
	공통	직급별 내용
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이 서울시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부 및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현황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지표에 대한 이해도 향상 지속가능발전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수립 역량 강화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추진 역량 강화 부서별 협력체계의 필요성 및 구체적 추진방안

- 교육의 주체는 지속위 내에 인식확산 T/F를 중심으로 함. T/F는 市의 지속가능발전 전담팀과 협력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음. 또한 필요시 관련 기관 종사자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음.

4.2 인재개발원 내 지속가능발전 이해향상 과목 편성

- 신임리더, 5급 승진리더, 6급 실무전문가 양성 등을 대상과정으로 하며, 교육의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이해도 향상을 중심으로 편성됨.

〈표 7-5〉 지속가능발전 교육내용

구분	내용
지속가능발전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지속가능발전 가치의 중요성 및 필요성
지속가능발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의 국제사회 동향 중앙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입법동향 및 위원회 운영 현황 해외 지속가능발전 관련 부서 및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국내외 주요 추진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지표 수립 현황 중앙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평가보고서 체계의 이해 국내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례 서울시 추진현황(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와 유관 업무 등)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비전, 전략, 목표, 과제의 이해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구성과 필요성 이해
지표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평가 사례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뉴욕시, 산타모니카 시 등 독창적인 지표 평가방법 소개 국가 지속가능발전 평가보고서의 평가 방법 이해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 모델(수레바퀴 모델)의 이해

5. 법규와 제도 개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2007년 8월 3일자로 법률 제8612호로 공포되어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추진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었음.
- 그러나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보면 환경보전 부분이 부족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측면이 배제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4년 5월 22일 김상희 의원 외 17인이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상정하였음.
- 「지속가능발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정계획이 되므로 이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법」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5조 제1항, 제6조 3항). 이에 따라 서울시는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어 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함(제13조 제1항, 제2항). 이에 따라 환경, 사회문화, 경제 분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에 기반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여야 하므로(제14조 제4항), 이를 준용하여 서울시 또한 지속가능성 평가를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함.

〈표 7-6〉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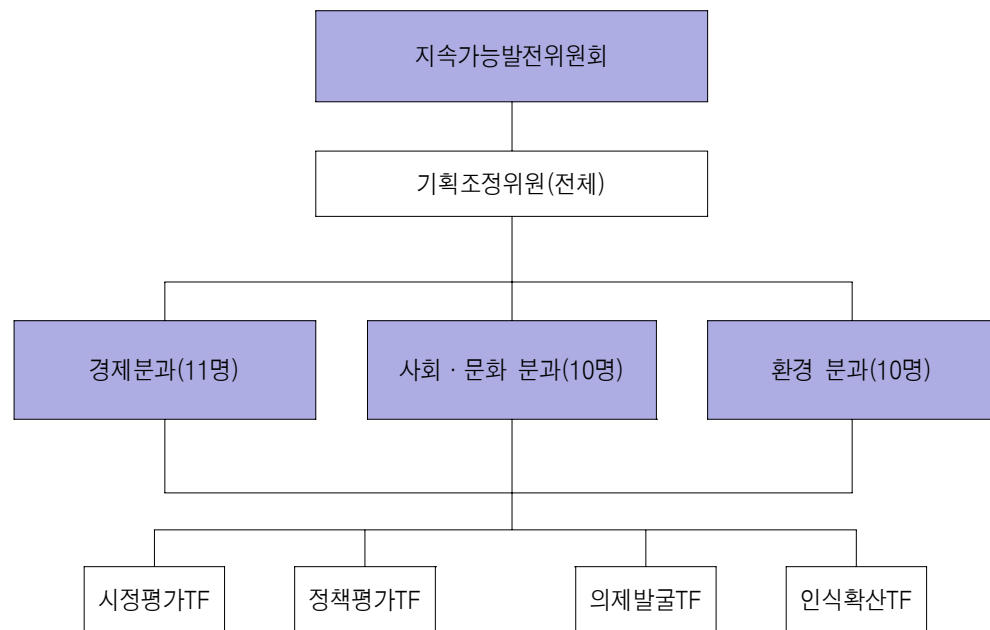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법 주요과제	市 추진사항(계획)
20년 단위 기본전략 수립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3개 분야(환경, 사회문화, 경제) 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지속가능발전 평가보고서 작성

6. 지속가능발전 조직 체계 개편

6.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T/F 구성·운영

- 기존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논의 사항 및 안건이 상정될 경우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여 왔음. 그러나 분과위원회는 경제, 사회문화, 환경의 각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어 통합적 논의를 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하되,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등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경우 활동별 T/F를 구성하여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함. T/F는 시정 평가, 정책평가, 의제발굴, 인식확산 분야로 나누어 운영될 예정이며 각 분과위원이 T/F에 참여하기로 함. 또한 기존의 기획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분과위원장, 분과간사로 구성되어 왔으나 이를 확대하여 T/F 위원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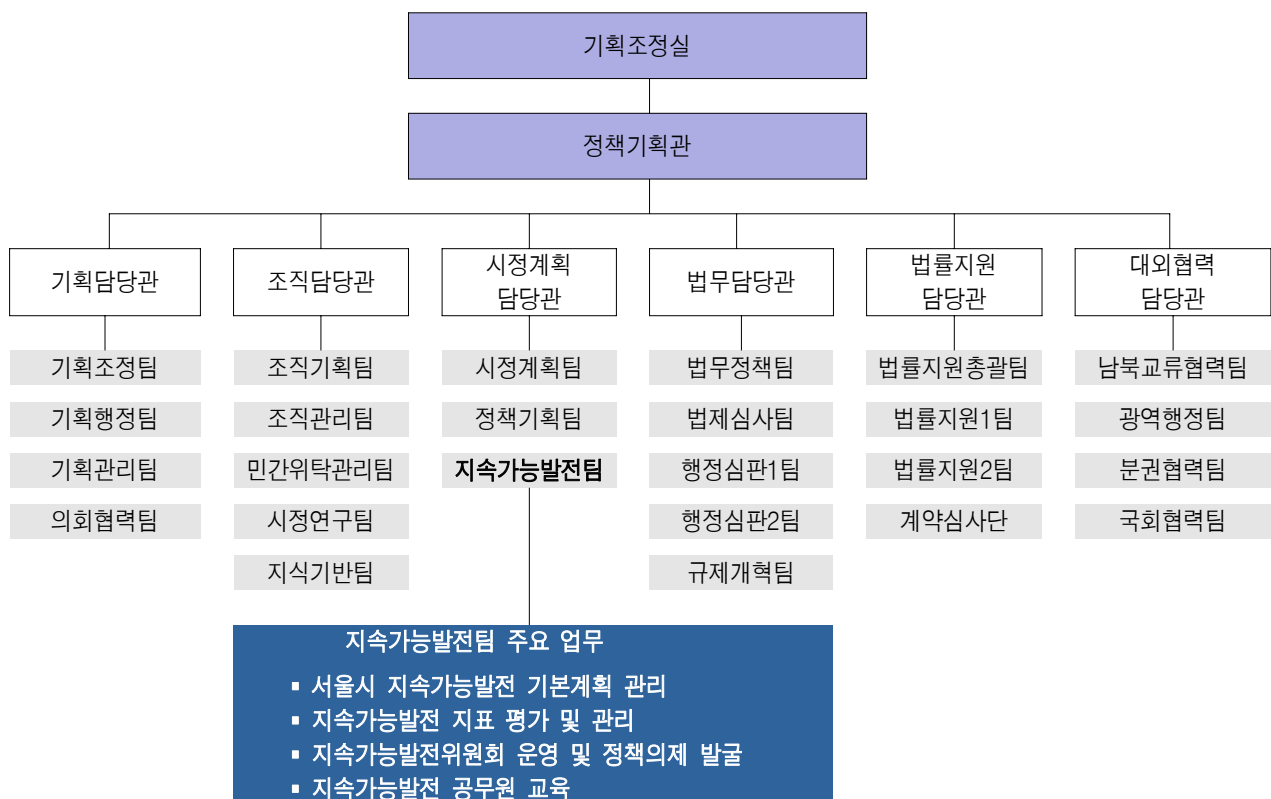
〈표 7-7〉 지속가능발전위원회 T/F 구성(안)



6.2 지속가능발전 전담조직 설치

- 서울시는 2002년부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방정부 최초로 지속가능성 평가를 시행해왔음.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시행하던 지속가능성 평가는 환경정책과 통합적으로 조정·연계가 필요한 주요 행정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및 기타 법률,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 그러나 2013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로부터 개별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업무가 이관되어 업무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는 시정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획조정실로 이관되어 부문별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자문하고 기본계획 수립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기본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더욱 체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그 결과 2015년부터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내 지속가능발전 전담팀을 신설하여 업무의 실행력을 담보하게 되었음. 지속가능발전팀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지표의 관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및 정책의제 발굴,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계획임.

〈표 7-8〉 지속가능발전 전담 조직 체계 및 주요 업무



7.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7.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사례의 자치구 확산

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배포와 공유

-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모델의 공유와 확대를 위하여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와 연계하여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배포하고 공유하고자 함.
- 자치구 공무원 및 자치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기본계획 공유는 지속가능발전 라운드 테이블과 직급별 교육 등과 연계하여 시행될 수 있음. 기본계획 공유 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노력이 추진기반이 되어야 함을 알리고자 함.

2)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권고

-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가능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왔음. 1996년 서울시 강동구의 지방의제 21 수립 선포를 시작으로 1997년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양천구, 종로구도 이에 동참하였으며, 1998년에는 강서구, 강북구, 용산구, 동대문구, 중랑구, 1999년 중구, 금천구, 송파구, 은평구, 2000년 영등포구, 관악구가 지방의제 21을 선포하였음.
- 서울시 노원구는 2010년 12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규정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3년 노원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서울시 강동구는 2011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¹⁾를 발간한 바 있으며, 2014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였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보건복지분과, 교육분과, 문화예술분과, 환경분과, 경제분과, 주민자치분과 등 총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됨.
- 서울시 도봉구는 201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을 구정방향으로 설정하고 참여를 통한 구정 및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에코마일리지 확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친환경나눔텃밭 보급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 팀을 신설한 바 있음.
- 위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을 권고하고자 함.

1) 강동구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상황을 환경, 사회, 경제 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GRI 가이드 3.0(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에 의해 작성하였음.

3)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컨설팅 추진

- 서울시는 자치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컨설팅을 추진·제공하고자 함.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현황 및 역량 수준을 진단함으로써 기본계획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지표 설정 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표 7-9〉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내용

구분	컨설팅 내용
지속가능발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개념 확산 및 이해도 향상
지속가능발전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 ■ 관련 부서 간의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 제안
지속가능발전 현황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지속가능성 ■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 ■ 환경적 지속가능성
방향 설정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단위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표 설정 제안 ■ 지표 평가 방법 제시 ■ 市의 기본계획 및 지표의 방향과 부합하도록 유도 및 권고

지속가능발전 진단 체크리스트 (예시)

1.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가? (관련 조례제정 등)
2.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3. 구민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가?
4. 업무부서 간의 소통 및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5. 경제 분야의 객관적 지속가능성(통계 데이터)과 주관적 지속가능성(공무원 및 주민들이 느끼는 정도)은 어느 정도인가?
6. 사회문화 분야의 객관적 지속가능성(통계 데이터)과 주관적 지속가능성(공무원 및 주민들이 느끼는 정도)은 어느 정도인가?
7. 환경 분야의 객관적 지속가능성(통계 데이터)과 주관적 지속가능성(공무원 및 주민들이 느끼는 정도)은 어느 정도인가?

7.2 국제사회에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모델 제시

- 이클레이(ICLEI: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 최대 지방정부 네트워크로서 1990년 창립된 이래로 현재 약84개국 1,000여개의 회원 도시가 참여하는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임.
- 이클레이는 3년마다 세계총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를 갖고 있음. 이번 총회는 2015년 서울에서 개최되며 특히 1995년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개최된 총회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것으로 동아시아 회원국 간의 결속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더불어 지방정부가 세계 지속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한 행위자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ICLEI, 2015).
- 2015년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는 ①지속가능한 도시, ②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도시, ③생물다양성 도시, ④저탄소 도시, ⑤ 회복력 있는 도시, ⑥녹색사회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 ⑦ 녹색경제 도시, ⑧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 등 8개 아젠다를 중심으로 28개 분과회의가 열리는 한편 서울시 세션(Seoul on Stage)이 별도로 열림.
- 특히 서울시는 Seoul on Stage에서 2030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제시할 계획임. 서울시가 뛰어난 정책과 프로젝트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문제 해결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당면과제와 이행전략을 제시할 예정임.
- 또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영문자료집을 제공하여 국제사회에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홍보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지속가능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7.3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정합성 고려

- 현재 UN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마련하고 있어 서울시가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적 동향 또한 고려하여야 함.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목표 간 상호 연계성이 높아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특징을 갖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본계획 수립 시 개념적 모델로서 동심원 모델을 사용하고 수레바퀴 모델을 통한 지표의 평가과정에서도 각 지표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였음. 또한 정책박람회, 지속가능성 요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참여성을 확보하는 한편, 평가에 통합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 T/F를 운영하고자 함.
- 또한 중앙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글로벌 시민교육, 포용성장, 기후변화, 성평등 이슈 등을 우리나라가 중시해야 할 분야로 보고 있어 본 기본계획에서도 이를 고려하

였음.²⁾ 글로벌 시민교육은 평생교육, 포용성장은 노인·청년일자리, 창조경제 등으로 반영하였으며, 기후변화 또한 ‘세계적인 기후변화 선도도시로 도약’이라는 전략 아래 과제와 사업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나가고자 하였음. 특히 2014년 EPI 평가 결과 기후변화 관련 지표의 순위가 낮게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더불어 성평등 분야와 관련하여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하고 보편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성평등 사회를 만든다는 과제를 설정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향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확정될 시 기본계획 및 지표와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할 여지가 있음. 또한 부서 간 통합적 업무를 도모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역할이 중시될 것으로 보임.
- 더불어 지표 평가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향후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체계를 바탕으로 별도로 ‘도시 지속가능성 지수(USI, Urban Sustainability Index)’를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8. 총괄과 재정계획

8.1 실행력 확보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주요 업무는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의제 발굴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함. 2015년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회의 T/F회의는 각 일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표 7-10〉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실행력 확보 추진계획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요 과업	T/F 구성	주요정책 평가					보고서 작성						‘16년 위원회 운영 본의
		의제 발굴					의제 발굴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						
				ICLEI 총회	교육			라운드 테이블					

2) 한겨레, 2015. 1. 6, “유엔이 제시한 ‘향후 15년 화두’는 지속가능발전”

8.2 재정운영계획

본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의 핵심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수립되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 아래 분야별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시정 사업 중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재배치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따라서 본 기본계획의 재정운영계획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함.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은 연동계획이므로 향후 수정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또한 이를 준용함. 또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의 재정계획은 각 사업에 해당하는 기본계획과 자료를 참고하였음.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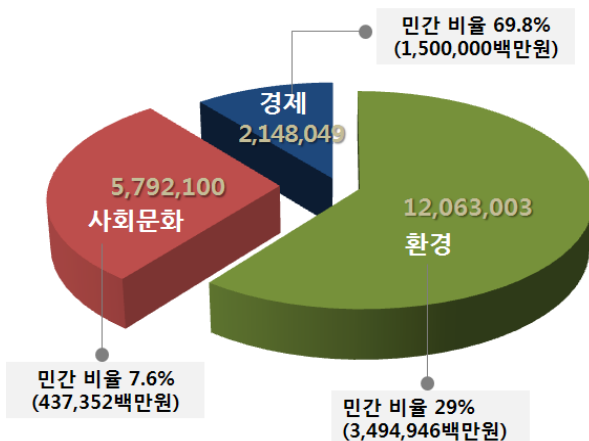
〈표 7-1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재정운영계획(총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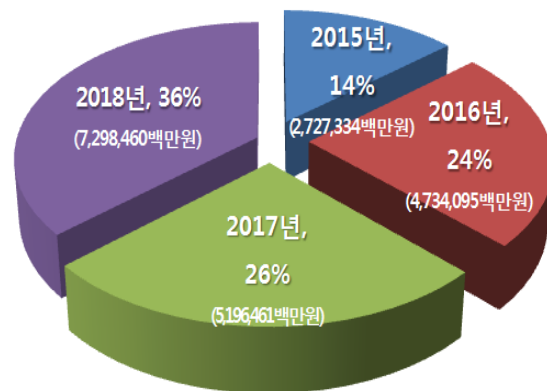
분야	투자계획				
	계	2015	2016	2017	2018
계	14,570,854 (5,432,298)	2,122,983 (558,443)	3,918,429 (772,726)	4,041,395 (1,112,126)	4,488,047 (2,773,403)
환경	8,568,057 (3,494,946)	1,190,913 (514,515)	2,287,921 (707,204)	2,471,429 (895,424)	2,617,794 (1,162,203)
사회문화	5,354,748 (437,352)	776,834 (43,928)	1,454,469 (50,522)	1,413,391 (156,702)	1,710,054 (186,200)
경제	648,049 (1,500,000)	155,236 (-)	176,039 (15,000)	156,575 (60,000)	160,199 (1,425,000)

출처: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원전하나 줄이기 2」, 「서울특별시 물재이용 관리계획」

- 1) () 민간 등 기타 투자금액의 합으로서 별도 계산 항목
- 2) 환경 분야의 민간 투자금액은 도시문화공원 조성 관련 사업 중 SH공사 투자금액을 포함한 금액(연도별 투자계획은 현재 수립 중으로 총액만을 합산하였음)



〈그림 7-1〉 분야별 재정운영계획



〈그림 7-2〉 연도별 재정운영계획

〈표 7-12〉 환경 분야 사업별 재정운영계획

(단위: 백만원)

주요사업	투자계획				
	계	2015	2016	2017	2018
원전하나줄이기 2	2,577,477	524,930	691,294	692,434	668,819
공공부문 및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	-	-	-
온실가스 감축사업 평가지표*	-	-	-	-	-
침수취약지역 해소	1,091,530	165,670	337,160	303,700	285,000
산사태 방지시설 확충	102,497	26,897	25,200	25,200	25,200
에너지 복지·지역공동체 확대	10,239	2,439	2,600	2,600	2,600
건물 에너지 효율화	86,046	21,546	21,500	21,500	21,500
분산형 전원 보급	(1,173,896)	(256,835)	(314,458)	(291,112)	(311,491)
건물 태양광발전소 확대	10,000	2,000	2,500	2,500	3,000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도입	1,800	-	1,000	800	-
공공차량기반 구축	85,716	5,716	20,000	50,000	10,000
나눔장터 확산	4,681	1,148	1,121	1,177	1,235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5,000	1,240	3,760	0	0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	-	-	-	-
중수도 시설 설치 지원	(19,599)		(9,274)		(10,325)
빗물관리시스템 설치	(44,777)		(26,878)		(17,899)
친환경자동차 보급	757,668	22,652	124,540	241,406	369,070
초미세먼지 노출예방시스템	540	-	180	180	180
운행차 저공해 사업	677,353	37,033	206,488	213,870	219,962
대기환경협약체 구성	270	-	80	90	100
한강숲 조성	33,915	2,800	8,235	9,420	13,460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	9,083	1,833	1,870	2,580	2,800
자연형 호안 조성	19,600	-	6,800	6,000	6,800
생태거점 조성	16,500	3,000	4,100	5,000	4,400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원 조성	42,364 (12,900) ¹⁾	18,464 (2,000)	12,400 (1,900)	7,900 (3,800)	3,600 (5,200)
생물다양성 증진	22,595	4,055	6,180	6,180	6,180
녹색문화 확산	2,687	647	768	798	474
도시문화공원 조성	15,300 (215,600) ²⁾	600	400	7,900	6,400
보행환경 개선	75,085	11,155	14,130	14,650	35,150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부 공원화	376,600 (857,200)	1,000 (56,000)	68,400 (128,800)	131,500 (281,700)	175,700 (390,700)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	52,902	8,120	9,774	15,944	19,064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2,490,609 (1,170,974)	327,968 (181,604)	717,441 (243,970)	708,100 (304,700)	737,100 (440,700)

*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평가 사업은 다양한 에너지 관련 정책과 연동되어 시행되는 것으로서 향후 관련 정책의 재정계획에 따라 수정·보완될 계획

- 1) () 별도 민간투자금액
- 2) [] 국립공원 투자금액
- 3) < > SH공사 투자금액

〈표 7-13〉 사회문화 분야 사업별 재정운영계획

(단위: 백만원)

주요사업	투자계획				
	계	2015	2016	2017	2018
여성일자리 창출	1,188,092	267,898	285,998	306,098	328,098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630,000	94,500	189,000	189,000	157,500
성평등 시정구현	80	20	20	20	20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166,321	15,172	34,193	50,500	66,456
동 마을복지센터 개편	21,150	5,000	5,000	5,000	6,150
생활임금제 도입	13,316	344	4,211	4,323	4,438
복지사각지대 해소	71,379	16,412	17,336	18,306	19,325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3,290	760	810	860	860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지원	19,800	4,950	4,950	4,950	4,950
평생학습체계 구축*	-	-	-	-	-
공공임대주택 확대	2,534,050	273,332	791,705	613,376	855,637
주거복지지원체계 강화	33,957	7,857	8,200	8,700	9,200
많은 아파트 문화 만들기	8,099	1,586	2,137	2,187	2,189
서울형 전월세제도 기반 마련	60,095	15,095	15,000	15,000	15,000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3,594	774	852	937	1,031
어린이 안전 강화	1,846	718	376	376	376
노후생활 지원	94,748	19,537	25,401	26,145	23,665
데이케어센터 확충	19,500	4,500	5,000	5,000	5,000
마을공동체 지원*	-	-	-	-	-
시민제안 활성화*	-	-	-	-	-
행정정보 공개 확대*	-	-	-	-	-
시민참여 감사 확대*	-	-	-	-	-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	-	-	-	-
재난유형별 현금지원 목표제 실행	13,356	3,666	4,126	3,282	2,282
재난초기 시민 대응역량 강화	858	243	230	230	155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추진	2,000	500	500	500	500
지하철 안전운영 강화	133,600 (437,352) ¹⁾	6,900 (43,928)	7,350 (50,522)	57,650 (156,702)	61,700 (186,200)
응급의료 시스템 강화	9,617	2,141	2,194	2,422	2,860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13,321	921	2,800	3,800	5,800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	1,410	390	340	340	340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	2,950	250	650	900	1,150
문화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176,742	7,779	24,663	52,200	92,100
도서관 운영 내실화	50,671	11,427	16,583	18,689	20,538
문화예술교육센터 확충	15,852	2,852	3,500	5,000	4,500
서울의 역사문화가치 제고	3,516	836	848	896	936
마을예술창작소 내실화	1,953	653	600	350	350
마을미디어 지원	8,215	715	3,700	1,800	2,000
생활문화제작 프로그램 활성화	400	100	100	100	100
생활체육 활성화	50,970	9,006	12,662	14,454	14,848

* : 해당사업은 관련 부서의 사업 조정여부에 따라 향후 변경

1) 지하철 운영기관 예산

〈표 7-14〉 경제 분야 사업별 재정운영계획

(단위: 백만원)

주요사업	투자계획				
	계	2015	2016	2017	2018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조성	62,877	2,877	20,000	20,000	20,000
동대문 창조경제클러스터 육성	30 ¹⁾	30	-	-	-
신·홍·합 창업밸리 구축	2,738	2,718	10	10	-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조성	10,366	7,366	1,000	1,000	1,000
상암 DMC·수색 서북권 육성	35,429 (1,500,000)	10,319	25,110 (15,000)	(60,000)	(1,425,000)
신규인재 양성사업 추진	37,845	9,000	9,300	9,600	9,900
소셜이노베이터 양성	3,774	774	1,000	1,000	1,000
서울 기술교육원 운영	92,116	22,096	22,879	23,337	23,804
뉴딜일자리 추진	81,920	20,420	20,500	20,500	20,500
나무그늘 프로젝트	5,912	1,316	1,532	1,532	1,532
청년 창업기반 구축	87,717	28,450	18,800	19,740	20,727
청년의무고용제 시행	900	200	200	250	250
청년층 노동권보호	1,130	190	250	320	370
글로벌 생활환경 구축	623	623	-	-	-
다문화사회 조성	-	-	-	-	-
관광콘텐츠 개발	26,558	5,271	6,329	6,929	8,029
MICE 기반 조성	34,363	7,163	8,000	9,200	10,000
한류관광 활성화	1,903	410	451	496	546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16,000	2,500	4,000	5,000	4,500
생활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 육성	3,960	990	990	990	990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5,230	1,180	1,300	1,350	1,400
시민생활 속 공유 확산	1,380	390	330	330	330
공유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73	31	14	14	14
공유기업 및 자립구 공유사업 지원	2,440	610	610	610	610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2,896	70	1,230	798	798
특화상권 활성화	9,118	118	3,000	3,000	3,000
중소기업 육성 지원	-	-	-	-	-
전통시장 활성화	89,494	25,336	21,386	21,386	21,386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	31,302	4,788	7,818	9,183	9,513

* : 해당사업은 관련 부서의 사업 조정여부에 따라 향후 변경

1) () 별도 민간투자금액

2) 동대문 창조경제 클러스터 육성' 사업의 재정 운영계획은 DDP 재정자립, 개별 특화산업·상권 육성사업 예산 별도 반영 추진 및 종합발전방안 마련 후 사업 반영할 계획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고용노동부, 2012,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개요집
- 고재경 외, 2014,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과제
- 구운모, 박정수, 2013, 우리나라 창조계층 인력의 추이 및 서비스직종의 창조인력화 방안, 산업연구원
- 국토교통부, 2013,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화를 위한 지침[안] 마련 연구
- 금기용, 2014, “서울관광의 질적 내실화 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 김정혜, 2010, “서울시 소득양극화,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 김범식·조달호, 2010, 서울시 가게의 소득 및 소비 특성 분석
- 김유나·문태훈, 2008, “환경성과지수(EPI)를 활용한 도시지속성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 pp.89-104
- 문화체육관광부, 2011,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보건복지부, 2011, 노인인구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2011,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
- 서울고용노동청, 2014, 2013년 서울지역 고용동향
- 서울연구원, 2011, 관광자원 현황조사
- 서울연구원, 2013, 인포그래픽스 제57호 “중국관광객의 여행 행태는?”
- 서울연구원, 2014, 인포그래픽스 제67호 “서울시민의 가게 재무 상태는?”
- 서울연구원, 2014, 인포그래픽스 제91호 “서울의 서비스업 현황은?”
- 서울연구원, 2014, 인포그래픽스 제110호 “2014년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은?”
- 서울특별시, 2012, 서울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이행성과 평가방안
- 서울특별시, 2012, 서울시민 복지기준
- 서울특별시, 2012,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
- 서울특별시, 2013,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2013, 서울교통비전 2030
- 서울특별시, 2013,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 서울특별시, 2013, 서울특별시 물재이용 관리계획
- 서울특별시, 2013,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2013, 서울서베이
- 서울특별시, 2013, 통계로 본 서울시민 건강 및 사망원인
- 서울특별시, 2014, 서울시정 4개년 계획
- 서울특별시, 2014, 2014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 서울특별시, 2014, 2014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12, 2012 서울 대기질 평가 보고서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13, 보도자료 「서울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로 여의도면적 110배 숲 조성효과」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13, -2013년도 정책자료집- 세계제일의 재활용도시 Master Plan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14,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3, 인포그래픽스로 보는 2013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성과자료집
-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2012, 환경성과지수(EPI) 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연구 I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2012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이창우, 2012, “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한겨레경제연구소 콜로키엄
- 이창우, 2012,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워킹페이퍼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1,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연구
- 정영근, 2006,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구축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중소기업청, 2013, 신설법인 동향 업종별·지역별 신설법인수
- 질병관리본부, 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 질병관리본부, 2012, 지역사회건강조사
- 차용진, 2012, “종합환경지수에 관한 실증적 연구 - 2012 환경성과지수(EPI) 모형검증-”, 한국위기관리논집 Vol.8 No.5, pp.101~122
- 충남발전연구원, 2012,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 방안 연구
- 통계청, 2013, 사망원인통계
- 통계청, 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2013, 전국사업체조사
- 통계청, 2014, 경제활동인구연보
- 한강사업본부, 2013,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 한국교통연구원, 2012, 2009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연도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2012 문예연감
- 환경부, 2012,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해설서
- 환경부, 2012, 소음·진동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평가
- 환경부, 2013, 2012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환경부, 2014,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희망제작소, 2013,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황과 과제

■ 국외문헌

- City of Kingston, 2010, Sustainable Kingston – Designing Our Community’s Future...Together.
- City of Santa Monica, 2006, Sustainable City Plan.
- District of Columbia, 2012, A Vision for a Sustainable DC.
- 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1,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 and Methodologies.
- Federal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Environment and Water Management, 2013, Sustainability barometer 2013.
- Bazan Gene and Tania Slawewski, 2002, “The Three Circles Model of Sustainability”, PSU Center for Sustainability.
- Hardi, P. and T. Zdan eds., 1997, Assessing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s and in Practic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innipeg. Manitoba. Canada.
- OECD, 2001, OECD Environmental Indicators –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 Ciegis Remigijus, Jolita Ramanauskiene, Bronislovas Martinkus, 2009,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ts Use for Sustainability Scenarios”, Engineering Economics(2).
- National Sustainability Council, 2013, Sustainable Australia Report.
- The City of New York, 2014, plaNYC Progress Report – A Greener, Greater New York / A Stronger, More Resilient New York.
- UNESCAP, 2013, Asia-Pacific Aspirations: Perspectives for a Post-2015 Development Agenda, Asia-Pacific Regional MDGs Report 2012/2013.
-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 Policy, Yale University and Center for International Earth Science Information Network, Columbia University, 2014, 2014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Full Report and Analysis
- WEF, 2013, Global Gender Gap Report in 2013.

■ 기타 자료

- 한겨레, 2015.01.06, “유엔이 제시한 ‘향후 15년 화두’는 지속가능발전”
- 한국일보, 2014.08.11, “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30%대...예산확보 비상”
- <http://ncsd.go.kr/app/> (지속가능발전포털)
- <http://sll.seoul.go.kr/>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
- <http://socialindex.seoul.go.kr/>(희망서울 생활지표)
- <http://stat.seoul.go.kr/> (서울통계)
-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focussdgs.htm>
- <http://water.nier.go.kr>
- <http://www.ncsds.org/index.php/sustainable-development-councils/>
- <http://www.sfac.or.kr/>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부록

키워드	수자원
지표	4. 물 재이용률

■ 산출방법

빗물 + 중수도 시설 + 하수처리수 재이용 비율

■ 현황

지표	빗물이용량	중수도시설 재이용량	하수처리수 재이용량
물 재이용률 (2010년 기준)	393.4천m ³ /년	2,837천m ³ /년	47,266천m ³ /년

■ 출처

서울특별시 물재이용 관리계획

지표	5. 빗물활용량
----	----------

■ 산출방법

서울시 연간 빗물 재활용량

■ 현황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2005년 16개소, 「빗물 가두고 머금기 사업」을 계획한 2010년 기준 214개소의 빗물이용시설이 있으며, 빗물이용량은 2010년 기준 393.4천m³/년

■ 출처

서울특별시 물재이용 관리계획

지표	6. 아리수 음용률
----	------------

■ 산출방법

서울시민의 연간 아리수 음용률

■ 현황

지표	2009	2010	2011	2012
아리수 음용률	84.2%	77.3%	76.8%	77.6%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키워드	수자원
지표	7. 1일 1인당 물소비량

■ 산출방법

서울시 시민고객 1명이 하루에 소비하는 아리수 사용량

■ 현황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1일 1인당 물소비량(Lpcd)	286	285	289	289	291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키워드	기후변화
지표	8. 풍수해 가구수

■ 산출방법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주택 수

■ 현황

지표	2010	2011	2012	2013
풍수해 가구수	18,664	14,581	514	104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지표	9. 침수취약지역 수
----	-------------

■ 산출방법

시간당 강수량 40-60mm 수준 폭우 시 침수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수

■ 현황

2010, 2011년 집중호우 이후 침수 취약지역(특별관리 11개소, 중점관리 16개소, 기타관리 7개소)을 중점 관리해 왔으며, 2013년 기준 침수취약지역은 29개소

■ 출처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지표

10. 온실가스 배출량

■ 산출방법

연간 온실가스(CO₂) 배출량

■ 현황

지표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온실가스 배출량 (천톤CO ₂ eq)	49,467	50,383	49,111	49,751	49,008	48,551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키워드

쾌적한 도시환경

지표

11. 한강 방문 시민수

■ 산출방법

문화·스포츠 행사, 체험 프로그램 참여, 시민공원 방문 시민수

■ 현황

2013년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상음악회, 영화제, 수상 레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약 944만명이 방문(전년 대비 38% 증가, 2012년 684만명)

■ 출처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지표

12. 한강수계 수질오염도

■ 산출방법

잠실, 노량진, 행주의 BOD

■ 현황

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노량진(mg/L)	3.5	4.3	4.1	3.2	2.8	2.6	2.1	2.6
잠실(mg/L)	1.6	1.9	1.6	1.5	1.1	1.2	1.3	1.1
행주(mg/L)	3.7	4.8	4.8	4.0	3.6	4.1	3.2	4.6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물환경정보시스템

지표

13. 가로경관 녹시율

■ 산출방법

자치구별 3개 지역의 도로 유형별(간선, 보조간선, 집산, 국지도로) 및 보도 종류별(차도, 보도) 녹색비율을 측정하여 평균 산출

■ 현황

지표	2009	2010	2011	2012	2013
녹시율(%)	19.32	20.35	20.41	21.02	21.61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지표

14. 보전녹지 증가율

■ 산출방법

용도지역 분류상 보전녹지 면적의 증가율

■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보전녹지 면적(㎡)	72,300	72,300	72,300	72,300	72,300

■ 출처

서울통계(용도지역 현황)

지표

15. 1인당 공원면적

■ 산출방법

(도시공원+자연공원+기타공원)/인구수

■ 현황

지표	2009	2010	2011	2012	2013
1인당 공원면적(㎡)	16.16	16.06	16.15	16.20	16.37

■ 출처

서울통계

지표

16. 지천 생태복원 개소 수

■ 산출방법

생태하천 복원사업 + 복개하천 복원사업

■ 현황

지표	2011	2012	2013
생태하천 복원개소	6	3	2
복원개소 누계	12	15	17

주)2012년 복원 완료 하천(15개소): 성내, 불광, 반포, 도봉, 도림, 목동, 성북, 정릉, 탄천, 목감, 홍제, 대동, 방학, 우이, 당현천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키워드

에너지

지표

17. 총 에너지 소비량

■ 산출방법

가정·상업, 수송, 산업, 공공·기타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의 합

■ 현황

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에너지 소비량 (천TOE)	15,586	16,008	15,482	15,027	15,717	16,958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지표

18. 신재생에너지 비율

■ 산출방법

(태양광, 풍력 등 11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량 / 총 에너지공급량) × 100

■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0.6%	0.6%	0.6%	1.4%	1.4%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지표

19.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참여 개소 수

■ 산출방법

서울시 연간 학교, 기업 등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참여 개소 수

■ 현황

- 2008년 사업을 시작으로 총 475개 건물에 에너지 효율화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28천 TOE절약, 온실가스 41천 톤 감축
- 대형건물에만 국한되었던 사업을 2012년부터 주택으로 확대, 2014년까지 1,216개소 건물 에너지 효율화 추진 목표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키워드

폐기물

지표

20. 생활폐기물 배출량

■ 산출방법

생활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량

■ 현황

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발생량 (톤/일)	11,170	11,420	11,525	11,447	11,337	10,020	9,440	9,189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지표

21.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 산출방법

(생활폐기물 재활용량 / 생활폐기물 총 배출량) × 100

■ 현황

(단위: 톤/일)

구분	2011년	2013년	2016년	2020년	2030년
합계	6,054	6,054	6,054	6,054	6,054
재활용	2,607 (38.7%)	2,779 (45.9%)	3,124 (51.6%)	3,469 (57.3%)	3,995 (66.0%)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지표

22. 녹색교통 수단분담률

■ 산출방법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를 이용한 통행량 / 교통수단 전체 통행량) × 100

■ 현황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

단위: 천명/일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년대비(%)
대중교통	10,195	10,135	10,224	10,411	10,554	10,783	10,844	61
지하철	4,533	4,532	4,577	4,730	4,835	4,984	5,114	130
시내버스	4,655	4,583	4,605	4,605	4,595	4,647	4,565	-82
마을버스	1,007	1,020	1,076	1,076	1,124	1,152	1,165	13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지표

23. 자전거 출퇴근 인구수

■ 산출방법

자전거로 통근하는 인구의 수

■ 현황

자전거 출퇴근 인구수는 2010년 기준 90천명으로 추정 (현재 정확한 통계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출처

서울시정 4개년 계획

■ 사회문화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은행(43개)

키워드	형평성
지표	1. 지니계수

■ 산출방법

소득의 모든 쌍을 대칭적으로 잡은 후, 그 차이의 절대치의 총합계를 총소득으로 나눈 것

$$\left\{ \frac{1}{2n^2\mu} \sum_{i=1}^n \sum_{j=1}^n |y_i - y_j| \right\}, \text{ 단, } \mu = \text{평균값}$$

■ 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소득	0.291	0.278	0.283	0.288	0.293	0.293	0.311	0.307
가처분 소득	0.282	0.266	0.276	0.277	0.280	0.278	0.293	0.289

주)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함

■ 출처

김범식, 조달호(2010), 서울시 가계의 소득 및 소비 특성 분석

지표	2.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

■ 산출방법

(경제활동 여성인구/15세이상 여성인구)×100

■ 현황

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52.0%	51.9%	51.7%	51.0%	49.8%	51.2%	52.0%	52.3%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지표	3.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	-----------------

■ 산출방법

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

■ 현황

지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성별 임금비율(%)	59.8	60.8	62.5	63.1	61.7	63.4	63.0

주) 남녀임금비는 남자=100 기준이며, 2007년 이후 자료생산의 어려움으로 통계작성 중단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키워드	사회적 양극화
지표	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 산출방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서울시 인구) × 100

■ 현황

지표	2009	2010	2011	2012	201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2.05%	2.05%	1.97%	1.92%	1.92%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지표	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	---------------------

■ 산출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 서울시민 중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

■ 현황

2014년 7월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규발굴 1,943명(누계 7,600명)

■ 출처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지표	6.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	----------------

■ 산출방법

(서울시 전체가구 중위소득 50% 이상 인구수 / 서울시 전체 인구수) × 100

■ 현황 (2013년 기준)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중위 50% 기준 상대빈곤율	18.5%	15.6%	15.0%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실적치(중위50% 이상)	81.5%	84.4%	85.0%

■ 출처

서울시민 복지기준

지표

7. 비수급 빈곤층 지원인원수

■ 산출방법

최저생계비 이하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초과되거나 수급자 신청을 포기해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지원 인원 수

■ 현황

지표	2009	2010	2011	2012
비수급 빈곤층 지원인원	73,204명	70,422명	63,450명	76,774명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키워드

가계부채

지표

8. 가계부채액

■ 산출방법

가구조사

■ 현황

서울서베이(2012) 조사 결과 서울거주 가구의 50.9%는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채의 주된 원인으로 '주택 임차 및 구입'(60.5%)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출처

서울 도시정책지표

키워드

지역 불균형

지표

9. 강남·북 지역의 1인당 개인소득

■ 산출방법

강북 지역의 연간 1인당 개인소득 / 강남 지역의 연간 1인당 개인소득

■ 현황

강남·북 지역의 연간 1인당 개인소득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서울 서베이 리포트(2010)에 따르면 서울의 5대 권역 월평균소득은 동남권 380만원, 서북권 349만원, 서남권 310만원, 도심권 303만원, 동북권 300만원 순으로 나타나 강남이라고 하는 동남권 권역과 기타 권역과의 소득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출처

서울서베یری포트(2010)

키워드	복지
-----	----

지표	10. 노인의 월평균 소득
----	----------------

- 산출방법

가구조사

- 현황

응답내용	50만원 미만	50만원 –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소득없음
2007년	36.4	19.9	6.9	4.0	2.2	1.2	2.4	27.0
2008년	29.8	22.7	10.9	5.2	3.2	1.8	2.7	23.8
2009년	32.7	22.2	11.3	5.7	3.2	2.0	4.8	18.0
2010년	27.7	22.4	13.1	7.5	3.0	2.9	3.3	20.2
2011년	21.3	25.5	18.8	10.8	4.6	2.1	5.0	11.9
2013년	21.7	26.9	21.4	12.2	5.5	2.2	3.3	6.8

- 출처

서울 도시정책지표

지표	11. 사회복지인력 1인당 시민수
----	--------------------

- 산출방법

사회복지인력 1인이 담당하는 시민의 수

- 현황

2013년 사회복지인력은 1,902명(동 1,119, 자치구 783)이나, 사회복지인력 1인당 시민수를 2015년 4,000명, 2016년 3,500명까지 확충할 계획

- 출처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지표	12. 공공분야 장애인 일자리 수
----	--------------------

- 산출방법

복지센터, 동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수

-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공공분야 장애인 일자리 수	7,772	8,500	9,250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지표 13. 영유아 보육 월 이용자 부담 50% 이하 자치구 비율

■ 산출방법

(월 이용자 부담액 50% 이하 자치구 수 / 전체 자치구 수) × 100

■ 현황

지표	2013년 목표	2013년 실적	달성률 (%)
영유아 보육 월 이용자 부담 50% 이하 자치구 비율(%)	44	48	109

■ 출처

서울시민 복지기준

키워드

건강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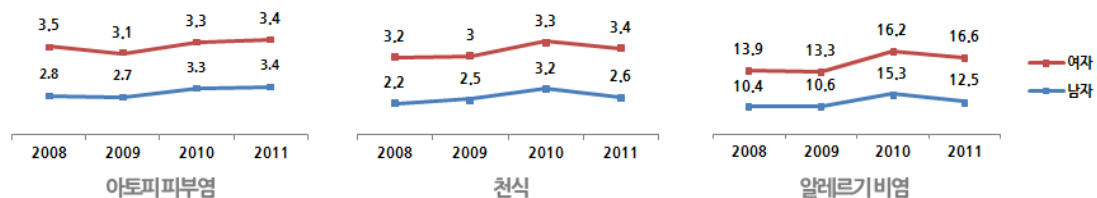
14. 환경성질환 유병률

■ 산출방법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유병률

■ 현황

2011년 기준 환경성질환 유병률은 약 20.9%(아토피 피부염 3.4%, 천식 3.0%, 알레르기 비염 14.5%)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표

15. 도시보건시설 수

■ 산출방법

보건소, 보건소 분소, 보건지소 수

■ 현황

지표	2011	2012	2013	2014
도시보건시설 수	52개소	58개소	67개소	73개소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지표

16. 비만도

■ 산출방법

BMI <체중(kg) ÷ 신장(m)²> 25.0 이상

■ 현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만율(%)	21.4	21.7	22.7	23.7	23.2

■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

17. 자살률

■ 산출방법

연간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

■ 현황

단위: 10만명당 명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살률	19.8	17.1	20.1	21.6	26.1	26.2	26.9	23.8	25.6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지표

18. 건강기대여명

■ 산출방법

전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

■ 현황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대여명	79.18	79.56	80.08	80.55	80.79	81.2	81.44

주) 전국 단위이며, 보건복지부의 전국 기대여명(2010년 71세)를 참고하여 서울시 건강기대여명은 2010년 73.18세, 2013년 74.38세로 산정

■ 출처

부서 내부자료

키워드	시민의식
지표	19. 서울시민 중 자원봉사자 비율

■ 산출방법

(서울시 등록 자원봉사자 인원 / 서울시 인구) × 100

■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원봉사자 등록률	5.84%	6.91%	8.86%	10.49%	11.79%	13.58%	15.07%	17.69%

■ 출처

서울통계(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지표	20. 시민 기부율
----	------------

■ 산출방법

설문조사

■ 현황

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시민 기부율	36.5%	43.3%	45.4%	45.8%	40.7	37.8	35.5

■ 출처

서울 도시정책지표

지표	21. 시민제안 건수
----	-------------

■ 산출방법

희망서울 정책박람회, 천만상상 오아시스, 시민참여 사회혁신 플랫폼을 통한 시민제안 건수

■ 현황

지표	2011	2012	2013
시민제안건수	15,897건	7,878건	8,178건

주) 2011년까지는 시민제안에 따른 인센티브제도가 있었으나, 2012년 제도가 없어지면서 제안건수가 감소하였음.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키워드	공동체 의식
-----	--------

지표	22.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공동체 수
----	-----------------------

■ 산출방법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공동체 수

■ 현황

2012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15개소를 시작으로 2013년 2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자치구별 1개소씩 25개소로 확대운영할 계획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서울시민 복지기준

지표	23.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건수
----	-------------------

■ 산출방법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건수

■ 현황

2012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총957건(주민모임 256건, 단체 701건) 이었으나 2013년 총 2,233건(주민모임 1,509건, 단체 724건)으로 1년 사이 135% 증가하였음.

2012년 총 957건



2013년 총 2,233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 건수, 서울시(2013)〉

특히 2012년 총 지원 사업 신청자 중 26.7%를 차지했던 주민모임 건수가 2013년에는 67.6%에 달하고 있음.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키워드

문화다양성

지표

24. 다문화 사회에 대한 태도

■ 산출방법

가구조사

■ 현황

단위: 10점 척도 환산값

기간	종합	인구감소문제 해결 위해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 정책 필요	이민자 많아지면 일자리 빼앗길 것 같다
2010	5.39	4.87	5.84	5.47
2011	5.10	5.01	5.82	4.47
2013	5.21	5.15	5.90	4.58

■ 출처

서울서베이

키워드

문화생활

지표

25. 마을형 문화공간 수

산출방법

마을예술창작소, 우리동네 북카페, 미디어센터 등의 수

현황

지표	2011	2012	2013
마을형 문화공간 수	11개소	73개소	135개소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지표

26. 공연건수 및 전시횟수

■ 산출방법

1년 동안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공연건수 및 전시횟수(미술전시회, 국악행사, 음악행사, 무용행사, 연극행사 건수)

■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시각예술 전시회	5,624	5,680	6,240	6,459	6,811	7,268	7,102	6,824
공연건수	4,119	3,805	3,173	4,221	4,886	5,273	4,905	5,104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

지표

27. 서울시 활동 예술가 수

■ 산출방법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수

■ 현황

서울문화재단에 2014년 12월 기준 등록되어 있는 예술가는 공연예술(335명), 시각예술(171명), 문화·축제(26명), 체험·교육(2명), 국악·전통(80명), 문학·인문학(51명), 문화일반(44명), 기타(18명)으로 파악

■ 출처

서울문화재단

키워드

문화생활

지표

28. 문화소외 시민대상 문화나눔 추진횟수

■ 산출방법

사랑티켓, 문화바우처, 천원의 행복, 우리동네 음악회 등 이용건수

■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문화이용권)	64,086매 (64,086매)	85,120매 (149,206매)	94,713매 (243,919매)
	카드사업(여행이용권)	8,408매 (8,408매)	6,352매 (14,760매)	6,353매 (21,113매)
	기획사업(문화)	31,715명 (31,715명)	52,159명 (83,874명)	46,180명 (130,054명)
	기획사업(여행)	2,390명 (2,390명)	3,081명 (5,471명)	3,013명 (8,484명)
스포츠바우처		1,335백만원 (1,335)	1,645백만원 (2,980)	1,645백만원 (4,625)
사랑의 문화나눔		380회(380회)	422회(802회)	문화이용권 사업에 통합
세종 함께해요! 나눔예술		240회(200천명)	112회(29천명)	자치구 연계 사업에 통합
시향 찾아가는 음악회		79회(66,000명)	82회(66,000명)	72회(45,000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9명(39)	39명(78)	46명(124)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장비 무상임대		46대	48대	2012년 완료
세종 천원의 행복		19회(40천명)	17회(25천명)	30회(39천명)
사랑티켓		226,787매	212,068매	195,602매
좋은영화 감상회		157회 64,445명	175회 60,426명	90회(45천명)
어르신 대상 청춘극장 운영(누계)		157천명	141천명	117천명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2014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지표

29. 문화환경 만족도

■ 산출방법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조사

■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점수	5.18	5.37	5.56	5.54	5.93	6.02	6.38	6.41
만족율(%)	19.8	27.6	32.2	30.0	41.9	43.7	48.9	57.3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키워드

안전

지표

30. 흉악사건 발생건수

■ 산출방법

흉악사건(5대 범죄 중 살인, 강도사건) 발생건수

■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살인	219	199	219	221	250	294	258	179	152
강도	1,481	1,200	1,076	948	1,510	1,029	956	570	420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지표

31. 교통사고 사망자 수

■ 산출방법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 현황

지표	2009	2010	2011	2012	2013
교통사고 사망자 수	501명	429명	435명	424명	378명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지표

32. 재난 및 안전사고 인명피해자 증감률

■ 산출방법

연간 교통사고 및 화재사건 사상자 증감률

■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교통사고 사상자	64,085	60,147	58,060	59,007	57,139
화재사건 사상자	257	230	197	277	233
전년대비 증감률(%)	9.19%	-8.99%	-3.51%	1.76%	-3.23%

■ 출처

2030 서울플랜, 서울통계

지표

33. 119 구급차 5분내 현장 도착률

■ 산출방법

119 구급차가 5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확률

■ 현황

지표	2011	2012	2013
119 구급차 5분내 현장 도착률	66.1%	71.8%	76%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지표

34. 재난위험시설 (D·E급) 해소수

■ 산출방법

연간 재난위험시설 해소수

■ 현황

지표	2011	2012	2013
재난 위험시설 해소 수(누계)	-	82개소(82개소)	75개소(157개소)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지표 35. 재난취약가구 안전서비스 지원 가구수

■ 산출방법

연간 재난취약가구 안전서비스 지원 가구수

■ 현황

지표	2011	2012	2013
재난 취약가구 안전서비스 지원(누계)	16,846가구	18,843가구(35,689)	20,513가구(56,202)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지표

36. 출산율

■ 산출방법

출산 가능한 나이(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

■ 현황

단위: 가임여성1명당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출산율	0.920	0.970	1.056	1.010	0.962	1.015	1.014	1.059	0.968

■ 출처

통계청(2014), 인구동향조사

지표

37. 고령자 비율

■ 산출방법

(65세 이상 인구 / 서울시 인구) × 100

■ 현황

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65세 이상 구성비(%)	7.1	7.6	8.2	8.6	9.0	9.5	10.0	10.6	11.2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지표

38. 노인취업률

■ 산출방법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노인 /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100

■ 현황

지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노인취업률	21.9%	22.5%	23.6%	23.5%	24.7%	24.8%

■ 출처

통계청(2014), 경제활동인구

키워드

교육

지표

39 학생 1인당 사교육비

■ 산출방법

초·중·고등학생 1명이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 학교 밖 보충교육을 하기 위해 부담하는 연간 비용

■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금액(만원)	전년비	금액(만원)	전년비
사교육비	24.0	0.0%	23.6	-1.7%
서울	32.8	2.2%	31.2	-4.9%
광역시	22.3	-1.8%	23.0	3.1%
중소도시	24.3	-0.4%	23.4	-3.7%
읍면지역	16.0	0.0%	15.0	-6.3%
참여율(% , %p)	71.7%	-1.9%	69.4%	-2.3%
서울	77.0%	-0.5%	73.5%	-3.5%
광역시	71.6%	-2.5%	70.8%	-0.8%
중소도시	72.4%	-2.3%	70.3%	-2.1%
읍면지역	64.0%	-1.4%	58.0%	-6.0%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지표

40. 평생교육 참여율

■ 산출방법

평생교육장 및 온라인강좌를 통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

■ 현황

지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생교육 참여율	28.7%	28.4%	32.6%	28%	34.5%	34.4%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키워드

주택

지표

41. 공공임대주택 수(누계)

■ 산출방법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수(누계)

■ 현황

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공임대주택 수(누계)	165,000호	172,000호	188,000호	215,530호

■ 출처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서울연구원

지표

4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액

■ 산출방법

녹색건축물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지원액

■ 현황

- 취득세 감면: 최소 5% 최대 15%까지 감면
- 재산세 감면: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 감면
- 녹색건축 인증 비용 지원: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
-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
(정확한 조성 지원액에 대한 통계자료는 현재 구축 중)

■ 출처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2013),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지표

43.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

■ 산출방법

연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 현황

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PIR	5.19	6.22	6.01	5.60	5.93	5.76	5.59	5.11	4.98

■ 출처

통계청, 부동산114

■ 경제분야 지속가능발전 지표 은행(21개)

키워드	글로벌 도시
지표	1. 외국도시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추진건수

■ 산출방법

자매·우호도시 교류 건수 + 국제회의·행사 개최 건수 + 국제회의·기구 참가 및 유치 건수

■ 현황

연도	자매 · 우호도시 교류	국제회의 · 행사 개최	국제회의 · 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2011년	39개 도시	42개 도시	48개 도시
2012년	연 5회	연 5회	연 6회
2013년	18개	20개	25개

■ 출처

2014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지표	2.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	-----------------

■ 산출방법

주거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 도시안전, 개방 및 친밀정도, 의사소통 정도의 7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

■ 현황

지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6.52점	6.78점	6.81점	6.82점	6.86점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지표	3. 도시브랜드 지수
----	-------------

■ 산출방법

도시의 국제적 명성, 기후 등 매력도, 도시의 안정도, 주거편리성, 문화공간 풍요성, 비즈니스 편리성 등 6개 지표를 개발하여 세계 50개 도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 현황

2009년 40위, 2011년 33위(2년마다 조사)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지표

4. 외국인 관광객 수

■ 산출방법

연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 × 서울 방문율(연도에 따라 조정)

■ 현황

지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외국인 관광객 수(추정)	605만명	707만명	780만명	919만명	985만명

■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연도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키워드

우수·숙련 인력

지표

5. 대학부설 창업보육센터 우수기업 지원 개소수

■ 산출방법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BI) 우수기업 지원 개소수

■ 현황

동북권 대학 창업보육센터(BI) 우수기업 선정 및 기술사업화 지원(연간 20개, 2012년 시작)
- 투자유치 900백만원, 수출 20백만원, 시제품개발 57건, 특허출원 36건

■ 출처

2014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지표

6.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액

■ 산출방법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액수

■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자금융자 지원 (억원)	12,964	11,135 (24,099)	10,000 (34,099)
신용보증 공급 (억원)	10,167	10,207 (20,374)	9,200 (29,574)

■ 출처

2014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지표

7. 벤처기업 수

■ 산출방법

서울시 내 벤처기업 수

■ 현황

지표	합계	제조업	건설,운수	도소매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기타
벤처기업 수 (2013년도)	6,237	1,916	119	183	2,933	104	982

■ 출처

벤처인(기술보증기금)

지표

8. 창조산업 종사자 비율

■ 산출방법

(서울시 8대 산업 종사자 수 / 전체 직업 종사자 수) × 100

* 8대 산업 :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MICE, 녹색, 금융, 바이오메디컬, 콘텐츠, IT 융합, 디자인·패션

■ 현황

지표	2010	2011	2012
창조산업 종사자 비율	23.4%	23.6%	23.7%

■ 출처

서울연구원 내부자료

키워드

산업의 다양성

지표

9. 전통시장 이용고객 만족도

■ 산출방법

설문조사

■ 현황

지표	2011	2012	2013
전통시장 만족도	89.5점	90점	90점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지표

10. 농부의 시장 수

■ 산출방법

서울시내 농부의 시장(산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개소수

■ 현황

-2012년 20개소, 2013년 30개소 운영

구분	내용
광화문 광장	2014년 4월 6일 ~ 11월 9일 매주 일요일
북서울 꿈의 숲	2014년 4월 19일 ~ 10월 25일 매주 토요일
보라매공원	2014년 4월 12일 ~ 10월 25일 둘째 주/넷째 주 토요일
청계천	2014년 8월 24일 ~ 10월 26일 매주 일요일

■ 출처

2014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지표

11.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

■ 산출방법

주말농장, 자투리 텃밭, 옥상텃밭 등 서울시내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

■ 현황

-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은 2011년 29.1ha에서 2012년 84.2ha, 2013년 108ha로 증가

- 도시텃밭은 2011년 100개소에서 2012년 1,673개소로 약 17배 증가

■ 출처

서울시 부서 내부자료

지표

12. 제조업 종사자 수

■ 산출방법

9차 산업분류 상의 제조업 업체 종사자 수

■ 현황

지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제조업 종사자 수	294,649명	282,583명	272,510명	274,809명	286,674명

■ 출처

통계청(2013), 전국사업체조사

키워드	고용불안
지표	13. 실업률

■ 산출 방법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 현황

지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실업률	4.4%	4.7%	4.6%	4.2%	4.0%

■ 출처

서울고용노동청(2014), 2013년 서울지역 고용동향

지표	14. 고용률
----	---------

■ 산출 방법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100

■ 현황

지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고용률	62.5%	63.5%	64.6%	64.6%	64.9%

■ 출처

서울고용노동청(2014), 2013년 서울지역 고용동향

지표	15. 노동분쟁 건수
----	-------------

■ 산출 방법

연간 노동분쟁(분규발생) 건수

■ 현황

지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노동분쟁 건수	139건	149건	137건	151건	119건

■ 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

키워드	청년실업
지표	16.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수

■ 산출방법

청년 인턴 고용 기업수

■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참여기업	채용승인	참여기업	채용승인	참여기업	채용승인
청년인턴십	977개	1,477명	1,125개	3,424명	1,576개	3,104명

■ 출처

2014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지표	17. 청년창업기업 수
----	--------------

■ 산출방법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20~30대 청년층이 재화를 생산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설립한 수

■ 현황

구분	청년창업센터	청년창업플러스센터
12.7.1 ~ 13.6.30	창업 733개, 일자리창출 2,631명	185개 기업, 일자리창출 482명
13.7.1 ~ 13.12.31	1,302개팀 선발	196개 기업, 일자리창출 476명

■ 출처

2014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지표	18. 청년고용률
----	-----------

■ 산출방법

(만 15~29세 취업자 수 / 만 15~29세 생산가능인구) × 100

■ 현황

지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청년고용률	44.0%	43.6%	45.1%	43.9%	43.3%

■ 출처

서울고용노동청(2014), 2013년 서울지역 고용동향

키워드	사회적 경제
지표	19. 협동조합 설립 수

■ 산출방법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서울시에 설립된 협동조합 수

■ 현황

- 2014년 6월 기준 서울시에 설립된 협동조합 1,378개

- 강남구 145개, 서초구 106개, 마포구 96개이며, 분야별로는 소매 및 도매 359개, 교육 서비스 229개 등

■ 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지표	20. 사회적경제기업 수
----	---------------

■ 산출방법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수

■ 현황

지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예비	인증		행안	서울형
사회적경제 기업 수	933개	431개	212개	171개	71개	40개

주) 2014년 1월 기준

■ 출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지표	21. 공유기업 수
----	------------

■ 산출방법

서울시에 설립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수

■ 현황

- 공유도시 서울선언('12.9), 조례제정('12.12), 공유서울 BI제작('13.2)

-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 2013년 37개, 2014년 50개

■ 출처

2014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행정지원(서울특별시)

발행일 2015년 3월

발행처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 : (02) 2133-6297

연구기관 서울연구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 (02) 2149-1153

ISBN 979-11-5621-315-4 (93350)